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황 수 경
이 창 근

KOREA DEVELOPMENT INSTITUTE

“나는 중산층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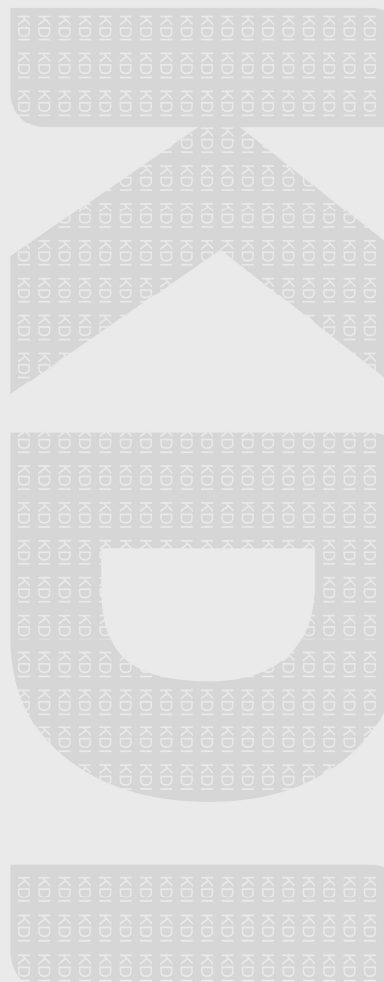
※아파트30평 ※부채없음 ※월500



연구보고서 2024-01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황수경 · 이창근



연구보고서 2024-01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연구총괄

황수경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자

이창근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연구지원

김용미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발간사

중산층의 확대는 한국의 모든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목표이다.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는 것은 균형적인 경제성장의 증거이자 동력이며, 아울러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산층’의 범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 사람들에서부터 정책담당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의 관점에서 중산층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렇듯 합의되지 않은 시각은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중산층 정책을 수립하는 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에서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 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독자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흔히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집단에 매우 이질적인 여러 계층이 혼합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상층의 상당수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여 중산층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실제 중산층의 하부를 이루는 집단의 상당수는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여 중산층 정책에 과소대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산층 정책이 상층에 더 가까운 집단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왜곡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중산층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를 실증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들은 중산층의 다층화 구조를 전제로 중산층 정책의 올바른 대상 설정, 중산층 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 등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중산층에 관한 종합 보고서이자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 및 정책 갈등의 원천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유익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준 저자들은 물론이고, 보고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익명의 검토자들과 출판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저자를 대신해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견해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24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조 동 철

목차

발간사

요 약	1
제1장 서론: 중산층 개념과 위기론에 대하여 (황수경)	3
제1절 중산층의 개념	3
제2절 한국의 중산층은 위기인가?	6
1. 중산층의 규모 및 경제력의 변화 추이	7
2. 주관적 중산층의 추이	10
제3절 '중산층 위기론'에 대한 가설적 탐색	11
1. 객관적-주관적 중산층의 불일치	11
2. 소득 양극화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	17
3. 자산 양극화 효과?	19
4. 소득 및 계층 이동성과의 관련성	22
제4절 남은 연구 주제	24
제2장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와 주관적 중산층 (황수경)	26
제1절 문제 제기	26
제2절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에 관한 논의	27
1. 해외 연구	28
2. 국내 연구	32
제3절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의 국제비교	34

1.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 규모의 비교	34
2. 소득계층 인식과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의 비교	39
제4절 한국인의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	43
제5절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의 결정요인	49
제6절 소 결	56
제3장 한국 중산층의 다층화 (황수경)	58
제1절 '사회경제 계층'의 재구성	58
제2절 사회경제 계층별 주요 특성	60
1. 인적 특성	60
2. 경제활동 및 생활 여건	64
3.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70
4. 확장된 중산층 범주 내 비교	74
제3절 계층 인식과 불평등 인식	81
1. 계층 판단 및 중산층 축소에 대한 견해	81
2. 불평등 인식	85
제4절 사회경제적 인식 및 정책 태도	92
1. 재분배 관련 정책 태도	93
2. 현안 이슈 및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견해	99
제5절 소 결	117
제4장 계층 인식 및 재분배 선호에 대한 정보 효과 실험의 실증분석 (황수경)	119
제1절 머리말	119
제2절 선행연구	121
제3절 본 연구의 실험 설계	124
제4절 분석 결과	126

1. 경제적 지위 인식과 편향의 특성	126
2. 소득 지위의 오인식과 중산층 판단	135
3. 편향의 수정이 재분배 선호에 미친 영향	144
제5절 소 결	149
제5장 중산층의 가치 및 정책 선호: 특권 중산층 · 능력주의 담론에 대한 실증적 검토 (이창근)	152
제1절 머리말	152
제2절 특권 중산층 담론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155
1. 경제환경의 변화와 중산층의 축소	155
2. 특권 중산층 / 능력주의 담론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157
제3절 한국의 중산층 분화: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인가?	160
1. 인구적 특성	160
2. 중산층 정체성: 소득 대 자산	164
3. 중산층 정체성: 능력주의적 가치관	166
4. 중산층 정체성: 교육의 역할	170
제4절 한국 중산층의 정책 선호	172
1. 기술 및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과 정책 선호	173
2. 노동 및 고용 관련 정책 선호	176
3. 교육과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견해	178
제5절 소 결	180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황수경 · 이창근)	183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183
1. 중산층의 다양한 개념	183
2. 소득 상위층의 상당수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한다	184

목차

3. 중산층 위기는 취약한 중산층의 문제로 이해해야	185
4.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와 주관적 중산층	186
5. 중산층의 다층화: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의 존재	187
6. 주관적 소득 지위 인식과 편향의 특성	188
7. 소득 지위의 오인식과 중산층 판단 / 재분배 선호	189
8. 특권 중산층·능력주의 담론에 대한 실증적 검토	191
제2절 정책 시사점	192
1. 중산층 정책의 올바른 대상 설정	192
2. 중산층 정책의 고려 사항	194
3.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	196
참고문헌	198
부 록	204
부록 A: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개요	209
부록 B: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설문지	212
ABSTRACT	236

◆ 표 목 차

<표 1- 1> 주관적 계층의식의 분포	12
<표 1- 2> 여러 조사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14
<표 1- 3> 자산 5분위 배율 및 자산 10분위 배율	19
<표 1- 4> 소득 및 자산 양극화 지표의 분해	22
<표 2- 1> 국가별 중위소득과 중간소득계층 비중	35
<표 2- 2> OECD 국가의 주관적 중산층 및 객관적 중산층(중간소득계층)의 규모	37
<표 2- 3> 가구원 수별 소득계층 분포	45
<표 2- 4> 가구원 수별 자산계층 분포	45
<표 2- 5> 가구원 수별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46
<표 2- 6> 소득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비교	47
<표 2- 7> 객관적 중산층(소득 기준)과 주관적 중산층의 불일치	47
<표 2- 8> 객관적 중산층(자산 기준)과 주관적 중산층의 불일치	48
<표 2- 9> 주관적 계층의식(6단계)의 결정요인-OLS 모형	50
<표 2-10> 주관적 계층의식(3단계)의 결정요인-다항로짓 모형	52
<표 2-11> 주관적 계층의식(3단계)의 결정요인-개인 인식 포함	55
<표 3- 1> 객관적 소득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비교	59
<표 3- 2> 주관적 계층의식에 소득 기준을 결합한 계층 구분	59
<표 3- 3> 사회경제 계층별 지인 유형	68
<표 3- 4> 현재의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70
<표 3- 5> 현 생활수준에 대한 상대적 평가	72
<표 3- 6> 생활수준의 변화에 대한 인식	73
<표 3- 7> 확장된 중산층 범주의 결정요인-다항로짓 모형	75

표목차

<표 3- 8> 심리적 비상층 vs 상층(기준 그룹)-로짓 모형	78
<표 3- 9> 취약 중산층 vs 하층(기준 그룹)-로짓 모형	80
<표 3-10>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된 요소	82
<표 3-11> 중산층의 조건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83
<표 3-12>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	84
<표 3-13>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순서형 로짓 모형	85
<표 3-14> 사회경제 계층별 불평등 인식-순서형 로짓 모형	88
<표 3-15> 계층 분포에 대한 인식 I	89
<표 3-16> 계층 분포에 대한 인식II -계층구조 이미지	91
<표 3-17> 바람직한 계층구조 이미지	92
<표 3-18> 현재의 세금부담 및 복지지출에 대한 견해	94
<표 3-19> 현재의 세금부담 및 복지지출에 대한 견해-순서형 로짓 모형	96
<표 3-20> 정부 복지지출 확대 시 추가 세금부담 동의	97
<표 3-21> 추가 세금부담 동의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	98
<표 3-22> 추가적인 자원 확보 방안(0: 현재 세대 부담...10: 국채 발행)	98
<표 3-23> 증세 시 우선적으로 올려야 하는 세금	99
<표 3-24> 정치 성향(0: 매우 보수적 vs 10: 매우 진보적)	100
<표 3-25> 로봇과 AI 기술 발전에 대한 견해-순서형 로짓 모형	102
<표 3-26> 로봇과 AI 기술 발전 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순서형 로짓 모형	103
<표 3-27>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향-순서형 로짓 모형	105
<표 3-28> 노동 분야 개혁 이슈에 대한 인식-순서형 로짓 모형	107
<표 3-29> 교육 분야 개혁 이슈에 대한 인식-순서형 로짓 모형	108
<표 3-30> 정치 분야 개혁 이슈에 대한 인식-순서형 로짓 모형	110
<표 3-31>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순서형 로짓 모형	112
<표 3-32>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순서형 로짓 모형	114
<표 3-33>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순서형 로짓 모형	115

<표 3-34>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견해-순서형 로짓 모형	116
<표 4- 1> 소득 지위 판단에서의 편향	128
<표 4- 2> 자산 지위 판단에서의 편향	128
<표 4- 3> 소득 인식 편향의 결정요인	131
<표 4- 4> 소득 인식 편향의 결정요인-준거집단 효과 포함	132
<표 4- 5> 자산 인식 편향의 결정요인-준거집단 효과 포함	134
<표 4- 6> 처치/비처치 집단의 응답 비교	136
<표 4- 7> 소득분위별 주관적 중산층 비율	138
<표 4- 8> 자산분위별 주관적 중산층 비율	138
<표 4- 9> 편향 수정이 중산층 판단에 미치는 효과(OLS)	142
<표 4-10> 편향 수정이 중산층 판단에 미치는 효과(OLS)-편향 유형별	143
<표 4-11> 편향 수정이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효과(OLS)	148
<표 4-12> 편향 수정이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효과(OLS)-편향 유형별	149
<표 5- 1> 연령집단별 계층 분포	161
<표 5- 2> 계층 및 연령별 대졸 이상 비율	161
<표 5- 3> 계층별 직업 분포	162
<표 5- 4> 계층별 산업 분포-전 연령	163
<표 5- 5> 계층별 산업 분포-40세 이하	164
<표 5- 6> 중산층의 조건(1순위)	165
<표 5- 7> 계층별 주위 사람들의 투자 관련 경험	166
<표 5- 8> 계층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	167
<표 5- 9> 계층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	167
<표 5-10> 계층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순서형 로짓 결과	169
<표 5-11> 삶의 태도: 순서형 로짓 결과	169
<표 5-12> 자녀 교육에 대한 지출이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계층 내 분포	171

표목차

<표 5-13> 입시제도에 대한 태도: 순서형 로짓 결과	172
<표 5-14> AI와 로봇에 대한 태도: 순서형 로짓 결과	174
<표 5-15> 생성형 AI 적극적 사용자의 비율(필요할 때 + 일상적으로)	175
<표 5-16> 노동 개혁 사안에 대한 견해: 순서형 로짓	176
<표 5-17> 이민 관련 사안에 대한 견해: 순서형 로짓	177
<표 5-18> 교육 및 사회적 이동성 관련 사안에 대한 견해: 선형확률모형	179
<부표 3-1> 인적 특성별 사회경제 계층의 분포	204
<부표 3-2> 개인의 경제 특성별 사회경제 계층의 분포	205
<부표 4-1> 시장소득 기준 계층별, 가구원 수별 소득, 소비, 자산 수준	206
<부표 4-2> 처분가능소득 기준 계층별, 가구원 수별 소득, 소비, 자산 수준	207
<부표 4-3> 소득 지위 판단에서의 편향-독일 사례	208
<부표 4-4> 소득 지위 판단에서의 편향-아르헨티나 사례	208
<부표 A1> 1차 조사 표본	210
<부표 A2> 2차 조사 표본	211

◆ 그림 목 차

[그림 1- 1] 중산층 기준의 스펙트럼	5
[그림 1- 2] 소득 기준 중산층 규모의 변화(2011~21년)	8
[그림 1- 3] 소비 기준 중산층 추이(2006~22년)	10
[그림 1- 4] 주관적 중산층 규모의 변화(1999~2021년)	11
[그림 1- 5] 가구의 소득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2021년 기준)	13
[그림 1- 6]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의 변화 추이	15
[그림 1- 7] 소득 상위 20%의 소득점유율 변화 추이	16
[그림 1- 8] 소득 양극화 관련 주요 지표 추이(2011~21년)	18
[그림 1- 9] 자산 양극화 관련 지표 추이(2012~21년)	21
[그림 2- 1] 인지된 소득분포와 실제 소득분포의 불일치	31
[그림 2- 2] 국가별 중위소득 수준과 중산층 비중	34
[그림 2- 3] OECD 국가의 중간소득계층과 주관적 중산층 규모의 비교	38
[그림 2- 4] 소득계층 분포와 주관적 사회계층 분포	41
[그림 2- 5] 소득 10분위 분포와 자산 10분위 분포의 비교	48
[그림 3- 1] 성, 연령대별 사회경제 계층 분포	61
[그림 3- 2] 본인의 취업 여부별 사회경제 계층 분포	62
[그림 3- 3] 세대주의 성별 및 취업 여부별 사회경제 계층 분포	62
[그림 3- 4] 교육수준과 사회경제 계층	64
[그림 3- 5] 사회경제 계층별 직업 분포	65
[그림 3- 6] 사회경제 계층별 개인의 소득 및 자산	66
[그림 3- 7] 사회경제 계층별 주거형태	67
[그림 3- 8] 사회경제 계층별 지인 유형	69

그림목차

[그림 3- 9] 다양한 계층 범주별 생활수준 만족도 차이	71
[그림 3-10] 생활수준에 대한 상대적 인식	72
[그림 3-11] 생활수준의 변화에 대한 인식(3점 척도)	73
[그림 3-12] 사회경제 계층별 중산층의 조건으로 고려되는 요소	83
[그림 3-13]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	84
[그림 3-14] 사회경제 계층별 불평등 관련 인식	87
[그림 3-15] 계층 분포에 대한 인식 I	89
[그림 3-16] 사회경제 계층별 계층구조 이미지에 대한 응답 분포	91
[그림 3-17] 현재의 세금부담 및 복지지출에 대한 견해	95
[그림 3-18] 사회경제 계층별 정치 성향 분포	100
[그림 3-19] 로봇과 AI 기술 발전에 대한 견해	102
[그림 3-20] 로봇과 AI 기술 발전 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	103
[그림 3-2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105
[그림 3-22] 노동 분야 개혁 이슈에 대한 인식	107
[그림 3-23] 교육 분야 개혁 이슈에 대한 인식	108
[그림 3-24] 정치 분야 개혁 이슈에 대한 인식	110
[그림 3-25]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112
[그림 3-26]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114
[그림 3-27]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115
[그림 3-28]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견해	116
[그림 4- 1] 실험 설계를 가미한 설문조사	125
[그림 4- 2] 실제 소득(자산) 및 주관적 소득(자산)의 분포	127
[그림 4- 3] 소득 인식 편향과 자산 인식 편향의 비교	129
[그림 4- 4] 소득분위별 인식 편향	129
[그림 4- 5] 처치/비처치 집단 간 주관적 소득 및 자산 분포 비교	137

[그림 4- 6] 주관적 소득분위와 주관적 자산분위별 주관적 중산층 비율	140
[그림 4- 7] 사회경제적 계층 지위별 주관적 중산층 비율	140
[그림 4- 8] 주관적 소득분위별 재분배 선호	145
[그림 4- 9] 처치/비처치 그룹의 주관적 소득분위별 재분배 선호	146
[그림 4-10] 처치/비처치 그룹의 주관적 자산분위별 재분배 선호	147
[그림 5- 1] 교육이 직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171

요 약

본 보고서는 한국에서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 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중산층 담론에서 다양한 경제적 지위를 가진 그룹들의 상이한 불만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중산층에 관한 연구는 중산층 담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주관적 중산층’의 다층성, 그리고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 간 불일치가 나타나는 원인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 의식이다.

본 연구를 위해 독자적으로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는 두 차례에 걸친 웹서베이 방식의 패널조사로 이루어졌다.

먼저 1차 조사(2023년 5월 실시)에서는 객관적인 소득 및 자산 수준, 주관적 계층 귀속감, 생활수준 만족도와 상향이동 가능성, 소득분배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물어봄으로써, 소득 분포에서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평가에서 체계적인 하향 편향이 존재하는지, 편향의 양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편향성이 정책 태도에서 어떤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2차 조사(동년 9월 실시)는 1차 조사에서 제공된 정보를 토

대로 객관적 계층 위치를 판별하고 이를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및 정책 태도에서 정보 효과가 나타나는지 관찰할 수 있도록 실험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구체적으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만 소득분배상의 자신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따라서 피드백을 받은 그룹(처치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비처치 그룹) 간에 중산층 인식 및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 등 다양한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은 기본적으로 동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제2장과 제3장은 1차 조사(N=3,434), 제4장과 제5장은 2차 조사(N=2,000)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중산층 개념 및 중산층 위기 담론을 중심으로 중산층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방향을 제기하며, 제2장에서는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소개하고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이용해 국제비교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의 결정요인을 탐색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에서 중산층의 다층성을 감안하여 ‘사회경제 계층’이라는 범주로 재구성하여 계층별 불평등 인식,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 태도에서의 특징들을 비교한다. 제4장에서는 실험적으로 설계된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 계층 정보를 통해 인식 편향이 수정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적으로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 중산층의 다층적 구조에 기반하여 각 집단이 어떻게 서로 다른 인식구조와 정책 선호를 가지는지를 검토하고, 이것이 특권 중산층 또는 엘리트 세습 논의의 맥락에서 정책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제1장

서론: 중산층 개념과 위기론에 대하여

황 수 경 (한국개발연구원)

제1절 중산층의 개념

‘중산층’이란 말은 일반 사람들에서부터 정책담당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그 개념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정확히 말하자면,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기보다는 각자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의미로 이야기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중산층(中産層, middle class)은 말 그대로 중(中)간 정도의 자산(産)을 보유한 계층(層)이다. 보통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의 측면에서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있는 중간계층을 지칭하며, 대중적으로는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먹고살 걱정은 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계층 사다리에서 허리를 이루는 중산층의 확대는 한국의 모든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다.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는 것은 균형적인 경제성장의 증거이자 동력이며, 아울러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실증연구가 있다. Easterly(2001)는 중산층이 강한 국가, 이른바 ‘중산층 컨센서스(middle class consensus)’가 형성된 국가에서 경제성장은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

고, Ravallion(2010)과 Brueckner *et al.*(2018)은 개도국에서의 경제성장이 전형적으로 중산층 확대와 함께, 인적자본 축적과 투자 확대라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였으며, Loayza *et al.*(2012)은 중산층의 규모가 커지면서 양질의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보건 및 교육 서비스를 확충하려는 사회정책이 활발해지고 민주적 참여와 부패를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OECD(2019)는 중산층을 ‘번영과 경제성장을 위한 엔진’이며 ‘포용적 성장의 토대’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인 중산층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파악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경제학 전통의 연구자들은 주로 측정 가능한 소득이나 소비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한다.¹ 가장 대표적인 예는 OECD(2019)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75~200%인 가구로 정의하는 방식이다.² 그 밖에 소득 혹은 소비 분포상 중간계층(대체로 60%)을 중산층으로 파악하기도 하고(Easterly, 2001), 중산층으로 간주할 수 있는 소득(혹은 소비지출)의 절대 수준을 특정해 중산층을 정의하기도 한다(Banerjee and Duflo, 2008; Ravallion, 2010).³

반면에 경제학 이외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소득·자산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 이외에 직업이나 교육수준이 보여주는 사회적 지위, 의식이나 생활양식의 배타적 특성, 삶의 기회나 생활 여건 만족도 등이 반영된 계층의식의 관점에서 중산층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산층의 정치적·사회적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Goldthorpe and McKnight(2006)과 Goldthorpe(2016)은 직업 및 고용 상태라는 지위재(positional good)를 통한 계층 구분을 통해 계층별 이동성과 불평등 문제를 분석하였고, Savage *et al.*(2015)은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맥과 같은 사회적 자원, 여가

1 자산(wealth)에 관한 가구 수준의 정보는 소득이나 소비에 비해 부정확하기 때문에 중산층을 식별할 때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자산이 부족한 개인을 중산층에서 배제하면 중산층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Atkinson and Brandolini,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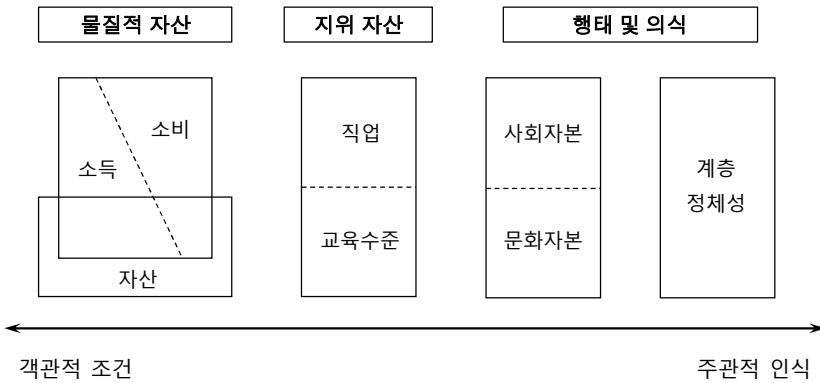
2 OECD는 Atkinson *et al.*(1995)의 제안에 따라 오랫동안 중위소득의 50~150% 가구를 중산층으로 파악해 왔으나, OECD(2019)부터는 기준을 75~200%로 상향 조정하였다.

3 Banerjee and Duflo(2008)는 중산층을 1인당 하루 소비지출이 2005년 PPP 기준 2~10달러 인 인구로 정의하였는데, 1인당 하루 소비가 2달러 이하가 글로벌 빈곤층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한편, Ravallion(2010)은 중산층을 1일 소비 2~13달러 사이 인구로 정의하였다.

활용 및 문화적 선호와 같은 문화자원도 계층 정체성을 만드는 강력한 구성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세 종류의 자본 측정치를 이용하여 중산층을 세분화하였다. 더 나아가 중산층 귀속의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주관적 자기평가에 기초한 계층 인식만으로 중산층을 포착하기도 한다 (Evans and Kelley, 2004; Evans and Mellon, 2016).

종합해 보면, 중산층을 파악하는 다양한 관점들은 물질적인 자산에서부터 계층 정체성으로 표현되는 의식적 측면까지의 넓은 스펙트럼에서 각기 다른 기준 혹은 여러 기준을 결합해 중산층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1).

[그림 1-1] 중산층 기준의 스펙트럼



이처럼 다양한 중산층 개념 가운데 어느 개념이 적절한지는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경제성장이나 번영과 같은 경제적 성과들은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소득이나 소비와 같은 유량(flow) 기준은 개인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할 것이며, 자산과 같은 저장(stock) 기준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성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직업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지위 자산은 삶의 기회, 계층 이동성 및 장래 전망을 파악할 때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사회통합 혹은 정책적 합의와 같은 측면

은 객관적 지위보다는 계층적 인식에 더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태와 의식 기준에서 포착하는 중산층 개념이 더 풍부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⁴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그 규모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런 다양한 개념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 중산층에 대한 상충된 인식이나 문제 제기에 어리둥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 중산층의 위기론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제2절 한국의 중산층은 위기인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축소’ 혹은 ‘중산층 위기’를 우려하는 언론 기사나 대중서자들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중산층’이 사라진다. 30년 전 국민 75% “난 중산층” … 올해엔 48%로 뚝”(『조선일보』, 2020. 7. 18), “경제적 보통 사람’ 그 많던 중산층은 어디로 갔을까?”(『한겨레』, 2022. 6. 4), “한국 중산층, 안녕하십니까”(『중앙일보』, 2023. 5. 22), “2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절반 “난 하층” … 사라지는 중산층”(『주간한국』, 2023. 10. 20) 등의 기사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주장들의 핵심은 최근 한국에서 중산층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경제적 지위도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자.

“1980년대에는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한국인이 70%에 이르렀지만 최근에는 10명 중 4명꼴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⁶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

4 한 사회의 재분배 정책이 객관적 불평등도보다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불평등도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Engelhardt and Wagener, 2014; 황수경, 2015).

5 이재열(2014),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와 조권중·최지원(2016), 『중산층 - 흔들리는 신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6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를 모집단으로 해 2023년 9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며, 자신이 중산층에 가깝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42%, ‘아니다’라는 응답은 47%로 나타났고, 11%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감,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기준 이상의 고소득층은 오히려 하층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이 별수록 그만큼 경제적 열망도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 『주간한국』, 2023. 10. 20.

그러나 중산층 규모나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거의 뒷받침되지 않는다. 최근 이영욱(2023)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중산층을 소득 또는 소비 수준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 규모는 2011년 이래 감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논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주요 지표들을 재구성해보자.

1. 중산층의 규모 및 경제력의 변화 추이

[그림 1-2]는 소득을 이용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산층 규모 및 지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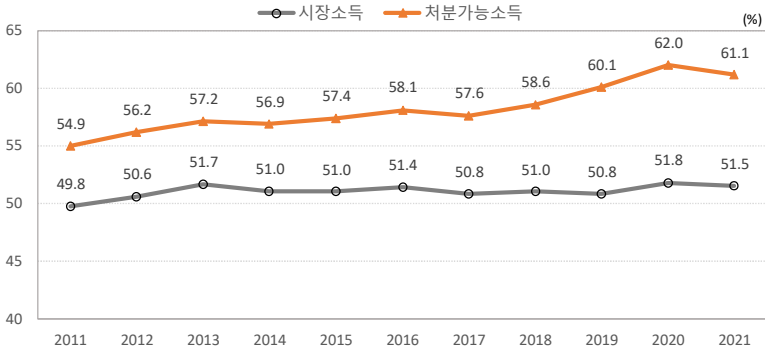
먼저 개인의 소득수준⁷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소득, 즉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150% 수준을 중산층으로 정의하든(A), 중위소득의 75~200% 수준을 중산층으로 파악하든(B),⁸ 중산층 규모는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시장소득 기준). 게다가 공적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을 포함해 실제 가구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처분가능소득 기준), 오히려 증가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최근 들어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전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나눈 균등화 소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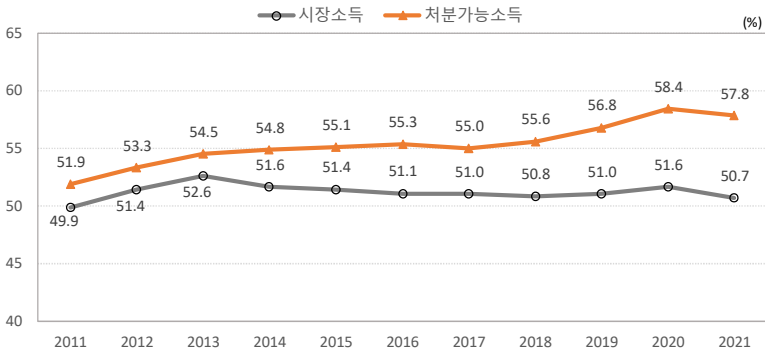
8 A는 OECD(Atkinson, 1995) 이래 OECD가 사용해온 중산층 기준이고, B는 OECD(2019)에서 새로 정의한 중산층 기준이다.

[그림 1-2] 소득 기준 중산층 규모의 변화(2011~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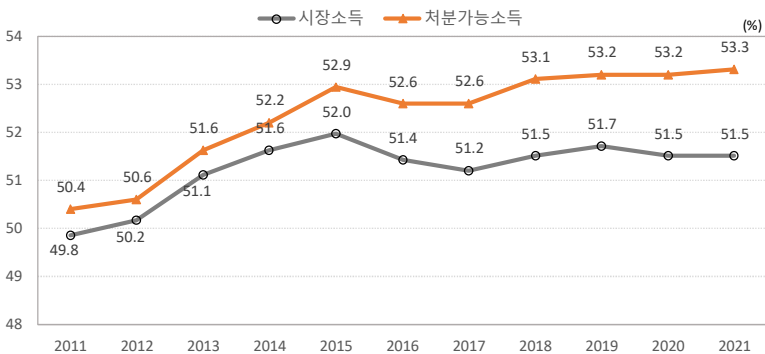
A. 중위소득 50~150%의 인구 비중



B. 중위소득 75~200%의 인구 비중



C. 중위 60%의 소득점유율



주: 소득은 균등화지수로 표준화한 균등화 소득이며, 패널 A, B의 수치는 해당 소득 범위의 인구 비중이고, 패널 C의 수치는 해당 인구의 소득점유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KOSIS 「소득분배지표」에서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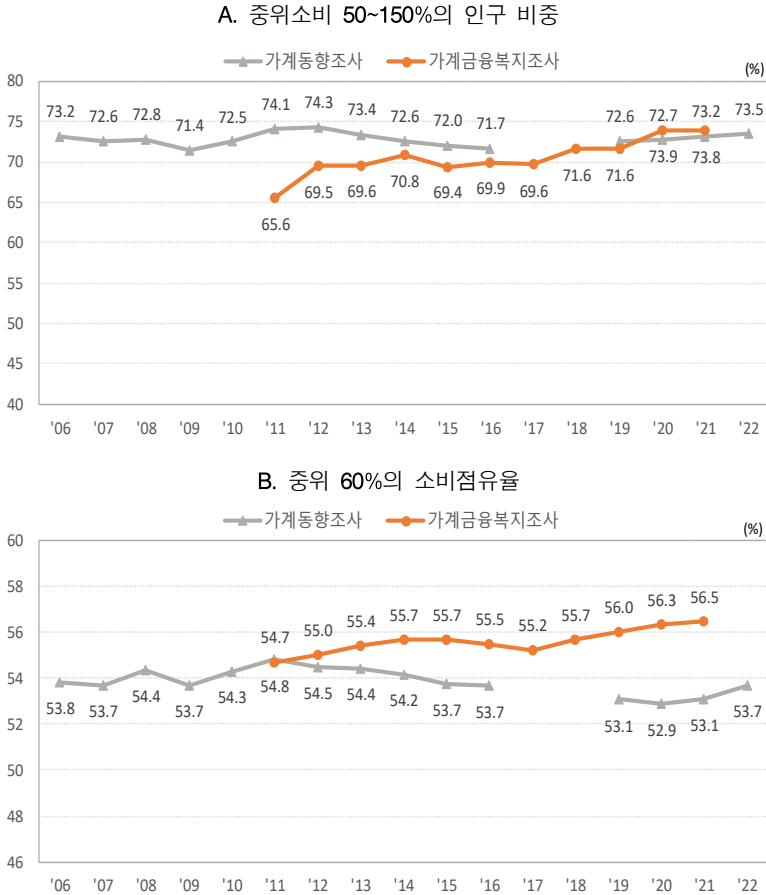
한편, 중산층의 범위를 분위 경계값을 이용해 절대적 수준에서 정의하는 대신, 소득수준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인구, 즉 중간 60%에 해당하는 인구의 소득점유율 변화로 그 경제적 지위를 파악해도(C) 역시 중산층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이 경우 중산층의 경제적 지위는 2015년까지 빠르게 상승하다 2016년 이후에 정체(시장소득 기준) 혹은 완만한 증가세(처분가능소득 기준)를 보인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소비’를 기준으로 중산층 규모 및 지위 변화를 파악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영욱(2023)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중위소비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비중 추이와 중위 60%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소비점유율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그림 1-3]은 이영욱(2023)의 분석 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1-3]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위소비 50~150% 인구 비중(A)은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위 60%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소비점유율(B)도 동 기간 중 54.7%에서 56.5%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비농가가구에 한정해 집계된 가계동향조사의 분석 결과는 두 지표 모두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따라서 여기서도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다거나 지위가 위축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영욱(2023)은 “중산층 축소에 관한 광범위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득 흐름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의 비중과 상대적 경제력은 최근 10~20년간 유지 내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다만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당장의 소득분배 개선보다 동태적인 계층 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림 1-3] 소비 기준 중산층 추이(2006~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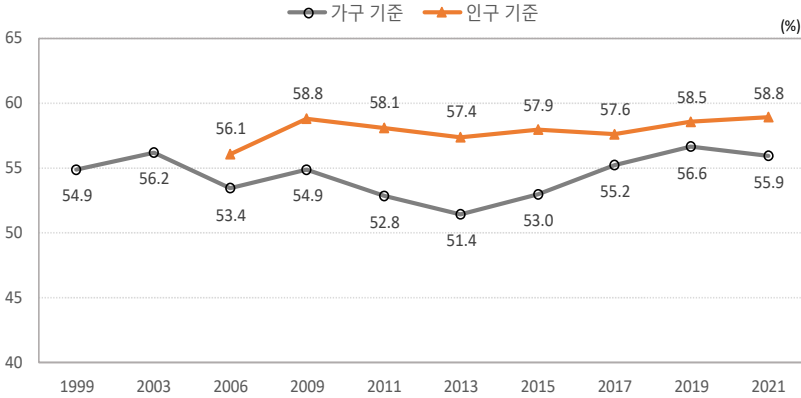
주: 가계동향조사는 비농가가구 대상 분기값의 연간 평균치이며, 2017~18년에는 소비자료가 없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이영욱(2023)에서 재인용.

2. 주관적 중산층의 추이

그렇다면 자신을 중간계층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어떨까? [그림 1-4]는 이른바 ‘주관적’ 중산층이라 정의할 수 있는 이들의 규모를 살펴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자신의 계층을 상·중·하로 나누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데 대해 중층(중상

[그림 1-4] 주관적 중산층 규모의 변화(1999~2021년)



주: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15년은 13세 이상, 2017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KOSIS에서 추출).

+ 중하)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2013년 51.4%를 저점으로 2021년 55.9%까지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 기준으로는 2009년 이래 57~58%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느 경우든 중산층이 위축되고 있는 근거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통계로 보면 한국에서 중산층이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산층 위기’ 담론은 우리 사회에서 그토록 강건하게 지속되는 것일까?

제3절 ‘중산층 위기론’에 대한 가설적 탐색

1. 객관적-주관적 중산층의 불일치

중산층 위기 담론과 관련한 하나의 단서는 주관적 계층의식의 전체 분포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표 1-1>은 [그림 1-4]를 도출한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의 전체 모습이

<표 1-1> 주관적 계층의식의 분포

(단위: %)

	1999	2003	2006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상층	1.1	1.4	1.5 (1.4)	2.7 (2.2)	1.9 (2.1)	1.9 (1.9)	2.4 (2.4)	2.8 (2.7)	2.7 (2.4)	2.9 (2.7)
중층	54.9	56.2	53.4 (56.1)	54.9 (58.8)	52.8 (58.1)	51.4 (57.4)	53.0 (57.9)	55.2 (57.6)	56.6 (58.5)	55.9 (58.8)
하층	44.0	42.4	45.2 (42.4)	42.4 (39.0)	45.3 (39.8)	46.7 (40.7)	44.6 (39.7)	42.0 (39.7)	40.8 (39.1)	41.2 (38.5)

주: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15년은 13세 이상, 2017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 기준임.

() 안은 인구 기준 비중이며, 이 자료는 2006년부터 제공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KOSIS에서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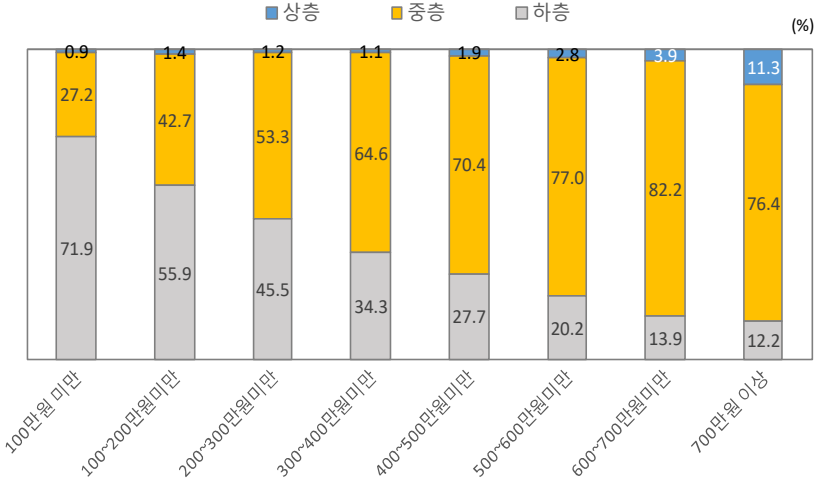
다. 이번에는 자신을 ‘중층’이라고 응답한 비율 대신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에 주목해보자. 연도에 따라 소폭의 등락이 있긴 하지만 불과 1~3%만이 스스로를 상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층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⁹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달리 해석해 보자면, 통상의 방식대로 우리 사회의 상위층을 약 20% 정도로 가정한다면, 그중 단 3%만이 자신을 상위층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대부분은 자신을 중층, 즉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객관적 계층 분포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분포에서 중산층의 괴리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주관적 계층의식을 가구소득과 교차해서 살펴보았다(그림 1-5). 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구성원 중 단 11.3%만이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하고 있고, 76.4%가 자신을 중층으로, 심지어 12.2%는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이 600~700만원에 해당하는 가구에서도 3.9%만이 스스로 상층이라고 인식하고, 82.2%는 자신을 중층으로, 13.9%는 하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9 정확히 말하면, 상층이 사라졌다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스스로를 상층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5] 가구의 소득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2021년 기준)



주: 19세 이상 인구 기준.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1 원자료.

물론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소득분위에서 상층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기준으로 월평균 균등화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67만원, 2인 가구 378만원, 3인 가구 463만원, 4인 가구 534만원이며, 따라서 응답자가 4인 가구이면 월소득이 800만원을 넘어야 중위소득의 150%를 넘을 수 있다. 또한 중위소득의 200% 이상이 되려면 2인 가구에서도 월 756만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적 상위층에서 심리적 하향 편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주관적 계층의식을 묻는 조사에서 이처럼 ‘상층’이 사라지는 현상은 매우 빈번하게 관찰된다. <표 1-2>는 전국 대표성을 지니는 3개 조사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층 범주의 차이로 인해 어떤 방식으로 중산층을 파악하느냐에 따라 중산층 규모는 36.1%에서 85.6%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지만, 어떤 경우든 중산층의 위쪽 경계를 이루는 상층의 비중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

<표 1-2> 여러 조사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단위: %)

한국노동패널조사			가족실태조사 (2020)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22)	
	2020	2021				
상상	0.1	0.1	상층	0.6	중산층 보다 높다	6.3
상하	1.4	1.4	중상층	8.8		
중상	17.1	17.7	중층	43.8	중산층	36.1
중하	49.5	46.9	중하층	33.0	중산층 보다 낮다	57.6
하상	26.5	28.5	하층	13.8		
하하	5.5	5.5	계	100	계	100
(중산층)	(66.6)	(64.6)		(85.6)		(36.1)

주: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이 흔히 중산층으로 파악되는 범주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KLIPS)」 24차 원자료;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21. 5; 문화체육관광부, 「2022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보고서」, 202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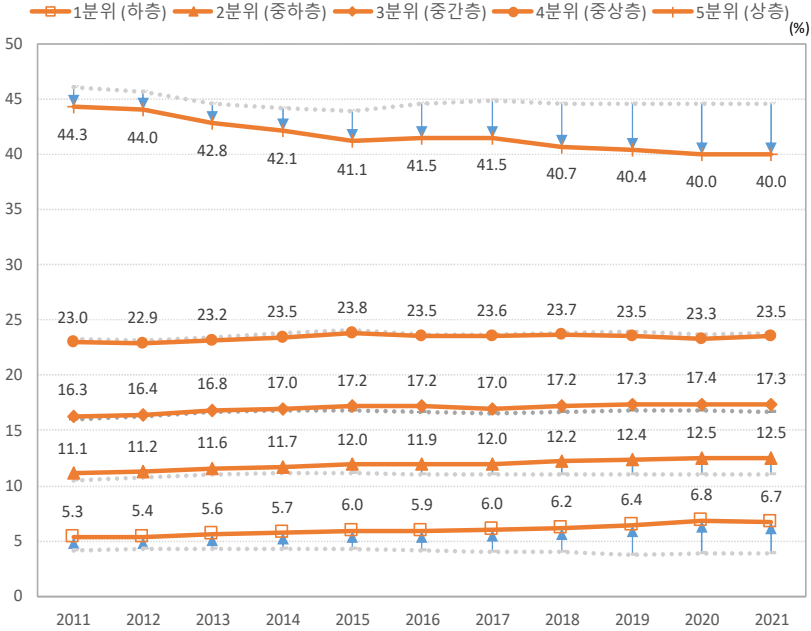
기서도 재차 확인되는 사실은, 객관적 지위로는 상층에 속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를 감안하고 전 계층의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의 변화 추이를 다시 살펴보자.

[그림 1-6]은 소득 5분위별로 2011~21년 기간 중의 소득점유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분위별로 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5분위(상위 20%)의 점유율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4분위(상위 20~40%)의 점유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된 반면, 1~3분위에서는 점유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재분배에 의한 소득 개선 효과에 힘입어 처분가능소득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객관적인 의미에서 경제적 지위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계층은 최상위층인 5분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중산층 위기 담론의 실체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객관적으로는 소득 상위층(여기서는 상위 20%)에 해당하면서도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그룹에서 (소득점유율로 측정

[그림 1-6]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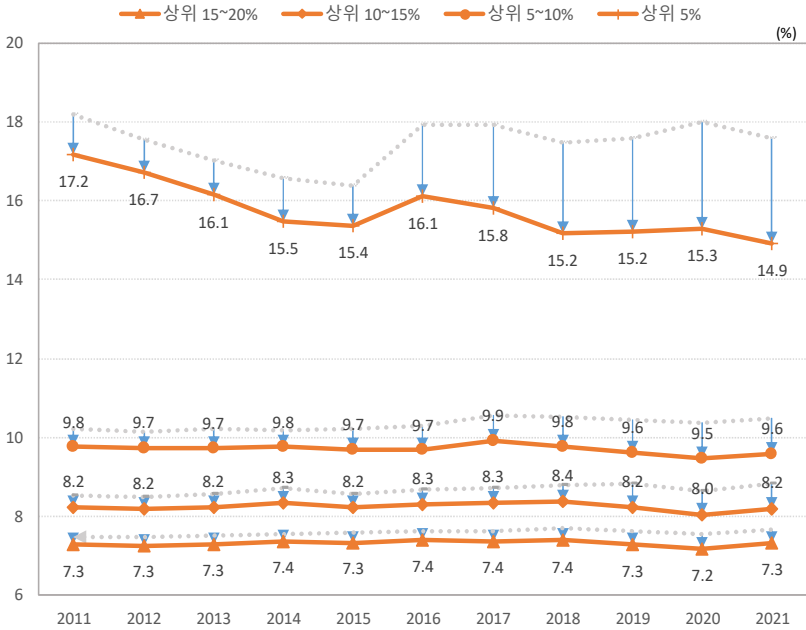
주: 소득은 균등화지수로 표준화한 균등화 가구소득 기준. 실선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점선은 시장소득 기준 소득점유율이고, 화살표는 재분배에 의한 증감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KOSIS 「소득분배지표」에서 추출).

되는) 경제적 지위 하락을 ‘객관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이들의 불만이 중산층 위기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경제적 지위가 하락한 계층을 좀 더 좁혀 보자. 소득계층을 20분위로 세분화해 상위 20%에 해당하는 4개 분위의 소득점유율 변화를 살펴본 것이 [그림 1-7]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개 그룹 모두에서 공적 순지출이 점차 증가해왔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로 소득 상위 10% 이상 그룹에서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소득점유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해 보면, 소득 상위층, 그중에서도 특히 소득 상위 10% 이상 계층에서 객관적으로 경제적 지위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스스로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2~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신을 중

[그림 1-7] 소득 상위 20%의 소득점유율 변화 추이



주: [그림 1-6]과 동일하며, 소득 상위 20%를 5% 구간으로 세분화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층으로 인식하면서 중산층 위기를 말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단지 주관적 측면(예: 상대적 박탈감)에서가 아니라 객관적 측면(예: 소득 지위)에서도 상실감이나 위기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계층이다. 동시에 이들은 매우 강력한 사회적 발언권이나 문화 권력을 지닌 그룹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뒤이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을 우리 사회의 중산층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 만약 중산층 논의가 이들에 의해 주도된다면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선택을 할 수 있을까?

2. 소득 양극화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

중산층 위기론이 실제 중산층이 아닌, 경제적 상위층에 속하지만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위기를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비판은 중산층 위기가 객관적인 위기라기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소득 양극화에 의해 상위층과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주로 상대적 지위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했기 때문에 절대적 수준에서 상위층과의 격차가 확대되었다면 이 주장이 일정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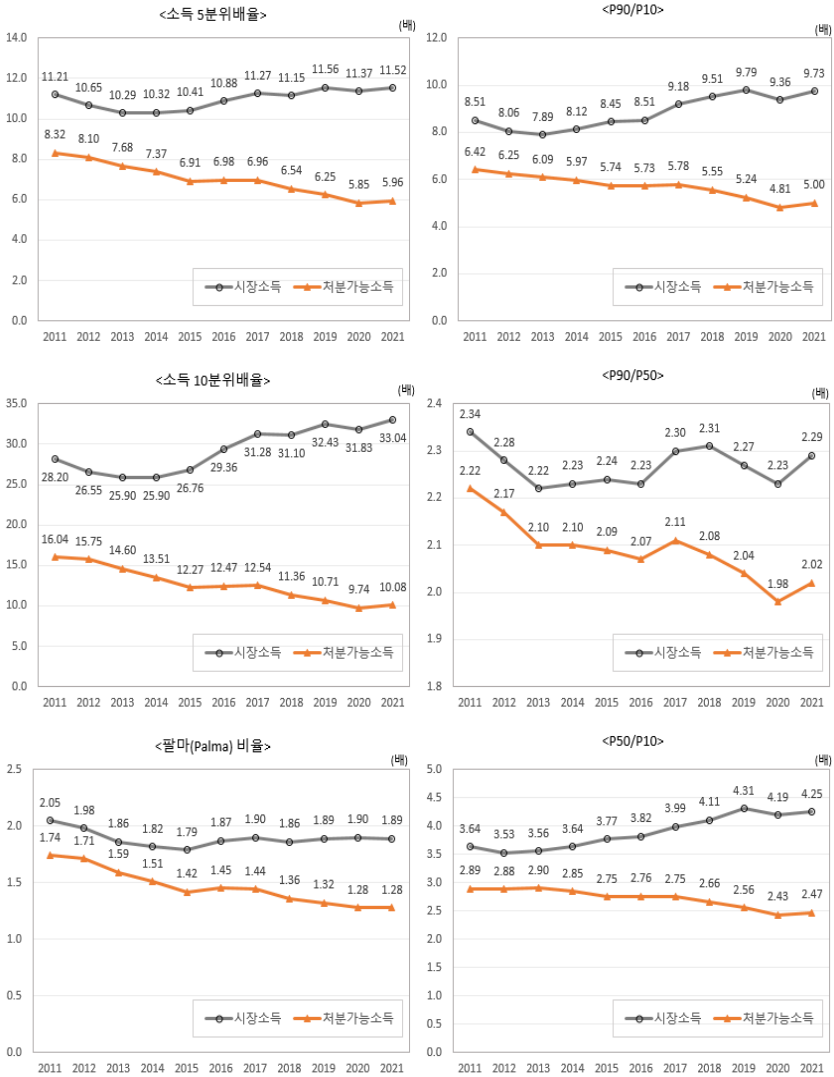
그렇다면 소득 양극화가 진행되어 중산층의 상대적인 지위가 하락했는지에 대한 실증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림 1-8]은 2011~21년 기간 중 소득 양극화 관련 주요 지표들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다수 있지만, 처분가능소득으로 보면 계층 간 격차는 일관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소득 상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10분위 배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1년 28.20에서 2021년 33.04로 높아졌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16.04에서 10.08로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중위소득(P50)을 기준으로 상위 10% 및 하위 10%와의 격차를 측정하는 P90/P50과 P50/P10의 추이에서도, 시장소득 기준으로 상위소득과 중위소득 간 격차는 확대/축소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중위소득과 하위소득 간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두 경우 모두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림 1-8] 소득 양극화 관련 주요 지표 추이(2011~21년)



주: 소득 5분위배율: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소득 10분위배율: 상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팔마비율: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
 P90/P10: 소득 10분위 중 9분위 소득 경계값(P90)을 1분위 소득 경계값(P10)으로 나눈 값.
 P90/P50: 소득 10분위 중 9분위 소득 경계값(P90)을 5분위 소득 경계값(P50)으로 나눈 값.
 P50/P10: 소득 10분위 중 5분위 소득 경계값(P50)을 1분위 소득 경계값(P10)으로 나눈 값.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KOSIS 「소득분배지표」에서 추출).

결국, 시장에서의 계층 간 소득격차는 어느 정도 확대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의 개입을 통해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벌어지는 시장소득 격차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상위층과의 격차가 아니라 하위층과의 격차라는 점에서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하는 근거로는 그리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산 양극화 효과?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소득보다 자산에서 더 심각하며, 따라서 중산층의 위기나 상대적 박탈감은 소득보다는 자산 격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자산이 소득과 대체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분적인 변동요인은 되겠지만 소득 순위를 크게 뒤바꿀 요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자산이 포함되면 격차의 크기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표 1-3>은 자산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 및 10분위 배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산 격차는 총자산보다는 순자산에서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대체적인 추세는 2014~15년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 이후에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표 1-3> 자산 5분위 배율 및 자산 10분위 배율

(단위: 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5분위 배율>										
총자산	62.41	55.49	49.82	50.78	52.59	52.65	53.47	57.57	58.40	58.42
순자산	78.63	70.50	63.59	64.20	64.91	65.97	68.01	74.61	79.35	80.19
<10분위 배율>										
총자산	266.81	227.95	207.28	209.70	221.34	222.30	227.31	248.41	250.35	251.19
순자산	561.10	470.53	414.63	400.98	427.61	432.97	458.76	529.11	579.76	520.70

주: 비균등화 자산으로 가구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김태완 외(2022)에서 재인용.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순자산 기준 10분위 배율의 추이를 보면, 2012년(561.10)부터 2015년(400.98)까지 하락하다가 집값 거품이 절정을 이룬 2020년(579.76)에 피크를 이루고 2021년(520.70)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순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변동이 자산 격차 추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2022년 이후에는 자산 격차가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계층에서 격차가 확대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위그룹을 기준으로 상위 10%와 하위 10%의 자산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 1-9]는 자산 10분위 배율의 변동 추이와 함께, 10분위 배율을 상위 10%와 중위그룹, 중위그룹과 하위 10%의 자산 배율로 분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중위그룹의 자산액으로는 5분위와 6분위의 자산평균액이 사용되었다.¹⁰

중위그룹의 자산 대비 상위 10%의 자산 격차는 총자산과 순자산에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 2017년까지 하락하다가 그 이후부터 확대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2022년 배율이 2012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반면, 중위그룹 대비 하위 10%의 자산 격차는 2014~15년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양상인데 순자산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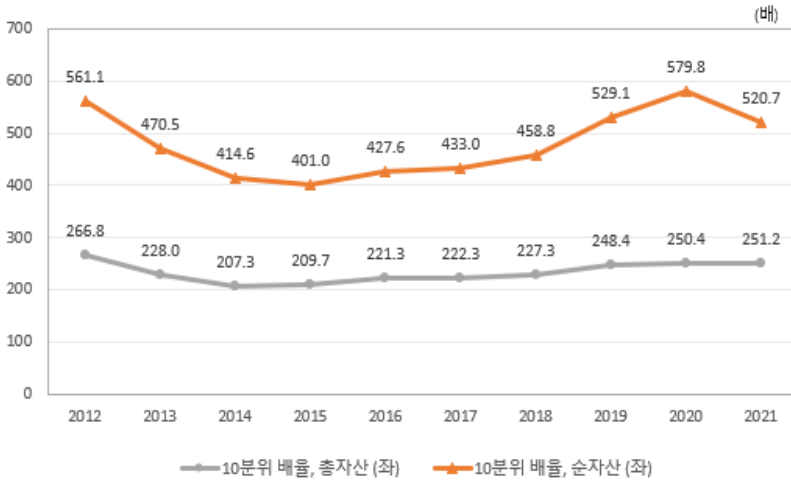
이렇게 보면 자산 10분위 배율 증가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중위그룹과 하위층 간의 격차 확대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소득 양극화 추이에서 살펴본 결과와도 일관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산 기준으로 살펴봐도 중산층과 상위층 간 격차 확대가 최근의 중산층 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4>는 지금까지 논의한 소득 및 자산 양극화 양상을 수치로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각 수치는 양극화 지표(P90/P10)를 중위값(P50) 기준으로 상층 및 하층 간의 격차로 분해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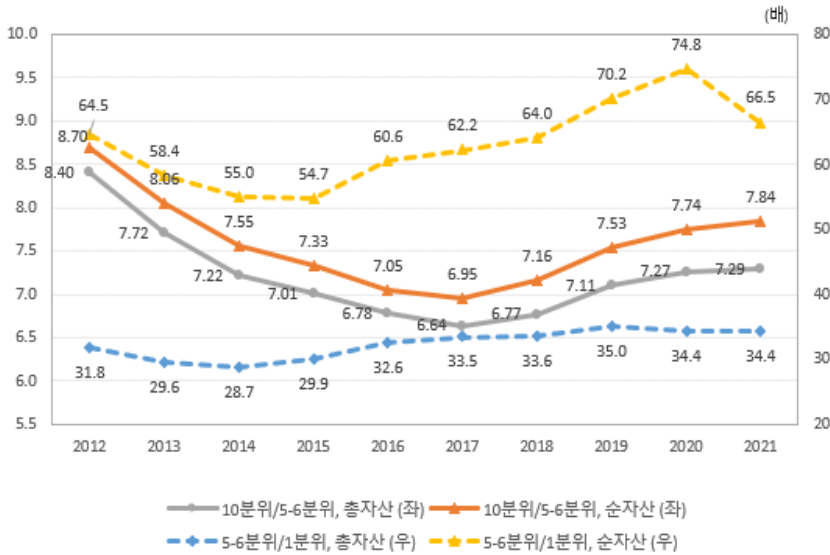
10 여기서 사용된 분위별 자산평균액은 김태완 외(2022)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수치는 김태완 외(2022)의 <표 4-1-10>~<표 4-1-14>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1-9] 자산 양극화 관련 지표 추이(2012~21년)

A. 자산 10분위 배율



B. 중위그룹 대비 1분위와 10분위의 자산 배율



주: 중위그룹은 중위수가 포함된 5분위와 6분위를 지칭함.
 자료: 김태완 외(2022)의 수치를 이용해 산출.

<표 1-4> 소득 및 자산 양극화 지표의 분해

(단위: 배)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순자산		
	2011	2016	2021	2011	2016	2021	2012	2017	2022
(1) P90/P10	8.51	8.51	9.73	6.42	5.73	5.00	74.4	63.5	92.4
(2) P90/P50	2.34	2.23	2.29	2.22	2.07	2.02	4.4	3.8	4.4
(3) P50/P10	3.64	3.82	4.25	2.89	2.76	2.47	17.0	16.8	21.1

주: P50은 중위값, P10과 P90은 각각 소득 1분위와 10분위 경계값. [(1)=(2)*(3)]. 소득은 각 연도 연간, 자산은 각 연도 3월 말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KOSIS에서 추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양극화 지표는 2016년 이후에 증가하였는데, 상층과 중층 간 격차보다는 중층과 하층 간 격차의 증가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층-중층 간, 그리고 중층-하층 간 격차 모두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소득 격차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자산 격차도 2017년까지 감소하다 그 이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증가한 격차 대부분이 중층과 하층 간의 격차 확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요약하면, 소득 및 자산에서 ‘계층 양극화’ 증거가 일부 존재하지만, 그 대부분은 상층-중층 간에서가 아니라 중층-하층 간 격차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소득 및 계층 이동성과의 관련성

마지막으로, 중산층의 위기는 현재의 소득(혹은 자산)수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소득 및 계층 이동성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우선, 중산층의 위기감은 현재의 지위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지위의 상실 가능성에서 오는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중

산층의 개념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소득이나 고용 지위의 안정성을 포함하는 견해를 대변한다. 글로벌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로 과거에 비해 노동시장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특히 중산층 가운데서 정규직에 안착한 중상위층보다는 소득이나 고용 지위가 크게 불안정해진 중하위층에서 더 심각하게 지위 하락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계층 의식 조사에서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0%를 넘는 것을 보면(표 1-1 참조), 비록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현재 객관적으로 중간소득자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하층으로 인식하는 그룹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중산층의 계층 상승 기대감의 측면에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될 수 있다. 소득 및 계층 이동성이 하락하면서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력만으로 소득 및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린다. 그런데 이 관점은 ‘상층’ 혹은 ‘중산층’을 절대 기준을 가진 계층 지위로 파악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궤를 같이한다. 절대소득의 상향 이동은 비영합 게임이지만 상대소득 및 계층의 상향 이동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관점에서는 계층 상승의 기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제공되고 있는가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쟁점은 하층 혹은 취약한 중산층이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계층적 기대감과 주로 관련되고, 두 번째 쟁점은 중산층이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층적 기대감에 더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중산층 문제는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매우 다른 문제의식들이 결합하여 표출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중산층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산층의 다양한 층위에서 위기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제4절 남은 연구 주제

지금까지 우리는 중산층 위기 담론의 다양한 측면과 각각에 대한 객관적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분명한 것은 객관적 기준에서 한국의 중산층이 줄고 있다거나 경제적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 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중산층 담론에서 다양한 경제적 지위를 가진 그룹들의 상이한 불만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 전체로 보면 상위계층이지만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상위 10% 계층의 존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중산층에 관한 연구는 중산층 담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주관적 중산층’의 다층성, 그리고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 간 불일치가 나타나는 원인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다층화되어 있는 중산층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심층분석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과다대표 혹은 과소대표로 인한 사회적 의사결정의 왜곡 문제를 직시하거나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관적 중산층, 보다 일반적 의미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위한 독자적인 인식조사를 기획하는 것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이하 KDI 계층인식조사)가 수행되었으며, 동 조사는 두 차례에 걸친 웹서베이 방식의 패널조사로 이루어졌다.

먼저 1차 조사(2023년 5월 실시)에서는 객관적인 소득 및 자산 수준, 주관적 계층 귀속감, 생활수준 만족도와 상향이동 가능성, 소득분배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물어봄으로써, 소득 분포에서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평가에서 체계적인 하향 편향이 존

재하는지, 편향의 양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편향성이 정책 태도에서 어떤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2차 조사(동년 9월 실시)는 1차 조사에서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 계층 위치를 판별하고 이를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및 정책 태도에서 정보 효과가 나타나는지 관찰할 수 있도록 실험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구체적으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만 소득분배상의 자신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따라서 피드백을 받은 그룹(처치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비처치 그룹) 간에 중산층 인식 및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 등 다양한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KDI 계층인식조사의 조사 개요, 조사 방법 및 구체적인 조사 내용(1, 2차 설문지)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은 기본적으로 KDI 계층인식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소개하고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이용해 국제비교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의 결정요인을 탐색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에서 중산층의 다층성을 감안하여 ‘사회경제 계층’이라는 범주로 재구성하여 다양한 계층별로 불평등 인식,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 태도에서의 특징들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실험적으로 설계된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 계층 정보를 통해 인식 편향이 수정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적으로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 중산층의 다층적 구조에 기반하여 각 집단이 어떻게 다른 인식구조와 정책 선호를 가지는지를 검토하고, 이것이 특권 중산층 또는 엘리트 세습 논의의 맥락에서 정책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제2장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와 주관적 중산층

황 수 경 (한국개발연구원)

제1절 문제 제기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중간소득계층, 예컨대 중위소득의 75~200% 수준으로 파악되는 중산층 규모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고,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50% 중후반대를 기록하며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관적 중산층의 규모도 2009년 이래 57~58%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최근(2023년) 조사에서는 2021년 58.8%였던 중산층 인구 비중이 61.6%로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사회조사」).¹¹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은 규모 면에서 대략 비슷한 수치를 보여 마치 유사한 인구계층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인구계층을 포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를 상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3% 수준에 불과하여 상위소득계층의 상당수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

11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상층 3.0%, 중층 61.6%, 하층 35.4%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인 2021년 조사와 비교해 상층과 중층은 각각 0.3%p 2.7%p 증가한 반면, 하층은 3.0%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통계청 보도자료, 2023. 11. 8).

율은 35~40%에 달해 중간소득계층으로 파악되는 중산층의 상당수는 자신을 중산층이 아닌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으로 파악되는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 간에는 단순히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계층 인식에서 체계적인 하향편의가 나타나 전혀 다른 집단을 지칭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소득계층은 중요한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큰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선거에서 저소득층이 보수를 지지하고 고소득층이 진보를 지지하는 계급 배반적 투표 행태가 나타나는가 하면, 사회정책 및 재분배 선호 등 공적 이슈와 관련한 태도에서도 계층 간에 그다지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된다(강원택 외, 2014). 계층의식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들이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편향성과 연관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장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이번 장에서는 객관적 기준(소득, 자산 등)에 의한 중산층과 주관적 기준에 의한 중산층, 즉, ‘중산층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양자 간에 나타나는 괴리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분포에서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편향의 존재 여부와 양상, 그리고 그 원인을 탐색하고, 중산층 계층의식의 주된 결정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제2절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에 관한 논의

소득이나 자산과 같이 객관적 기준으로 파악되는 중산층과 주관적 인식에 의한 중산층(‘중산층 인식’) 간에 체계적인 괴리가 나타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불일치의 정도나 방향만 다를 뿐, 각국의 문헌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먼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가 나타나는 정도와 원인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살펴보자.

1. 해외 연구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는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그 자체가 직접적인 분석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Ravallion and Lokshin(2002, 이하 RL)은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경제적 후생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소득에 기반한 객관적 측정치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이유를 해명하고자 한 최초의 연구로 파악된다. 다만, 그들의 기본 관심사는 중산층보다는 빈곤계층이었으며, 따라서 러시아 빈곤 통계에서 나타나는 빈곤 지표와 빈곤 인식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들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 러시아인의 30%는 소득 9단계 사다리에서 가장 낮은 두 단계로 자신을 평가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가난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실제 빈곤 통계상으로는 빈곤하지 않았다. RL은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으로, 첫째, 지역별 생활비 차이와 같은 요소가 덜 반영되어 실제 빈곤을 잘못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빈곤 측정의 오류), 둘째, 소득 이외에 다양한 요소들, 예컨대 건강, 교육 및 고용 상태와 같은 요소들이 소득과 독립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빈곤 인식의 다차원성)을 상정하고 테스트한 결과, 빈곤 측정 방식을 개선할 경우 객관적 척도와 주관적 인식 간의 불일치를 일부 줄이지만 여전히 큰 불일치가 존재하며,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포함할 때 설명력이 배가된다는 것을 보이며 빈곤 인식의 다차원성 가설을 지지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주관적 경제 후생 인식에는 소득 이외에 건강, 교육수준, 고용 상태, 자산, 거주지역 등 다른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RL이 러시아인들의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의 하향 편향을 다루었다면, Evans and Kelley(2004, 이하 EK)는 개인들이 자신을 사회계층의 중간에 있다고 보는 경향, 이른바 ‘중앙 편향(central tendency)’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즉, 고소득층임에도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고, 저소득층이면서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EK는 21개국¹²에서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가난한 국가뿐만 아니라 부

유한 국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며, 또한 정보 접근성과 관련된 개인의 교육수준과도 상관없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러한 중앙 편향이 개인들이 자신을 둘러싼 집단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이른바 ‘준거집단 효과(reference-group effect)’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였다.

Cruces *et al.*(2013)은 아르헨티나를 대상으로 객관적 소득 지위와 주관적 인식 간에 불일치가 상당함을 보였고, Lora and Fajardo(2013, 이하 LF)는 분석대상을 라틴아메리카 16개국으로 확장하여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순위를 과소평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반대로 자신의 순위를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중앙 편향’이 존재하며, 다만 부정적 편향이 긍정적 편향보다 약간 더 우세하다고 분석하였다. Cruces *et al.*(2013)은 거주지역으로 측정된 준거집단이 응답자의 상대적 위치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 준거집단 가설을 지지하였고, LF는 소득, 직업, 교육, 지역 경제 상황, 고용 상태, 재능과 운(luck) 등의 요소들 간의 불완전한 상관관계가 불일치의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라틴계 국가들과는 달리 서구 유럽 국가들에서의 분석 결과는 복잡적이다. Lindemann(2007)은 에스토니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앙 편향이 일관되지 않아 부분적으로만 확인되고 일부는 준거집단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aradja *et al.*(2017)은 스웨덴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실제보다 자신이 더 가난하다고 믿고 있고 13%만이 자신의 위치를 높게 평가하여, 주관적 인식에서 하향 편향이 지배적이라고 파악하였다. 반면에 Engelhardt and Wagener(2018)와 Fernandez-Albertos and Kuo(2018)는 각각 독일과 스페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난한 응답자들은 자신의 순위를 과대평가하고, 부유한 응답자들은 자신의 순위를 과소평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스스로 중간소득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12 영미권 국가(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복지 국가(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과거 공산주의 국가(체코, 불가리아, 동독,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러시아), 기타(필리핀,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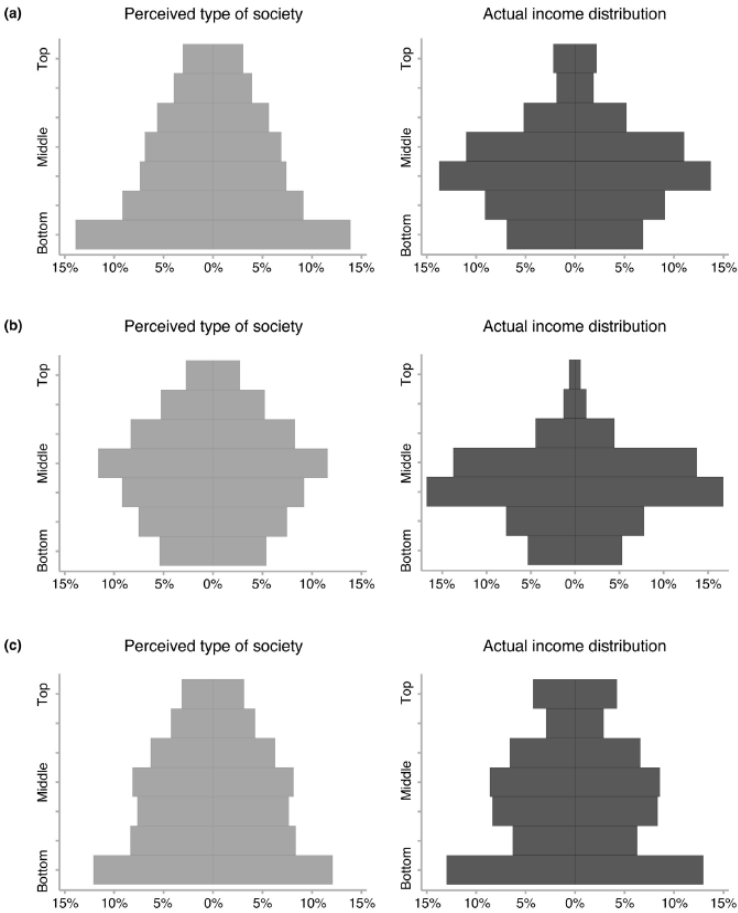
경향, 즉 중앙 편향 가설을 지지하였다.

주관적 계층 인식의 편향은 개인 수준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주관적 인식은 소득을 비롯한 객관적 특성뿐만 아니라 어떤 과거를 경험했는지, 자신의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 심지어 미디어의 영향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Powdthavee(2007)는 인도네시아 표본에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현재의 지출 능력보다 미래의 경제적 지위 전망에 더 많이 의존함을 보였고, Lindemann(2007)은 에스토니아에서 노년층에 비해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계층 지위를 실제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역시도 성장하고 있는 국가에서 청년들의 미래 전망이 훨씬 낙관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Karadja *et al.*(2017)은 교육수준이 높고 미디어를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에서, 그리고 소득상승 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에서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Diermeier *et al.*(2017)은 불평등에 대한 언론보도 등이 현실 세계의 상황과 분리된 개인의 인식(media bias)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한편, 자신의 상대적 소득 지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전체 소득분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예컨대 중앙 편향이 강한 국가에서는 소득분배가 실제보다 더 평등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며, 하향 편향이 심한 국가에서는 소득분배가 실제보다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Norton and Ariely(2011)는 미국에서 부(wealth)의 분배 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미국인들은 불평등 수준을 실제 수준보다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와 달리 Chambers *et al.*(2014)은 미국인들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평균소득을 과소평가하고 소득불평등의 증가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한편, Niehues(2014)와 Hauser and Norton(2017)은 ISSP 데이터를 기반으로 23개국의 계층별 소득분포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지된 분포와 실제 분포 간에 차이가 있으며, 각 국가는 크게 (a) 과대평가(프랑스, 독

[그림 2-1] 인지된 소득분포와 실제 소득분포의 불일치



주: (a) 과대평가형, (b) 과소평가형, (c) 유사형에 대한 Niehues(2014)의 삽화로, 그림의 사례는 각각 프랑스, 미국, 노르웨이임.

자료: Hauser and Norton(2017)에서 재인용.

일 등), (b) 과소평가(미국, 호주 등), (c) 비교적 유사(노르웨이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그림 2-1).

이러한 소득분배 및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설사 실제 불평등 수준과 다를지라도, 재분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견해를 구성하여 재분배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연구

한국에서는 그동안 사회학 분야를 주축으로 주관적 중산층의 특성과 결정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김병조, 2000; 조동기, 2006). 이런 연구들은 대체로 객관적 소득 지위만을 가지고 중산층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 생활기회 등 비경제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계층 구분이 필요함을 역설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주관적-객관적 중산층의 불일치 문제를 다루었다.

국내에서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의 괴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최효미(2008)가 처음이다. 그는 노동패널(KLIPS)을 이용해 중위소득계층(중위소득 50~150%)과 주관적 중간층을 비교한 결과, 주관적 중간층의 비율이 중위소득계층 비율보다 높은 가운데, 응답자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객관적 지위에 비해 낮게 생각하는 경향(하향 편향 사례 49%)이 있으며, 특히 상층이 중간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위소득계층 가구 중 하류층과 중간층에 속한 가구주를 비교한 결과, 자산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가주택 보유자와 전문관리직 종사자일수록 주관적 중간층에 속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달리 말하면 반대의 경우엔 자신을 하류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준협(2013)은 독자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 현상을 분석하였는데, OECD 기준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54.9%에 달하며, 특히 남성 가구주이면서 고령층인 비정규직·자영업자에서 불일치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자 간의 괴리가 커질수록 사회경제적 불안과 불만이 확대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계층의식을 고려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송한나 외(2013)는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격차를 상대적 거리로 측정하여 그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통

해 불일치 정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자본 외에 문화자본(본인과 부모의 교육수준, 문화적 소양, 여가활동 등)과 사회자본(관계자본, 신뢰, 정치 성향 등)이 많을수록 객관적 지위보다 주관적 계층 지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교적 최근 연구인 이종희(2017)는 통계상의 중산층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체감중산층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연구 모티브로 삼았는데, 이러한 괴리는 소득 이외에 연령·직업 등의 인구사회학적 지표, 미래의 예상되는 소득 변화, 타인과 비교한 소비생활 수준, 소비 만족도 등의 주관적 지표가 중산층 인식에 유의미한 독립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안아림·마강래(2019)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준거집단 효과로 인해 객관적 소득수준보다 주관적 계층 인식이 낮아지는 하향불일치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기존 문헌들을 종합하면 주관적 중산층,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주관적 계층 인식은 실제 소득상 계층 지위와는 차이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러한 불일치의 정도와 방향은 국가마다, 시기마다, 그리고 분석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여전히 실증적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를 야기하는 원인과 관련해서는 준거집단 효과에 의한 중앙 편향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개인이 현재 처한 상황,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 정보 부족, 미디어의 영향 등 주관적 계층 인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추가로 작용하여 편향의 정도와 방향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 연구에서 이런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되거나 본격적으로 분석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좀 더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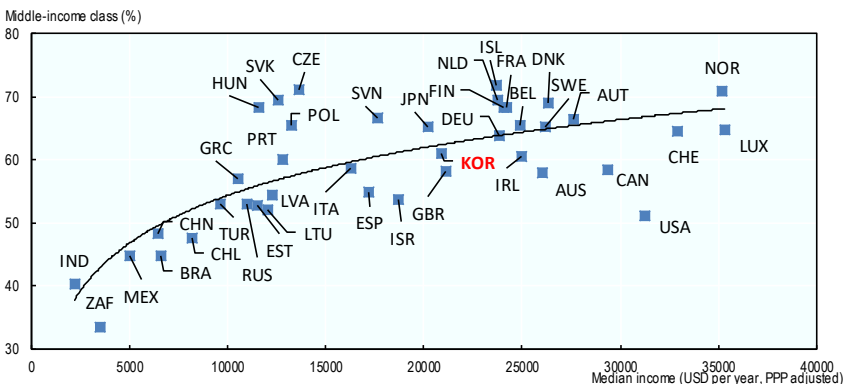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 중산층(계층)과 주관적 중산층(계층 인식) 간의 불일치 양상은 국가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본 절에서는 가능한 수준에서 국가별 양상을 비교하면서 한국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현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 규모의 비교

먼저 각국의 객관적 중산층의 규모와 주관적 중산층의 규모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OECD(2019)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이용한다.

먼저 ‘객관적 중산층’은 국가별로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사는 인구로 정의한다.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중간 소득계층(middle-income class)’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는 국가별 중위소득 수준과 중산층 비중을 도시하고 있으며, 그림에 사용된 수치는 <표 2-1>에서 보고한다.

[그림 2-2] 국가별 중위소득 수준과 중산층 비중



자료: OECD(2019)의 Figure 2.2.

<표 2-1> 국가별 중위소득과 중간소득계층 비중

(단위: PPP 기준 미국\$, %)

국가	중위소득	하한(75%)	상한(200%)	중간소득계층
룩셈부르크	LUX	35,310 (1)	26,482	70,620 64.7 (16)
노르웨이	NOR	35,206 (2)	26,404	70,411 70.8 (3)
스위스	CHE	32,886 (3)	24,664	65,771 64.5 (17)
미국	USA	31,221 (4)	23,416	62,442 51.2 (34)
캐나다	CAN	29,319 (5)	21,990	58,639 58.4 (23)
오스트리아	AUT	27,576 (6)	20,682	55,153 66.5 (11)
덴마크	DNK	26,313 (7)	19,735	52,626 69.0 (6)
스웨덴	SWE	26,179 (8)	19,634	52,357 65.2 (15)
호주	AUS	26,049 (9)	19,537	52,097 58.1 (25)
아일랜드	IRL	24,939 (10)	18,704	49,878 60.4 (20)
벨기에	BEL	24,914 (11)	18,686	49,829 65.6 (12)
프랑스	FRA	24,231 (12)	18,173	48,462 68.3 (8)
핀란드	FIN	24,029 (13)	18,021	48,057 68.3 (9)
독일	DEU	23,814 (14)	17,861	47,628 63.9 (18)
네덜란드	NLD	23,741 (15)	17,806	47,483 69.4 (5)
아이슬란드	ISL	23,660 (16)	17,745	47,320 71.9 (1)
영국	GBR	21,141 (17)	15,856	42,283 58.3 (24)
한국	KOR	20,870 (18)	15,653	41,741 61.1 (19)
일본	JPN	20,210 (19)	16,502	44,006 65.2 (14)
이스라엘	ISR	18,678 (20)	14,008	37,356 53.8 (29)
슬로베니아	SVN	17,666 (21)	13,249	35,331 66.8 (10)
스페인	ESP	17,214 (22)	12,911	34,428 55.0 (27)
이탈리아	ITA	16,274 (23)	12,206	32,549 58.6 (22)
체코	CZE	13,666 (24)	10,250	27,333 71.2 (2)
폴란드	POL	13,229 (25)	9,922	26,458 65.5 (13)
포르투갈	PRT	12,841 (26)	9,854	26,278 60.1 (21)
슬로바키아	SVK	12,586 (27)	9,439	25,172 69.5 (4)
라트비아	LVA	12,279 (28)	9,209	24,559 54.3 (28)
리투아니아	LTU	12,077 (29)	9,058	24,154 52.1 (33)
헝가리	HUN	11,609 (30)	8,707	23,219 68.4 (7)
에스토니아	EST	11,544 (31)	8,658	23,089 52.8 (32)
그리스	GRC	10,525 (33)	7,894	21,050 57.1 (26)
튀르키예	TUR	9,621 (34)	7,215	19,241 52.9 (31)

<표 2-1>의 계속

국가		중위소득		하한(75%)	상한(200%)	중간소득계층	
칠레	CHL	8,194	(35)	6,145	16,387	47.5	(36)
멕시코	MEX	5,010	(38)	3,757	10,019	44.9	(37)
러시아	RUS	10,977	(32)	8,232	21,953	53.1	(30)
브라질	BRA	6,623	(36)	4,968	13,247	44.8	(38)
중국	CHN	6,483	(37)	4,862	12,967	48.2	(35)
남아공	ZAF	3,473	(39)	2,605	6,947	33.5	(40)
인도	IND	2,209	(40)	1,656	4,417	40.2	(39)

주: 하단의 5개국은 OECD 비회원국. () 안은 순위.
 자료: OECD(2019)를 토대로 작성.

여기서 분석에 사용된 소득은 가구원 수로 조정된 표준화 처분가능소득이다. 중위소득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중위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대체로 중간소득계층(객관적 중산층)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 평균으로는 61.5%의 인구가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중위소득 수준에서 전체 분석대상 국가 중 18위에 해당하고 중산층 비중으로는 19위로 나타나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한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주관적 중산층’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을 일컫는다. 주관적 중산층의 규모는 세계가치관조사에서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수준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OECD가 사용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2017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에 수집된 수치라고 보고되어 있다. 국가별 주관적 중산층의 비중은 <표 2-2>에 수록하였으며, 표에는 앞서 소개한 중간소득계층 비중과 두 중산층 개념의 비중 격차도 함께 보고하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65.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관적 중산층 비율은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등 주요 북유럽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국민의 80% 이상이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포르투갈,

<표 2-2> OECD 국가의 주관적 중산층 및 객관적 중산층(중간소득계층)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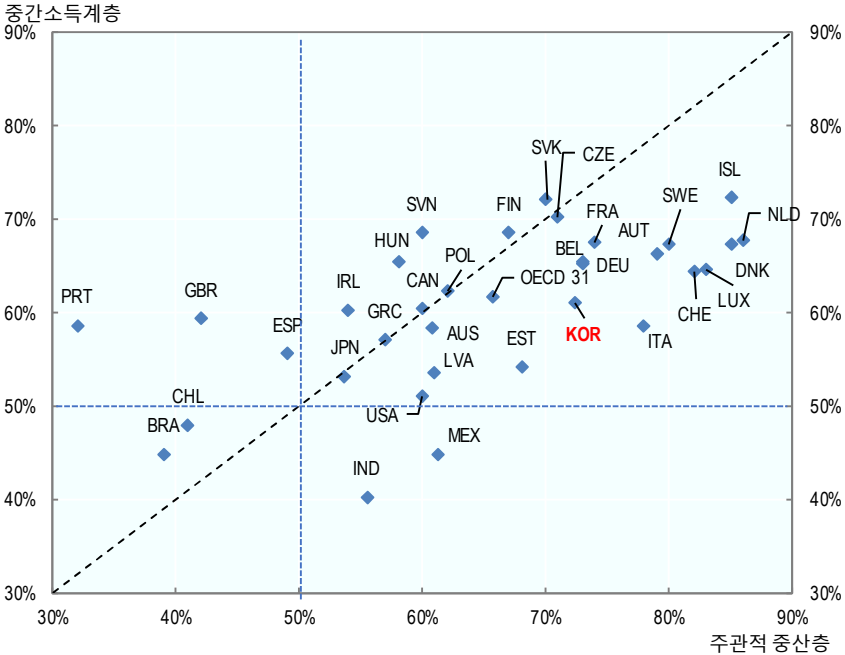
(단위: %, %p)

국가	주관적 중산층 (A)	중간소득계층 (B)	차이 (A-B)	
네덜란드	NLD	86.0	67.7	18.3
덴마크	DNK	85.0	67.3	17.7
아이슬란드	ISL	85.0	72.3	12.7
룩셈부르크	LUX	83.0	64.5	18.5
스위스	CHE	82.0	64.4	17.6
스웨덴	SWE	80.0	67.4	12.6
오스트리아	AUT	79.0	66.3	12.7
이탈리아	ITA	78.0	58.6	19.4
프랑스	FRA	74.0	67.5	6.5
벨기에	BEL	73.0	65.3	7.7
독일	DEU	73.0	65.5	7.5
한국	KOR	72.3	61.1	11.2
체코	CZE	71.0	70.3	0.7
슬로바키아	SVK	70.0	72.1	-2.1
에스토니아	EST	68.0	54.2	13.8
핀란드	FIN	67.0	68.5	-1.5
폴란드	POL	62.0	62.4	-0.4
멕시코	MEX	61.2	44.9	16.3
라트비아	LVA	61.0	53.6	7.4
호주	AUS	60.7	58.4	2.3
캐나다	CAN	60.0	60.4	-0.4
미국	USA	60.0	51.0	9.0
슬로베니아	SVN	60.0	68.5	-8.5
헝가리	HUN	58.0	65.4	-7.4
그리스	GRC	57.0	57.1	-0.1
인도	IND	55.5	40.2	15.3
아일랜드	IRL	54.0	60.3	-6.3
일본	JPN	53.7	53.2	0.5
스페인	ESP	49.0	55.6	-6.6
영국	GBR	42.0	59.3	-17.3
칠레	CHL	41.0	48.0	-7.0
브라질	BRA	39.0	44.8	-5.8
포르투갈	PRT	32.0	58.7	-26.7
OECD 31개국 평균		65.7	61.6	4.1

주: 브라질과 인도는 OECD 31개국에서 제외됨.

자료: OECD(2019).

[그림 2-3] OECD 국가의 중간소득계층과 주관적 중산층 규모의 비교



주: '중간소득계층'은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의 75~200%인 가구의 인구 비중이며, '주관적 중산층'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인구의 비중임.

자료: OECD(2019)의 Figure 1.1.

브라질, 칠레, 영국에서는 대략 국민 5명 중 2명만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은 OECD 국가의 중간소득계층 규모와 주관적 중산층 규모를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 규모 간 상당한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각선을 기준으로 하단에 놓여진 국가들은 객관적 중산층보다 주관적 중산층이 많은 국가이며, 반대로 상단에 있는 국가들은 객관적 중산층보다 주관적 중산층이 적은 국가에 해당한다. 한국은 주관적 중산층이 객관적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하단의 국가들에서는 이른바 중산층 편향(middle class bias)이 나타나

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주관적 중산층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주관적 중산층 비중이 매우 낮은 국가들에서는 객관적 중산층 가운데 일부만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어 중산층 편향을 압도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주관적 중산층 규모는 중간소득계층과 약한 상관관계만을 보여 주어 소득수준과도 상대적으로 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소득 이외에 개인들의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 예컨대 문화적·제도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주관적 중산층과 객관적 중산층의 전체 규모에서 나타나는 차이만으로는 양자 간 불일치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전체 계층 구조를 전제할 때라야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 편향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하자.

2. 소득계층 인식과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의 비교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개인들의 계층 인식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소득분배 상황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불일치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득계층 분포와 주관적 계층 분포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소득계층 분포와 주관적 계층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¹³를 이용한다. 다만, WVS를 사용해 구한 소득계층 분포는 실제의 소득분포가 아닌 10개 소득계층 중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문항¹⁴에 대한 개인들의 응답에 기초한

13 WVS는 1980년대 초반(1981~84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대략 5년 주기로 조사가 진행되어 현재 7차 조사(2017~20년)까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총 105개 국가가 동 조사에 참여하였지만, 조사차수별로 참여 국가는 약간씩 다르며 최근 차수인 7차 조사에는 64개 국가 또는 경제단위가 참여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23년 1월에 발표된 시계열 통합자료 WVS TimeSeries 1981~2022(버전 4.0)이다.

14 질문은 ‘귀하의 가구소득(월급,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은 전체 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수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각 소득계층에 10%씩 고르게 분포해야 하지만 응답에서는 다양한 분포 형태가 관찰된다. 따라서 소득계층에서도 상당 정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역시도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관적 사회계층은 ‘귀하의 가정은 현재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¹⁵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였다.

[그림 2-4]는 국가별 소득계층에 대한 인식 분포와 사회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 분포를 나란히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소득계층 분포와 사회계층 분포 모두에서 국가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소득계층 분포(좌측 그림)에서는 일부 국가(뉴질랜드,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등)를 제외하면 대체로 중앙 편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지만, 사회계층 분포(우측 그림)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층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크게 중앙 편향과 하향 편향의 양상으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 행에 표시된 한국, 독일, 스페인은 소득계층과 사회계층 모두에서 자신을 중간 정도라고 응답한 비중이 많은 국가에 해당한다. 이 중 한국과 스페인은 대다수가 중간층 중에서도 중하위층이라고 응답하여 다분히 하향 편향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행의 중국, 홍콩, 대만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계층 분포 인식에서도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득계층에서는 중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회계층에서는 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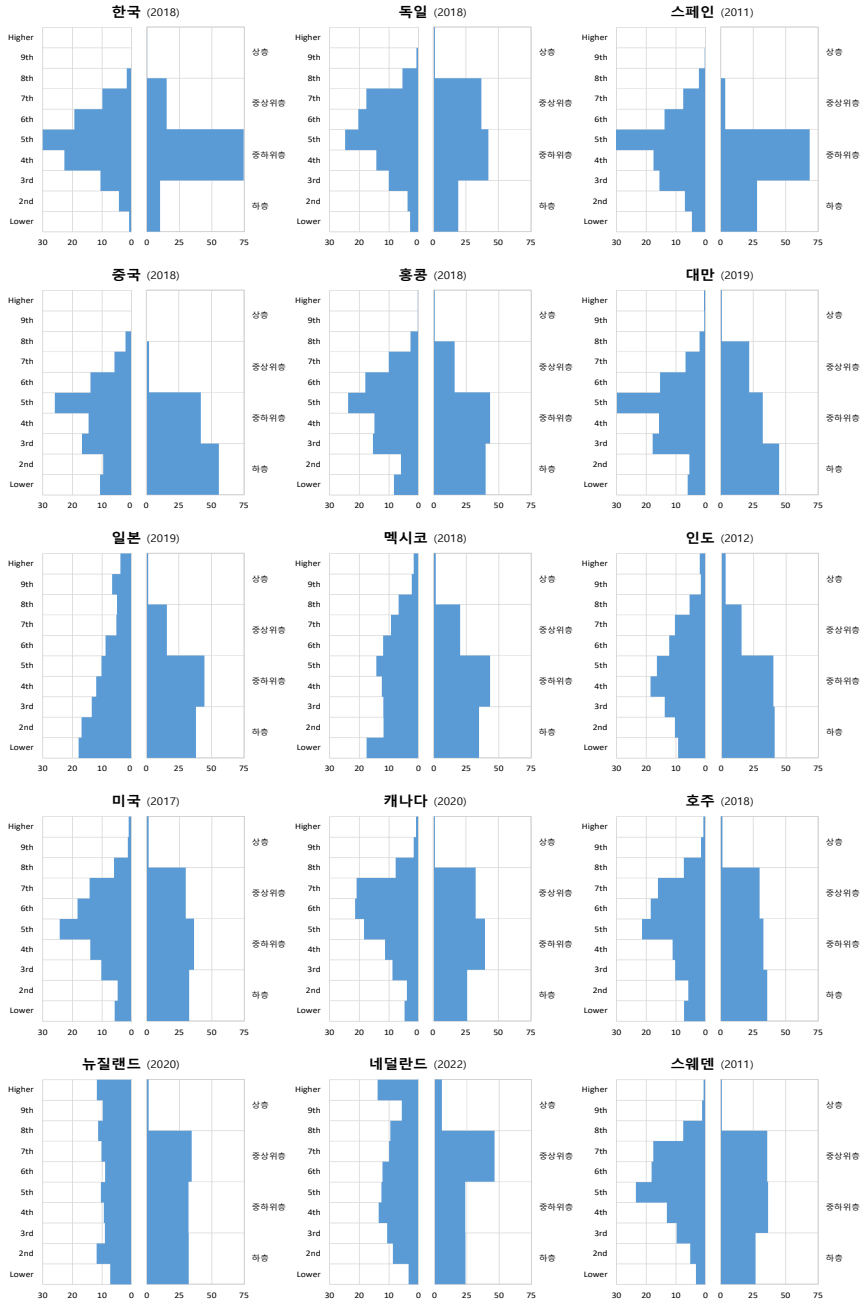
세 번째 행의 국가들은 소득계층 인식에서 중앙 편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인데, 일본, 멕시코, 인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회계층 인식에서는 하향 편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네 번째 행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영미권 국가들의 계층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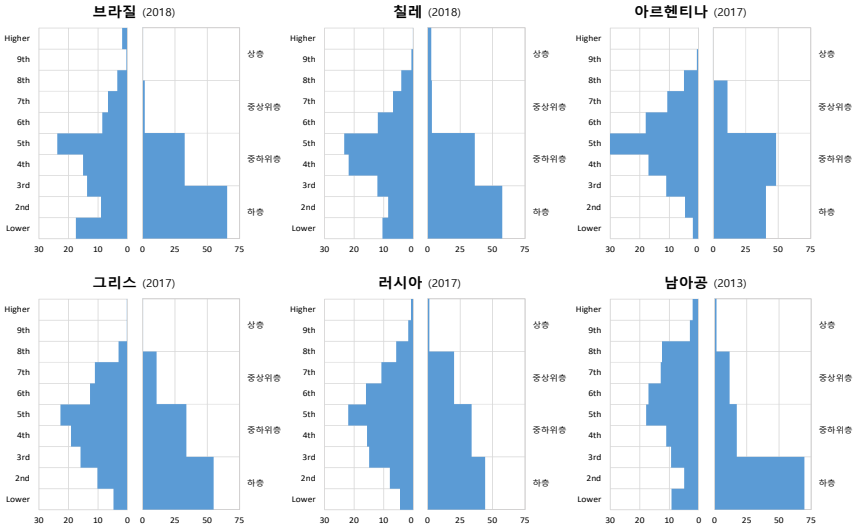
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며 10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15 해당 질문의 선택지는 1. 상층, 2. 중상위층, 3. 중하위층, 4. 일용직 근로자, 5. 하층으로 되어 있으며, 분석에서는 4와 5를 한데 묶어 하층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2-4] 소득계층 분포와 주관적 사회계층 분포



[그림 2-4]의 계속



주: 좌측은 소득계층(10단계) 분포, 우측은 사회계층(4단계) 분포를 보여주며, 스웨덴, 스페인, 인도, 남아공은 6차 조사, 나머지 국가들은 7차 조사를 이용해 산출함.
 자료: World Values Survey, WVS TimeSeries 1981~2022(버전 4.0).

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득계층에서는 자신을 중간계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다소 높지만, 사회계층에서는 상층을 제외하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갖는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 행에는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국가들은 계층 인식의 편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뉴질랜드와 네덜란드에서는 소득계층 분포가 매우 고르게 나타나며, 스웨덴에서도 중앙 편향의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에서도 상층인 사람들 상당수가 자신을 상층이 아닌 중상위층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계층 인식에서의 편향도 전반적으로 적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페이지에 표시된 6개 국가는 사회계층 인식에서 하향 편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들로 분류할 수 있다. 전체적인 계층 분포의 모습은 중국의 유형과도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응답자가 인식하는 소득계층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국가를 제외하면 대체로 중앙 편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제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자신을 중간소득계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계층 인식에서는 중앙 편향보다는 하향 편향이 더 일반적인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층은 거의 없어 이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사회계층상 중간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가별로 정도 차는 있지만, 사회의 중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의 경우는 소득계층 인식에서 중앙 편향이 매우 두드러진 국가 중 하나로 파악되며, 반면에 주관적 사회계층 분포에서는 대부분(74.5%)이 자신을 중하위층에 귀속시키고 있어 중앙 편향과 하향 편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의 방향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다음 절의 분석 주제가 될 것이다.

제4절 한국인의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객관적 계층구조와 주관적 계층구조 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전체 규모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층이 서로 다른 그룹을 대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과연 한국인들은 자신의 사회계층을 객관적인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에서의 불일치는 어떤 특징을 가지며 왜 발생하는 것일까?

앞 절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제한된 정보만을 사용해 계층 인식에서 편향의 존재를 확인하였지만,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서의 불일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하고 엄밀한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객관적 계층구조와 주관적 계층구조를 각각 따로 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두 계층을 직접 교차해 살펴보는 것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의 예를 들어보자. 객관적 중산층(혹은 중간소득계층)은 통상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정확한 소득 정보와 가구원 수 정보가 필요하며, 여기에 개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정보까지 있어야 객관적 범주와 주관적 범주의 비교가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는 국내에서 한국노동패널(KLIPS) 정도가 고작이다.

저자는 본 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이하 KDI 계층인식조사)¹⁶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객관적 계층 지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독창적인 방식의 설문을 고안했다. 먼저 소득 및 자산 정보를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식 대신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하되,¹⁷ 국가 통계(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확인되는 가구원 수별 소득 및 자산 10분위수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각기 다른 구간을 제시함으로써 소득/자산 구간의 선택이 곧바로 계층 분위의 선택과 일치되도록 하였다.¹⁸ 한편, 상위 20%에 대해서는 소득(자산) 20분위수를 이용하여 구간을 더 세분화함으로써 상위층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소득 및 자산 계층 분포는 <표 2-3> 및 <표 2-4>와 같다. 여기서 10분위 구간별 분포만 제시하며, 가중치가 반영된 수치이다.¹⁹ 이론적으로 각 계층에 10%씩의 인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소득 하위층(1, 2분위)과 최상위층(10분위)이 다소 적게 반영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표본의 대표성이 대체로 유지되었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16 본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수록된 조사 개요와 설문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17 일회적인 설문조사에서 주관식으로 기입하게 한 소득/자산 정보는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가구소득은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이며, 연간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판단하게 하였다. 한편, 자산은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액을 제외한 순자산으로 측정하였다. 소득 및 자산 분위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부록 B의 설문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9 본 장에서 제시된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1차 조사 가중치가 반영된 것이다.

<표 2-3> 가구원 수별 소득계층 분포

(단위: %, 명)

소득계층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전체
0~10%	10.4	3.8	2.0	1.2	2.9	3.4
10~20%	5.6	5.3	5.2	4.1	4.6	4.9
20~30%	5.9	10.4	9.1	7.9	15.4	8.9
30~40%	14.8	11.6	11.6	10.0	16.6	11.9
40~50%	15.5	9.8	10.7	13.1	17.9	12.3
50~60%	13.7	12.0	12.1	14.9	8.5	13.0
60~70%	14.7	15.0	14.0	11.3	13.0	13.4
70~80%	8.1	14.8	13.7	15.8	5.9	13.3
80~90%	6.2	11.8	11.9	14.1	3.8	11.3
90~100%	5.1	5.4	9.6	7.6	11.3	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481)	(731)	(974)	(1,041)	(206)	(3,434)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2-4> 가구원 수별 자산계층 분포

(단위: %, 명)

자산계층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전체
0~10%	23.7	14.0	11.9	10.7	11.7	13.6
10~20%	16.7	10.8	10.2	9.0	16.8	11.3
20~30%	13.5	10.0	10.4	11.3	18.8	11.5
30~40%	8.5	10.3	9.4	8.1	8.9	9.0
40~50%	9.5	8.3	9.1	10.2	6.4	9.2
50~60%	6.5	10.7	9.3	16.6	12.0	11.6
60~70%	6.5	7.8	7.4	7.7	7.7	7.5
70~80%	2.9	10.7	9.5	10.8	5.6	9.0
80~90%	6.4	9.2	12.2	8.6	5.5	9.3
90~100%	5.7	8.2	10.5	7.0	6.6	8.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481)	(731)	(974)	(1,041)	(206)	(3,434)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2-5> 가구원 수별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단위: %)

자산계층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전체
상상	0.4	0.8	0.8	0.6	0.5	0.7
상하	2.7	2.1	3.1	1.8	0.9	2.3
중상	13.9	20.0	21.5	23.6	21.9	20.8
중하	44.4	50.3	47.9	52.4	53.7	49.6
하상	21.5	17.1	18.1	14.9	16.2	17.3
하하	17.0	9.7	8.6	6.8	6.8	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N=3,434)

한편, 주관적 계층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 직업, 학력, 재산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으며, 계층 구분은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동일하게 ‘상상-상하-중상-중하-하상-하하’의 6개 범주로 제시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는 <표 2-5>에 요약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전 가구 기준으로 주관적 상층은 3.0%, 주관적 중층은 70.4%, 주관적 하층은 26.7%의 구성비를 보인다. 2022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상층 3.0%, 중층 61.6%, 하층 35.4%로 파악된 것과 비교하면 중층은 다소 많게, 하층은 다소 적게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상층이 매우 적고 중간층이 과다하게 포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모습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 10분위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두 정보를 이용해 객관적 계층 지위와 계층의식 간 괴리를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음영 처리된 부분은 객관적 중산층을 중위 60%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간주할 때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인식이 일치하는 부분을 표시하며, 그 외 영역은 불일치하는 사례로 파악된다.

중산층에 주목해 표를 재구성하면 <표 2-7>로 집약된다. 객관적 중산층은 72.8%, 주관적 중산층은 70.4%로 파악되어, 1,761명(51.3%)만이 두 기준에서 일치된 중산층으로 파악되며, 1,396명(40.7%)은 어느 한 기준에서만 중산층에 포함되고 있다.

<표 2-6> 소득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비교

(단위: 명)

소득계층	주관적 계층의식						계
	하하	하상	중하	중상	상하	상상	
0~10%	50	22	32	8	4	0	117
10~20%	46	48	63	7	4	0	169
20~30%	58	81	139	22	5	1	307
30~40%	44	106	197	53	5	1	407
40~50%	33	89	237	55	7	3	424
50~60%	18	73	245	93	12	3	445
60~70%	30	69	262	88	8	4	461
70~80%	20	60	236	133	8	1	457
80~90%	13	30	188	140	10	4	386
90~100%	8	14	105	113	15	5	261
계	322	593	1704	713	79	23	3,434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2-7> 객관적 중산층(소득 기준)과 주관적 중산층의 불일치

(단위: 명, %)

		주관적 계층의식			
		하	중	상	계
소득	하(0~20%)	167 (4.9)	110 (3.2)	8 (0.2)	285 (8.3)
	중(20~80%)	682 (19.9)	1,761 (51.3)	58 (1.7)	2,501 (72.8)
	상(80% 이상)	66 (1.9)	546 (15.9)	35 (1.0)	647 (18.8)
	계	915 (26.7)	2,417 (70.4)	101 (3.0)	3,434 (100.0)

주: () 안은 총인원(3,434명) 대비 구성비.

가중치가 반영되어 반올림된 수치이므로 <표 2-6>의 단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자산 기준을 이용해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면(표 2-8), 두 기준에서 일치하는 중산층 그룹은 1,441명(42.0%), 불일치 중산층 그룹은 1,520명(44.3%)으로 일치 사례는 줄고 불일치 사례는 더 늘어난다.

한편, 소득 순위와 자산 순위를 비교해보면 개략적인 양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만(그림 2-5), 상관계수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다($r=0.4195$).

<표 2-8> 객관적 중산층(자산 기준)과 주관적 중산층의 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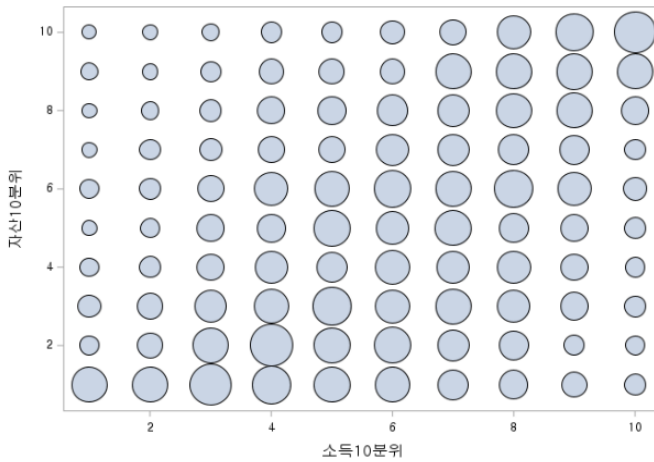
(단위: 명, %)

		주관적 계층의식							
		하		중		상		계	
자 산	하(0~20%)	376	(10.9)	457	(13.3)	22	(0.6)	855	(24.9)
	중(20~80%)	501	(14.6)	1,441	(42.0)	42	(1.2)	1,984	(57.8)
	상(80% 이상)	38	(1.1)	519	(15.1)	37	(1.1)	595	(17.3)
	계	915	(26.7)	2,417	(70.4)	101	(3.0)	3,434	(100.0)

주: () 안은 총인원(3,434명) 대비 구성비.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그림 2-5] 소득 10분위 분포와 자산 10분위 분포의 비교



주: 원의 크기는 관측치 수를 반영함. 두 지표 간의 상관계수는 0.4195.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KDI 계층인식조사가 개인 대상 조사이고 가구주가 아니면 가구 전체의 자산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산 정보는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하기보다 계층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5절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의 결정요인

이제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자. 이는 개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떤 요인들이 객관적인 경제 여건과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예비적으로 6단계로 측정된 주관적 계층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 OLS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9>에 보고되어 있다.

모형 (1)은 10분위로 측정된 가구의 소득 및 자산 계층, 가구원 수, 응답자 개인의 소득, 자산 및 취업 여부 등 가구와 개인의 경제 여건을 보여주는 요인들만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구의 경제적 여건과 독립적으로 응답자 자신의 경제 상황도 주관적 계층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소득이나 보유 자산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도 계층 인식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구의 소득 및 자산 10분위의 판단에 이미 가구원 수가 반영된 표준화 소득 및 자산이 고려되었음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설명력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모형 (2)에는 성, 연령, 교육수준이 설명변수로 추가되었는데, 남성보다는 여성, 청년층, 그리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계층 인식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체계적으로 주관적 계층 지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변수들은 다른 설명변수가 추가된 모형에서도 계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모형 (3)에는 인적 관계망의 특성을 대리하는 세 변수(긍정적 인맥, 부정적 인맥, 사회지도층 인맥)²⁰를 추가하였는데, 긍정적 인맥과 사회지도층 인맥은 계층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정적 인맥은 계층 인식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 세 변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9>의 주에 설명되어 있다.

<표 2-9> 주관적 계층의식(6단계)의 결정요인-OLS 모형

	종속변수: 주관적 계층(6단계)			
	(1)	(2)	(3)	(4)
상수항	1.603 (0.080)**	1.458 (0.090)**	3.024 (0.201)**	3.111 (0.202)**
소득10분위	0.080 (0.007)**	0.066 (0.007)**	0.060 (0.007)**	0.061 (0.007)**
자산10분위	0.057 (0.007)**	0.057 (0.007)**	0.056 (0.007)**	0.047 (0.007)**
가구원 수	0.047 (0.013)**	0.046 (0.013)**	0.044 (0.012)**	0.029 (0.013)*
개인소득	6E-04 (0.000)**	7E-04 (0.000)**	7E-04 (0.000)**	7E-04 (0.000)**
개인자산	4E-06 (0.000)**	4E-06 (0.000)**	4E-06 (0.000)**	4E-06 (0.000)**
취업 여부	0.124 (0.039)**	0.086 (0.039)*	0.070 (0.039)+	0.067 (0.039)+
여성		0.085 (0.031)**	0.077 (0.031)*	0.083 (0.031)**
20대		0.334 (0.048)**		
30대		0.042 (0.046)		
50대		-0.055 (0.042)		
60대 이상		0.085 (0.046)+		
연령			-0.061 (0.009)**	-0.060 (0.009)**
연령제곱			6E-04 (0.000)**	6E-04 (0.000)**
중졸 이하		-0.287 (0.156)+	-0.264 (0.155)+	-0.285 (0.155)+
초대졸		0.069 (0.048)	0.052 (0.048)	0.056 (0.048)
대졸		0.169 (0.039)**	0.137 (0.040)**	0.145 (0.040)**
대학원 이상		0.310 (0.059)**	0.254 (0.059)**	0.262 (0.059)**
긍정적 인맥			0.030 (0.015)+	0.030 (0.015)*
부정적 인맥			-0.038 (0.012)**	-0.038 (0.012)**
사회지도층			0.150 (0.034)**	0.152 (0.034)**
자가 보유				0.123 (0.035)**
정치 성향				-0.021 (0.007)**
Adj R-Sq	0.212	0.237	0.246	0.250

주: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N=3,434).

1. 개인의 소득과 자산은 응답 구간의 중간값을 사용, 연속변수로 취급함.
2. 연령 및 교육수준 더미변수에서 기준은 40대, 고졸임. 각 교육수준에 재학생도 포함.
3. 긍정적 인맥은 지인 네트워크에 관한 문항에서 (1), (3), (5), (7)에 동의한 응답 횟수, 부정적 인맥은 (2), (4), (6), (8)에 동의한 응답 횟수, 사회지도층은 (9)의 더미로 측정
 - (1) 서울의 강남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
 - (2) 무주택자로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다.
 - (3) 최근 3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있다.
 - (4)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받은 사람이 있다.
 - (5)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의 투자로 돈을 크게 번 사람이 있다.
 - (6)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의 투자로 돈을 크게 잃은 사람이 있다.
 - (7) 부동산 투자로 돈을 크게 번 사람이 있다.
 - (8) 부동산 투자로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
 - (9) 지인 중 사회지도층(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법조계, 언론인, 대학교수 등)이 있다.
4. 정치 성향은 보수적(0)~진보적(10)에 대한 응답 수치.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모형 (4)에는 자가 보유 여부와 응답자의 정치 성향을 추가하였다. 여기서 정치 성향은 보수 0, 진보 10의 사이에서 응답자가 스스로 보고한 성향을 의미한다. 예상대로,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층 인식에 낙관적 태도가 나타나며, 반대로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계층 인식에 하향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표 2-9>의 모형은 암묵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동일한 영향요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하층과 중층, 중층과 상층 사이의 계층 인식에서 각 요인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다분히 비현실적인 가정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선형성을 고려하는 모형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는 하층-중층-상층의 3단계 계층에서 개인이 중층을 기준으로 하층 혹은 상층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판별하는 다항로짓 모형을 상정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10>에 제시되어 있으며, 사용된 설명변수들은 앞의 <표 2-9>와 동일하다. 분석 결과에 대해 방향성 위주로 해석하고 정량적인 해석은 하지 않기 때문에 다항로짓 모형의 오즈비(Odds Ratio) 추정치는 보고에서 생략한다.

우선 하층과 중층을 가르는 데는 가구의 소득 및 자산은 물론 개인의 소득 및 자산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호의 방향은 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모두 일치한다. 하지만 중층과 상층을 구분하는 데는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소득의 영향도 유의하지 않다. 다만, 개인의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상층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아진다.

개인의 취업 여부는 하층과 중층 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층과 상층 간에서는 상층으로 인식할 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구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본인이 미취업 상태에 있는 개인은 자신을 부유층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관적 인식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하층이나 상층보다는 중층으로 인식할 확

<표 2-10> 주관적 계층의식(3단계)의 결정요인 - 다항로지 모형

	종속변수: 주관적 계층(3단계)	
	하층 vs 중층	상층 vs 중층
상수항	1.890 (0.314) **	-3.793 (0.756) **
소득 10분위	-0.158 (0.023) **	0.042 (0.056)
자산 10분위	-0.095 (0.022) **	-0.038 (0.054)
가구원 수	-0.115 (0.040) **	-0.191 (0.098) +
개인소득	-0.002 (0.000) **	1E-03 (0.001)
개인자산	-2E-05 (0.000) **	8E-06 (0.000) +
취업 여부	0.016 (0.120)	0.922 (0.273) **
여성	-0.292 (0.096) **	0.019 (0.234)
20대	-0.818 (0.148) **	0.756 (0.373) *
30대	-0.157 (0.137)	-0.191 (0.443)
50대	0.113 (0.131)	0.181 (0.345)
60대 이상	-0.080 (0.146)	0.253 (0.357)
중졸 이하	0.090 (0.431)	0.491 (1.085)
초대졸	-0.220 (0.133) +	-0.534 (0.386)
대졸	-0.598 (0.113) **	-0.668 (0.288) *
대학원 이상	-0.867 (0.207) **	-0.304 (0.369)
긍정적 인맥	-0.026 (0.048)	0.140 (0.108)
부정적 인맥	0.084 (0.038) *	-0.098 (0.090)
사회지도층 인맥	-0.146 (0.111)	0.709 (0.239) **
자가 보유 여부	-0.434 (0.103) **	-0.358 (0.268)
진보적 정치 성향	0.078 (0.022) **	-0.125 (0.048) **
하층 915 / 중층 2,419 / 상층 100		
N = 3,434 / -2 Log L = 4822.6		

주: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2) 변수 설명은 <표 2-9>와 동일.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구원 수의 증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계층 상승의 요건일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 상층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자산에서 높은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과 청년층은 계층 인식에서 낙관적인 태도, 즉 동일한 조건에서 하층보다는 중층, 중층보다는 상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

악되어, 앞서 OLS 모형의 분석과도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중층-상층 간에는 이러한 효과가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하층보다는 중층으로 인식할 확률을 체계적으로 높이지만 중층 대신 상층으로 인식할 확률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부호가 나타나고 있어(대졸자에서는 5% 수준에서 유의하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높은 교육수준은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오히려 낮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계층 인식에서 인맥의 효과를 살펴보면, 부호의 방향은 OLS 결과와 동일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낮아지거나 사라졌다. 다만, 부정적 인맥은 하층으로 인식할 확률을 높이고, 사회지도층 인맥은 상층으로 인식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자가 보유 여부는 중층과 하층 간에는 유의미한 변별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중층-상층 간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내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중산층의 조건일 뿐, 상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은 동일한 조건에서 중층보다는 하층, 상층보다는 중층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자신의 계층 지위를 체계적으로 더 낮게 보도록 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으로, 현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10년 뒤의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부모·이웃·지인과의 상대 비교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 변수들이 계층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자. 현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10년 후 개선 기대’는 ‘10년 뒤, 귀하의 생활수준이 현재와 비교해서 어떤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나빠질 것(1), 비슷할 것(2), 좋아질 것(3)으로 응답한 내용이다. 세 가지의 상대적인 비교 질문은 응답자의 생활수준을 첫째, 부모가 응답자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둘째, 주위 지역주민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비교해서, 셋째, 주로 만나는 지인들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것으로, ‘과거 부모와의 비교’는 5

점 척도(훨씬 나빠짐=1, ... 훨씬 좋아짐=5), 그리고 ‘이웃과의 비교’ 및 ‘지인과의 비교’는 3점 척도(상대적으로 낮다=1, ... 상대적으로 높다=3)로 측정되었다.

이상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개인 인식 지표를 앞의 계층의식 결정요인 모형에 추가해 다항로짓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2-11>에 수록하였다. 앞의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계수 크기와 유의도 면에서 다소의 변화만 있을 뿐, 대체로 동일한 부호를 보여주고 있다.

추가한 인식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의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주관적 계층 인식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계층을 하층보다는 중층으로, 중층보다는 상층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현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주관적 계층 인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10년 뒤 생활수준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하층-중층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중층-상층 간에서는 뚜렷한 변별력이 없다. 즉, 장래 전망은 중산층과 하층을 나누는 경계에서 주효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기준 그룹과의 상대적 비교 인식은 계층 인식의 판단에 다소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부모와의 비교 변수는 하층-중층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중층과 상층 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과거 부모와 비교해서 생활수준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계층을 상층보다는 중층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해석하면 과거에 생활수준이 크게 상승하여 중산층이 된 사람들은 아무리 부유해지더라도 스스로를 상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주변 이웃이나 지인과 비교해서 상대적 우위를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자신의 계층을 더 높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준거집단 이론에 의한 설명과도 일치한다. 또한 지인보다는 이웃과의 비교가 더 유의하게 작용하며, 지인과의 비교는 중층-상층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11> 주관적 계층의식(3단계)의 결정요인 - 개인 인식 포함

	종속변수: 주관적 계층(3단계)	
	하층 vs 중층	상층 vs 중층
상수항	5.229 (0.409) **	-4.212 (0.929) **
소득 10분위	-0.104 (0.025) **	0.036 (0.056)
자산 10분위	-0.037 (0.024)	-0.045 (0.054)
가구원 수	-0.125 (0.043) **	-0.186 (0.099) +
개인소득	-0.002 (0.000) **	0.001 (0.001)
개인자산	-2E-05 (0.000) **	7E-06 (0.000)
취업 여부	0.056 (0.129)	0.890 (0.276) **
여성	-0.219 (0.104) *	-0.011 (0.239)
20대	-0.430 (0.159) **	0.654 (0.377) +
30대	0.022 (0.149)	-0.283 (0.445)
50대	-0.104 (0.143)	0.219 (0.353)
60대 이상	-0.334 (0.160) *	0.264 (0.368)
중졸 이하	0.073 (0.468)	0.410 (1.103)
초대졸	-0.291 (0.145) *	-0.647 (0.391) +
대졸	-0.755 (0.123) **	-0.701 (0.291) *
대학원 이상	-0.798 (0.224) **	-0.396 (0.372)
긍정적 인맥	-0.013 (0.052)	0.149 (0.108)
부정적 인맥	0.002 (0.041)	-0.082 (0.091)
사회지도층 인맥	-0.105 (0.120)	0.642 (0.243) **
자가 보유 여부	-0.322 (0.112) **	-0.405 (0.275)
정치 성향	0.071 (0.024) **	-0.112 (0.048) *
현 생활수준 만족도	-0.454 (0.057) **	0.250 (0.128) +
10년 후 개선 기대	-0.147 (0.072) *	-0.217 (0.176)
과거 부모와의 비교	-0.093 (0.061)	-0.431 (0.141) **
이웃과의 비교	-0.830 (0.103) **	0.531 (0.232) *
지인과의 비교	-0.457 (0.092) **	0.133 (0.226)
하층 915 / 중층 2,419 / 상층 100		
N = 3,434 / -2 Log L = 4822.6		

주: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2) 기준 변수 설명은 <표 2-9>와 동일. 추가 변수 중 '현 생활수준 만족도'는 5점 척도(매우 만족=5), '10년 후 개선 기대'는 3점 척도(3=좋아질 것), '과거 부모와의 비교'는 5점 척도(훨씬 좋아짐=5), 그리고 '이웃과의 비교' 및 '지인과의 비교'는 3점 척도(상대적으로 높다=3)로 측정됨.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제6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소득수준으로 파악하는 객관적 중산층과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 중산층이 불일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그 양상과 원인에 대해 살펴 보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객관적 조건에 의한 계층 구분과 자신이 평가하는 주관적 계층 인식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또한 사람들은 소득으로 살펴본 계층 지위를 물었을 때와 일반적인 사회계층을 물었을 때도 매우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 기준의 계층 인식보다는 일반적 의미의 사회계층 인식에서 불일치 정도가 크게 나타나, 사회계층을 판단할 때 소득 이외의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 불일치의 정도와 방향은 국가마다, 시기마다,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공통되는 점은 자신을 상층으로 보는 개인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즉, 객관적 상층의 상당수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관적’ 중산층에는 ‘객관적’ 상층의 다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산층과 하층을 나누는 경계 지점에서는 국가별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부 국가에서는 하층의 상당수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중앙 편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예: 독일, 스웨덴), 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중산층의 일부가 자신을 하층으로 간주하는 계층 하향화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예: 중국, 브라질). 전자의 경우는 주관적 중산층과 객관적 중산층 간 대표성에서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후자의 경우는 주관적 중산층이 객관적 상층과 중산층 상층부를 포함하여 대표성에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개인들의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는 준거집단 효과에 의한 중앙 편향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 정보 부족, 미디어의 영향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불일치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KDI 계층인식조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주관적 계층구조를 재구성해 보면 상상 0.7%, 상하 2.3%, 중상 20.8%, 중하 49.6%, 하상 17.3%, 하하 9.3%로 나타나, 상층은 매우 적고 중간층이 많지만 아래쪽으로 치우친 전형적인 호리병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 상층의 일부는 주관적 중산층으로, 객관적 중산층 일부는 주관적 하층으로 편입된 구조인 셈이다.

한국에서 개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구의 경제적 여건과 독립적으로 응답자 자신의 경제 상황(취업 여부, 개인의 소득 및 자산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성,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 특성도 체계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계층 인식을 보여주며, 고학력자들은 자신을 상층이나 하층이 아닌 중산층으로 보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그 외에도 사회적 인맥, 자가 보유 여부, 정치 성향 등도 계층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 인맥의 효과는 대체로 양(+), 부정적 인맥의 효과는 대체로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가 보유 여부는 중층과 하층 간에는 유의미한 변별 기준이 되지만 중층-상층 간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보적인 정치 성향은 자신의 계층 지위를 체계적으로 더 낮게 보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현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10년 뒤의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부모·이웃·지인과의 상대 비교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도 주관적 계층 인식에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객관적 계층 지위와 다른 주관적 계층의식을 구성하도록 작용하여 총체적으로 한국에서 호리병 구조의 계층 인식이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 주관적 중산층이 객관적 중산층보다 상층에 더 가까운 인적 구성을 갖도록 한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한국 중산층의 다층화

황 수 경 (한국개발연구원)

제1절 '사회경제 계층'의 재구성

우리는 앞서 한국 사회에서 소득 순위로 파악되는 객관적 중산층과 자신이 인식하는 주관적 중산층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며,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서 체계적인 하향편의가 존재하여 주관적 중산층은 객관적 중산층보다 상층에 더 가까운 인적 구성을 취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보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중산층 논의와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중산층 논의가 상충적일 수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기준에 의한 중산층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을 실질적인 하나의 범주로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경제적 지위를 가진 다층적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이 실체에 더 근접한 이해 방식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장에서는 주관적/객관적 계층 기준을 결합한 새로운 계층 범주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중산층이 다양한 범주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제2장에서 개략적으로 소개된 바 있는 KDI 계층인식조사를 이용하면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결합한 계층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 교차 분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표 3-1>은 앞의 <표 2-7>을 재정리한 것이다.

<표 3-1> 객관적 소득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비교

(단위: 명, %)

		주관적 계층의식			
		상	중	하	계
소득 계층	상(80% 이상)	35 (1.0)	546 (15.9)	66 (1.9)	647 (18.8)
	중(20~80%)	58 (1.7)	1,761 (51.3)	682 (19.9)	2,501 (72.8)
	하(0~20%)	8 (0.2)	110 (3.2)	167 (4.9)	285 (8.3)
	계	101 (3.0)	2,417 (70.4)	915 (26.7)	3,434 (100.0)

주: () 안은 총인원(3,434명) 대비 구성비. 객관적 중산층은 소득 중위 60%로 가정.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3-2> 주관적 계층의식에 소득 기준을 결합한 계층 구분

		주관적 계층의식			구분	빈도(명)	구성비(%)	
		상	중	하				
소득	상	상층	심리적 비상층		⇒	상층	101	3.0
	중		핵심 중산층	심리적 비상층		612	17.8	
	하			취약 중산층		1,871	54.5	
			하층	취약 중산층		682	19.9	
					하층	167	4.9	
					계	3,434	100.0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주관적 계층의식에서의 하향 편향을 염두에 두고 주관적/객관적 기준을 고려하기 위해, 계층 불일치 그룹 가운데 주관적 계층의식이 소득계층보다 낮은 그룹을 별도 그룹으로 분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층과 소득 중층에서 자신의 계층 지위를 더 낮게 인식하는 그룹을 각각 ‘심리적 비상층’, ‘취약 중산층’이라는 별도의 계층 범주로 파악한다. 구체적인 구분 방법은 <표 3-2>에 요약되어 있다.

이 중 중산층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이 되어야 하는 계층 범주는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일 것이다. ‘심리적 비상층’은 소득 기준으로 상층에 속하지만 스스로를 상층으로 보지 않는 그룹을 망라하며,²¹ ‘핵심 중산층’은 심리적 비상층을 제외하고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21 소득 상층이면서 주관적으로 하층으로 인식하는 사례 수(1.9%)가 많지 않아 하나의 범

여기는 그룹이며,²² ‘취약 중산층’은 소득 기준으로는 중층에 해당하나 자신을 하층으로 간주하는 그룹을 지칭한다. 이들 각 그룹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어떤 이유로 객관적 계층 지위와 다른 (특히 하향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가지는지, 그리고 각 그룹이 사회경제적 인식 및 정책 태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가 이하의 주된 분석 주제가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주관적/객관적 조건을 결합하여 범주화한 다섯 개의 계층—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그리고 하층—을 ‘사회경제 계층’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제2절 사회경제 계층별 주요 특성

1. 인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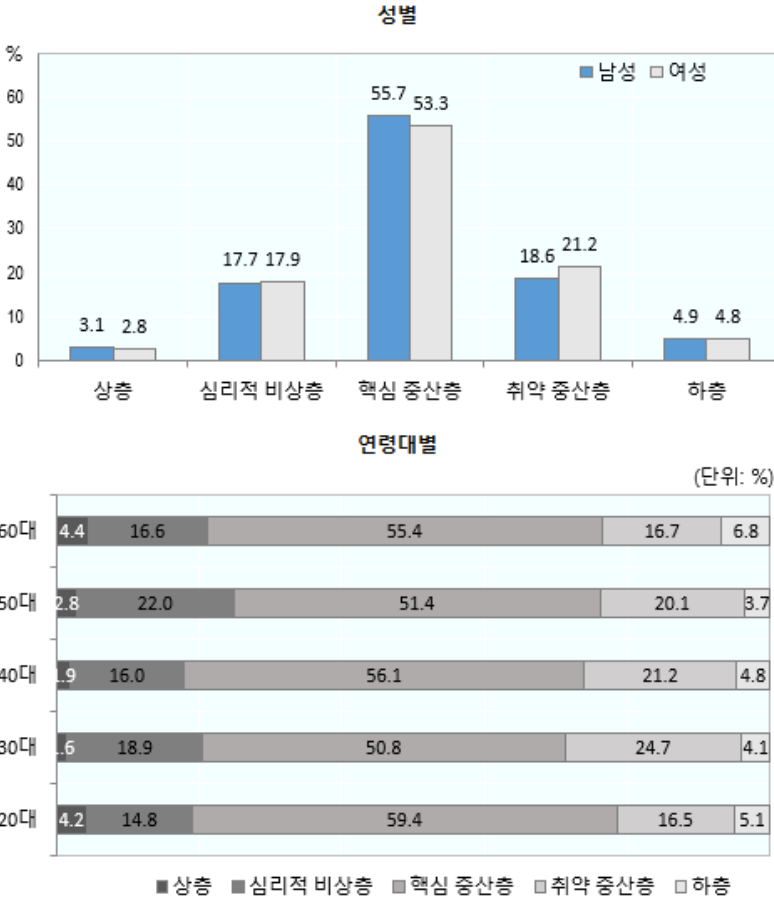
먼저 앞 절에서 구성한 사회경제 계층이 개인의 인적 특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여기서 제시된 통계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두 가중치가 반영된 수치이다.

우선 응답자 성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으나, 연령대별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그림 3-1). 20대에서는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의 비율이 가장 낮고 핵심 중산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30대에서는 반대로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의 비율이 크게 늘고 핵심 중산층의 비율이 쪼그라든다. 20대의 계층 인식에서 불일치 그룹이 적다는 것은 본인이나 가족의 객관적 조건 외에 주변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

주로 포괄하였지만, 두 그룹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자신을 중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른 것은 주로 학력인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전자에 비해 대졸보다는 고졸이나 전문대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많았다. 따라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는 두 그룹을 분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후자를 제외할 경우 이 그룹은 ‘엘리트 중산층’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22 ‘핵심 중산층’에는 소득은 하층으로 분류되지만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경우(107명)를 포함하는데, 이들 중에는 미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아(110명 중 61명) 가구소득을 적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 3-1] 성, 연령대별 사회경제 계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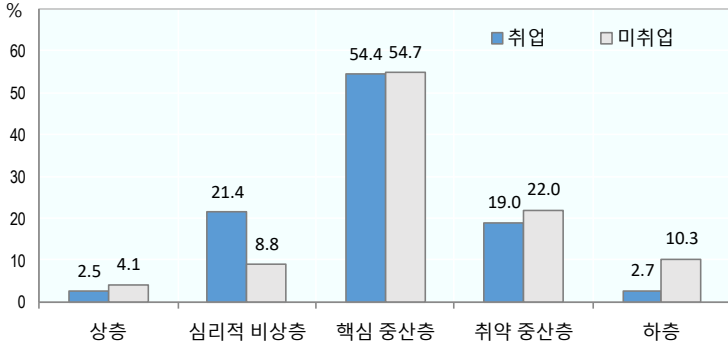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30대부터는 사회생활에 본격적으로 노출되면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축적된 자산이 없다고 느끼면서 불일치 그룹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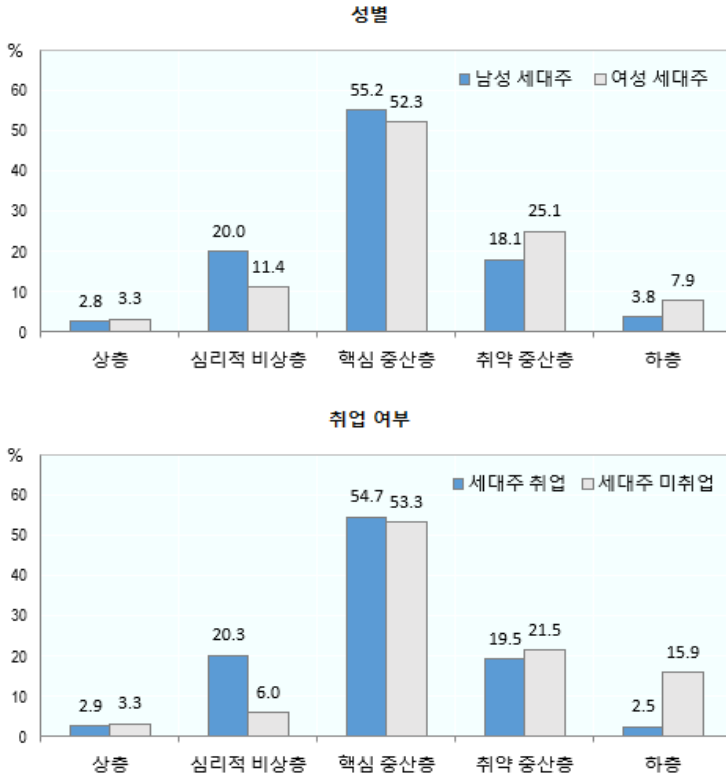
본인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계층 구성에 차이를 보이는데(그림 3-2), 미취업자에서 심리적 비상층이 적고 취약 중산층 혹은 하층이 크게 증가한다. 이는 실제 미취업자의 객관적 소득 지위가 낮은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림 3-2] 본인의 취업 여부별 사회경제 계층 분포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그림 3-3] 세대주의 성별 및 취업 여부별 사회경제 계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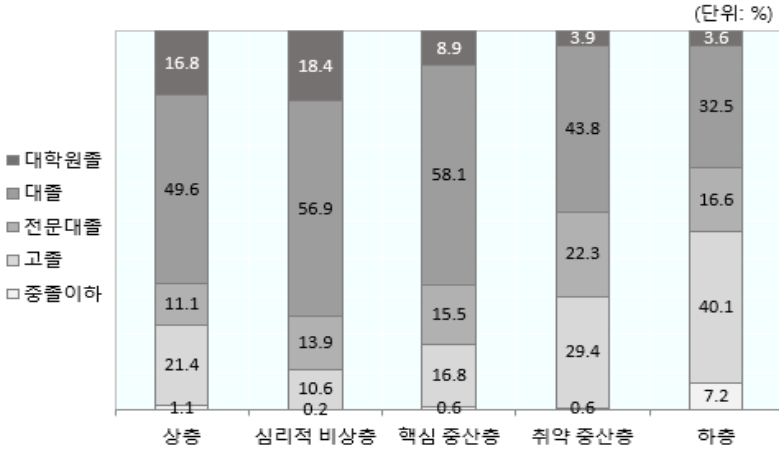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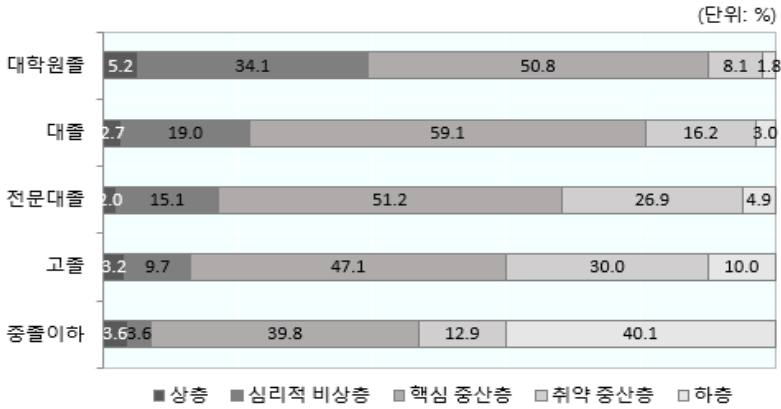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객관적 소득 지위와의 관련성은 세대주의 특성별로 구분했을 때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그림 3-3). 여성 세대주 가구에서 심리적 비상층 비율이 낮고 취약 중산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 세대주 가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세대주가 미취업 상태인 가구에서도 사회경제 계층의 하향화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러한 가구 특성이 경제적 지위를 낮추고 소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교육수준별 계층 인식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다(그림 3-4). 일반적으로 고학력일수록 경제적 상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저학력일수록 경제적 하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주관적 인식을 고려한 사회경제 계층에서는 상층과 하층이 아닌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의 규모 변화에 주로 반영되고 있다(그림 3-4의 위). 특히 학력이 높아질수록 상층 비율은 증가하지 않고 심리적 비상층 비율만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는데, 이는 고학력자의 경우 소득 상위계층에 속해 있어도 스스로를 상층이 아닌 중산층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졸 이하를 제외하면 학력이 낮을수록 취약 중산층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역시 저학력자의 경우 객관적으로 중산층에 해당해도 스스로는 하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는 소득수준 이외의 여러 경제적 위험 요소들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한편, 중졸 이하에서 취약 중산층이 적은 것은 객관적으로도 중간층이 아니라 하층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교육수준과 같이 경제적 지위와 상관관계가 높은 특성들은 사회경제 계층별로 구분해 분포를 살펴보는 게 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사회경제 계층별로 학력 분포를 비교해 보면(그림 3-4의 아래), 심리적 비상층의 교육수준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상층보다도 확연하게 높다. 반면, 여타 계층에서는 사회경제 계층과 학력수준이 대체로 양(+)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고학력 집단에서 자신을 상층이 아닌 중산층이라고 여기게 하는 별도의 기제가 있음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4] 교육수준과 사회경제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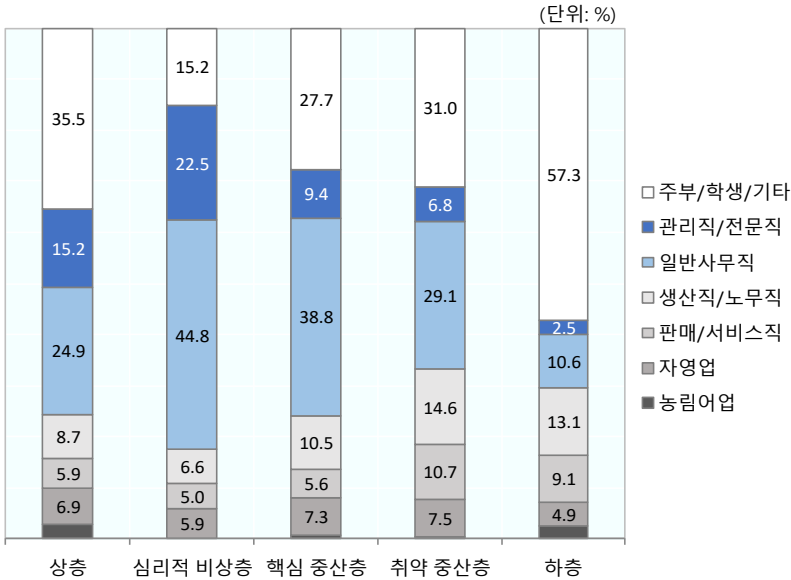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2. 경제활동 및 생활 여건

이번에는 사회경제 계층별로 경제활동 및 생활 여건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

먼저 [그림 3-5]는 사회경제 계층별로 직업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도 눈에 띄는 것은, 상층이 아닌 심리적 비상층에서 최고소득 직업

[그림 3-5] 사회경제 계층별 직업 분포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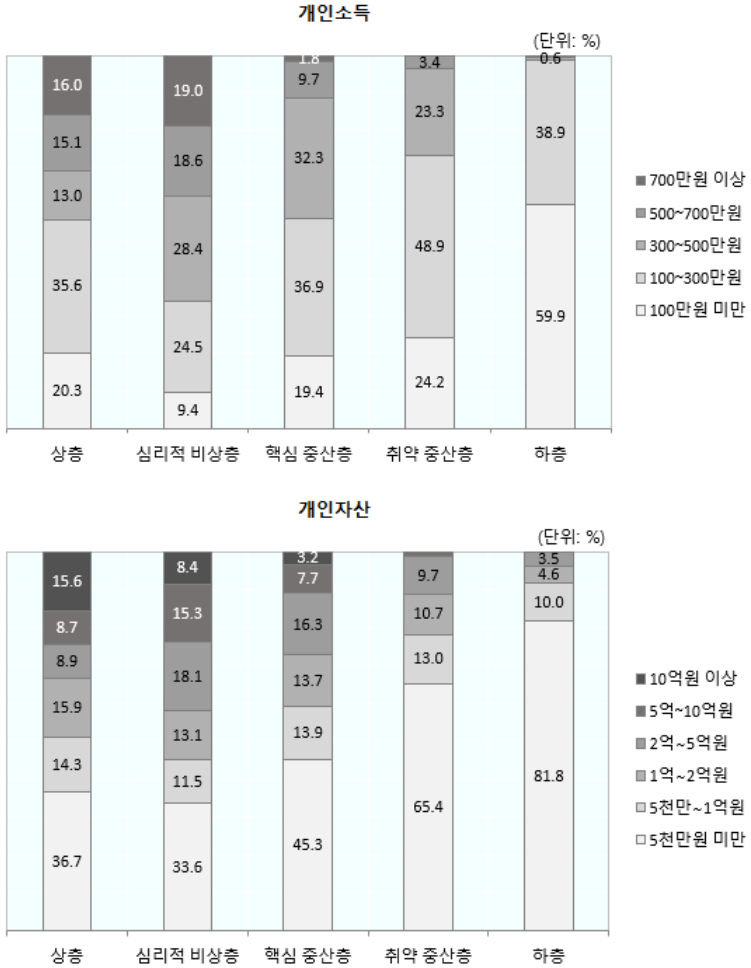
군에 해당하는 관리직/전문직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 엘리트층의 상당수가 객관적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에 취약 중산층은 핵심 중산층에 비해 일반사무직의 비중은 적고 생산/노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자신의 계층을 인식할 때 직업적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학력이나 직업보다 더 명확하게 개인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개인의 소득과 자산일 것이다.²³ [그림 3-6]은 사회경제 계층별 개인 소득 및 자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개인소득 분포를 보면, 심리적 비상층에서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른 모든 소득 범주를 포함해 체계적으로 상층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보여준다. 일

23 경제적 계층을 구분할 때 사용된 것은 가구소득이므로 개인의 소득 및 자산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강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림 3-6] 사회경제 계층별 개인의 소득 및 자산



주: 자산은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임.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반적으로 나타나는 소득과 계층 간의 양의 관계가 심리적 비상층에서만
 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인자산²⁴ 측면에서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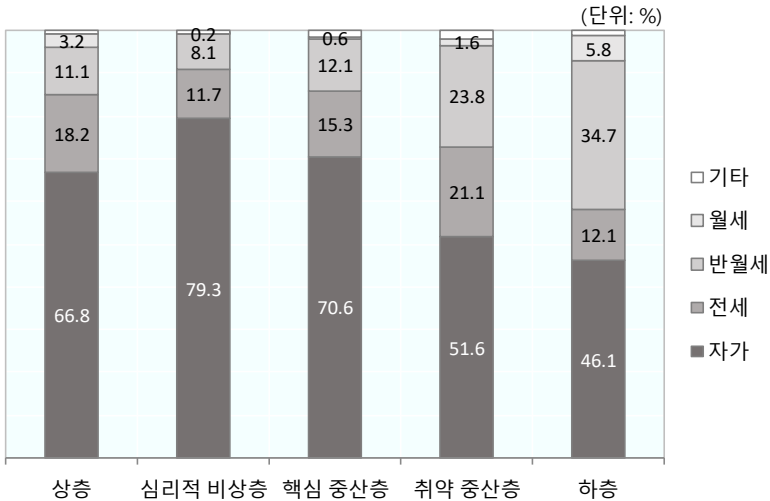
²⁴ 여기서 자산은 부동산을 포함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의미한다.

원 이상 고자산 구간의 비중이 심리적 비상층보다 상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자산의 상대적 부족이 심리적 비상층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게끔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경제 계층별 주거형태를 살펴보자. [그림 3-7]에 따르면 심리적 비상층에서 자가 비율은 79.3%로, 모든 사회경제 계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핵심 중산층의 자가 비율(70.6%)도 상층(66.8%)보다 높다. 확장된 중산층 범주(즉,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내에서는 자가 보유 비율이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상층을 포함하면 그런 상관관계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다. 상층과 심리적 비상층 간에는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어떤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각 계층별로 어떤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3개월 동안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취했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교류한 적이 있는 지인들 가운데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지인 유형은 첫째, 사회지도층 인사(고위공무

[그림 3-7] 사회경제 계층별 주거형태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원, 국회의원, 법조계, 언론인, 대학교수 등), 둘째, 여유가 있거나 부러움을 살만한 사람, 둘째,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손해를 본 사람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응답 결과는 <표 3-3>과 [그림 3-8]에 수록하였다.

지인 중에 사회지도층 인사가 있다는 응답자 비중은 상층에서 가장 높고 하층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반면, 둘째 유형, 즉 여유가 있거나 부러움을 살만한 지인이 있다는 응답자 비중은 강남지역 아파트 거주자를 제외하면 오히려 심리적 비상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강남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인이 있는 비중은 상층과 심리적 비상층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이들 두 계층 간의 역전을 제외하면 대체로 계층 지위가 낮아질수록 긍정적 인맥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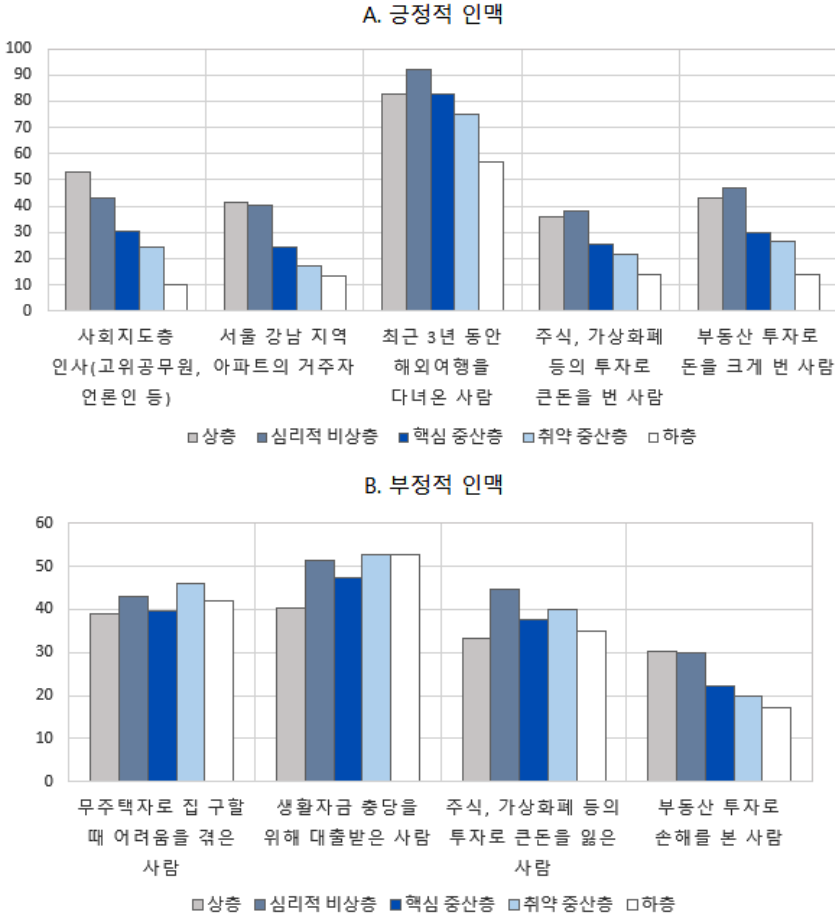
반면에 셋째 유형, 즉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크게 손해를 본 지인이 있는 지인에서는 부동산 투자로 손해 본 지인을 제외하면 계층 간에 체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금융 관련 투자로 손해를 본 지인은 심리적 비상층에서 가장 많고 부동산 투자로 손해 본 지인은 상층에서 가장 많다.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서 그로 인한 수익이든 손실이든 경험할

<표 3-3> 사회경제 계층별 지인 유형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전체
• 사회지도층 인사(고위공무원, 언론인 등)	53.0	43.3	30.3	24.4	10.2	31.2
•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거주자	41.3	40.4	24.3	17.1	13.2	25.7
• 최근 3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	82.9	92.0	82.5	74.9	56.6	81.4
• 주식, 가상화폐 등의 투자로 큰돈을 번 사람	35.9	37.9	25.6	21.4	14.0	26.7
• 부동산 투자로 돈을 크게 번 사람	42.9	47.1	30.1	26.3	13.8	32.0
• 무주택자로 집 구할 때 어려움을 겪은 사람	38.9	42.9	39.5	46.0	41.9	41.5
• 생활자금 충당을 위해 대출받은 사람	40.3	51.4	47.5	52.8	52.6	49.3
• 주식, 가상화폐 등의 투자로 큰돈을 잃은 사람	33.4	44.6	37.5	39.9	34.8	39.0
• 부동산 투자로 손해를 본 사람	30.1	29.9	22.3	19.9	17.0	23.1

주: 지인 중에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응답자 비중(%).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그림 3-8] 사회경제 계층별 지인 유형



주: 지인 중에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응답자 비중(%).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약하면, 심리적 비상층은 고학력자 및 고소득자 비중이 가장 높고, 관리직/전문직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중과 자가 비율도 가장 높으며,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자산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계층은 스스로를 상층이 아닌 중산층 혹은 심지어 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핵심 중산층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는 집단으로, 이른바 ‘엘리트’

중산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취약 중산층은 교육수준, 직업군, 개인 소득 및 자산 등 여러 지표에서 핵심 중산층과 하층의 중간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경계지대(boundary zone)적 특성 때문에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의해 언제든지 하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3.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사회경제 계층별로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현재의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표 3-4), 사회경제 계층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체계적인 차이가 관찰된다. 핵심 중산층이 중간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가운데, 상층과 심리적 비상층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견해가 우세하고, 취약 중산층과 하층에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의견 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보인다.

[그림 3-9]는 다양한 계층 범주별로 생활수준 만족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계층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주관적 계층에서 중상층과 상하층 간 역전이 나타난다. 상층의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중층의 상층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올라갈 때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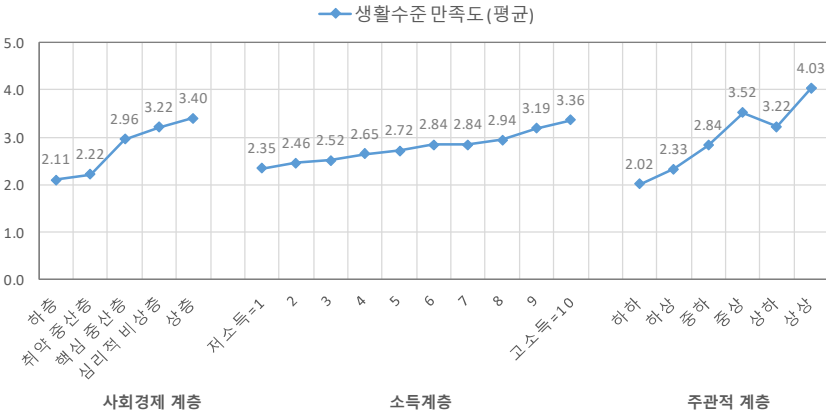
<표 3-4> 현재의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전체
1. 매우 불만족	6.0	4.0	4.6	26.6	37.7	10.5
2. 약간 불만족	15.3	18.3	26.9	37.0	27.8	27.0
3. 그저 그렇다	24.6	36.9	39.1	26.2	23.6	34.9
4. 약간 만족	40.7	33.7	26.5	8.9	7.7	23.8
5. 매우 만족	13.4	7.2	3.0	1.4	3.2	3.7
평균	3.40	3.22	2.96	2.22	2.11	2.83

주: 평균은 5점 척도로 환산해 산출한 단순 평균값.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그림 3-9] 다양한 계층 범주별 생활수준 만족도 차이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증가가 소득계층이 상승함에 따른 만족도 증가보다 가파르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기준을 결합한 사회경제 계층은 중간 정도의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취약 중산층의 만족도 수준은 핵심 중산층보다는 하층과 더 유사하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다.

<표 3-5>는 자신의 생활수준을 주변의 이웃 혹은 만나는 지인들과 비교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준다. 심리적 비상층과 핵심 중산층은 압도적 다수(70% 이상)가 이웃 또는 지인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반면, 상층은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57%)이 가장 많지만 상대적으로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반대로 취약 중산층과 하층의 경우에는 이웃 또는 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비교 인식이 자신의 계층 인식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6>은 자신의 생활수준이 과거 부모 때와 비교해서,²⁵ 그리고 10년 뒤의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평가한 것이다. 과거 부모의 생활수준과 비교해서 좋아졌다(약간+훨씬)고 응답한 비율은 심리적 비상층에서 가장

25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귀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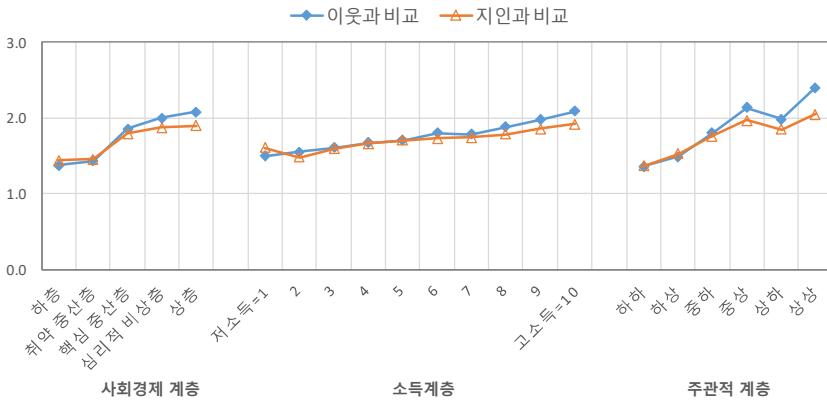
<표 3-5> 현 생활수준에 대한 상대적 평가

(단위: %)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전체
주변 이웃들과 비교한 생활수준						
1. 낮음	17.4	12.0	19.9	57.6	65.0	28.1
2. 비슷함	57.3	75.8	74.1	41.2	32.6	65.3
3. 높음	25.3	12.2	6.0	1.2	2.5	6.6
평균	2.08	2.00	1.86	1.44	1.38	1.79
만나는 지인들과 비교한 생활수준						
1. 낮음	20.6	19.1	24.7	58.4	60.5	32.0
2. 비슷함	69.3	74.3	71.0	37.2	35.2	63.1
3. 높음	10.1	6.6	4.4	4.5	4.4	4.9
평균	1.89	1.88	1.80	1.46	1.44	1.73

주: 평균은 3점 척도로 환산해 산출한 단순 평균값.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그림 3-10] 생활수준에 대한 상대적 인식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높고, 핵심 중산층의 경우도 좋아졌다는 응답이 상층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취약 중산층은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는 응답을 웃돌고 있으며, 훨씬 나빠졌다는 강한 부정응답도 20%에 이른다. 부모 때와 비교한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도 취약 중산층은 핵심 중

<표 3-6> 생활수준의 변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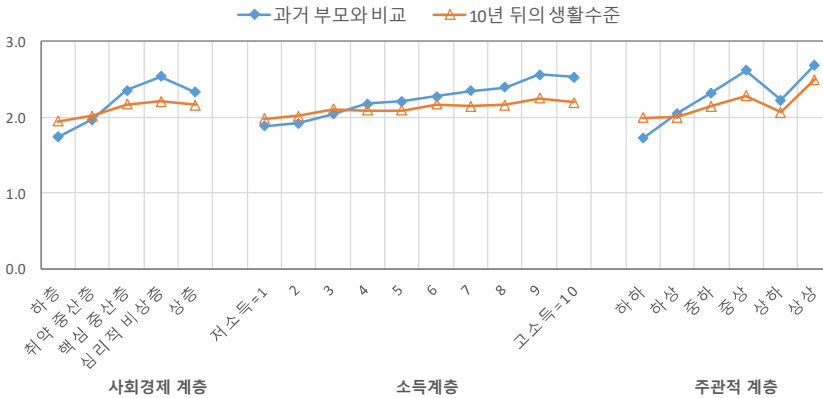
(단위: %)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전체
부모님의 과거 상황과 비교한 생활수준						
1. 훨씬 나빠짐	7.7	4.8	6.1	20.4	31.0	10.0
2. 약간 나빠짐	17.2	9.2	14.6	17.7	16.8	14.4
3. 비슷함	17.6	18.5	23.2	26.8	30.9	23.3
4. 약간 좋아짐	27.0	39.7	38.7	26.2	20.0	35.1
5. 훨씬 좋아짐	30.5	27.8	17.4	9.0	1.3	17.2
평균 (3점 기준)	3.56 (2.33)	3.76 (2.54)	3.47 (2.35)	2.86 (1.97)	2.44 (1.74)	3.35 (2.28)
10년 뒤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1. 나빠질 것	17.1	12.9	14.9	25.7	29.9	17.5
2. 비슷할 것	49.6	52.9	53.3	46.7	45.9	51.5
3. 좋아질 것	33.2	34.1	31.8	27.6	24.2	31.1
평균	2.16	2.21	2.17	2.02	1.94	2.14

주: 평균은 5점 척도와 3점 척도로 환산해 산출한 단순 평균값. 과거 부모와의 비교의 경우 () 안의 수치는 나빠짐-비슷-좋아짐의 3점 척도로 환산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그림 3-11] 생활수준의 변화에 대한 인식(3점 척도)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상층보다는 하층과 더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0년 뒤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는 과거 경험보다는 계층 간 편차가 적은 편이지만, 여기서도 심리적 비상층의 미래 인식이 상층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취약 중산층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크게 증가하여 하층과 더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도 광의의 중산층 범주 내에서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은 하나의 그룹으로 포괄하기에는 너무 다른 특성을 갖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파악된다. 심리적 비상층은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핵심 중산층보다는 상층에 가깝거나 심지어 상층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취약 중산층은 중산층보다는 하층에 더 가까운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4. 확장된 중산층 범주 내 비교

지금까지는 개별 항목의 기초통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지만, 그 결과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고 각각의 독립적인 효과를 분리해 분석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광의의 중산층 범주로 파악될 수 있는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확장된 중산층 범주만을 대상으로 한 다항로지트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3-7>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핵심 중산층을 기준 그룹으로 하여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의 구별되는 그룹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 연령, 교육수준(고졸 기준)과 같은 인적 특성, 가구원 수, 그 외 여타 요인들을 통제한 후의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먼저 가구자산 수준은 심리적 비상층에서 가장 높고,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의 순으로 낮아진다. 개인소득도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의 순서를

<표 3-7> 확장된 중산층 범주의 결정요인 - 다항로짓 모형

	종속변수: 중산층 범주	
	심리적 비상층 vs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vs 핵심 중산층
상수항	-4.028 (0.793) **	2.561 (0.738) **
여성	0.745 (0.121) **	-0.105 (0.118)
연령	-0.074 (0.034) *	0.112 (0.032) **
연령제곱	0.001 (0.000) +	-0.001 (0.000) **
중졸 이하	-0.574 (1.116)	-0.712 (0.668)
초대졸	0.152 (0.203)	-0.161 (0.158)
대졸	-0.054 (0.173)	-0.622 (0.138) **
대학원 이상	0.316 (0.217)	-0.795 (0.262) **
자산 10분위	0.224 (0.026) **	-0.032 (0.026)
가구원 수	0.001 (0.050)	-0.135 (0.047) **
개인소득	0.004 (0.000) **	-0.002 (0.000) **
개인자산	-8E-06 (0.000) **	-2E-05 (0.000) **
자영업	0.030 (0.241)	0.149 (0.209)
판매/서비스직	0.308 (0.267)	0.497 (0.211) *
생산직/단순직	0.081 (0.246)	0.079 (0.204)
일반사무직	0.229 (0.174)	-0.131 (0.173)
관리직/전문직	0.479 (0.214) *	0.216 (0.249)
긍정적 인맥	0.195 (0.056) **	-0.010 (0.057)
부정적 인맥	0.047 (0.045)	-0.021 (0.045)
사회지도층 인맥	0.099 (0.122)	-0.072 (0.131)
현 생활수준 만족도	0.120 (0.065) +	-0.491 (0.064) **
10년 후 개선 기대	0.057 (0.086)	-0.165 (0.079) *
과거 부모와의 비교	0.103 (0.075) +	-0.001 (0.067)
이웃과의 비교	0.192 (0.124)	-0.883 (0.113) **
지인과의 비교	0.027 (0.117)	-0.503 (0.102) **
자가 보유	0.098 (0.143)	-0.387 (0.123) **
심리적 비상층 608 / 핵심 중산층 1,877 / 취약 중산층 682		
N = 3,167 / -2 Log L = 4684.4		

주: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2)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변수 설명은 <표 2-9> 및 <표 2-11> 참조.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보인다. 하지만 개인자산에서는 인적 특성과 여타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심리적 비상층과 핵심 중산층의 순서가 역전되어 앞의 [그림 3-6]과 차이를 보인다. 개인자산의 부족이 심리적 비상층의 하향적 계층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으로 직업군을 살펴보면 개인소득을 통제하고도 심리적 비상층에서 관리직/전문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취약 중산층에서는 판매/서비스직이 핵심 중산층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심 중산층과 비교해 심리적 비상층에는 고임금 직업군이 상대적으로 많고 취약 중산층에는 고용안정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직업군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비록 통계적 유의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외 모든 긍정적 특성에서 심리적 비상층은 양의 부호, 취약 중산층은 음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가장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생활 만족도에서 ‘심리적 비상층 > 핵심 중산층 > 취약 중산층’의 관계가 뚜렷하다. 부모/이웃/지인과의 비교 태도에서는, 심리적 비상층이 핵심 중산층보다 부모 때보다 나아졌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과거에 상향 이동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웃이나 지인과의 비교에서는 핵심 중산층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며, 이러한 인식이 자신을 상층보다는 중산층과 동일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취약 중산층은 핵심 중산층과 비교해 이웃과 지인에 비해 자신의 생활수준이 더 낮다고 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비교 태도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자신을 중산층이 아닌 하층으로 여기게끔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자가 보유 여부는 심리적 비상층과 핵심 중산층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핵심 중산층과 취약 중산층 간에는 확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취약 중산층은 핵심 중산층에 비해 자가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심리적 비상층이 핵심 중산층보다 더

나은 생활 여건에 있고, 취약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즉,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은 여러 측면에서 상·중·하의 위계적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한편,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의 상대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로짓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8>과 <표 3-9>는 심리적 비상층과 상층, 취약 중산층과 하층 간의 결정요인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각각 상층과 하층을 기준으로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먼저 심리적 비상층과 상층을 비교하고 있는 <표 3-8>을 살펴보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심리적 비상층과 비교했을 때 상층의 뚜렷한 우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가구자산은 심리적 비상층에서 더 많다. 관리직/전문직과 일반사무직 같은 안정적인 직업군의 비중도 심리적 비상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개인자산에서는 심리적 비상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러 번 지적된 바와 같이 상층과 심리적 비상층을 가른 것은 개인자산의 상대적 부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인적 교류 면에서 상층이 사회지도층과 더 많이 알고 지낸다는 특징을 보이지만 그 외는 통계적 차이가 없다. 한편, 과거 부모의 생활수준에 비해 나아졌다는 인식은 심리적 비상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인적자본에 의존해 현재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이웃/지인과 비교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심리적 비상층은 부모로부터 계층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다른 준거집단과의 비교에 의해 자신의 계층 지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자가 보유 여부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양의 부호가 나타나 심리적 비상층이 상층보다 자가 보유 비율이 높을 가능성

<표 3-8> 심리적 비상층 vs 상층(기준 그룹) - 로짓 모형

	(1)	(2)
상수항	-4.677 (1.733) **	-4.411 (1.762) **
여성	0.560 (0.289) +	0.563 (0.292) +
연령	0.163 (0.073) *	0.154 (0.074) *
연령제곱	-0.002 (0.001) *	-0.002 (0.001) *
중졸 이하	-0.301 (1.733)	-0.149 (1.794)
초대졸	0.787 (0.456) +	0.813 (0.458) +
대졸	0.645 (0.369) +	0.672 (0.373) +
대학원 이상	0.463 (0.449)	0.535 (0.457)
자산 10분위	0.167 (0.058) **	0.173 (0.058) **
가구원 수	0.203 (0.121) +	0.219 (0.122) +
개인소득	0.001 (0.001)	0.001 (0.001)
개인자산	-1E-05 (0.000) *	-1E-05 (0.000) *
자영업	0.665 (0.518)	0.634 (0.519)
판매/서비스직	0.525 (0.560)	0.597 (0.567)
생산직/단순직	0.828 (0.507)	0.849 (0.513) +
일반사무직	1.320 (0.367) **	1.281 (0.369) **
관리직/전문직	1.245 (0.457) **	1.205 (0.462) **
긍정적 인맥	-0.021 (0.117)	0.028 (0.124)
부정적 인맥	0.117 (0.102)	0.103 (0.103)
사회지도층 인맥	-0.459 (0.275) +	-0.490 (0.278) +
현 생활수준 만족도	-0.219 (0.151)	-0.214 (0.151)
10년 후 개선 기대	0.163 (0.198)	0.188 (0.200)
과거 부모와의 비교	0.559 (0.173) **	0.567 (0.175) **
이웃과의 비교	-0.515 (0.274) +	-0.569 (0.277) *
지인과의 비교	-0.168 (0.282)	-0.181 (0.284)
자가 보유	0.505 (0.314)	0.465 (0.320)
<거주지역> 상위 1%		-1.248 (0.707) +
상위 1~5%		-0.017 (0.541)
상위 5~10%		-0.205 (0.532)
상위 10~25%		-0.196 (0.345)
상위 25~50%		-0.279 (0.319)
-2 Log L	485.5	696.6
N	708 (심리적 비상층 608 / 상층 100)	

주: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가중치 미사용.

2) 거주지역 구분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2023.6.20) 기준. 그 외 변수는 <표 3-7>과 동일.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이 있다는 것이다.²⁶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상층과 심리적 비상층 간에는 자가 보유 여부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오히려 어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모형 2에서는 거주지역의 특성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사용된 변수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자료(2023년 6월 20일 기준)를 활용해 전국의 시군구를 상위 1%, 5%, 10% 등으로 나누어 범주화하고 이를 응답자의 거주지 정보에 매칭하여 구한 구간별 더미변수이다. 여기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지역은 강남구가 유일하다.²⁷

이들 변수를 포함했을 때 상위 1% 거주 더미에서 유의한 음의 부호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드시 자가는 아닐지 몰라도, 강남구에 거주할수록 심리적 비상층이 아닌 상층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강남구 거주자’라는 것이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수 있으며, 반대로 ‘강남구 거주자’가 아니라는 것이 자신을 상층이 아닌 중산층으로 판단하는 요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상위 1%’는 되어야 상층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생각이 통용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다. 어느 경우든 이는 특정 거주지가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암묵적인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취약 중산층과 하층의 그룹 특성을 비교하고 있는 <표 3-9>를 살펴보자. 취약 중산층은 하층에 비해 저학력자가 적고 자산 수준 및 개인소득 수준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직업군 가운데에서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유의하게 적을 뿐 다른 직업군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령의 저학력자로 구성된 농어촌에 하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 대부분의 긍정적 특성에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지도

26 자가 보유 더미변수의 계수 추정치에 대한 p값은 0.108로 10% 유의수준에 근접해 있다.

27 상위 1~5% 구간에는 서울에서는 서초구,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양천구, 성동구, 광진구가 포함되고, 서울시 이외에서는 과천시가 포함되었다.

<표 3-9> 취약 중산층 vs 하층(기준 그룹)-로짓 모형

	(1)	(2)
상수항	-4.409 (1.380) **	-3.938 (1.407) **
여성	0.710 (0.230) **	0.670 (0.231) **
연령	0.101 (0.058) +	0.097 (0.058) +
연령제곱	-0.001 (0.001) +	-0.001 (0.001) +
중졸 이하	-1.417 (0.729) +	-1.423 (0.729) *
초대졸	0.319 (0.295)	0.307 (0.296)
대졸	0.272 (0.253)	0.247 (0.254)
대학원 이상	-0.712 (0.618)	-0.654 (0.626)
자산 10분위	0.208 (0.063) **	0.192 (0.064) **
가구원 수	0.272 (0.096) **	0.262 (0.096) **
개인소득	0.011 (0.002) **	0.011 (0.002) **
개인자산	-2E-06 (0.000)	-2E-06 (0.000)
농림어업	-2.353 (1.077) *	-2.410 (1.093) *
자영업	-0.265 (0.407)	-0.300 (0.408)
판매/서비스직	-0.465 (0.399)	-0.469 (0.400)
생산직/단순직	-0.473 (0.413)	-0.496 (0.416)
일반사무직	-0.543 (0.420)	-0.545 (0.421)
관리직/전문직	-0.097 (0.658)	-0.096 (0.656)
긍정적 인맥	0.123 (0.118)	0.138 (0.119)
부정적 인맥	-0.092 (0.090)	-0.105 (0.090)
사회지도층 인맥	1.076 (0.332) **	1.052 (0.334) **
현 생활수준 만족도	0.025 (0.115)	0.024 (0.116)
10년 후 개선 기대	0.084 (0.145)	0.103 (0.146)
과거 부모와의 비교	0.282 (0.138) *	0.273 (0.139) +
이웃과의 비교	0.021 (0.226)	0.014 (0.226)
지인과의 비교	0.006 (0.189)	0.054 (0.190)
자가 보유	-0.159 (0.245)	-0.501 (0.328)
월세/반월세		-0.592 (0.330) +
기타 주거형태		0.470 (0.860)
-2 Log L	617.9	613.3
N	849(취약 중산층 682 / 하층 167)	

주: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가중치 미사용.

2) 주거 형태는 전세를 기준으로 한 더미변수. 그 외 변수는 <표 3-7>과 동일.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층 인맥과 부모와의 비교를 제외하면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자가 보유 여부에서는 음의 부호가 나타나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닌데, 주거형태가 전세인 경우를 기준으로 좀 더 세분화해 보면(모형 2), 월세/반월세의 경우 하층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안정성 면에서 취약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확장된 중산층 범주의 세 그룹이 대체로 순차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과는 달리, 상층과 심리적 비상층 간에는 뚜렷한 우열관계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취약 중산층은 하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여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 취약 중산층은 핵심 중산층과 하층의 중간적 지위를 가지면서 하층의 특성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펴본 고유의 특성을 가지는 각 사회경제 계층이 사회경제적 인식 및 정책 태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제3절 계층 인식과 불평등 인식

본 절에서는 자신의 계층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 중산층에 관한 생각,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사회경제 계층별 차이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계층 판단 및 중산층 축소에 대한 견해

KDI 계층인식조사에서는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판단하는 데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물어보았다. <표 3-10>은 사회경제 계층 범주별로 그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

응답자 전체로 보면 자신의 계층을 판단하는 데 순자산(58.3%)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으며, 두 번째 요소가 소득(29.4%)이라고 응답하

<표 3-10>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된 요소

(단위: %)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전체
소득	27.4	24.7	30.1	30.3	36.5	29.4
순자산	55.1	62.3	57.5	60.7	45.8	58.3
학력	6.8	3.2	3.8	1.8	4.9	3.4
직업	10.8	8.6	7.4	5.6	9.6	7.5
기타	0.0	1.4	1.3	1.5	3.2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카이제곱 검정 결과, $\chi^2(16) = 37.66, p=0.0017$.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였다. 그다음은 직업(7.5%), 학력(3.4%)의 순이다. 우선순위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사회경제 계층 간에 정도 차는 엇보인다.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의 경우에는 자산을 고려한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객관적 계층 불일치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자산에 대한 고려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반면, 자산 축적에 대한 기대가 낮은 하층의 경우에는 소득을 우선 고려했다는 비율(36.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 의미에서 중산층을 판단하는 조건으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표 3-11>은 중산층의 조건으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묻은 질문에 대한 3순위까지의 응답에 대해 1순위=3, 2순위=2, 1순위=1의 가중치를 주어 합산한 결과이다. 자신의 계층 지위를 판단할 때와는 달리, 중산층의 조건으로는 소득(37.4%)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산(32.7%)이 그다음으로 나타났다.²⁸ 상층에서 거주지역, 직업 등의 요소를 중시하는 비율이 다소 높지만 대체로 계층별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그림 3-12).

한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²⁸ 여기에서 따로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1순위 응답만을 고려하면 소득 51.4%, 자산 38.6%로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다.

<표 3-11> 중산층의 조건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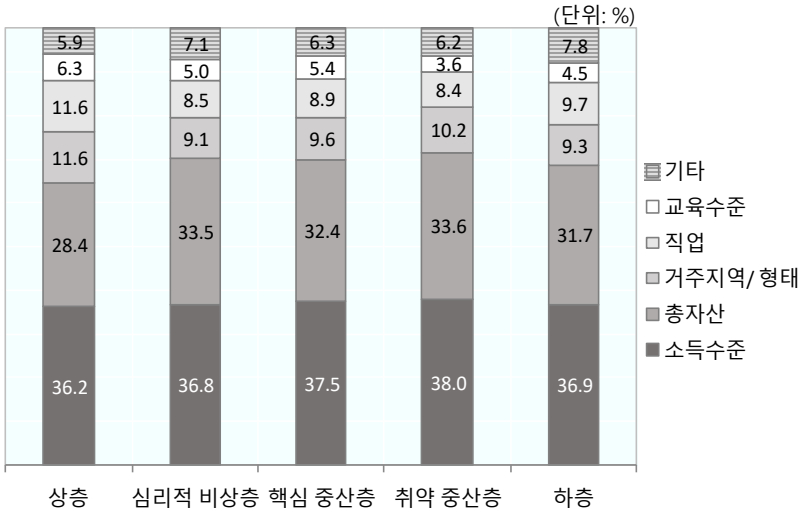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전체
소득수준	36.2	36.8	37.5	38.0	36.9	37.4
총자산(부동산 포함)	28.4	33.5	32.4	33.6	31.7	32.7
거주지역 및 주거 형태	11.6	9.1	9.6	10.2	9.3	9.7
직업	11.6	8.5	8.9	8.4	9.7	8.8
교육수준	6.3	5.0	5.4	3.6	4.5	5.0
기타*	5.9	7.1	6.3	6.2	7.8	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3순위까지의 응답에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으로 가산점을 부여해 산출하였으며, 기타에는 주변 인맥, 도덕 및 사회규범 의식, 정치·사회적 의식, 문화적 취향을 포함.

2) 카이제곱 검정 결과, $\chi^2(16) = 32.01, p=0.010$.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그림 3-12] 사회경제 계층별 중산층의 조건으로 고려되는 요소



주 및 자료: <표 3-11>과 동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보았다. <표 3-12>와 [그림 3-13]은 그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 표의 마지막 행에는 4점 척도로 간주하여 산출한 평균 동의 수준이 보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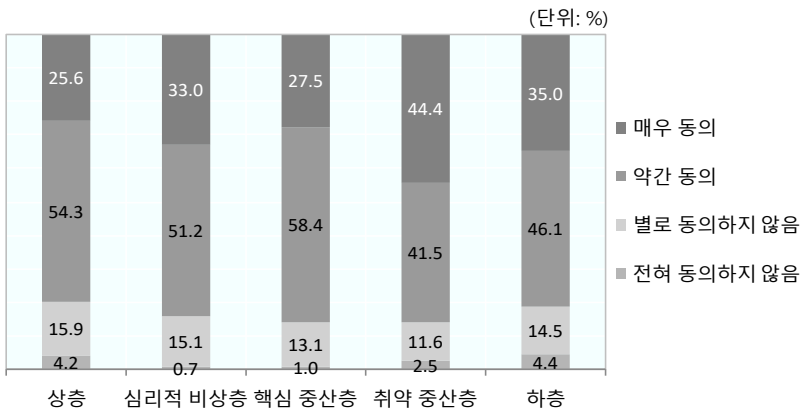
객관적 지표에 의한 중산층은 물론 주관적 중산층의 규모가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이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계층에서 80% 이상이 ‘약간’ 혹은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 중산층에서 중산층이 축소되고 있다는 데 공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평균 3.28).

<표 3-12>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전체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	0.7	1.0	2.5	4.4	1.5
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5.9	15.1	13.1	11.6	14.5	13.3
3. 약간 동의한다	54.3	51.2	58.4	41.5	46.1	53.0
4. 매우 동의한다	25.6	33.0	27.5	44.4	35.0	32.1
평균	3.01	3.16	3.12	3.28	3.12	3.16

주: 평균은 4점 척도로 환산해 산출한 단순 평균값.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그림 3-13]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



주 및 자료: <표 3-12>와 동일

<표 3-13>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순서형 로짓 모형

(기준: 핵심 중산층)	종속변수: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	
	(1) 기본	(2) 인적 특성 통제
상층	-0.216 (0.140)	-0.226 (0.144)
심리적 비상층	0.083 (0.067)	0.048 (0.069)
취약 중산층	0.327 (0.067) **	0.392 (0.068) **
하층	-0.016 (0.114)	0.099 (0.116)

주: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는 1% 유의수준(N=3,434).

2) 인적 특성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이 고려됨.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위의 응답을 서열을 가지는 변수로 해석하면(즉, 1=‘비동의’, ..., 4=‘동의’), 순서형 로짓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그룹 간 차이의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추정 결과는 <표 3-13>에 제시하였다. 모형 (1)은 사회경제 계층 더미변수(핵심 중산층 기준)만을 포함해 추정한 결과이고, 모형 (2)는 성, 연령, 교육수준이 추가로 통제된 모형의 추정 결과이다.²⁹

결과에 의하면, 취약 중산층의 경우 핵심 중산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약 중산층의 경우 자신의 위치에서 느끼는 중산층 이탈 위기감이 전체 사회상의 판단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불평등 인식

다음으로 사회경제 계층별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관련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와 관련된 질문은 다음 다섯 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질문은 성공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으로, ‘열심히 일하면 결국엔 성공할 수 있다’(0)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10)는 견해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높은 값을 가질수록 우리 사회

²⁹ 이하에서도 인식 및 정책 태도가 순위형 값으로 측정되는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계층 간 통계적 차이를 검증할 것이다. 지면관계상 여타 통제변수의 추정 결과는 생략한다.

에서 성공하려면 개인의 노력보다는 운이나 배경이 중요하다는,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소득 형평성을 보는 시각으로, ‘소득은 더 공평해야 한다’(0)와 ‘노력하는 만큼 차이가 나야 한다’(10)의 견해에 대한 상대적 동의 정도를 측정한다. 낮은 값일수록 소득에서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 가깝고, 값이 커질수록 노력에 의한 소득 차이를 옹호하는 관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질문은 개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와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0)와 ‘당사자가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10)는 견해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확인하였으며, 낮은 값일수록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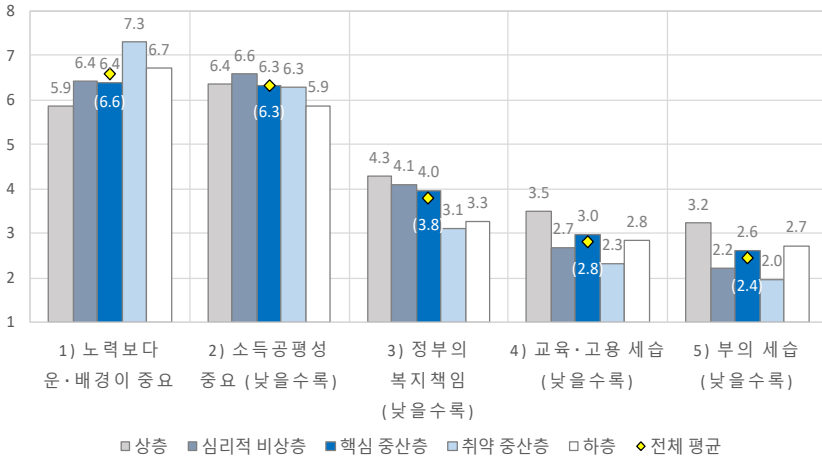
네 번째 질문은 교육 및 고용의 대물림 현상에 대한 인식으로, ‘개인의 교육이나 취업 기회는 부모 혹은 지인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이 매우 높다’(0)와 ‘교육이나 취업 기회는 부모 혹은 지인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매우 균등하다’(10)는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낮은 값을 가질수록 교육·고용 지위에서의 세습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질문은 부의 세습과 관련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자산 형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이 매우 높다’(0)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매우 균등하다’(10)는 견해에 대한 상대적 동의 수준을 보여준다. 이 경우도 낮은 값을 가질수록 부의 세습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 결과는 [그림 3-14]에서 요약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성공에서 개인의 노력보다 운과 배경이 더 중요(6.6)하다고 생각하고, 교육 및 고용 지위의 대물림(2.8), 부의 세습(2.4)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계에 있어서도 당사자 책임보다는 정부의 복지책임(3.8)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소득의 경우는 공정성보다는 노력에 의한 차등화(6.3)를 더

[그림 3-14] 사회경제 계층별 불평등 관련 인식

(단위: 0~10점 척도)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평균 수치.

각 문항에서 대비되는 두 견해 중 어느 의견에 더 동의하는지를 0~10점 척도로 확인함.

- 1) 0: 열심히 일하면 결국엔 성공할 수 있다. vs 10: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 2) 0: 소득은 더 공평해야 한다. vs 10: 노력하는 만큼 차이가 나와야 한다.
- 3) 0: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vs 10: 당사자가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
- 4) 0: 교육이나 취업 기회는 부모 혹은 지인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이 매우 높다. vs 10: 교육이나 취업 기회는 부모 혹은 지인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매우 균등하다.
- 5) 0: 개인의 자산 형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이 매우 높다. vs 10: 개인의 자산 형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매우 균등하다.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경제 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핵심 중산층의 견해와 매우 흡사하며 다른 계층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계층 불일치 그룹(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에서 불평등 인식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성공에서 운과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 및 고용 지위의 대물림, 부의 세습에 대해서도 더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심리적 비상층은 소득에서 노력에 의한 차등화를 더 지지하고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해 상층이나 핵심 중산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심리적 비상층의 경우 원론적 의미의 불평등 인식과 달리, 정책적 대응

<표 3-14> 사회경제 계층별 불평등 인식-순서형 로짓 모형

	(1) 노력보다 운 중요	(2) 소득 공평성 중요 (낮을수록)	(3) 정부의 복지책임 (낮을수록)	(4) 교육·고용 세습 (낮을수록)	(5) 부의 세습 (낮을수록)
인적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 통제					
상층	-0.059 (0.038)	0.009 (0.039)	0.037 (0.038)	0.072 + (0.039)	0.092* (0.039)
심리적 비상층	0.002 (0.018)	0.042* (0.019)	0.023 (0.018)	-0.041* (0.019)	-0.068** (0.021)
취약 중산층	0.153** (0.020)	-0.016 (0.017)	-0.126** (0.018)	-0.133** (0.020)	-0.145** (0.021)
하층	0.076* (0.033)	-0.064* (0.030)	-0.105** (0.032)	-0.057 + (0.034)	-0.018 (0.033)

주: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N=3,434).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에서는 다른 태도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3-14>는 순서형 로짓 모형을 통해 사회경제 계층별 불평등 인식의 차이를 분석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앞서 그림을 토대로 설명한 내용들이 대부분 통계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사회경제 계층별로 한국 사회의 계층 분포 및 중산층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표 3-15>는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할 때 전체 인구에서 한국 사회에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은 각각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이용해 각 사회경제 계층이 인식하고 있는 계층 분포를 재구성한 것이다. 중간계층의 비율은 상위 및 하위 계층에 대한 평균 응답 수치를 100에서 뺀 값으로 산출하였다. 가시적 이해를 돕기 위해 <표 3-15>의 분포를 그림으로 도시한 것이 [그림 3-15]이다.

심리적 비상층은 한국 사회에서 상위계층의 비율을 가장 적게 예측하지만, 하위계층의 비율도 가장 적게 보고 있어 중간층이 가장 두터운 사회를 그리고 있다. 반면에 취약 중산층은 심리적 비상층 다음으로 상위

<표 3-15> 계층 분포에 대한 인식 I

(단위: %)

예상 비율	계층별	사회경제 계층					전체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상위계층 (Pr > F)		20.9 -	14.6 (0.000)	18.3 (<.0001)	17.4 (0.258)	19.7 (0.204)	17.6 (<.0001)
중간계층		40.1	51.5	45.1	39.8	41.2	44.8
하위계층 (Pr > F)		39.0 -	33.9 (0.016)	36.7 (0.002)	42.8 (<.0001)	39.1 (0.033)	37.6 (<.00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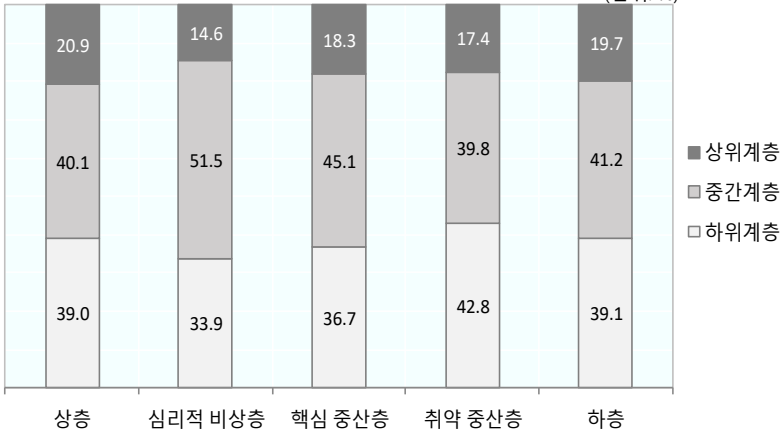
주: 1) 상위계층 및 하위계층에 대한 예측평균치를 이용하여 전체 분포를 구성

2) () 안은 ANOVA 검정의 p값으로, 사회경제 계층별 수치는 앞의 그룹과의 비교(예: 상층 vs 심리적 비상층)이고, 마지막 열('전체')의 수치는 전체 그룹에 대한 검정 결과임.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그림 3-15] 계층 분포에 대한 인식 I

(단위: %)



주 및 자료: <표 3-15>와 동일.

계층을 적게 예상했지만, 하위계층 비율을 가장 높게 예상하여 중간계층이 가장 쪼그라든 한국 사회의 모습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비상층은 상층을 적게 보기 때문에 자신을 상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취약 중산층은 중산층이 적고 하층이 많은 사회를 가정하여 자신을 하층에 귀속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전체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해 어떤 모양으로 상상하는지를 살펴보자. <표 3-16>은 소득에 따른 계층별 인구분포를 고려할 때 현재의 한국 사회가 어떤 유형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이며, [그림 3-16]은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계층구조 이미지 가운데 ①이 가장 불평등한 구조를 나타내며, ⑤로 갈수록 평등한 구조에 가깝다.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인구가 배치된 ⑥은 평등/불평등의 문제 대신 자연발생적인 위계구조를 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응답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의 소득분포를 가장 불평등하게 보고 있는 계층은 취약 중산층으로 파악된다. 취약 중산층에서 ①~③을 합한 비율은 85.3%에 이르며 이는 하층(78.4%)을 넘어서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불평등 상태를 보여주는 ①을 선택한 비율도 25.4%로 다른 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저소득층이 다수를 이루는 피라미드 형태를 상정하는 ②를 선택한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취약 중산층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중간계층을 가장 쪼그라든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심리적 비상층과 핵심 중산층은 매우 유사한 계층구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상층이 소수이고 대다수가 하층인 ②와 ③의 피라미드 형태를 그리는 비율이 가장 많고 중층이 두터운 다이아몬드형(④)을 선택한 비율도 20% 수준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①~③을 선택한 비율이 4분의 3에 가까워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층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계층에 비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가장 낮게 예상하고 있으며, 하층은 취약 중산층보다는 덜하지만 불평등도가 매우 높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해보면, ‘취약 중산층 > 하층 > 심리적 비상층 > 핵심 중산층 > 상층’의 순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6> 계층 분포에 대한 인식 II - 계층구조 이미지

(단위: %)

	①	②	③	④	⑤	⑥
고소득						
저소득						
(설명)	상층은 소수의 엘리트, 중층은 극소수, 하층이 대다수인 형태	상층은 소수, 그보다 많은 사람들은 중층, 대다수가 하층인 피라미드 형태	가장 낮은 층에 적은 사람들이 있는 걸 제외한 피라미드 형태	대부분의 사람이 중간층에 있는 형태	가장 높은 층에 적은 사람들이 있는 걸 제외한 역피라미드 형태	모든 층에 균일하게 사람들이 존재하는 형태

사회경제 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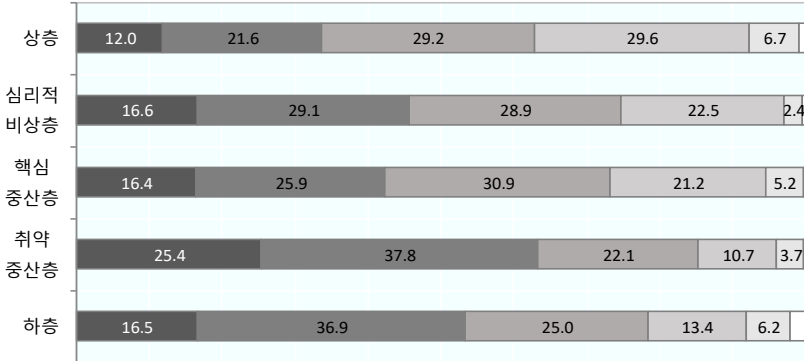
상층	12.0	21.6	29.2	29.6	6.7	1.0
심리적 비상층	16.6	29.1	28.9	22.5	2.4	0.5
핵심 중산층	16.4	25.9	30.9	21.2	5.2	0.4
취약 중산층	25.4	37.8	22.1	10.7	3.7	0.3
하층	16.5	36.9	25.0	13.4	6.2	2.1
전체	18.1	29.3	28.5	19.2	4.5	0.5

주: 카이제곱 검정 결과, $\chi^2(20) = 132.8, p < .0001$.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그림 3-16] 사회경제 계층별 계층구조 이미지에 대한 응답 분포

(단위: %)



- ① 상층은 소수의 엘리트, 중층은 극소수, 하층이 대다수인 형태
- ② 상층은 소수, 그보다 많은 사람들은 중층, 대다수가 하층인 피라미드 형태
- ③ 가장 낮은 층에 적은 사람들이 있는 걸 제외한 피라미드 형태
- ④ 대부분의 사람이 중간층에 있는 형태
- ⑤ 가장 높은 층에 적은 사람들이 있는 걸 제외한 역피라미드 형태
- ⑥ 모든 층에 균일하게 사람들이 존재하는 형태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3-17> 바람직한 계층구조 이미지

(단위: %)

	①	②	③	④	⑤	⑥
고소득						
저소득						
상층	1.0	3.9	8.2	59.5	18.7	8.7
심리적 비상층	0.4	2.3	2.8	67.6	19.0	8.0
핵심 중산층	0.5	3.5	6.0	63.6	16.7	9.7
취약 중산층	0.6	2.9	4.8	64.0	13.9	13.8
하층	1.8	6.0	4.7	55.4	14.5	17.5
전체	0.6	3.3	5.2	63.9	16.5	10.5

주: 카이제곱 검정 결과, $\chi^2(20) = 51.88, p=0.0001$.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하지만 어떤 소득분포를 가진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속 계층과 무관하게 중간층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 다이아몬드형(④)을 선택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난다(표 3-17).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산층이 다수인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4절 사회경제적 인식 및 정책 태도

이번 절에서는 사회경제 계층별로 사회경제적 인식 및 정책 태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재분배 관련 정책 태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고, 이어서 다양한 현안 이슈 및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재분배 관련 정책 태도

<표 3-18>은 현재의 세금부담 수준 및 복지지출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4개 문항에 대해 사회경제 계층별 응답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중치가 고려된 수치이다. [그림 3-17]은 사회경제 계층별 응답 차이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사회경제 계층별 응답 차이를 순서형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19>에 수록하였다. 로짓 모형에서는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적 특성을 통제된 후의 사회경제 계층 간 통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세금부담 수준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응답은 상층과 심리적 비상층에서 20%를 넘어선다. 취약 중산층에서도 현재의 세금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더 많은 반면, 하층에서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과 적다는 응답이 45.4%를 차지하여 현재의 세금부담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객관적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기초해 매겨지기 때문에 주관적 계층 지위가 그와 괴리(주로 하향)될 경우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계층 불일치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세금 불만이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뒤이은 두 질문은 취약계층과 중산층을 특정해 현재의 정부 복지지출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그림 3-17의 하단). 취약계층 대상의 정부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데, 심리적 비상층에서 동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매우 부족’ 혹은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을 합하면 45.9%로 상층 49.7%보다 낮은 수준이다. 핵심 중산층에서는 부족하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51.9%이고, 취약 중산층에서는 동 비율이 65.4%로 크게 된다. 한편, 취약계층 대상 복지지출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은 심리적 비상층과 핵심 중산층에서 평균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심리적 비상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심리적 비상층에서 취약계층 대상 복지지출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상

<표 3-18> 현재의 세금부담 및 복지지출에 대한 견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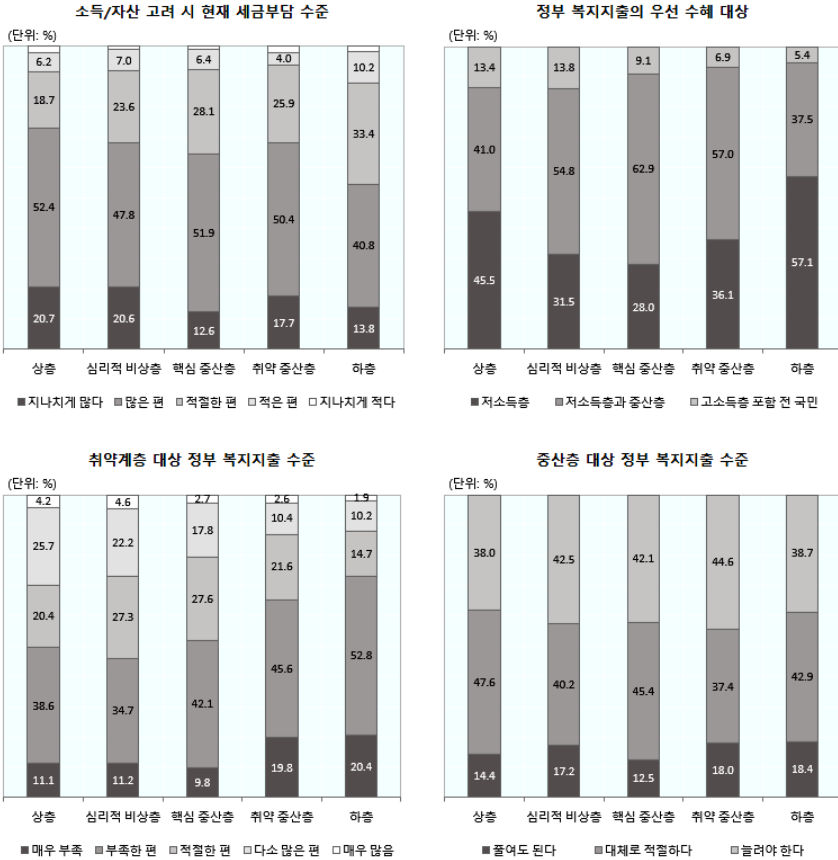
	사회경제 계층					전체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1) 소득/자산 고려 시 현재 세금부담 수준						
1.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	20.7	20.6	12.6	17.7	13.8	15.4
2. 세금이 많은 편	52.4	47.8	51.9	50.4	40.8	50.3
3. 적절한 편	18.7	23.6	28.1	25.9	33.4	26.8
4. 세금이 적은 편	6.2	7.0	6.4	4.0	10.2	6.2
5. 세금이 지나치게 적다	2.1	1.0	1.1	2.0	1.8	1.3
평균	2.17	2.20	2.31	2.22	2.45	2.28
(2) 취약계층 대상 정부 복지지출 수준						
1. 매우 부족	11.1	11.2	9.8	19.8	20.4	12.6
2. 부족한 편	38.6	34.7	42.1	45.6	52.8	41.9
3. 적절한 편	20.4	27.3	27.6	21.6	14.7	25.5
4. 다소 많은 편	25.7	22.2	17.8	10.4	10.2	17.0
5. 매우 많음	4.2	4.6	2.7	2.6	1.9	3.0
평균	2.73	2.74	2.62	2.30	2.20	2.56
(3) 중산층 대상 정부 복지지출 수준						
1. 줄어도 된다	14.4	17.2	12.5	18.0	18.4	14.8
2. 대체로 적절하다	47.6	40.2	45.4	37.4	42.9	42.8
3. 늘려야 한다	38.0	42.5	42.1	44.6	38.7	42.4
평균	2.24	2.25	2.30	2.27	2.20	2.28
(4) 정부 복지지출의 우선 수혜 대상						
1. 저소득층	45.5	31.5	28.0	36.1	57.1	32.2
2. 저소득층과 중산층	41.0	54.8	62.9	57.0	37.5	58.4
3. 고소득층 포함 전 국민	13.4	13.8	9.1	6.9	5.4	9.5
평균	1.68	1.82	1.81	1.71	1.48	1.77

주: 각 문항의 열 합은 100임. 마지막 행에 보고된 평균 수치는 각 문항의 응답을 점수 척도로 환산해 산출한 단순 평균값.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대적으로 적은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계층 지위가 낮을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더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7] 현재의 세금부담 및 복지지출에 대한 견해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거나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핵심 중산층에서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고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에서는 줄여도 된다는 의견이 다소 높지만, 인적 특성을 통제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표 3-19 참조).

마지막으로, 정부 복지지출을 늘린다면 주로 어느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질문에는 상층과 하층에서는 저소득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확장된 중산층

<표 3-19> 현재의 세금부담 및 복지지출에 대한 견해 - 순서형 로짓 모형

	(1) 소득/자산 고려 시 현재 세금부담 수준	(2) 취약계층 대상 정부 복지지출 수준	(3) 중산층 대상 정부 복지지출 수준	(4) 정부 복지지출의 우선 수혜 대상
인적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 통제				
상층	-0.271 * (0.129)	0.085 (0.101)	-0.072 (0.147)	-0.316 + (0.173)
심리적 비상층	-0.164 ** (0.058)	0.109 * (0.046)	-0.096 (0.067)	0.007 (0.078)
취약 중산층	-0.097 + (0.055)	-0.294 ** (0.049)	-0.075 (0.065)	-0.287 ** (0.077)
하층	0.221 * (0.095)	-0.447 ** (0.092)	-0.133 (0.117)	-0.874 ** (0.150)

주: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N=3,434).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범주 내에서는 저소득층과 함께 중산층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심리적 비상층에서는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의 복지를 지지하는 견해가 상층과 비슷한 수준(약 13%)으로 높게 나타나고, 취약 중산층에서는 저소득층 우선 정책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마다 기본적인 복지 태도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복지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들의 재분배 인식에서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추가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까?

먼저 추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이 나온다(표 3-20).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 응답이 많은 가운데, 특히 심리적 비상층에서 부정적 응답(41.0%)이 가장 많고, 적극적인 부정 의사를 표명한 비율도 상층과 유사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핵심 중산층에서 부정적 응답(35.5%)이 가장 적다.

<표 3-20> 정부 복지지출 확대 시 추가 세금부담 용의

(단위: %)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전체
1. 전혀 그렇지 않다	15.5	15.4	11.0	12.4	18.6	12.5
2. 별로 그렇지 않다	20.8	25.6	24.5	25.1	18.5	24.4
3. 보통이다	36.7	30.2	37.3	36.1	37.9	35.8
4. 약간 그렇다	23.1	25.6	25.7	23.3	22.2	24.9
5. 매우 그렇다	3.9	3.3	1.6	3.2	2.8	2.3
평균	2.79	2.76	2.82	2.80	2.72	2.80
순서형 로짓 모형: 인적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 통제						
추정계수	-0.040 (0.100)	-0.078+ (0.046)	(기준)	-0.002 (0.045)	-0.069 (0.081)	-

주: 로짓 모형에서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는 10% 유의수준(N=3,434).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3-20>의 하단에는 로짓 모형을 이용해 계층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심리적 비상층과 핵심 중산층 간의 응답 차이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추가 세금부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 이유는 계층별로 근소하게 차이를 보인다(표 3-21). 상층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사용할지 의문이라서’라는 응답이 많고, 확장된 중산층 범주에서는 ‘이미 충분히 내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 하층에서도 ‘이미 충분히 내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다른 계층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내지 않아서’(14.2%)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가능할까? 우선 현재 세대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방안(0)과 미래에 갚아야 하는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방안(10) 중 어느 쪽 의견에 가까운지를 살펴보았다(표 3-22).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중간적 견해에 있으며,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국채 발행보다는 현재 세대의 세금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근소하게 더 동의(4.33)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21> 추가 세금부담 용의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

(단위: %, 명)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전체
정부의 세금 사용에 대한 불신	48.2	32.5	32.3	37.9	33.2	34.0
이미 충분히 내고 있어서	37.8	53.8	50.3	42.1	38.0	48.4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내지 않아서	8.9	6.7	7.2	12.1	14.2	8.5
복지지출 확대 불필요	5.1	4.1	7.6	4.8	6.0	6.2
기타	0.0	3.0	2.7	3.0	8.7	3.0
N 계	37 (100.0)	251 (100.0)	664 (100.0)	255 (100.0)	62 (100.0)	1,269 (100.0)

주: 1) <표 3-20>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2) 카이제곱 검정 결과, $\chi^2(16) = 31.80, p=0.0106$.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3-22> 추가적인 자원 확보 방안(0: 현재 세대 부담 ... 10: 국채 발행)

(단위: %)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전체
현세대의 세금으로 총당(0-3)	33.3	36.6	33.4	36.0	39.1	34.8
중간적 견해(4-6)	43.0	47.8	52.2	52.5	47.4	51.0
미래에 값을 국채 발행(7-10)	23.7	15.6	14.3	11.5	13.5	14.2
평균	4.46	4.30	4.37	4.23	4.25	4.33
순서형 로짓 모형: 인적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 통제						
추정계수	0.023 (0.046)	-0.008 (0.021)	(기준)	-0.045* (0.021)	-0.037 (0.038)	-

주: 로짓 모형에서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는 5% 유의수준(N=3,434).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계층 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데, 상층에서 국채를 발행해 해결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인적 특성을 통제하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차이로 파악된다. 반면에 취약 중산층에서 현재 세대의 세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핵심 중산층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으로,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어떤 세금을 우선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였다(표 3-23).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증세 우선

<표 3-23> 증세 시 우선적으로 올려야 하는 세금

(단위: %)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계
1순위 응답						
법인세	51.5	56.0	51.7	54.6	45.0	52.7
재산세	15.5	18.4	18.2	22.6	25.2	19.4
소득세	20.4	13.9	19.9	18.1	25.1	18.7
소비세	12.6	11.8	10.2	4.7	4.7	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카이제곱 검정	$\chi^2(12) = 52.86, p < .0001$					
1~4순위 통합						
법인세	31.0	32.6	32.2	32.8	31.1	32.3
재산세	23.0	24.9	24.5	26.7	26.2	25.1
소득세	24.9	22.7	24.2	24.3	25.3	24.0
소비세	21.2	19.7	19.1	16.2	17.3	1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카이제곱 검정	$\chi^2(12) = 53.53, p < .0001$					

주: 1~4순위 통합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각각 4점에서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산출.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순위를 ‘법인세 > 재산세 ≥ 소득세 > 소비세’의 순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 계층별로 살펴보면,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층에서 재산세보다 소득세를 앞순위에 두었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현안 이슈 및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견해

가. 정치 성향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개인의 정치 성향을 알아보자. 정치 성향은 개인의 정책 태도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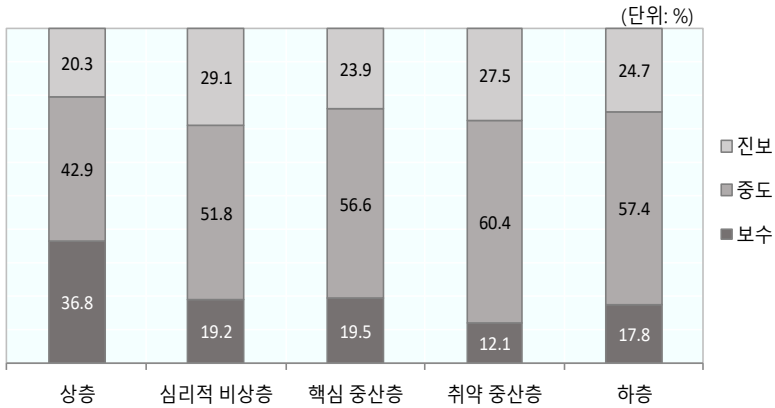
<표 3-24> 정치 성향(0: 매우 보수적 vs 10: 매우 진보적)

(단위: %)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전체
보수(0~3)	36.8	19.2	19.5	12.1	17.8	18.4
중도(4~6)	42.9	51.8	56.6	60.4	57.4	56.1
진보(7~10)	20.3	29.1	23.9	27.5	24.7	25.5
평균	4.42	5.26	5.12	5.51	5.06	5.20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그림 3-18] 사회경제 계층별 정치 성향 분포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3-24>는 매우 보수적(0)과 매우 진보적(10) 사이의 스펙트럼에서 자신의 정치 성향을 표시한 응답을 보수(0~3), 중도(4~6), 진보(7~10)로 범주화해 그 분포와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8]은 이를 그림으로 도시한 것이다.

상층은 자신의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분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지만, 그 외 계층에서는 중도 성향이 절반 이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진보 쪽으로 다소 기운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계층 불일치 그룹에서 진보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치 성향과 계층 지위 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확장된 중산층 범주로 보면, 취약 중산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의 순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보적 성향이 자신의 계층 지위를 낮게 보도록 하였는지, 아니면 불완전한 소속감이 진보적 성향을 키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정치 성향에서의 특성이 다양한 정책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나. 기술 발전에 대한 견해

최근 로봇과 AI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 즉 인간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줌으로써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기술 발전이 중산층 일자리를 위협해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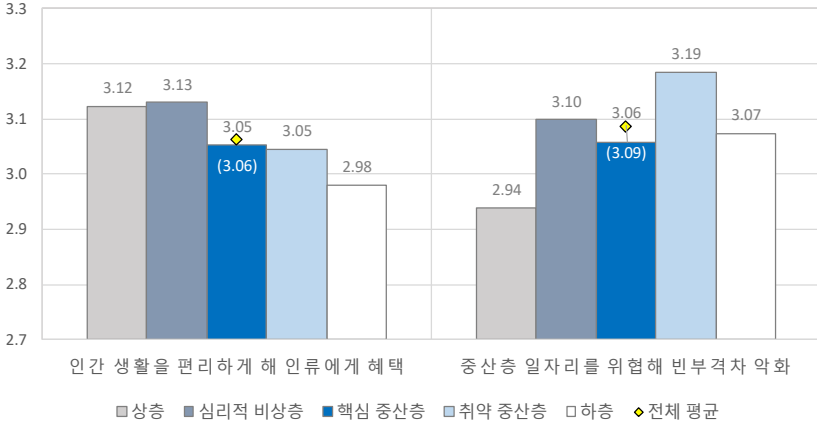
[그림 3-19]는 로봇과 AI 기술 발전에 대한 두 가지 견해에 대해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약간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의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이다. 우리 국민의 동의 수준은 두 견해 모두에 대해 3점, 즉 약간 동의하는 정도로 파악되었다. 우려와 기대가 어느 정도 혼재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사회경제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계층 지위가 내려갈수록 긍정적인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아지고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는 높아지는 모습이지만, 계층 불일치 그룹의 경우는 부정적인 견해가 유난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5>는 로봇과 AI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경제 계층별 견해 차이를 핵심 중산층을 기준으로 순서형 로짓 모형을 통해 평가한 결과이다. 인간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 인류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견해는 심리적 비상층에서 유의하게 높고, 중산층 일자리를 위협해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견해는 상층에서 낮고 취약 중산층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3-19] 로봇과 AI 기술 발전에 대한 견해

(단위: 1~4점 척도)



주: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약간 동의, ④ 매우 동의로 측정됨.
() 안의 수치는 전체 평균 수치.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3-25> 로봇과 AI 기술 발전에 대한 견해 - 순서형 로짓 모형

	(1) 인간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 인류에게 혜택을 줄 것	(2) 중산층 일자리를 위협해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
상층	0.170 (0.173)	-0.256 (0.154) +
심리적 비상층	0.216 (0.081) **	0.114 (0.073)
취약 중산층	0.035 (0.076)	0.280 (0.072) **
하층	-0.115 (0.132)	0.006 (0.126)

주: 성, 연령, 교육수준 통제.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N=3,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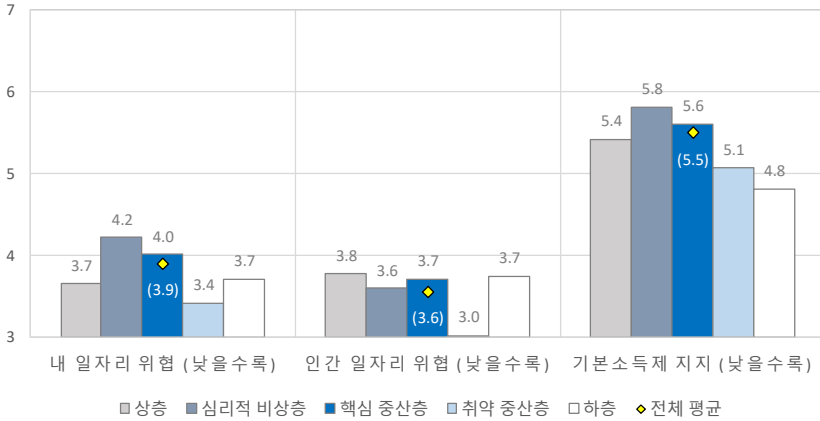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보았다.

첫째, 로봇과 AI 기술이 내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내 일자리는 여전히 안전할 것이라고 보는지, 둘째, 경제 전체로 볼 때 로봇과 AI 기술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이다. 세 번째로 만약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면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지지하는지를 물었다.

[그림 3-20] 로봇과 AI 기술 발전 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

(단위: 0~10점 척도)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평균 수치.

각 문항에서 대비되는 두 견해 중 어느 의견에 더 동의하는지를 0~10점 척도로 확인함.

- 0: 로봇과 AI 기술이 더 발전하면 내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vs 10: 로봇과 AI 기술이 더 발전해도 내 일자리는 안전할 것이다.
- 0: 경제 전체로 보면, 로봇과 AI 기술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vs 10: 경제 전체로 보면, 로봇과 AI 기술이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것이다.
- 0: (일자리가 줄어들다면) 일하지 않아도 생활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기본소득제를 지지한다. vs 10: 기본소득제보다는 정부가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3-26> 로봇과 AI 기술 발전 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 - 순서형 로짓 모형

	(1) 내 일자리 위협 (낮을수록)	(2) 인간 일자리 위협 (낮을수록)	(3) 기본소득제 (낮을수록)
상층	-0.064 (0.041)	0.001 (0.040)	-0.027 (0.034)
심리적 비상층	0.024 (0.018) **	-0.022 (0.019)	0.025 (0.016)
취약 중산층	-0.079 (0.018)	-0.103 (0.019) **	-0.055 (0.015) **
하층	-0.025 (0.032)	0.018 (0.032)	-0.083 (0.027) **

주: 성, 연령, 교육수준 통제.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N=3,434).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각 응답은 대비되는 두 의견 사이에서 0~10점 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그림 3-20]에 요약되어 있다. <표 3-26>에는 사회경제 계층별 인식 차이에 대한 순서형 로짓 모형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였다.

로봇과 AI 기술이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인식은 평균 3~4

점대의 동의 수준을 보여 대체로 어느 정도 일자리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 중산층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반대로 심리적 비상층과 핵심 중산층에서는 위협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 전체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로봇과 AI 기술이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가능성보다는 기존 일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에 더 동의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에서 3점대의 평균을 기록하고 있다.

계층별 인식 차이는 사회경제 계층별 직업 분포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그림 3-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약 중산층의 경우 생산직과 노무직 비중이 높아 자동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으며, 반면에 관리직이나 전문직 비중이 큰 심리적 비상층은 상대적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 정도 사회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하층과 달리, 취약 중산층은 전적으로 자신의 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안정성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하층을 제외하면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많았다. 특히 심리적 비상층과 핵심 중산층에서 기본소득제보다는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더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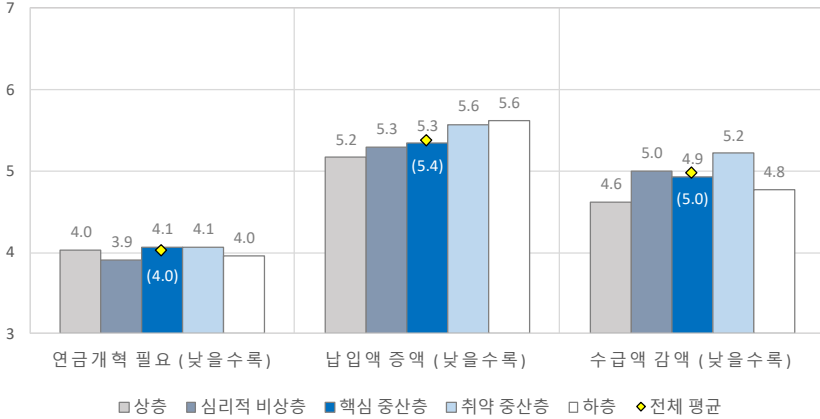
다. 우리 사회의 개혁 이슈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2041년에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5차 재정추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그림 3-21).

우선 현세대가 더 내거나 덜 받는 등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0)는 견해와 현재 제도를 유지하고 부족분은 미래세대의 조세로 부담하자(10)는 견해를 놓고 선택하게 하였는데, 평균 4점 전후로 응답하여 연금 개혁을

[그림 3-2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단위: 0~10점 척도)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평균 수치.

각 문항에서 대비되는 두 견해 중 어느 의견에 더 동의하는지를 0~10점 척도로 확인함.

- 0: 현재대가 더 내거나 덜 받는 등의 연금 개혁 필요 vs 10: 현재 제도를 유지하고 부족분은 미래세대의 조세로 부담.
- 0: 연금 납입액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vs 10: 연금 납입액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0: 연금 수급액을 조금 줄어도 괜찮다. vs 10: 연금 수급액을 더 늘려야 한다.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3-27>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향-순서형 로짓 모형

	(1) 연금 개혁 필요 (낮을수록)	(2) 납입액 증액 (낮을수록)	(3) 수급액 감액 (낮을수록)
상층	0.012 (0.039)	0.003 (0.039)	-0.033 (0.043)
심리적 비상층	-0.025 (0.019)	0.004 (0.018)	0.005 (0.020)
취약 중산층	-0.019 (0.018)	0.009 (0.018)	0.038 (0.019) +
하층	-0.030 (0.033)	0.041 (0.032)	-0.025 (0.035)

주: 성, 연령, 교육수준 통제.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N=3,434).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아주 시급하게 느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필요성에 동의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계층 간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납입액을 더 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연금 수급액을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도 확인하였는데, 전자(납입액 증액)에 대한 저항이 후자(수급액 감액)에 대한 저

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입액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층 지위가 내려갈수록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산층, 그중에서도 계층 불일치 그룹에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중산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은퇴 후 연금 의존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인적 특성을 통제하고 보면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한 견해에서 사회경제 계층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이다(표 3-27).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의 개혁 이슈에 대한 사회경제 계층별 견해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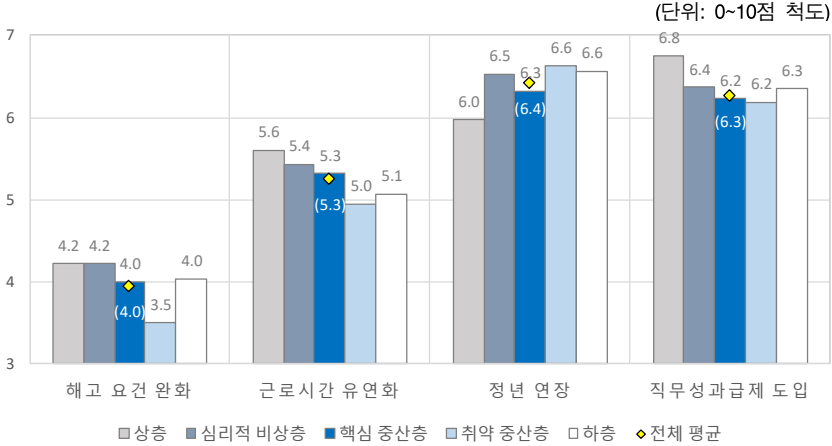
먼저 노동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고 요건 완화, 근로시간 유연화, 정년 연장,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네 가지 의제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다. [그림 3-22]에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3-28>은 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의 사회경제 계층별 차이를 보고한다.

전체적으로, 정년 연장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동의를 표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유연화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수준, 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 계층별로 보면, 취약 중산층에서 해고 요건 완화 및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반대가 강하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심리적 비상층은 해고 요건 완화 및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는 핵심 중산층보다는 상층과 가까운 견해를 보이지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취약 중산층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표하고 있다.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중산층보다는 상층과 하층에서 더 높은 지지를 보이는데, 이들 계층의 경우 임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임금체계가 이미 충분히 성과 기준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개혁 이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견해를 확인하였다(그림 3-23). 첫째, 기본권리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에 더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산업 변화 대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교육에 더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지의 견해이고,

[그림 3-22] 노동 분야 개혁 이슈에 대한 인식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평균 수치.

각 문항에서 대비되는 두 견해 중 어느 의견에 더 동의하는지를 0~10점 척도로 확인함.

- 0: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위해 고용보장 강화해야 vs 10: 원활한 일자리 흐름을 위해 고용과 해고 요건 완화 필요.
- 0: 장시간 근로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반대 vs 10: 원활한 업무 수행과 긴 휴가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찬성.
- 0: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므로 정년 연장을 반대 vs 10: 고령화 대처를 위해 정년 연장 찬성.
- 0: 평가의 어려움과 조직문화를 고려, 직무·성과급제 반대 vs 10: 업무성과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직무·성과급제 찬성.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3-28> 노동 분야 개혁 이슈에 대한 인식-순서형 로짓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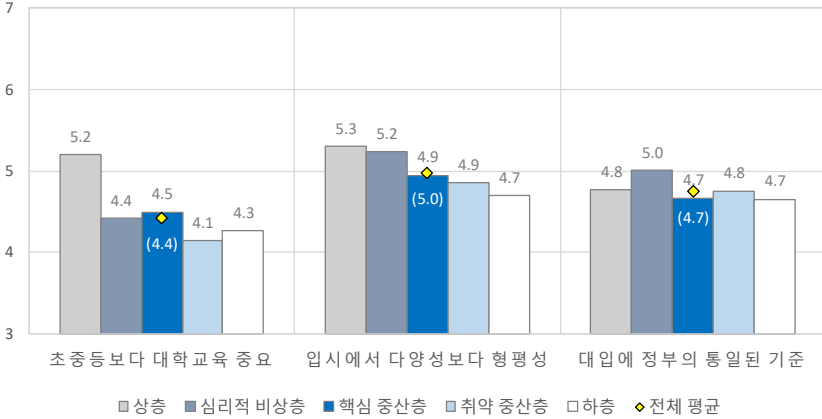
	(1) 해고 요건 완화	(2) 근로시간 유연화	(3) 정년 연장	(3) 직무성과급제
상층	0.022 (0.037)	0.024 (0.034)	-0.047 (0.038)	0.085 + (0.044)
심리적 비상층	0.034 * (0.017)	0.013 (0.016)	0.027 (0.018)	0.023 (0.019)
취약 중산층	-0.070 ** (0.018)	-0.038 * (0.015)	0.049 ** (0.018)	-0.003 (0.018)
하층	-0.004 (0.030)	-0.028 (0.027)	0.048 (0.033)	0.023 (0.034)

주: 성, 연령, 교육수준 통제.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N=3,434).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그림 3-23] 교육 분야 개혁 이슈에 대한 인식

(단위: 0~10점 척도)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평균 수치.

각 문항에서 대비되는 두 견해 중 어느 의견에 더 동의하는지를 0~10점 척도로 확인함.

5) 0: 기본권리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에 더 투자 vs 10: 산업 변화 대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교육에 더 투자.

6) 0: 입시제도는 다원화를 지향해 다양한 기준 적용 vs 10: 형평성을 위해 단순명료한 기준 적용.

7) 0: 입시제도에서 대학의 자율적 판단 확대 vs 10: 정부의 통일된 기준을 우선시.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3-29> 교육 분야 개혁 이슈에 대한 인식-순서형 로짓 모형

	(1) 초중등교육보다 대학교육 중요	(2) 입시에서 다양성보다 형평성	(3) 대입에서 정부의 통일된 기준
상층	0.081 (0.035) *	0.043 (0.035)	0.025 (0.036)
심리적 비상층	-0.009 (0.016)	0.028 (0.016) +	0.041 (0.016) *
취약 중산층	-0.040 (0.016) *	-0.007 (0.016)	0.005 (0.016)
하층	-0.020 (0.029)	-0.022 (0.029)	0.002 (0.030)

주: 성, 연령, 교육수준 통제.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N=3,434).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둘째, 입시제도에서 다원화를 지향하여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지, 아니면 형평성을 위해 단순명료한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한 견해이며, 셋째, 입시제도에서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확대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정부가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우선시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견해이다.

국민 전체로 보면 대학교육보다는 초중등교육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 중산층과 하층에서 이러한 견해가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일하게 상층에서만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시제도와 관련해 다원화와 형평성 기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계층 지위가 낮아질수록 단일한 기준보다는 다양한 기준의 적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한 일원화된 선발 방식보다는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확대하자는 견해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심리적 비상층에서는 두 견해에 비슷한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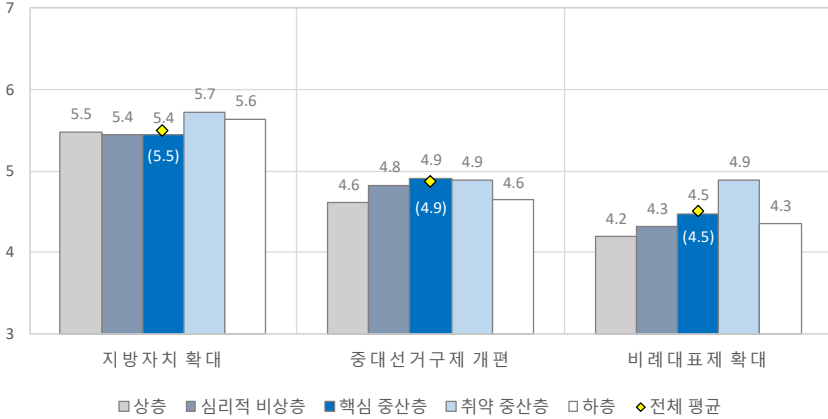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 개혁 이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그림 3-24). 지방자치 확대에 대한 견해,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및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다.

우선 지방자치제에 대한 견해에서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확대 의견은 취약 중산층과 하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이들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인적 특성을 통제하면 취약 중산층의 경우만 핵심 중산층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정치 성향을 추가로 통제하면 그마저도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다. 이는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견해에서 정치 성향의 영향을 배제하면 사회경제 계층 간 견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범중산층보다는 상층과 하층에서 책임성이 강한 소선거구제 유지를 더 희망하며, 취약 중산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명확한 대표성을 갖는 지역 선거구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치 성향을 통제하고도 이 같은 특징은 대체로 유지된다(표 3-30 하단 참조).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3-24] 정치 분야 개혁 이슈에 대한 인식

(단위: 0~10점 척도)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평균 수치.

각 문항에서 대비되는 두 견해 중 어느 의견에 더 동의하는지를 0~10점 척도로 확인함.

- 0: 행정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 축소 vs 10: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 확대.
- 0: 책임성이 더 강한 소선거구제 유지 vs 10: 승자독식 및 사표 방지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 0: 명확한 대표성을 갖는 지역 선거구제 선호 vs 10: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례대표제 확대.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3-30> 정치 분야 개혁 이슈에 대한 인식 - 순서형 로짓 모형

	(1) 지방자치 확대	(2) 중대선거구제 개편	(3) 비례대표제 확대
성, 연령, 교육수준 통제			
상층	0.016 (0.036)	-0.046 (0.038)	-0.024 (0.037)
심리적 비상층	-0.003 (0.017)	-0.019 (0.017)	-0.025 (0.017)
취약 중산층	0.033 (0.016) *	0.007 (0.017)	0.049 (0.017) **
하층	0.036 (0.029)	-0.024 (0.031)	-0.008 (0.031)
정치 성향 추가 통제			
상층	0.032 (0.036)	-0.042 (0.038)	-0.002 (0.038)
심리적 비상층	-0.005 (0.017)	-0.019 (0.017)	-0.029 (0.017) +
취약 중산층	0.025 (0.017)	0.004 (0.017)	0.038 (0.017) *
하층	0.034 (0.029)	-0.025 (0.031)	-0.011 (0.031)

주: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N=3,434).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라. 사회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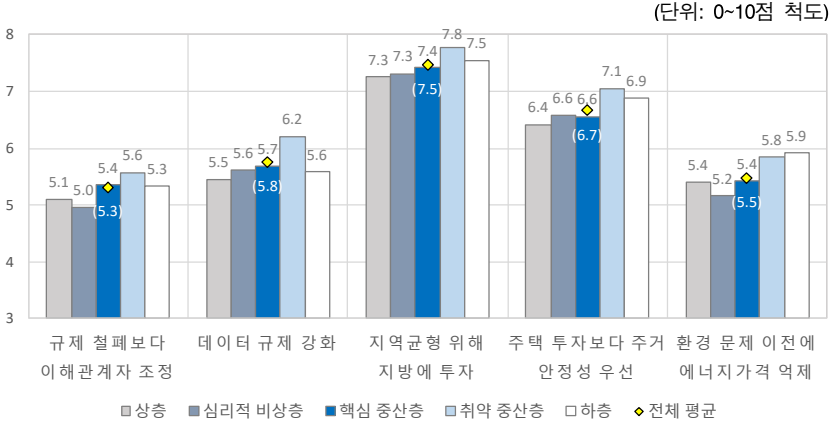
[그림 3-25]는 다양한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사회경제 계층별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타다·에어비앤비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데이터 규제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규제들에 대해 산업적 필요에 의한 단순한 규제 철폐보다는 안전성과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정이 먼저라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견해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각각 5.3점, 5.8점). 사회경제 계층별로는 심리적 비상층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 철폐를 지지하는 정도가 가장 크지만 동의 수준이 5.0점에 불과해 절대적 우위를 가진 견해는 아니다. 데이터 규제와 관련해서는 취약 중산층에서 규제 강화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범중산층으로 한정해 보면 계층 지위가 낮아질수록 신중한 접근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정책과 관련해서 수요가 있는 서울에 인프라를 더 집중하자는 견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자는 견해를 비교했을 때 지방 투자 우선에 압도적인 지지(7.5점)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택정책에서 주택을 자산으로 보는 정책보다는 주거의 안정성 및 분배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훨씬 우세하며(6.7점), 에너지 가격정책에서는 환경 및 온난화 해결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물가안정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억제해야 한다는 관점이 상대적으로 더 지지받고 있다(5.5점). 이러한 견해에서는 범중산층 내에서 계층 지위가 낮을수록 지지도가 체계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공통으로 나타나는데, 심리적 비상층과 핵심 중산층 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핵심 중산층과 취약 중산층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정책 중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기혼 유자녀 가정 혜택,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할당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에 대한

[그림 3-25]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평균 수치.

- 각 문항에서 대비되는 두 견해 중 어느 의견에 더 동의하는지를 0~10점 척도로 확인함.
- 0: 타다, 에어비앤비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 철폐 vs 10: 안전성과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정이 먼저.
 - 0: 산업육성과 정책개선을 위해 데이터 규제 완화 vs 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규제 강화.
 - 0: 수요가 있는 서울에 인프라 집중 vs 10: 지역균형을 위해 지방에 투자 확대.
 - 0: 주택을 주거수단을 넘어 자산으로 보는 정책 필요 vs 10: 주거의 안정성 및 분배를 우선 시하는 정책 필요.
 - 0: 환경 및 온난화 해결을 위해 에너지 가격 인상 vs 10: 삶의 수준 보장을 위해 에너지 가격 억제.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3-31>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 순서형 로짓 모형

	(1) 규제 철폐보다 이해관계자 조정	(2) 데이터 규제 강화	(3)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투자	(2) 주택 투자보다 주거안정성 우선	(3) 환경 문제 이전에 에너지 가격 억제
상층	-0.032 (0.037)	-0.023 (0.038)	-0.029 (0.044)	-0.027 (0.038)	0.005 (0.038)
심리적 비상층	-0.048 ** (0.017)	-0.005 (0.018)	-0.021 (0.020)	-0.002 (0.018)	-0.032 (0.018) +
취약 중산층	0.013 (0.017)	0.061 ** (0.018)	0.081 ** (0.021)	0.086 ** (0.019)	0.051 ** (0.018)
하층	-0.036 (0.031)	-0.035 (0.031)	0.035 (0.037)	0.057 + (0.033)	0.061 + (0.032)

주: 성, 연령, 교육수준 통제.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N=3,434).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견해를 확인해 보았다. 응답 결과는 [그림 3-26]에 요약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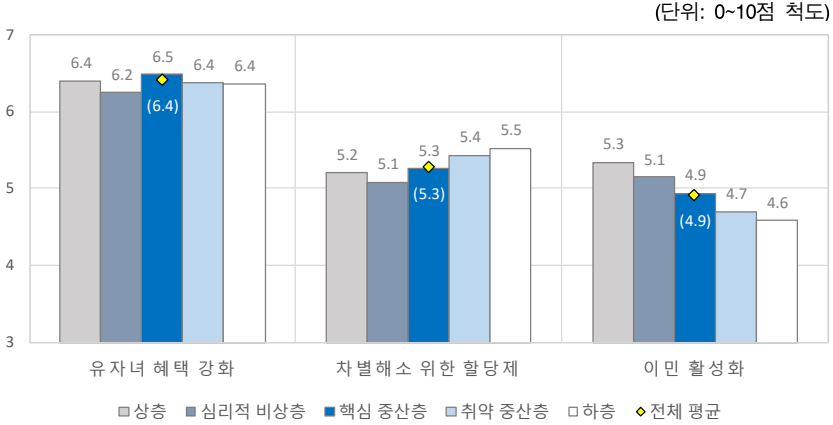
먼저 기혼 유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층 간에도 큰 차이가 없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성별, 지역별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할당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동의 수준이 5점을 근소하게 웃도는 수준으로 찬반 견해가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비상층에서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계층 지위가 낮아질수록 할당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이민 활성화 정책에서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 계층 지위가 낮을수록 이민정책에 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할당제는 상층 및 심리적 비상층의 기회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민자가 확대되면 하층에서 고용기회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경제 계층 간 견해 차이는 인적 특성을 통제하면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표 3-32).

이번엔 외교정책을 살펴보자. 외교정책에서는 미·중과의 균형외교와 대미 외교 중시의 견해를 비교하였으며, 아울러 선진국으로서 해외 원조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다(그림 3-27).

우리 국민들은 대미 외교를 중시하자는 견해보다는 미·중과의 균형외교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더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범중산층에서 이러한 견해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가 위상 및 국제적 이익을 위해 해외 원조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국민적 동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계층 지위가 낮은 취약 중산층과 하층에서 원조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국가 위상 이전에 국내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확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3-26]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평균 수치.

각 문항에서 대비되는 두 견해 중 어느 의견에 더 동의하는지를 0~10점 척도로 확인함.

- 1) 0: 형평성 및 다양성을 위해 기혼 유자녀 가정에 혜택 반대 vs 10: 저출산 해결을 위해 기혼 유자녀 가정 혜택 강화.
- 2) 0: 기회는 충분히 공정하므로 인위적 할당제 불필요 vs 10: 성별, 지역별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할당제 필요.
- 3) 0: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이민 규제 vs 10: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3-32>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순서형 로짓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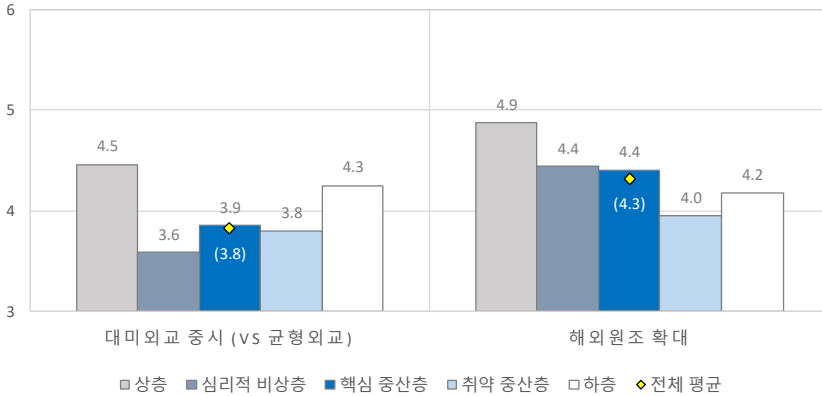
	(1) 유자녀 혜택 강화	(2) 차별 해소를 위한 할당제	(3) 이민 활성화
통제변수 없음			
상층	-0.10 (0.036)	-0.007 (0.037)	0.057 (0.039)
심리적 비상층	-0.029 (0.016)	-0.023 (0.017)	0.029 (0.018) +
취약 중산층	-0.013 (0.016) +	0.024 (0.016)	-0.034 (0.017) *
하층	-0.015 (0.029)	0.035 (0.030)	-0.051 (0.031) +
성, 연령, 교육수준 통제			
상층	-0.018 (0.036)	-0.001 (0.037)	0.048 (0.039)
심리적 비상층	-0.024 (0.017)	-0.024 (0.017)	0.021 (0.018)
취약 중산층	-0.004 (0.016)	0.019 (0.017)	-0.019 (0.018)
하층	-0.015 (0.030)	0.037 (0.031)	-0.045 (0.032)

주: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N=3,434).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그림 3-27]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단위: 0~10점 척도)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평균 수치.

각 문항에서 대비되는 두 견해 중 어느 의견에 더 동의하는지를 0~10점 척도로 확인함.

- 1) 0: 안보-경제 간, 미국-중국 간 균형 외교 필요 vs 10: 안보를 우선시하여 미국 중심의 질서에 편입.
- 2) 0: 국내 문제 해결이 우선, 해외 원조 최소화 vs 10: 국가 위상 및 국제적 이익을 위해 해외 원조 규모 확대.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3-33>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순서형 로짓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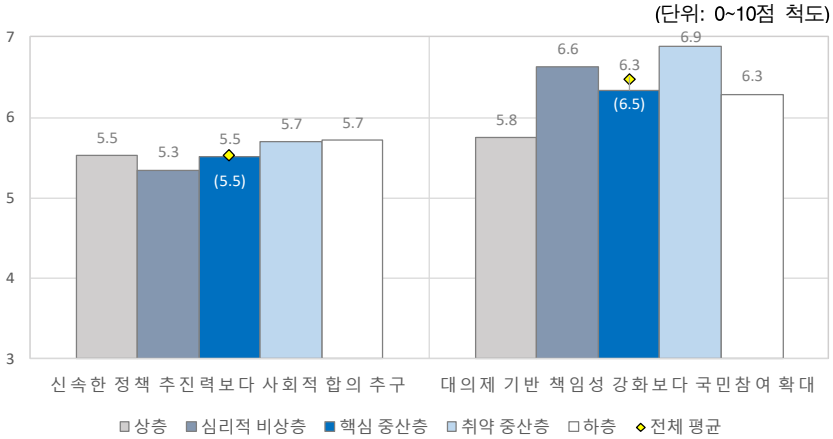
	(1) 대미 외교 중시 (vs 균형외교)	(2) 해외 원조 확대
상층	0.067 (0.036) +	0.072 (0.042) +
심리적 비상층	-0.021 (0.017)	0.005 (0.019)
취약 중산층	-0.014 (0.017)	-0.077 (0.019) **
하층	0.031 (0.030)	-0.041 (0.034)

주: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N=3,434).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 추구나 국민참여 확대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다(그림 3-28). 우리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정부의 신속하고 강한 정책 추진력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것(5.5점), 그리고 대의제 기반의 책임성 강화보다는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6.5점)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8]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견해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평균 수치.

각 문항에서 대비되는 두 견해 중 어느 의견에 더 동의하는지를 0~10점 척도로 확인함.

1) 0: 정부의 신속하고 강한 정책 추진력 vs 10: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추구.

2) 0: 대의제 원칙에 기반한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 있는 결정과 책무성 강화 vs 10: 정책 결정 과정에 주권자인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를 더 확대.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3-34>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견해 - 순서형 로짓 모형

	(1) 신속한 정책 추진력보다 사회적 합의 추구	(2) 대의제 기반 책임성 강화보다 국민참여 확대
상층	0.001 (0.036)	-0.077 (0.037) *
심리적 비상층	-0.028 (0.017) +	0.037 (0.018) *
취약 중산층	0.024 (0.017)	0.090 (0.018) **
하층	0.033 (0.030)	-0.003 (0.032)

주: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N=3,434).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특히 국민참여 확대 의견에서는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에서 매우 높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계층이 가장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띠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결과이다.³⁰

30 결과 보고는 생략했지만, 정치 성향을 추가로 통제하면 계수 크기가 줄어들는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여전히 유지된다.

제5절 소 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이 동질적인 하나의 범주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질적인 여러 집단이 중층화되어 있는 복합적 계층이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KDI 계층인식조사를 이용하여 객관적 기준(가구소득)과 계층의식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계층 범주—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를 구성하고 세부 계층별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고소득층이면서 스스로는 상층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심리적 비상층은 고학력자 및 고소득자 비중이 상층보다도 높고, 관리직/전문직 비중과 자가 보유 비율도 가장 높으며,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자산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핵심 중산층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주관적 중산층의 상위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은 말 그대로 ‘엘리트’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취약 중산층은 교육수준, 직업군, 개인 소득 및 자산 등에서 핵심 중산층과 하층의 중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의해 언제든지 하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는 경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 및 생활 여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도 범중산층 범주 내에서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은 하나의 그룹으로 포괄하기에는 너무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리적 비상층은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핵심 중산층보다는 상층에 가깝거나 심지어 상층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취약 중산층은 중산층보다는 하층과 더 유사한 특성을 보여준다.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은 불평등 인식 및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 사회경제적 인식 및 정책에 대한 견해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계층 불일치 그룹에 해당하는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은 불평등 인식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갖고 있지만,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분배 정책에서 자신의 주관적/객관적 계층 지위와 어긋난 견해를 보여주기도 한다. 예컨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 수준에 대해 핵심 중산층에서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에서는 줄여도 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심리적 비상층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어느 그룹을 중산층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밖의 다양한 현안 이슈나 사회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확장된 중산층 범주 내에서 견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할당제, 그리고 이민 활성화 정책 등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심리적 비상층은 할당제에 대해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민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취약 중산층에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할당제는 심리적 비상층의 기회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민자 확대는 취약 중산층의 고용기회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산층의 이러한 다층성을 감안할 때 주관적 중산층의 상층부, 특히 엘리트 중산층의 견해가 중산층의 사회적 니즈로 과대포장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증하고 있는 취약 중산층의 위협요인(주거 불안, 고용 불안 등)을 경감시키는 데 중산층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계층 인식 및 재분배 선호에 대한 정보 효과 실험의 실증분석

황 수 경 (한국개발연구원)

제1절 머리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202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의 조건으로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686만원, 월소비 427만원, 순자산이 9억 4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각각의 순위를 따져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은 상위 46% 수준이고, 소비는 상위 27%, 순자산은 상위 20% 수준이다.³²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려면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중간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위 20% 이상의 상당히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계층이 되어야 한다. 중산층 조건이 이렇게 높다 보니 객관적 조건에서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 (NH투자증권의 조사에 따르면 45.6%)가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응답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31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2022 중산층 보고서』, NH투자증권, 2022. 9.

32 소득, 소비는 2021년 연간 기준이며, 자산은 2022년 3월 말 기준이다. 100세시대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월소득 686만원을 상위 24% 수준, 월소비 427만원을 상위 9.4% 수준, 순자산 9억 4천만원을 상위 11% 수준으로 평가했으나, 이는 명백히 오류이다.

공인된 국가 통계를 이용해 수치를 다시 확인해 보자. OECD 기준에 따라 중산층을 가구소득이 표준화 중위소득의 75~200% 이하인 가구로 정의했을 때 상층은 14.4%, 중산층 50.6%, 하층 35.0%의 비중으로 나타난다. 이때 중산층의 연간소득은 2021년 4인 가구 기준으로 4,816만원에서 1억 2,817만원 사이이며,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401만원에서 1,068만원 사이가 된다(평균 677만원). 그리고 중산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358만원이며, 순자산은 5억 4천만원 수준이다.³³ 요즘 주변에서 더 자주 관찰되는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소득은 347만~925만원 사이(평균 582만원),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원 수준, 순자산은 5억원 정도가 우리 사회의 실제 중산층의 모습이다.

개인들은 우리 사회의 전체 소득분포와 자신의 객관적인 소득 지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일까? 전체 소득분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왜곡된 인식에 기반해 중산층의 기준을 높게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객관적인 소득분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중산층’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판단기준 때문에 자신을 중산층 범주에 올려놓지 못하는 것일까? 전자는 부족하거나 왜곡된 정보로 인한 결과일 것이고, 후자는 중산층의 기준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간적 생활 수준보다 훨씬 높은 데서 야기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 오류는 단순히 중산층의 판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계층 지위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인식 및 정책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객관적인 소득 지위를 잘못 알고 있어서 중산층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인식을 더 비관적 혹은 낙관적으로 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이 정책 판단에도 반영되어 우리 사회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면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이러한 왜곡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소득 지

33 시장소득에 공적이전 순소득을 더해 실제 가구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층 10.3%, 중산층 58.3%, 하층 31.4%가 되어 재분배 효과로 인해 상층과 하층이 줄고 중산층이 더 두터워졌음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중산층의 연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401만~1,069만원 사이(평균 665만원), 월소비는 369만원, 순자산은 6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위와 무관하게 ‘중산층’의 기준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 기준과 객관적 중산층 기준 간의 괴리가 크다면 주관적 ‘중산층’ 개념은 정책대상으로서 매우 제한적인 의미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특히 주관적 ‘중산층’을 토대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허리가 아닌 기득권층에 더 유리한 상황을 강화할 위험을 야기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인식 편향에 대한 탐색을 본격적인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객관적인 소득 지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주관적 계층 인식이 바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재분배 선호와 같은 정책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KDI 계층인식조사는 ‘객관적 정보 제공’이라는 처치를 포함하는 실험적 설계를 가미하여 2차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2차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인식 편향의 수정이 가져올 변화를 분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편향된 소득분포 및 계층 인식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실험적 방식으로 진행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며, 제3절에서는 우리 조사의 실험 디자인과 데이터 구조를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뒤이어 제4절에서는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객관적인 계층 지위라는 정보 제공이 계층 인식과 정책 태도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할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소득과 부의 분포에 대한 개인들의 믿음이 일반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며 소득분포에서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평가에서 체계적인 편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제2장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러한 인식 편향이 재분배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다양

한 실험적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가장 먼저 실험 설계를 도입한 연구로는 Cruces *et al.*(2013)을 꼽을 수 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를 대상으로 객관적 소득 지위와 주관적 인식 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며, 거주지역으로 측정된 준거집단과 응답자의 상대적 소득 지위 인식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이질적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친구를 둔 응답자들이 이러한 편견에 덜 취약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일부에게만 개인의 소득 지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험적 조사를 통해 편향(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지위의 차이)의 제거가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과대평가하여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것으로 평가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실제 순위를 알고 나서 더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Zilinsky(2014)는 불평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미국 유권자들의 낙관적인 신념 및 재분배에 대한 낮은 선호와 관련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실험에서 정보처리에 무작위로 할당하여 소득불평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정보의 제공 방식(숫자 혹은 도표)을 달리했을 때 실제 불평등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정보에 노출된 피실험자들이 통계집단에 비해 경제적 기회에 대한 비관론이 증가하고 일반적이고 불특정한 재분배 조치에 대한 지지는 증가하였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실험은 개인의 위치에 대한 정보 수정이라기보다 전체 사회의 불평등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어 통상적인 정보 실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Karadja *et al.*(2017)은 스웨덴 표본을 대상으로 소득분포에서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지를 평가하였는데, 응답자의 86%가 실제보다 자신이 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13%는 자신의 위치를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정보를 더 많이 취득하는 사람일수록 편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의 조사 자료를 스웨덴 통계청의 행정기

록과 연결하여 2차 조사 시 부분 표본에 대해 실제의 상대소득을 알려준 결과,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부유하다는 것을 알게 된 개인은 재분배를 덜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들은 소득분포에 대한 잘못된 믿음 자체보다는 개인의 상대소득에서의 오류가 재분배에 대한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Engelhardt and Wagener(2018)는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Cruces *et al.*(2013) 및 Karadja *et al.*(2017)과 같은 정보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연구 결과는 다소 엇갈린다. 독일에서도 가난한 응답자들은 자신의 순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부유한 응답자들은 상대적인 소득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소득분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재분배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평등을 글로벌 관점으로 확장한 Fehr *et al.*(2022)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되는데, 독일 국민들은 ‘세계’ 소득분배에서 개인의 실제 위치를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지만 그러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세계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그들의 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vidberg *et al.*(2023)은 덴마크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참조그룹 내에서의 소득 지위 인식과 불평등에 대한 공정성 관점을 조사하고, 이 자료를 참조그룹 및 개인의 소득 이력에 대한 행정자료와 연결하여 유사한 정보 실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람들은 참조그룹의 소득수준에 대해 대체로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에서는 중심편향(center bias)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모든 참조그룹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해당 그룹 내의 불평등이 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무작위로 절반의 사람들에게 실제 위치를 알려준 결과, 모든 참조그룹에서 소득불평등을 훨씬 더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대평가한 사람들에서 불공정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과소평가한 사람들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여러 국가를 배경으로 다양한 실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편향의 원인이나 편향 수정의 결과에서는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할 만한

공통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관된 결과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엄밀히 말해 ‘인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회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깊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마다 시대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3절 본 연구의 실험 설계

다수의 외국 문헌들에 비해 국내에서는 ‘객관적 계층-계층의식’ 혹은 ‘객관적 중산층-주관적 중산층’ 간의 괴리의 원인이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실험적 설계를 가미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의 피드백이 개인의 중산층 인식 및 재분배에 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KDI 계층인식조사의 실험 설계 구조는 [그림 4-1]에 요약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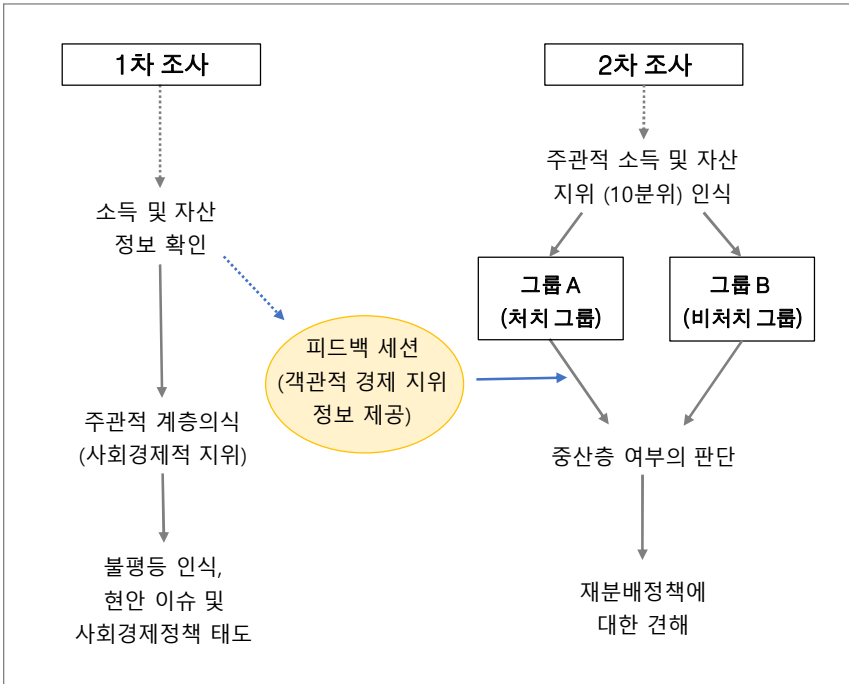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2차 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10분위 구간 표를 제시하고 자신의 소득분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게 하여 주관적인 자산분위도 파악하였다.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		중간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그리고 나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처치 그룹에만 다음과 같은 정보 내용을 보여주었다.

[그림 4-1] 실험 설계를 가미한 설문조사



자료: 저자 작성.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을 낮은 수준(0%)에서 높은 수준 (100%)으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지난 조사에서의 귀하의 응답에 따르면, 귀하 가구의 소득수준은 전체에서 _____% 구간, 자산 수준은 전체에서 _____% 구간에 해당합니다.

* 소득수준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2021년 월평균 소득, 자산 수준은 동 조사의 2022년 순자산을 토대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때 소득 및 자산 구간은 0~10%, 10~20%, ..., 90~100%로 표시되어 객관적인 소득/자산 10분위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개인들은 앞서 자신이 평가한 소득 및 자산의 위치가 객관적인 위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객관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그룹(처치 집단)과 제공받지 않은 그룹(비처치 집단)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만약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개인의 판단 오류를 수정하고 정책 태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 뒤이어 진행된 응답에서 두 그룹 간 체계적인 차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의 분석은 처치-비처치 집단 간 통계적 차이가 주된 분석대상이므로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은 원수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제4절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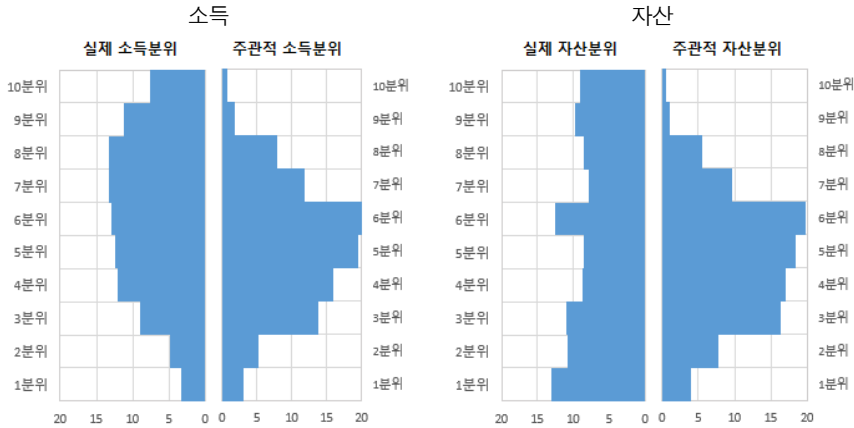
실증분석은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다. 첫째, 한국인의 경제적 지위 인식에서 체계적인 편향이 존재하는가? 둘째,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오인식은 중산층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경제적 지위 오인식의 수정이 재분배 선호와 같은 정책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보자.

1. 경제적 지위 인식과 편향의 특성

먼저 한국인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인식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편향의 특성을 살펴보자. [그림 4-2]는 2차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평가한 주관적 소득분위와 자산분위를 1차 설문조사 응답에서 확인된 객관적 소득분위 및 자산분위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자신의 소득 및 자산 지위를 평가할 때 상층에 속한 개인은 실제 위치보다 낮게 평가하고 하층에 속한 개인은 실제 위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중앙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으로부터 주관적 인식에서의 편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편향은 십분위(decile)로 측정된 주관적 지위와 객관적 지위 간의 차이로 정의한다. 따라서 자신의 지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사람들에

[그림 4-2] 실제 소득(자산) 및 주관적 소득(자산)의 분포



주: 2차 표본은 총 2,000명으로 구성됨.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서 양의 편향이 나타나고 반대로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 사람들에서 음의 편향이 나타날 것이다. <표 4-1>과 <표 4-2>는 소득과 자산 지위 판단에서의 편향의 특성을 각각 요약하고 있다.

먼저 소득 지위 인식에서의 편향을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상향 편향을 보인 사람이 24.3%, 하향 편향을 보인 사람이 58.9%이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16.9%에 불과한 가운데, 저소득층인 1~4분위에서는 양의 편향이 우세하고, 중간층과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5분위 이상에서는 음의 편향이 우세하며, 중간에서 멀어질수록 편향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향 편향을 보인 사람은 1분위에서 71%로 가장 많고 소득수준에 따라 줄어들며, 반대로 하향 편향을 보인 사람은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10분위에서는 97%에 이른다.

자산 지위 판단에서의 인식 편향은 소득 인식에서 관찰된 것보다 크기가 더 크고 편향을 가진 사람도 더 많지만, 소득 인식 편향과 자산 인식 편향의 전체적인 모습은 둘이 매우 유사하다(그림 4-3). 다만, 자산 인식 편향의 경우 상향 편향을 보인 사람(35.3%)이 늘고, 하향 편향을 보인 사람(50.4%)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4-1> 소득 지위 판단에서의 편향

객관적 소득분위	응답자 수	인식된 평균 소득분위	평균 편향	양의 편향		음의 편향		편향 없음 비중
				비중	평균	비중	평균	
1분위	66	2.879	1.879	0.712	2.638	0.000	0.000	0.288
2분위	98	3.347	1.347	0.663	2.200	0.112	-1.000	0.224
3분위	178	3.826	0.826	0.534	2.011	0.180	-1.375	0.287
4분위	242	4.273	0.273	0.434	1.724	0.331	-1.438	0.236
5분위	250	4.832	-0.168	0.372	1.495	0.432	-1.676	0.196
6분위	258	5.089	-0.911	0.182	1.468	0.585	-2.013	0.233
7분위	266	5.263	-1.737	0.086	1.304	0.793	-2.332	0.120
8분위	266	5.699	-2.301	0.026	1.143	0.842	-2.768	0.132
9분위	224	6.246	-2.754	0.013	1.000	0.951	-2.911	0.036
10분위	152	7.118	-2.882	0.000	0.000	0.967	-2.980	0.033
전체	2,000	5.076	-0.969	0.243	1.831	0.589	-2.400	0.169

주: 소득 인식 편향 = 객관적 소득분위 - 인식된 소득분위.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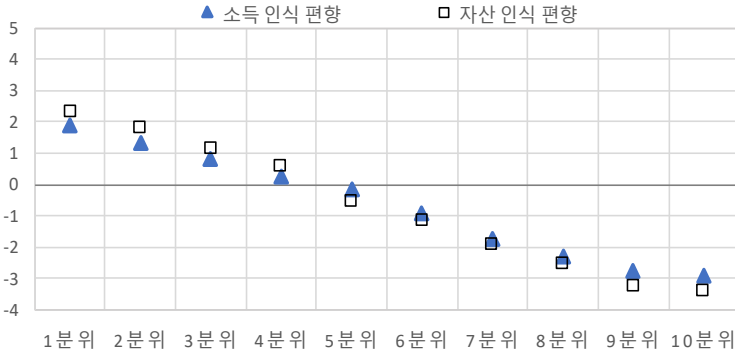
<표 4-2> 자산 지위 판단에서의 편향

객관적 자산분위	응답자 수	인식된 평균 자산분위	평균 편향	양의 편향		음의 편향		편향 없음 비중
				비중	평균	비중	평균	
1분위	260	3.335	2.335	0.842	2.772	0.000	0.000	0.158
2분위	217	3.839	1.839	0.788	2.427	0.074	-1.000	0.138
3분위	221	4.145	1.145	0.606	2.246	0.154	-1.412	0.240
4분위	173	4.572	0.572	0.486	1.952	0.283	-1.327	0.231
5분위	172	4.483	-0.517	0.291	1.460	0.512	-1.841	0.198
6분위	251	4.841	-1.159	0.131	1.515	0.649	-2.092	0.219
7분위	156	5.109	-1.891	0.051	1.125	0.833	-2.338	0.115
8분위	172	5.488	-2.512	0.035	1.333	0.913	-2.803	0.052
9분위	197	5.777	-3.223	0.000	0.000	0.990	-3.256	0.010
10분위	181	6.630	-3.370	0.000	0.000	0.972	-3.466	0.028
전체	2,000	4.736	-0.497	0.353	2.308	0.504	-2.600	0.144

주: 자산 인식 편향 = 객관적 자산분위 - 인식된 자산분위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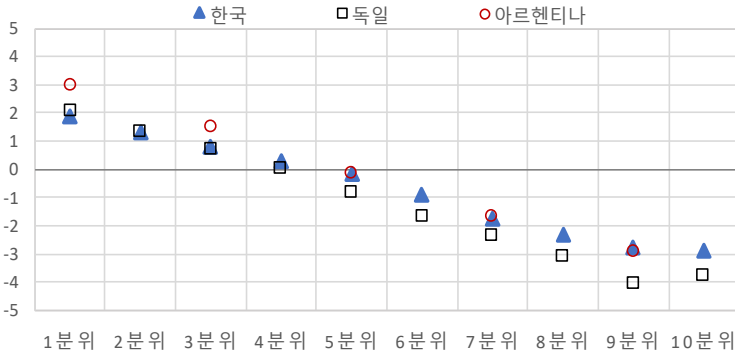
[그림 4-3] 소득 인식 편향과 자산 인식 편향의 비교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자산 인식 편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선행연구가 없지만, 소득 인식 편향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연구가 존재하여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그림 4-4]는 소득분위별 인식 편향의 크기를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독일은 Engelhardt and Wagener(2018), 아르헨티나는 Cruces *et al.*(2013)의 분석 결과를 차용한 것이다.³⁴

[그림 4-4] 소득분위별 인식 편향



주: 독일은 Engelhardt and Wagener(2018), 아르헨티나는 Cruces *et al.*(2013)의 결과이며, 아르헨티나는 5분위별 수치임.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34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4-3>과 <부표 4-4>에 수록하였다.

세 국가 모두에서 하층에서는 양의 편향, 상층에서는 음의 편향이 나타나 소득 지위 인식에서 중앙 쏠림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한편, 편향의 크기로 보면, 저소득층에서의 상향 편향은 아르헨티나에서 상대적으로 크고 한국과 독일에서는 그보다 작게 나타나는 반면, 상위층에서의 하향 편향은 독일에서 가장 크고 한국은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상층과 하층의 편향이 서로 대칭에 가까운 모습이라면 독일의 경우는 상층에서의 하향 편향이 압도적인 모습이고 한국은 그 중간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아르헨티나와 같이 대칭적인 편향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주관적 중산층이 객관적 중산층의 모습과 크게 괴리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독일과 한국에서는 상층의 하향 편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주관적 중산층은 객관적 중산층과 괴리되어 더 높은 소득계층을 포착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표 4-3>은 소득 지위 인식에서의 편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OLS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종속변수인 인식 편향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인식된 주관적 소득계층과 실제 소득계층의 차이로 측정되었다. 모형 (1)은 전체 집단에 대해 인적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 정치 성향) 변수를 추가하여 객관적 소득분위와 편향의 독립적 관계를 살펴본 것이고, 모형 (2)와 (3)은 각각 상향 편향을 가진 그룹(실제보다 자신의 소득계층을 높게 인식하는 그룹으로 주로 저소득층)과 하향 편향을 가진 그룹(실제보다 자신의 소득계층을 낮게 인식하는 그룹으로 주로 고소득층)에 한정하여 동일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하향 인식 편향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는 인식 편향의 절댓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인적 특성을 통제하고도 인식 편향은 객관적 소득분위와 강한 부(-)의 관계를 보인다.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1)에서 절편이 2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양의 편향이 증가하고,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음의 편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 중앙 쏠림 현상을 뒷받침한다.

<표 4-3> 소득 인식 편향의 결정요인

	종속변수: 소득 지위에서의 인식 편향		
	(1) 전체	(2) 상향 편향 그룹	(3) 하향 편향 그룹
상수항	2.599 (0.194) **	2.957 (0.255) **	0.591 (0.210) **
객관적 소득분위	-0.611 (0.015) **	-0.211 (0.028) **	0.303 (0.018) **
여성	-0.067 (0.071)	0.152 (0.097)	0.001 (0.067)
연령	-0.001 (0.003)	-0.006 (0.004) +	-0.003 (0.003)
중졸 이하	-0.355 (0.370)	0.395 (0.479)	-0.509 (0.473)
초대졸	0.198 (0.120) +	-0.133 (0.155)	-0.213 (0.117) +
대졸	0.585 (0.098) **	0.082 (0.124)	-0.528 (0.095) **
대학원 이상	0.747 (0.143) **	0.147 (0.212)	-0.680 (0.133) **
진보 성향(0~10)	-0.040 (0.017) *	-0.025 (0.025)	0.027 (0.016) +
N	2,000	485	1,177
Adj R-Sq	0.4597	0.1167	0.2005

주: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2) 하향 편향 그룹의 모형 (3)에서는 인식 편향의 절댓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함.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양의 편향과 음의 편향을 구분하여 분석한 모형 (2)와 모형 (3)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재확인되고 있다. 상향 편향 그룹의 경우 객관적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편향의 크기가 줄어들며, 하향 편향 그룹의 경우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편향의 크기가 확대된다.

한편, 인적 특성 변수의 효과는 상향 편향 그룹과 하향 편향 그룹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주로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상향 편향 그룹에서는 연령에 대해서만 1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고 다른 변수들과는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하향 편향 그룹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식 편향의 크기가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동일한 소득수준에서 자신의 소득계층 지위를 더 낮게 보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울러 하향 편향 그룹에서는 진보적 정치 성향이 편향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효과, 즉 자신의 계층 지위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

이번에는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 준거집단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 분석하였다. KDI 계층인식조사에서는 ‘귀하의 친구 및 동료들의 소득 및 자산 수준은 대체로 어느 계층에 분포되어 있습니까?’를 묻고, ① 대체로 상층에 속한다, ② 대체로 중산층에 속한다, ③ 대체로 하층에 속한다, ④ 전 계층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친구나 지인이 전 계층에 골고루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 계층에 주로 속해 있는 경우 편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을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는 <표 4-4>에서 보고한다. <표 4-3>에서와 마찬가지로 하향 인식 편향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는(모형 3) 인식 편향의 절댓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4-4> 소득 인식 편향의 결정요인 - 준거집단 효과 포함

	종속변수: 소득 지위에서의 인식 편향		
	(1) 전체	(2) 상향 편향 그룹	(3) 하향 편향 그룹
상수항	2.706 (0.208) **	2.930 (0.278) **	0.385 (0.223) +
객관적 소득분위	-0.637 (0.015) **	-0.222 (0.029) **	0.327 (0.018) **
주로 상층 지인	0.918 (0.261) **	-0.291 (0.422)	-0.719 (0.243) **
주로 중산층 지인	0.550 (0.107) **	0.191 (0.159)	-0.312 (0.101) **
주로 하층 지인	-0.363 (0.128) **	0.023 (0.187)	0.256 (0.121) *
여성	-0.129 (0.070) +	0.145 (0.097)	0.036 (0.066)
연령	-0.005 (0.003) +	-0.007 (0.004) *	-0.001 (0.003)
중졸 이하	-0.293 (0.360)	0.380 (0.479)	-0.463 (0.465)
초대졸	0.141 (0.117)	-0.161 (0.156)	-0.163 (0.116)
대졸	0.460 (0.096) **	0.052 (0.125)	-0.437 (0.095) **
대학원 이상	0.614 (0.139) **	0.119 (0.212)	-0.557 (0.132) **
진보 성향(0~10)	-0.041 (0.017) *	-0.026 (0.025)	0.032 (0.015) *
N	2,000	485	1,177
Adj R-Sq	0.4874	0.1180	0.2294

주: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2) 하향 편향 그룹의 모형 (3)에서는 인식 편향의 절댓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함.

3) 친구·지인 더미는 전 계층에 고루 분포된 경우가 기준 그룹임.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분석 결과, 상향 편향을 보인 집단에서는 친구나 지인의 구성이 편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하향 편향을 보인 집단에서는 친구나 지인이 대체로 상층이나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편향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하층과의 교류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이와 상반되게 편향의 크기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앙 편향의 원인과 관련한 기존 설명을 뒤집는 것이다. Cruces *et al.*(2013)은 개인이 계층 지위를 인식할 때 자신의 주변 이웃들을 중심으로 모집단을 예상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부자의 구성을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하여 하향 편향이 발생하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구성을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하여 상향 편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친구를 둔 응답자들은 이러한 편견에 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증분석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확인하였다. Cruces *et al.*(2013)의 설명대로라면 특정 소득계층의 사람들과 주로 친분이 있을 때 모집단에 대한 추론에서 해당 집단의 분포를 과대평가하여 편향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층과 주로 교류하는 사람들은 하향 편향이 증가하고 하층과 주로 교류하는 사람들은 하향 편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하향 편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상층과 주로 교류하는 사람들에서 편향의 크기가 가장 작고, 중산층과 주로 교류하는 사람들에서도 편향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오히려 하층과 주로 교류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전 계층과 두루 알고 지내는 사람들보다 편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하향 편향을 가진 고소득계층에서 상층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자신의 소득 지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층과의 교류가 많으면 자신의 소득 지위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친구나 지인으로 대표되는 준거집단은 모집단을 추론하는 표본(sample)으로 고려된다기보다는 자신이 동일시하고자 하는 내집단(in-group)으로 간주되고 그 집단 구성원들과 더 가깝게 자신을 위치 지으려는 경향을 가진다는 설명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중심 편향(center bias)

혹은 극단 회피(extremeness aversion)의 심리 성향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자산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도 유사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5>는 자산 지위에서의 인식 편향을 종속변수로 하고 객관적 자산 분위, 지인 계층 더미, 기타 통제변수들을 이용하여 결정요인들을 살펴본 것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하향 인식 편향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는 인식 편향의 절댓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이해를 용이하게 하였다. 예상대로 객관적 자산분위와 편향 간에 강한 부(-)의 관계가 확인되며, 모형 (1)에서 보듯이 자산 지위가 인식 편향에 미치는 한계효과(-0.699)는 소득 지위의 한계효과(-0.637)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산 지위에 관한 인식에서 더 뚜렷한 중앙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5> 자산 인식 편향의 결정요인 - 준거집단 효과 포함

	종속변수: 자산 지위에서의 인식 편향		
	(1) 전체	(2) 상향 편향 그룹	(3) 하향 편향 그룹
상수항	3.659 (0.199) **	4.632 (0.391) **	0.821 (0.244) **
객관적 자산분위	-0.699 (0.013) **	-0.724 (0.027) **	0.223 (0.015) **
주요 상층 지인	1.190 (0.262) **	0.161 (0.622)	-0.202 (0.303)
주요 중산층 지인	0.670 (0.108) **	0.438 (0.233) +	-0.277 (0.126) *
주요 하층 지인	-0.185 (0.129)	-0.148 (0.275)	-0.044 (0.151)
여성	-0.152 (0.070) *	-0.120 (0.142)	0.139 (0.083) +
연령	-0.023 (0.003) **	-0.026 (0.006) **	0.006 (0.004) +
중졸 이하	-0.689 (0.362) +	-0.547 (0.701)	0.034 (0.579)
초대졸	0.154 (0.117)	0.313 (0.228)	-0.081 (0.145)
대졸	0.428 (0.097) **	0.595 (0.182) **	-0.080 (0.119)
대학원 이상	0.709 (0.140) **	1.064 (0.313) **	-0.001 (0.164)
진보 성향(0~10)	-0.029 (0.017) +	-0.027 (0.037)	-0.001 (0.019)
N	2,000	485	1,177
Adj R-Sq	0.6482	0.6528	0.1833

주: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2) 하향 편향 그룹의 모형 (3)에서는 인식 편향의 절댓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함.

3) 친구·지인 더미는 전 계층에 고루 분포된 경우가 기준 그룹임.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상향 편향 그룹과 하향 편향 그룹을 나누어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적 특성 효과는 소득 인식 편향과 달리 상향 편향 집단에서 대체로 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편향이 감소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편향이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저자산 그룹에 속하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우 자신의 자산 지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지인 계층 더미는 주로 중산층과 교류한다는 사람들에서만 전 계층과 두루 교류한다는 사람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지만 그 효과는 상향 편향 그룹에서 편향을 키우고 하향 편향 그룹에서 편향을 줄이는 등 서로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 역시 준거집단과 동일시하려는 내집단 효과(in-group effect)와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득 인식 편향에서보다는 이 효과가 덜 체계적이고 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개인들 간 자산의 차이가 소득에 비해 밖으로 덜 드러난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인은 경제적 지위 인식에서 중앙 쏠림 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상위층에서의 하향 편향이 비대칭적으로 더 커서 주관적 중산층이 객관적 중산층보다 더 높은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경향은 소득보다는 자산 측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소득 지위의 오인식과 중산층 판단

KDI 계층인식조사에서는 실험적 설계를 가미해 소득 지위 인식에서의 오류가 중산층 판단이나 여타의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2차 조사의 전체 응답자 2,000명을 처치 집단과 비처치 집단에 각 1,000명씩 무작위로 배당하고 처치 집단에 대해서만 본인의 객관적인 소득 및 자산 지위를 알려준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처치 집단과 비처치 집단 간의 응답 차이를 통

해 소득 지위의 오류 수정이 다양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소득 지위의 오인식이 중산층 판단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처치 집단과 비처리 집단이 동일한 모집단을 대표하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6>은 처치/비처리 집단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의 응답 분포를 비교하고 있으며, [그림 4-5]는 소득과 자산에 대해 처치/비처리 집단 간 주관적 분위별 분포를 보여준다. 처치/비처리 집단의 객관적 소득분위 분포는 동일하게 설계되었으나, 주관적 소득분위와 주관적 자산분위, 그리고 1차 조사 정보로부터 구한 객관적 자산분위의 분포는 두 집단 간에 근소하게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처치/비처리 집단의 동질성(homogeneity)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표 4-6의 마지막 행),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세 지표 모두에서 기각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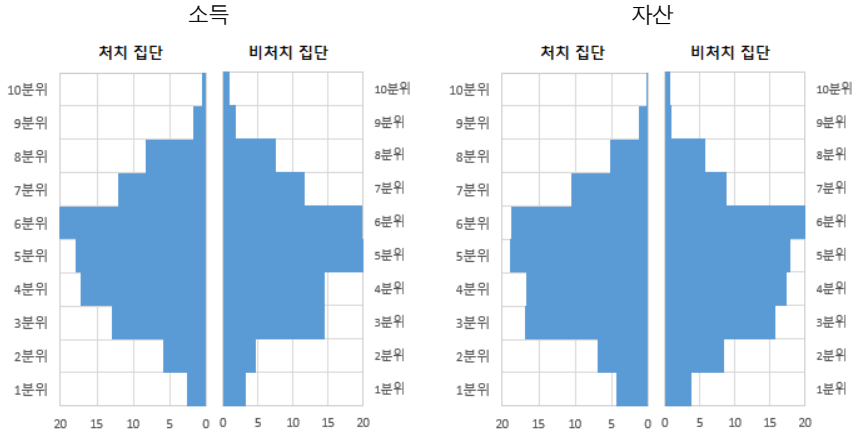
<표 4-6> 처치/비처리 집단의 응답 비교

(단위: %)

	실제 소득분위	주관적 소득분위		실제 자산분위		주관적 자산분위	
		처리	비처리	처리	비처리	처리	비처리
1분위	3.3	2.7	3.3	13.2	12.8	4.4	3.7
2분위	4.9	5.9	4.7	11.1	10.6	7.0	8.4
3분위	8.9	13.0	14.5	10.5	11.6	16.9	15.7
4분위	12.1	17.2	14.5	8.7	8.6	16.7	17.3
5분위	12.5	18.0	21.1	8.7	8.5	19.0	17.9
6분위	12.9	20.6	19.8	12.9	12.2	18.8	20.6
7분위	13.3	12.0	11.6	8.4	7.2	10.6	8.8
8분위	13.3	8.3	7.6	8.7	8.5	5.2	5.8
9분위	11.2	1.8	1.9	9.0	10.7	1.2	1.0
10분위	7.6	0.5	1.0	8.8	9.3	0.2	0.8
$\chi^2(p)$	-	9.76 (0.370)		3.50 (0.941)		9.35 (0.405)	

주: 처리/비처리 집단 간 실제 소득분위 분포가 동일하도록 표본을 설계함.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그림 4-5] 처치/비처치 집단 간 주관적 소득 및 자산 분포 비교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2차 조사에서는 처치 과정을 거친 후 응답자들에게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하는지를 직접 물었다. 이때 중산층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한 어떠한 사전적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응답자들이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중산층’ 이미지를 상정하여 판단하게 하였다. 비처치 집단은 자신의 소득 및 자산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기반을 두고 가부를 판단하였을 것이고, 처치 집단은 수정된 지위 정보를 바탕으로 중산층 여부를 판단하였을 것이다.

응답 결과는 <표 4-7>과 <표 4-8>에서 보고한다. <표 4-7>은 실제 및 주관적 소득분위별 주관적 ‘중산층’ 비율을, <표 4-8>은 실제 및 주관적 자산분위별 주관적 ‘중산층’ 비율을 처치/비처치 집단 간 차이와 함께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먼저 소득 지위에서 보면, 통상적인 중산층 기준의 하나인 중위 60%에 해당하는 사람들(객관적 중산층) 가운데 자신의 실제 소득 및 자산 지위에 관한 정보를 받은 처치 그룹에서 오히려 주관적 중산층 비율이 더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처치 집단에서는 객관적 중산층 가운데 37.3%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판단했지만, 처치 집단에서는 이보다 더 줄어 32.2%만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했다. 소득분위별로 구분해 보면

<표 4-7> 소득분위별 주관적 중산층 비율

(단위: %, %p)

	실제 소득분위			주관적 소득분위		
	처치	비처치	차이	처치	비처치	차이
1분위	0.0	6.1	-6.1	0.0	0.0	0.0
2분위	14.3	22.4	-8.1	0.0	2.1	-2.1
3분위	22.5	20.2	2.3	2.3	4.8	-2.5
4분위	19.0	25.6	-6.6	12.8	15.2	-2.4
5분위	32.8	35.2	-2.4	39.4	35.5	3.9
6분위	34.1	46.5	-12.4 *	52.4	65.7	-13.3 **
7분위	38.3	39.1	-0.8	65.8	71.6	-5.8
8분위	42.1	50.4	-8.3	75.9	73.7	2.2
9분위	59.8	55.4	4.4	72.2	84.2	-12.0
10분위	71.1	67.1	4.0	80.0	80.0	0.0
중위 60% (3~8분위)	32.2	37.3	-5.1 *	-		

주: 처치/비처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t-test 검정 결과, **는 1%, *는 5% 유의수준.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4-8> 자산분위별 주관적 중산층 비율

(단위: %, %p)

	실제 자산분위			주관적 자산분위		
	처치	비처치	차이	처치	비처치	차이
1분위	14.4	18.8	-4.4	0.0	0.0	0.0
2분위	15.3	28.3	-13.0 *	1.4	1.2	0.2
3분위	26.7	25.9	0.8	6.5	6.4	0.1
4분위	27.6	34.9	-7.3	20.4	18.5	1.9
5분위	35.6	34.1	1.5	40.0	44.7	-4.7
6분위	33.3	36.1	-2.8	57.4	71.8	-14.4 **
7분위	47.6	40.3	7.3	72.6	75.0	-2.4
8분위	52.9	50.6	2.3	86.5	81.0	5.5
9분위	51.1	62.6	-11.5	75.0	80.0	-5.0
10분위	78.4	77.4	1.0	100.0	75.0	25.0
중위 60% (3~8분위)	36.6	36.2	-0.4	-		

주: 처치/비처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t-test 검정 결과, **는 1%, *는 5% 유의수준.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유일하게 6분위 그룹에서 처치/비처치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는데, 처치 그룹에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처치 그룹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변인은 실제 소득과 자산 지위에 관한 정보이고, 소득 지위는 처치/비처치 그룹 간에 동일하므로 자산 지위 정보가 중산층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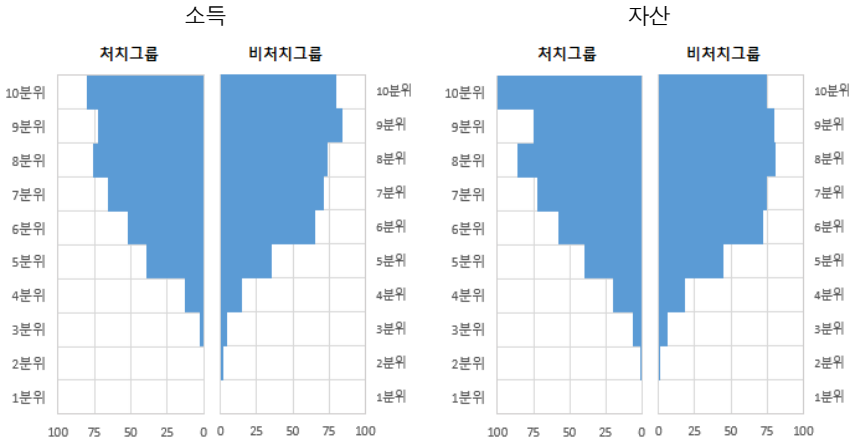
자산 지위로 보면 중위 60%에 속한 사람들의 주관적 중산층 비율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자산분위 2분위 그룹, 주관적 자산분위 6분위 그룹에서 처치/비처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도 모두 처치 그룹에서 비처치 그룹보다 주관적 중산층 비율이 더 낮게 파악되고 있다. 이 역시 객관적인 소득/자산 정보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중산층 판단에 더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즉, 사람들은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교집합의 관점에서 중산층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관찰은 소득 상위 20% 이내 혹은 자산 상위 20% 이내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그림 4-6 참조). 게다가 처치 그룹에 한정해 보면, 자신이 명백히 소득 상위 10% 혹은 자산 상위 10%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도 각각 71.1%, 78.4%가 자신을 여전히 중산층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국민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중산층’ 개념은 우리 국민의 중간적 생활수준을 누리는 계층이 아니라 소수의 상층부를 제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삶을 영유하는 계층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관적 ‘중산층’은 주관적 계층 지위³⁵에서 파악되는 ‘중층’과도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그림 4-7]은 스스로 평가한 사회경제적 계층 지위별로 주관적 중산층 비율을 도시하고 있다. 본인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간주하고 있으며(상상 69.2%, 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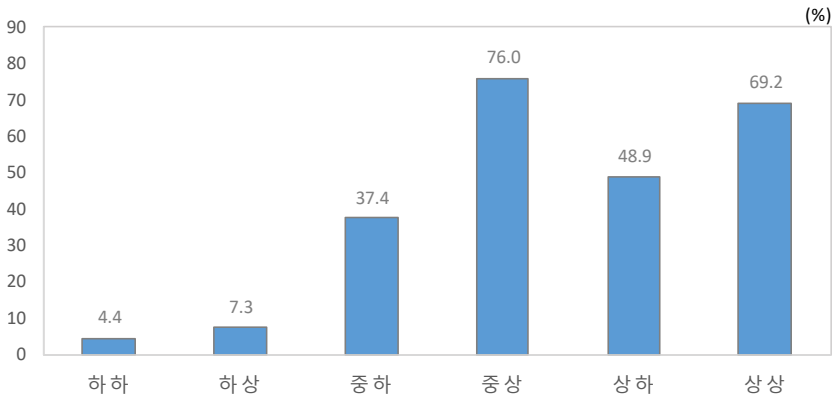
35 사회경제적 계층 지위는 1차 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으로, 상층(상, 하), 중층(상, 하), 하층(상, 하)의 6개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4-6] 주관적 소득분위와 주관적 자산분위별 주관적 중산층 비율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그림 4-7] 사회경제적 계층 지위별 주관적 중산층 비율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48.9%), 반대로 스스로 중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상당수는 자신이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중상 24.0%, 중하 62.6%).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중산층’ 개념이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중간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 더 높은 지위로 이해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 간단한 회귀모형을 통해 주관적 중산층을 판단함에 있어 정보 처치가 미친 효과를 확인해 보자. 개인들은 자신의 소득 지위와 자산 지위를 고려하여 중산층 여부를 판단하는데, 비처치 그룹은 추가적인 정보가 없었으므로 주관적 지위가 그대로 반영될 것이고, 처치 그룹은 실제 소득 지위와 실제 자산 지위가 고려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묘사될 수 있다.

$$\text{비처치 그룹: } MC_i = f(SID_i, SWD_i | X_i) \quad (1)$$

$$\begin{aligned} \text{처치 그룹: } MC_i &= f(ID_i, WD_i | X_i) \quad (2) \\ &= f(SID_i - bias_i^{ID}, SWD_i - bias_i^{WD} | X_i) \end{aligned}$$

여기서 MC 는 자신을 중산층으로 판단하는지 여부를 나타내고, SID 와 ID 는 각각 개인의 주관적 및 객관적 소득분위, SWD 와 WD 는 각각 주관적 및 객관적 자산분위를 의미한다. 또한 $bias^{ID}$ 와 $bias^{WD}$ 는 앞 소절에서 다룬 바와 같이 십분위(decile)로 측정된 주관적 지위와 객관적 지위 간의 차이, 즉 인식 편향을 나타내며, 따라서 식 (2)의 두 번째 행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X 는 중산층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개인 특성 벡터를 포착한다.

선형함수를 가정하면, 두 집단의 중산층 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은 통합 회귀식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MC_i = \beta_0 + \beta_1 SID_i + \beta_2 SWD_i - (\beta_3 bias_i^{ID} + \beta_4 bias_i^{WD}) \times Treat_i + \gamma X_i + \epsilon_i \quad (3)$$

편향에 관한 정보는 처치 그룹에 대해서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처치항($Treat$)과의 교차항을 도입하였다.

<표 4-9>는 식 (3)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1)은 소득 및 자산 지위만을 고려하여 추정한 것이고, 모형 (2)는 중산층 여부와 소득 및 자산 지위와의 비선형적 관계를 감안하여 소득 및 자산 지위의 제곱항을 변수로 추가한 것이다. 모형 (3)은 그 밖의 인적 특성들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것이다.

<표 4-9> 편향 수정이 중산층 판단에 미치는 효과(OLS)

	종속변수: 중산층 인식		
	(1)	(2)	(3)
상수항	-0.387 (0.028) **	-0.395 (0.053) **	-0.002 (0.116)
<i>SID</i>	0.053 (0.009) **	0.068 (0.032) *	0.055 (0.009) **
<i>SWD</i>	0.103 (0.009) **	0.092 (0.031) **	0.100 (0.009) **
$bias^{ID} \times Treat$	0.001 (0.003)	0.001 (0.003)	0.001 (0.003)
$bias^{WD} \times Treat$	0.009 (0.002) **	0.009 (0.002) **	0.009 (0.002) **
SID^2		-0.001 (0.003)	
SWD^2		0.001 (0.003)	
여성			0.021 (0.018)
연령			-0.021 (0.005) **
연령제곱			0.000 (0.000) **
중졸 이하			0.012 (0.094)
초대졸			0.050 (0.031) +
대졸			0.031 (0.025)
대학원 이상			0.101 (0.037) **
진보 성향(0~10)			0.005 (0.004)
Adj R-Sq	0.3287	0.3281	0.3347

주: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N=2,000).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데는 10분위로 측정된 소득수준보다는 10분위로 측정된 자산 수준의 효과가 두 배가량 큰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소득 정보와 실제 자산 정보가 주어졌을 때도 소득 인식 편향은 중산층 판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자산 인식 편향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본인의 실제 자산 수준을 확인하고 자신의 중산층 여부 판단을 조정했다는 것을 뜻한다. 위의 추정식에 따르면, 자신의 오인식에 대해 $\beta_4 (=0.009)$ 만큼 할인(discount)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중산층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득 및 자산 지위의 제공항을 추가했으나, 두 항목 모두 유의성이 없어 중산층 판단이 소득과 자산에 대해 단조 증가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해 소득 및 자산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앞의 [그림 4-6]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도 하다. 한편, 여타의 개인 특성을 모형에 추가해도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주관적 인식과 자산 인식 편향의 계수 크기와 유의성은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정계수의 강건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상향 편향 집단과 하향 편향 집단에 따라 처치 효과가 다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편향 유형별로 그룹을 나누어 식 (3)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0>에서 보고한다.

편향 유형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살펴봐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소득 편향에 관한 정보는 중산층 판단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산 인식 편향은 유의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상향 편향 그룹에서 자산 인식 편향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편향이 없었던 그룹에서는 자산 인식 편향도 중산층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소득 인식 편향이 없는 그룹에서 자산 인식 편향도 적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4-10> 편향 수정이 중산층 판단에 미치는 효과(OLS)-편향 유형별

	종속변수: 중산층 인식		
	(1) 상향 편향 그룹	(2) 하향 편향 그룹	(3) 무편향 그룹
상수항	-0.314 (0.071) **	-0.394 (0.041) **	-0.360 (0.054) **
<i>SID</i>	0.018 (0.019)	0.068 (0.013) **	0.059 (0.019) **
<i>SWD</i>	0.129 (0.018) **	0.095 (0.013) **	0.087 (0.020) **
<i>bias^{ID} × Treat</i>	0.001 (0.010)	-0.004 (0.005)	
<i>bias^{WD} × Treat</i>	0.017 (0.005) **	0.006 (0.003) *	0.005 (0.005)
N	485	1,177	338
Adj R-Sq	0.2448	0.3508	0.3700

주: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는 각각 1%, 5% 유의수준.

2) 무편향 그룹은 소득 편향이 없는 그룹을 지칭함.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중산층’ 개념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 삶을 영위하는 중간계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최상층을 제외한 상층에 더 가까운 개념처럼 보인다. 또한 사람들은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중산층을 판단하고 있으며,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중산층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 실험 결과, 중산층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 소득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자산 정보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조정은 대부분 중산층 인식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중산층 기준이 형성되게 된 데는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보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지만 하층보다는 상층의 삶의 방식이 더 많이, 더 자주 노출됨에 따라 이것이 사람들의 워너비가 되고 기대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다. 기대수준이 높은 것은 도전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실과 괴리된 왜곡된 판단으로 낭패를 보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현실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허상에 기대어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3. 편향의 수정이 재분배 선호에 미친 영향

이번에는 인식 편향의 수정이 재분배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자. KDI 계층인식조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첫째, 귀하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금전적 지원)

둘째, 귀하는 정부가 실직 상태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일자리를 제

공해야 한다는 데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일자리 제공)

셋째, 귀하는 정부가 저소득계층을 위해 의료 및 주택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복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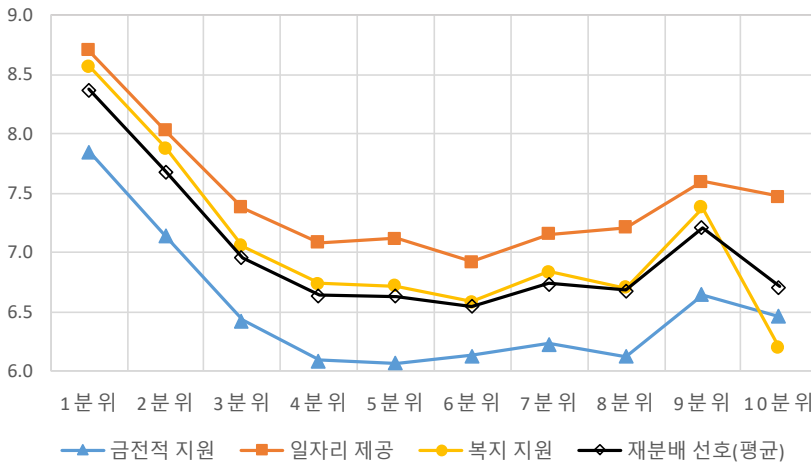
각각의 질문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부터 ‘매우 동의한다’(10)까지의 11개 구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는 [그림 4-8]에 도시하였다. 그림은 주관적 소득 지위별로 각각의 재분배 형태에 대한 평균 동의 수준을 보여준다. 여기서 ‘재분배 선호’는 금전적 지원, 일자리 제공, 복지 지원의 세 항목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재분배 형태에 대해 저소득층에서 동의 수준이 높고 5~6분위의 중간계층에서 가장 낮으며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재분배 선호가 점차 증가하는 U자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³⁶

재분배의 순수혜자가 되는 저소득층에서의 높은 선호는 개인적 이해관계(self-interest)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재분배의 순부담자가 될 가

[그림 4-8] 주관적 소득분위별 재분배 선호

(단위: 0~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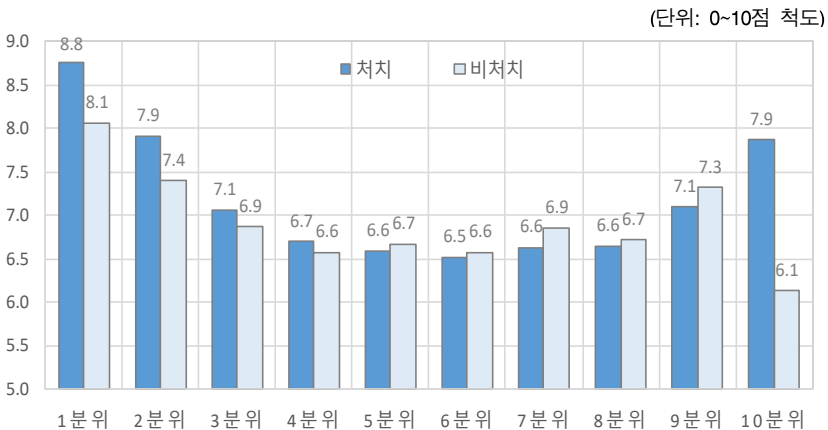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36 10분위의 경우 응답자 수가 적어(N=15) 평균값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능성이 높은 소득 상위층에서의 재분배 선호 증가는 그와는 다른 요소들이 작동함을 시사한다. 공정성이나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점, 정치 성향이나 신념 등이 이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보 실험에 초점을 맞춰 처치 그룹과 비처치 그룹 간 재분배 선호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세 유형의 재분배 지표를 통합한 ‘재분배 선호’ 지표를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간주한다.

[그림 4-9]는 주관적 소득분위별로 처치/비처치 그룹의 재분배 선호를 비교하고 있다. 하위 분위에서는 처치 그룹에서 재분배 선호가 높고 상위 분위에서는, 관측치 수가 적은 10분위를 제외하면, 비처치 그룹에서 재분배 선호가 높게 나타난다.³⁷ 마찬가지로, [그림 4-10]은 주관적 자산분위별로 처치 그룹과 비처치 그룹의 재분배 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인 양상은 소득분위별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두 그룹 모두에서 U자형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4-9] 처치/비처치 그룹의 주관적 소득분위별 재분배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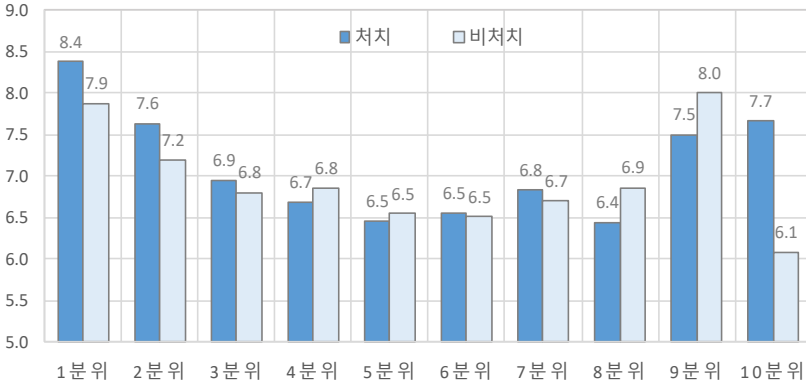


주: 소득 10분위의 처치/비처치 그룹은 각각 5명, 10명임.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37 t-test 검정 결과, 각 분위별 처치/비처치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그림 4-10] 처치/비처치 그룹의 주관적 자산분위별 재분배 선호

(단위: 0~10점 척도)



주: 자산 10분위의 처치/비처치 그룹은 각각 2명, 8명임.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이제 인식 편향의 수정이라는 정보 처치가 재분배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더 분석적인 방법으로 살펴보자.

앞서 논의한 식 (3)의 회귀모형을 재분배 선호의 결정 모형에 적용해 보자. 이제 종속변수는 중산층 여부가 아닌 재분배 선호이다. 추정 결과는 <표 4-11>에 수록하였다.

중산층 판단 모형에서와는 달리 재분배 선호 모형에서는 제공항의 계수가 모두 유의하게 나온다(모형 2). 즉, 낮은 분위에서는 주관적 소득 및 자산분위가 증가할수록 재분배 선호가 감소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분위가 증가할수록 재분배 선호가 다시 증가하는, U자형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 여타의 개인 특성 변수들이 포함된 모형 3에서도 소득 및 자산 관련 변수들은 매우 안정적인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주된 관심 변수인 인식 편향 관련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인식 편향의 수정은 재분배 선호에 미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지만 자산 인식 편향의 수정은 재분배 선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컨대 자신의 실제 자산 지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낮다는 것을 알았다면(즉, $SWD_i - WD_i = 1$), 모형 3을 기준으로 재분배 선호가 $-\beta_4 (=0.036)$ 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음

<표 4-11> 편향 수정이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효과(OLS)

	종속변수: 재분배 선호		
	(1)	(2)	(3)
상수항	7.532 (0.137) **	9.015 (0.258) **	9.436 (0.582) **
<i>SID</i>	-0.056 (0.045)	-0.471 (0.154) **	-0.557 (0.152) **
<i>SWD</i>	-0.088 (0.045) *	-0.377 (0.151) *	-0.355 (0.148) *
<i>bias^{ID} × Treat</i>	-0.012 (0.014)	-0.005 (0.014)	-0.009 (0.014)
<i>bias^{WD} × Treat</i>	-0.023 (0.011) *	-0.024 (0.011) *	-0.036 (0.012) **
<i>SID</i> ²		0.041 (0.015) **	0.049 (0.015) **
<i>SWD</i> ²		0.031 (0.015) *	0.028 (0.015) +
여성			-0.309 (0.086) **
연령			-0.065 (0.025) **
연령제곱			0.001 (0.000) **
중졸 이하			-0.084 (0.448)
초대졸			-0.037 (0.145)
대졸			0.077 (0.119)
대학원 이상			0.067 (0.173)
진보 성향(0~10)			0.177 (0.021) **
Adj R-Sq	0.0156	0.0368	0.0815

주: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N=2,000).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의 편향이 존재하는 사람이 자신의 실제 자산 지위가 더 높다는 것을 안다면 반대로 재분배 선호는 β_4 만큼씩 감소할 것이다.

중산층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편향 유형별로 처치 효과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그룹별로 나누어 추정하였으며, <표 4-12>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모형에는 소득분위 및 자산분위의 제곱항이 포함되었으며, 아울러 성, 연령, 교육수준, 정치 성향과 같은 인적 특성이 추가로 통제되었으나 지면 관계상 보고에서는 생략하였다.

상향 편향 집단과 하향 편향 집단 모두에서 소득 인식 편향의 수정은 재분배 선호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자산 인식 편향의 수정만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분리 모형에서의 자산 정보 처치 효과는 전체 모형에서보다 더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2> 편향 수정이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효과(OLS)–편향 유형별

	종속변수: 중산층 인식		
	(1) 상향 편향 그룹	(2) 하향 편향 그룹	(3) 무편향 그룹
상수항	7.835 (1.171) **	9.833 (0.816) **	9.558 (1.331) **
<i>SID</i>	-0.252 (0.342)	-0.644 (0.210) **	-0.253 (0.339)
<i>SWD</i>	-0.115 (0.285)	-0.499 (0.204) *	-0.595 (0.350) +
<i>bias^{ID} × Treat</i>	-0.015 (0.045)	-0.029 (0.025)	
<i>bias^{WD} × Treat</i>	-0.038 (0.023) +	-0.043 (0.016) **	-0.020 (0.029)
<i>SID²</i>	0.028 (0.030)	0.053 (0.021) *	0.026 (0.032)
<i>SWD²</i>	-0.003 (0.027)	0.049 (0.022) *	0.046 (0.034)
N	485	1,177	338
Adj R-Sq	0.0316	0.1072	0.0786

주::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2) 무편향 그룹은 소득 편향이 없는 그룹이며, 성, 연령, 교육수준, 정치 성향이 통제되었음.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상향 편향을 가진 사람보다 하향 편향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으므로, 경제적 지위에 관한 오인식은 우리 사회 전반의 재분배 선호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만약 올바른 정보를 통해 개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관한 인식 편향, 특히 자산 인식 편향이 줄어든다면 평균적 의미에서 재분배 선호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제5절 소 결

본 장에서는 계층 인식에서 종종 나타나는 편향에 주목하여 그 양상과 원인을 살펴보고, 정보 실험을 통해 그러한 편향의 수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분석 결과들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은 경제적 지위 인식에서 소득(자산)이 낮은 계층에서 상향 편향이 나타나고 소득(자산)이 높은 계층에서는 하향 편향이 나타나

전체적으로 중앙 쏠림 현상이 강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양 방향의 편향이 대칭적이지 않고 하향 편향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사한 연구들과 비교하면 아르헨티나보다 비대칭성이 심하고 독일보다는 덜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주관적 중산층이 객관적 중산층보다 소득수준이 상당히 더 높은 상위계층을 포괄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인식 편향을 생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메커니즘으로 통상 자신의 주변 환경이 주는 단서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준거집단 효과를 말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준거집단의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받는 메커니즘은 사뭇 달라 보인다. 대체로 하향 편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친구나 지인 등 준거집단의 영향을 받는데, 상층과 주로 교류하는 사람일수록 편향의 크기(절댓값)가 줄어들고 하층과 주로 교류하는 사람들은 편향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적인 예로 설명하자면 소득 상위층에서 상층과 교류하면 자신을 상층에 가깝게, 하층과 교류하면 자신을 하층에 가깝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들이 준거집단의 구성원들과 가깝게 자신을 위치 지으려는 경향, 이른바 내집단 효과(in-group effect)의 결과로 해석하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

둘째,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오인식이 중산층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가 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니라는 답을 주고 있다. 자신이 소득 상위 10% 혹은 자산 상위 10% 이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70~80%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산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은 오히려 중산층 판단기준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중산층’ 개념이 중간적 생활수준을 누리는 계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상층부를 제외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삶을 영유하는 상위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높은 중산층 기준은 현실과 괴리된 기대수준을 형성하고 그러한 허상에 기대어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는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에서 경제적 지위와 재분배 선호 간에 U자형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제적 지위에 관한 오인식은 개인의 재분배 선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식 편향이 줄면 상향 편향이 있는 하위계층에서는 재분배 선호가 더 증가하고 하향 편향이 있는 상위 계층에서는 재분배 선호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 전체로 보면 하향 편향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평균적인 재분배 선호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한국인의 일관되지 않은 높은 재분배 선호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은 노력이나 능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소 모순적인 인식을 보이는데(황수경, 2019), 만약 분배구조상 자신의 위치에 대한 오인식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상충적인 인식구조를 일부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로 하향 편향이 있는 중상위층 사람들을 중심으로 미시적 분배 관점에서는 정당한 보상 차이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잘못 판단한 결과, 진정한 위치를 알고 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득 및 자산 지위에 관한 개인들의 인식 편향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엄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5장

중산층의 가치 및 정책 선호: 특권 중산층·능력주의 담론에 대한 실증적 검토

이 창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제1절 머리말

중산층은 전통적으로 경제성장의 결실이자 안정된 사회의 상징이었다. 또한 이들은 전통적으로 중도적 가치 지향과 온건한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어 합리적인 집단적 의사결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어져 왔다. 따라서 중산층을 지지하고 그 규모를 늘리는 것은 이념 지향성과 무관하게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학계를 중심으로 중산층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문제제기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불평등의 증가 현상, 특히 기술진보와 무역에 따른 중간 일자리의 감소나 금융위기 이후 “1% 대 99%”와 같이 소수 대 나머지 간의 격차 확대 등에 대해서는 많은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지속되어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논의들은 극소수의 부유층 또는 특권층이 아니라 중산층 중 일부가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의 근원임을 지적한다. 이 논의들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특정한 시기의 기술적·경제적 변화 흐름을 타고 성공하여 중산층에 진입한 집단이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세습 중산층’ 또는 ‘특권 중산층’의 등장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조귀동, 2020; 구해

근, 2022).

중산층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중위소득의 75~200%라는 범위가 매우 넓어, 삶의 양식과 정체성이 다른 수많은 집단을 내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중산층 논의가 다른 점은 사회동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즉, 새롭게 부상한 계층은 과거의 특권층이 그랬듯 규칙을 위반하고 부패를 저지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인맥, 투자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활용하여 그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앞 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중상위층 사람들이 중산층의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도 특권적 지위를 갖는 중산층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Giridharadas, 2018; Stewart, 2018; Shell, 2018; Markovits, 2020). 미국의 논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중산층 내부의 균열을 소득이나 자산 등이 아닌,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이념적 기반을 통해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면 능력주의는 단순히 새롭게 부상한 계층이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이면서도 미국 경제와 사회의 규칙을 다시 쓰는 역할을 한다. 능력주의는 인종, 성적 지향 등 과거의 차별을 낳았던 요소들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면서도,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과 관련된 요소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정치적 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미국적 신념체계 위에서 능력주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능력주의는 기업의 운영 방식, 가구와 개인의 소비 행태, 사회적 교류를 통해 강화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는 주로 교육을 통해 엘리트 세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강조가 미국의 논의에서 두드러지는 점이다.

특권 중산층 또는 엘리트 세습에 대한 논의는 최근 많은 논의가 집중된 정치적 양극화에도 무관하지 않다. 능력주의로 무장한 신흥 엘리트가 전통적인 차별에 반대하고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지지하는 다양성 또는 정체성 정치를 강화하는 반면, 중산층에서 지위가 하락

한 사람들은 그로부터 배제되어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Markovits, 2020). 중산층은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 투자를 비롯한 경쟁의 구조에 진입하거나, 주변부로 밀려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치, 정당 및 선거 구조는 이를 진영화함으로써 이들은 각자의 진정한 정책 선호와 무관하게 각 진영의 정치적·정책적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강화하는 순환구조에 빠지게 된다(임원혁 외, 2019). 온라인에서는 소셜미디어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지리적 분화로 인해 동류집단 내부의 교류가 더욱 증가하는 현상은 준거집단과 정책에 대한 판단에 있어 편향성을 더욱 증가시킨다(Markovits, 2020; 구해근, 2022). 이는 정책 선호와 정치적 요구, 정책 결정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중산층의 분화 현상과 그 함의에 대해서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논의를 우리나라 맥락에서 확인하려는 노력, 즉 중산층 세부 집단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부족했다.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확인한 한국 중산층의 다층적 구조에 기반하여 각 집단이 어떻게 다른 인식구조와 정책 선호를 가지는지를 검토하고, 이것이 정책의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권 중산층 또는 세습 중산층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관점에서는 ‘심리적 비상층’이 얼마나 ‘핵심 중산층’과 다른지를 살펴보는 문제로 치환된다. 특히 심리적 비상층은 상향 이동을 이미 달성하여 소득 기준으로 상위계층에 위치하나, 추가적인 상향 이동 욕구가 크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변화에 민감한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선행연구에서 말하는 특권·세습 중산층에 해당한다면, 능력주의를 신봉하고, 그에 따라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취약 중산층’은 미국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포퓰리즘적 주장 또는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본 장의 주된 목표다.

본 장의 분석은 주로 사회학을 위주로 발전해 온 중산층 담론을 경제

정책적 차원으로 연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치(value) 또는 정책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견해를 물음으로써 중산층이 기존의 생각처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여전히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2절에서는 특권·세습 중산층과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논리구조와 핵심 쟁점사안을 도출한다. 제3절에서는 주관적 기준 중산층 내부의 세 집단—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이 가치(value)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제4절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정책의 문제로 연결한다. 우리 사회의 당면한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특권·세습 중산층 논의의 핵심인 교육 및 기회 평등, 기술 변화에 대해 이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제5절에서는 논의를 종합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제2절 특권 중산층 담론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1. 경제환경의 변화와 중산층의 축소

중산층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구가하며 두터운 중산층 집단이 형성되었고, 이와 함께 안정된 소득 기반을 바탕으로 교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유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는 사람들과 공동체적 활동을 하며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과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의 삶의 양식 역시 자리를 잡았다.

미국의 중산층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국가의 경제적 및 사회적 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들이 가지는 정책적 견해는 정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조사연구들은 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노동소득 및 주택 구입에 대한 낮은 세금, 교육에 대한 지원,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의 확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 숙련자 위주의 이민정책, 인권 및 국제적 협력 위주의 관여를 지지하는 대외정책 등을 지지해 왔음을 보여준다.

중산층의 이러한 정책 선호는 여전히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과 무역이라는 근본적인 외생적 충격은 중산층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ical change: SBTC) 또는 반복작업 편향적 기술진보(routine-biased technical change: RBTC)는 주로 중산층 가구주들이 수행하던 작업과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직종을 대체했고, 그 결과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Card and DiNardo, 2002; Autor, 2014), 저임금 서비스 고용의 증가가 중산층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Autor and Dorn, 2013). 여기에 중국 등 저임금을 활용한 신흥 제조국들의 수입이 확대되며 중산층의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졌고(Autor, Dorn, and Hanson, 2016), 이는 무역에 대한 부정적 견해, 더 나아가 보호무역주의 및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기도 했다(Autor, Dorn, Hanson, and Majlesi 2020).

우리나라는 비슷하면서도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와 오프쇼어링의 부정적 영향은 미국과 유사하지만, IT 제조업 및 서비스업 안에서 신산업이 등장하여 고소득 일자리를 만들어 냈고, 중국과의 교역 증대는 수입침투율 증가를 통해 일부 일자리 파괴 효과가 있었지만, GVC를 통한 수출 증대가 함께 일어났으므로 여기서 발생한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상쇄했다(Koo and Whang, 2018; 김정호, 2019).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자리 총량에 미친 영향은 비슷하더라도 기술 및 무역의 변화를 통해 새로이 기회를 얻은 사람들과 기존의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조귀동(2020)과 같이 여기에 세대론적 관점을 더하는 시도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는 1) 젊은 세대들 중 일부는 IT와 중국이라는 기회에 힘입어 계층 상승을 이루었으나, 2) 과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던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는 이전 세대들의 일자리 지키기가 기술 진보와 결합하여 더 이상 새로이 창출되지 못했고, 3) 과거의 경제적 질서로부터 수혜를 입은 집단의 자녀들은 우수한 교육투자의 수혜를 입어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4) 다수의 젊은 층은 1)~3)의 결합 효과로 인하여 양질의 일자리 획득, 가족 형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회에 안착하지 못한 것이 세대론의 본질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불평등의 양상은 세대 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 안에서 부모들의 특성에 따라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2. 특권 중산층 / 능력주의 담론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진보와 무역이라는 충격으로 인한 중산층 내부의 분화 현상은 다각도로 그 메커니즘이 분석된 바 있다. 문제는 불평등의 동력에 어떻게 대처하여 중산층 붕괴를 막을 것이냐인데, 대부분의 주장들은 격차 확대의 근원이 일자리에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즉,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최근 부각되고 있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청년기에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것이 자산 축적 및 가족 형성에서 발견되는 격차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통상적인 경제학적 해법으로는 새로운 숙련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일자리 전환 과정의 충격을 완화하는 다양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Holzer, 2018).

그러나 Shell(2018), Markovits(2020)를 비롯한 능력주의 담론은 중산층 내부에서의 분화가 노동소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통한 경험, 정보의 유통, 자산 축적 행태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특권 중산층의 자녀들은 단지 좋은 교육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몰두하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문화를 그 과정에서 전수받고,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모범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는 계층 간 지리적 분리 현상이

강화되면서 계층별로 서로 다른 준거집단을 가지게 되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

능력주의 담론이 통상의 경제학적 논의와 다른 것은, 경제학은 기술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기업전략의 변화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능력주의 담론은 그 자체를 변화의 대상으로 지목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생산구조가 소수의 엘리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형태로 변모했으며, 이것이 반드시 기업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양질의 일자리로부터 배제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점점 줄어드는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과 과도한 열정의 투입이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상류층 또는 상위 중산층에 남아있기 위해 필요한 교육 투자액은 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넘어 직장에서 살아남고 투자기회를 포착하여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근면함과 의지 등 비인지적 능력이 필요한데, 이 역량을 키우는 데에는 상당한 문화 및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는 그만한 투입을 하기 어려운 다수의 사람들을 사회와 경제로부터 소외시킴과 동시에, 경쟁에 뛰어난 중산층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경쟁에서 이겨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하더라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자기 계발의 압박감에 시달린다.

따라서 능력주의 담론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사람들이 적응하도록 돕는 통상적인 정책이 오히려 생산성과 교육투자의 기준치를 높여버림으로써 다수의 중산층이 배제되는 현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규칙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능력주의 자체가 기업의 직무 설계와 노동 수요에 영향을 주고, 기술혁신 역시 소수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하는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개입 역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회사보다 개인이 힘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노조의 강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유급 육아·상병 휴직 가능성 제고 등이 “규칙 바꾸기” 관점의 대표적인 정책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Freman *et al.*, 2015; Reeves and Guyot, 2018). 또한 기술

이 활용되는 방식 역시 대규모 조직 안에서 직무를 더 세분화하여 대체 가능하게 하고, 조직의 부품으로서 근로자를 육성하는 것보다 이들이 3D 프린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hell, 2018). 이러한 접근을 통해 조직의 일부로서 과도한 열정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행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들은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기술 변화에 맞추어 산업특수적인 숙련을 키우는 것보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반적 숙련을 키우는 방향을 향해야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이 주도하고 근로자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들이 주도하는 상향식의 작은 혁신으로 혁신의 방식이 바뀔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중산층 근로자들이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Shell, 2018).

물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규칙 바꾸기”는 곧 가격체계에 기반한 시장의 자원배분 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자원배분의 왜곡에 대한 걱정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그러나 중산층의 축소 현상이 사회적 불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았듯이 탈락 계층이 시장 지향적 정책을 반대하는 집단으로 변모, 시장경제 그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중산층의 지위가 세습되는 요소들을 억제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는 것은 중산층 출신 자녀들의 인적자본 투자 및 근로 의지를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좁은 의미의 경제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예컨대 디지털 전환은 사회적 역량, 대인관계 역량의 중요도를 높이는데, 이러한 비인지적 역량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자원배분의 왜곡 여지가 적고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합의 가능한 정책들을 식별하고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다.

제3절 한국의 중산층 분화: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KDI 계층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권 중산층·능력주의 담론이 한국에서 얼마나 유효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장의 분석은 이미 상승이 되었으나 계층 상승의 욕구가 강하여 능력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심리적 비상층과, 중산층에서 밀려나 경직적인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의 인구적 특성뿐 아니라 가치체계 전반, 삶의 경제적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왜 특정한 정책 선호를 갖게 되는지를 더 잘 이해해 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서두에서 주관적 계층의식과 실제 소득을 활용하여 정의한 계층 구분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본 장의 논의를 앞 장들의 결과와 바로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 인구적 특성

우선 <표 5-1>에 나타난 각 연령집단 내의 계층 분포를 살펴보자.³⁸ 연령 내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각 행의 수치들의 합은 100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이 표를 제시하는 것은 아직 소득이 부족한 젊은 층이 취약 중산층이나 하층으로 분류되어 전체 그림을 왜곡하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젊을수록 취약 중산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비상층의 비율이 50대에 가장 높은 것을 보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소득을 올리게 되었으나, 아직 그들이 원하는 만큼 사회적 지위 상승을 이루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대의 취약 중

³⁸ 본 장에서 보고되는 표와 그림은 모두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표 5-1> 연령집단별 계층 분포

(단위: %)

연령대	하층	취약 중산층	핵심 중산층	심리적 비상층	상층
20대	6.3	15.6	58.8	13.8	5.5
30대	5.4	23.7	52.8	16.2	1.9
40대	4.7	19.7	55.9	18.6	1.2
50대	3.7	17.8	53.1	22.3	3.0
60대	6.7	16.0	56.9	16.7	3.7
전체	5.3	18.5	55.4	17.8	3.0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상층 비율이 낮은 것은 다수가 독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본인의 특성보다는 아버지 세대인 50대, 60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학력 분포를 살펴보자. 앞 장에서 심리적 비상층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확인된 바 있다. 이를 세대 간에 비교하기 위해 각 계층 및 연령대별로 대졸 이상의 비율을 <표 5-2>에 표시했다. 여기에서도 심리적 비상층의 대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20대의 경우는 예외인데, 이는 심리적 비상층과 상층의 교육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처럼 20대가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아 부모의 특성을 반영하

<표 5-2> 계층 및 연령별 대졸 이상 비율

(단위: %)

연령대	하층	취약 중산층	핵심 중산층	심리적 비상층	상층
20대	26.7	54.0	71.1	61.4	66.2
30대	59.6	51.7	72.5	88.1	82.3
40대	23.5	42.5	72.1	86.9	51.9
50대	45.4	42.6	65.5	81.7	46.9
60대	28.7	35.2	61.2	79.5	60.6
전체	35.7	45.0	68.3	80.8	60.9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5-3> 계층별 직업 분포

(단위: %)

	하층	취약 중산층	핵심 중산층	심리적 비상층	상층
①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	0.8	0.3	0.7	0.3	0.0
② 자영업(소규모 장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	3.5	5.8	6.5	5.2	3.6
③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및 외 판원 등)	9.4	10.7	6.0	3.3	5.1
④ 생산/기술직/단순노무직(기계· 조립 종사자, 토목 관련 현장 업, 경비, 배달/운반 등)	10.7	14.0	10.0	7.3	12.5
⑤ 일반사무직(일반회사·공공기 관 등의 사무직, 교사 등)	9.6	30.9	41.5	45.9	30.0
⑥ 관리직/전문직(5급 이상 공무원, 교장, 연구직, 교수, 의사 등)	3.9	5.8	10.0	21.5	20.7
⑦ 기타	2.1	1.9	1.0	1.1	1.7
⑧ 미취업	60.1	30.5	24.3	15.6	26.5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으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주요 특성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표 5-3>을 살펴보면, 심리적 비상층은 다른 어떤 집단들보다도 관리직 및 전문직, 그리고 일반 사무직이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심리적 비상층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갖게 되고, 이를 토대로 경제적 기반을 이룬 것이다. 반면, 취약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판매/서비스직, 생산기술직, 주부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산층의 분화를 이끄는 것이 교육을 통한 직업 선택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조귀동(2020)을 비롯한 특권·세습 중산층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계층의 형성은 기술과 산업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직업의 부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표 5-4>에는 각 계층별로 산업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각 열의 수치 합이 100이 되도록 표를 구성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것은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이

<표 5-4> 계층별 산업 분포 - 전 연령

(단위: %)

	하층	취약 중산층	핵심 중산층	심리적 비상층	상층
① 컴퓨터, 전자기기	4.0	0.5	2.1	3.5	0.0
② 전기기기	2.4	0.7	2.2	4.4	0.0
③ 자동차	3.6	2.7	2.3	3.5	9.2
④ 석유화학	0.0	0.3	1.2	1.4	2.3
⑤ 기계금속	2.9	2.3	4.4	2.7	2.3
⑥ 섬유, 의복 제조	0.0	1.0	1.5	0.7	0.0
⑦ 기타 제조업	1.9	11.6	7.8	14.5	6.9
⑧ 도소매	15.1	7.2	8.7	5.3	12.4
⑨ 숙박, 음식	4.2	5.6	2.4	2.5	4.5
⑩ 금융	1.9	4.7	1.9	4.0	2.2
⑪ 문화콘텐츠	2.3	2.7	1.5	1.8	0.0
⑫ IT 서비스	0.0	4.4	6.2	8.6	2.3
⑬ 교육	7.2	7.3	12.6	11.2	12.2
⑭ 기타 서비스	20.7	17.4	16.2	12.4	13.5
⑮ 공공부문	7.2	12.8	12.3	12.0	9.5
⑯ 자영업	3.4	2.8	4.8	1.1	1.8
⑰ 기타	23.3	16.2	12.1	10.6	20.9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다른 계층 대비 제조업의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이었던 IT 제조업, IT 서비스 분야에 상당히 높은 비중이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0대 이하로 대상을 국한할 경우 (표 5-5), 이 비중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적 변화가 새로운 상류 중산층의 등장을 이끈 것이다.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 분포 역시 중산층으로부터의 상방·하방 분화가 산업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무직 일자리가 중산층의 주력을 형성하는 한편, 심리적 비상층부터는 관리직의 비율이 두 배에 가까워진다. 요컨대 성장 산업의 관리 직종에 있는 것이 계층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반면, 취약 중산층으로 밀려나는 것은

<표 5-5> 계층별 산업 분포 - 40세 이하

(단위: %)

	하층	취약 중산층	핵심 중산층	심리적 비상층	상층
① 컴퓨터, 전자기기	4.1	1.3	3.4	5.2	0.0
② 전기기기	0.0	1.9	1.7	9.1	0.0
③ 자동차	9.2	5.5	2.5	2.9	11.0
④ 석유화학	0.0	0.0	1.3	0.0	0.0
⑤ 기계금속	7.3	1.1	3.4	2.4	4.7
⑥ 섬유, 의복 제조	0.0	1.6	0.6	2.4	0.0
⑦ 기타 제조업	4.9	11.1	6.8	13.4	14.2
⑧ 도소매	26.4	3.3	6.7	3.3	16.3
⑨ 숙박, 음식	6.1	5.0	2.8	2.9	4.7
⑩ 금융	0.0	8.5	0.9	5.5	0.0
⑪ 문화콘텐츠	0.0	6.3	1.5	0.7	0.0
⑫ IT 서비스	0.0	8.4	7.7	10.0	4.7
⑬ 교육	0.0	1.8	9.2	9.4	11.1
⑭ 기타 서비스	0.0	9.9	17.8	8.6	16.5
⑮ 공공부문	6.1	15.1	16.6	11.8	5.9
⑯ 자영업	3.1	2.1	2.9	0.6	0.0
⑰ 기타	32.9	17.3	14.2	12.0	11.0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판매 및 서비스직 또는 미취업 상태로 전환과 연관되어 있다. 미취업 상태가 심리적 비상층에서 가장 낮은 것 또한 두드러진다.

2. 중산층 정체성: 소득 대 자산

이제 각 계층이 중산층 정체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앞서 제3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층이 두터운 소득분포를 선호하며, 동시에 한국의 소득분포가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응답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소득은 중산층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닐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적 문제 중 하나가 집

값 상승과 그로 인한 부의 양극화였던 점을 돌이켜봐도 그러하다. 그러나 동일한 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주거안정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로, 어떤 사람들은 자산 축적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의 주된 논의 주제가 중산층의 분화이므로, 계층별로 중산층의 정의 요소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확인해 보자.

아래 <표 5-6>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심리적 비상층은 핵심 중산층에 비해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좋은 직업과 노동소득을 바탕으로 객관적 상층에 도달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산 축적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표 5-6> 중산층의 조건(1순위)

(단위: %)

	하층	취약 중산층	핵심 중산층	심리적 비상층	상층
소득수준	56.4	50.6	52.6	46.6	36.6
자산 수준	33.5	41.3	38.5	44.8	53.2
거주지역	2.4	2.7	2.1	1.4	4.9
직업	4.1	1.9	2.6	2.8	5.2
기타	3.6	3.5	4.3	4.3	0.0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5-7>에서도 자산 축적을 위한 투자가 핵심 중산층과 심리적 비상층을 가르는 주요한 기준임을, 그리고 준거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부동산 투자를 통해 큰돈을 번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응답의 경우 심리적 비상층과 상층 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표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심리적 비상층의 경우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돈을 잃은 사람들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높고,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다는 주변인의 비율 역시 핵심 중산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 또한 지인 중 강남 거주자가 있다는 응답 역시 그 비율이 상층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높아, 자산

<표 5-7> 계층별 주위 사람들의 투자 관련 경험

(단위: %)

	하층	취약 중산층	핵심 중산층	심리적 비상층	상층
주식, 가상화폐로 큰돈 번 사람 있음	13.8	21.6	25.6	37.2	35.0
주식, 가상화폐로 돈 잃은 사람 있음	34.7	39.6	37.6	44.4	34.0
부동산 투자로 큰돈 번 사람 있음	13.8	26.4	30.2	46.9	43.0
부동산 투자로 손해본 사람 있음	16.8	20.2	22.4	29.6	30.0
지인 중 강남 거주자 있음	12.6	16.9	23.7	39.3	41.0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축적을 통해 상층으로 진입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한 목적이며, 이것을 용이하게 달성하는 데 유리한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취약 중산층의 경우 큰돈을 번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심리적 비상층과 크게 차이가 나는 반면 돈을 잃은 사람이 있다는 비율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취약 중산층 역시 자산 증식에 많은 관심이 있으나, 관련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것이 성과의 차이로 이어졌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3. 중산층 정체성: 능력주의적 가치관

다음으로 중산층의 능력주의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1차 조사에서는 불평등에 대해 다섯 가지 대척되는 진술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0~10점 사이에 표시하도록 했다(표 5-8).

각각의 질문에 대해 계층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자. 불평등에 대한 태도는 성, 연령, 지역 등 인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평균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해당 특성을 통제해 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5-9>에 제시되어 있다. 1~5열은 별도의 통제변수 없이 핵심 중산층 대비 각 집단의 더미변수만을 넣은 결과이며, 6~10열은 성, 연령 구간, 교육수준, 거주 광역자치단체를 통제해 결과이다. 이

<표 5-8> 계층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

	0점	10점
질문 1	열심히 일하면 결국엔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질문 2	소득은 더 공평해야 한다	노력하는 만큼 차이가 나와 한다
질문 3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가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질문 4	개인의 교육이나 취업 기회는 부모 혹은 지인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이 매우 높다	개인의 교육이나 취업 기회는 부모 혹은 지인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이 매우 균등하다
질문 5	개인의 자산 형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이 매우 높다	개인의 자산 형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이 매우 균등하다

<표 5-9> 계층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

	질문 1	질문 2	질문 3	질문 4	질문 5
	(1)	(2)	(3)	(4)	(5)
하층	0.386 (0.256)	-0.163 (0.267)	-0.698*** (0.270)	-0.210 (0.252)	0.226 (0.242)
취약 중산층	0.882*** (0.150)	-0.140 (0.157)	-0.813*** (0.159)	-0.747*** (0.148)	-0.569*** (0.142)
심리적 비상층	0.053 (0.152)	0.303* (0.159)	0.130 (0.161)	-0.291* (0.150)	-0.514*** (0.144)
상층	-0.490 (0.333)	0.206 (0.348)	0.354 (0.352)	0.551* (0.329)	0.664** (0.315)
관측치	2000	2000	2000	2000	2000
R-squared	0.020	0.003	0.018	0.015	0.017
	인구특성 통제				
	(6)	(7)	(8)	(9)	(10)
하층	0.551** (0.262)	-0.205 (0.275)	-0.784*** (0.279)	-0.394 (0.259)	0.024 (0.249)
취약 중산층	0.921*** (0.153)	-0.241 (0.160)	-0.817*** (0.163)	-0.842*** (0.151)	-0.672*** (0.145)
심리적 비상층	0.084 (0.154)	0.360** (0.162)	0.162 (0.164)	-0.239 (0.152)	-0.459*** (0.146)
상층	-0.283 (0.334)	0.195 (0.351)	0.354 (0.355)	0.557* (0.330)	0.685** (0.318)
관측치	2000	2000	2000	2000	2000
R-squared	0.048	0.021	0.030	0.038	0.035

주: *은 10%, **은 5%, ***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기여한 교육수준의 효과가 일정 부분 제외될 것이므로, 공동의 정체성을 지니는 사회집단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지면 제약을 감안하여 해당 변수들의 계수는 보고하지 않는다.

표를 살펴보면 심리적 비상층이 핵심 중산층에 비해 다음과 같은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능력주의적 가치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두 번째 질문에서 다른 어느 계층보다도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성공과 실패가 개인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이것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현실에서 소득 결정 및 자산 형성이 부모의 배경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자산 형성 측면에서 개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10월). 이는 상층과 뚜렷이 대비되는 면모로, 능력으로 고소득을 얻었고, 다음의 과제인 자산 형성의 경우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취약 중산층은 능력주의 경향이 핵심 중산층에 비해 낮고 집단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다른 집단보다 능력주의적 견해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으며, 따라서 정부의 복지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고 믿고(질문 3) 소득과 자산의 결정에 있어 부모의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경향(질문 4, 5)이 강했다. 흥미롭게도 이는 심리적 비상층에서도 관찰되는 대목이다. 또한 첫 번째 질문에서 묻고 있는 근면함의 가치에 대한 신뢰가 모든 집단에 비해 낮은 것이 관찰되어, 중산층에서 탈락하거나 탈락할 위기에 있는 것이 경제적 규칙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수가 0~10점으로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리커트 척도로 제시된 범주형 변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순서형 로짓 분석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표 5-10>에서 나타나듯 결과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후 리커트 척도로 제시된 변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회귀식을 사용할 것이다.

<표 5-10> 계층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순서형 로짓 결과

	질문 1	질문 2	질문 3	질문 4	질문 5
	(1)	(2)	(3)	(4)	(5)
하층	0.412** (0.188)	-0.194 (0.181)	-0.595*** (0.191)	-0.272 (0.184)	-0.005 (0.190)
취약 중산층	0.785*** (0.111)	-0.074 (0.111)	-0.605*** (0.110)	-0.822*** (0.113)	-0.704*** (0.113)
심리적 비상층	0.106 (0.109)	0.283*** (0.109)	0.086 (0.108)	-0.181* (0.108)	-0.298*** (0.107)
상층	-0.223 (0.229)	0.128 (0.234)	0.272 (0.239)	0.449** (0.225)	0.514** (0.232)
관측치	2000	2000	2000	2000	2000

주: *은 10%, **은 5%, ***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인구변수 통제됨.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5-11> 삶의 태도: 순서형 로짓 결과

	미래를 위해 현재 포기	삶의 의미	성취감	자율성	행복(OLS)
	(1)	(2)	(3)	(4)	(5)
하층	0.050 (0.190)	-0.572*** (0.199)	-0.519** (0.202)	-0.404** (0.196)	-1.409*** (0.210)
취약 중산층	0.082 (0.109)	-0.618*** (0.111)	-0.682*** (0.110)	-0.374*** (0.110)	-1.154*** (0.123)
심리적 비상층	0.244** (0.109)	0.376*** (0.109)	0.310*** (0.108)	0.481*** (0.109)	0.335*** (0.124)
상층	-0.136 (0.247)	0.462** (0.229)	0.455** (0.232)	0.629*** (0.234)	0.594** (0.268)
관측치	2000	2000	2000	2000	2000

주: 1) *은 10%, **은 5%, ***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인구변수 통제됨.
 2) 1~4열은 0~10점 척도의 리커트 척도, 5열은 0~100점 척도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이러한 삶의 태도는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표 5-11>에서 제시한 회귀분석 표는 심리적 비상층의 삶의 태도가 여러모로 상층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핵심 중산층에 비해 “인생에서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며,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끼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 그 결과,

“삶이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심리적 비상층은 미래의 혜택을 위해 오늘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경향이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강한데, 이는 자산 축적의 필요 때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러한 특성들이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

4. 중산층 정체성: 교육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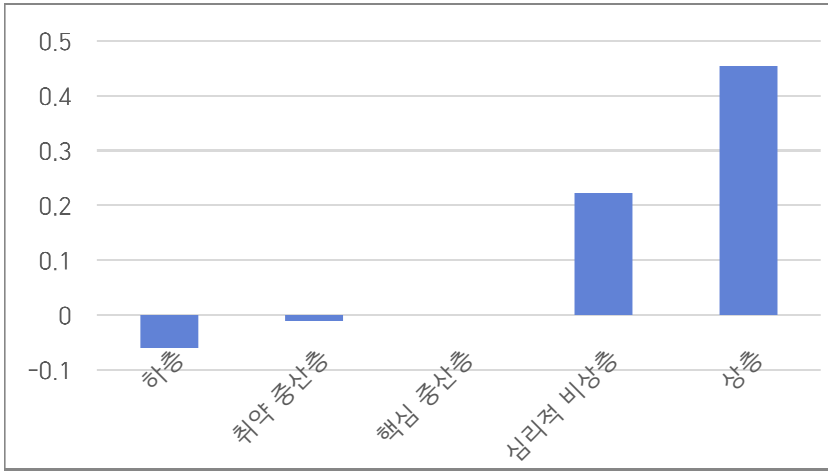
능력주의 담론에 있어 교육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능력주의 담론은 정치사회적 권력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을 획득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차 설문에서는 “자녀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능력 개발과 좋은 직업을 얻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부터 “매우 도움이 된다”까지 네 가지 범주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응답자의 대답을 종속변수로 하고, 앞서와 같은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순서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계층 더미에 대한 계수를 [그림 5-1]에 표시했다. 핵심 중산층이 기준 그룹이 되므로 계수는 0이며, 심리적 비상층 및 상층 집단의 계수만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림 5-1]은 상층만큼은 아니지만 심리적 비상층이 교육의 효용성을 높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심리적 비상층이 반드시 교육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 5-12>는 이들의 교육 투자가 상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보여주며, 오히려 취약 중산층이 미세하게 더 많은 비중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보자. 능력주의 담론은 특권 중산층이 능력주의를 신봉하고, 그에 따라 지위 유지를 위해 교육과 직장에 대한 과도한 헌신 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을 만들고, 동시에 본인들의 삶 역시 피폐해짐을 주장하고 있다.

[그림 5-1] 교육이 직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표 5-12> 자녀 교육에 대한 지출이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계층 내 분포

(단위: %)

	하층	취약 중산층	핵심 중산층	심리적 비상층	상층
10% 미만	36.4	24.8	18.0	24.5	19.1
10~20%	24.2	32.6	33.3	31.7	33.3
21~30%	24.2	20.9	27.7	25.9	14.3
31~40%	6.1	13.2	12.4	11.5	9.5
41~50%	6.1	6.2	5.6	3.6	14.3
51% 이상	3.0	2.3	2.9	2.9	9.5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파악되는 심리적 비상층을 능력주의 담론에서 말하는 특권 중산층으로 치환하기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5-13>을 보면, 다른 계층에 비하여 격차 해소를 위한 할당제를 지지하지 않고, 직장 내에서의 보상에 관하여 연공서열제도는 반대하고 직무급 및 성과급은 찬성한다는 측면에서

<표 5-13> 입시제도에 대한 태도: 순서형 로짓 결과

	할당제 불필요	직무성과급 찬성	입시제도 단순화	입시제도의 통일된 기준
	(1)	(2)	(3)	(4)
하층	-0.444** (0.184)	0.180 (0.183)	-0.161 (0.183)	-0.212 (0.178)
취약 중산층	-0.001 (0.109)	0.168 (0.109)	-0.089 (0.110)	-0.044 (0.109)
심리적 비상층	0.241** (0.111)	0.262** (0.110)	0.315*** (0.111)	0.185* (0.111)
상층	0.096 (0.241)	0.319 (0.235)	0.313 (0.225)	0.002 (0.235)
관측치	2000	2000	2000	2000

주: 1) *은 10%, **은 5%, ***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인구변수 통제됨.

2) 1~4열은 0~10점 척도의 리커트 척도, 5열은 0~100점 척도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는 심리적 비상층이 확실히 능력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은 입시제도의 다원화와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지지하기보다는, 단순하고 일원화된 기준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미국의 능력주의 담론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점이며, 복잡한 입시제도하에서 이들이 가진 문화자본 및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지위를 세습한다는 비판이 사실일 수는 있으나, 적어도 이들이 그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핵심 중산층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교육에 투자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인다.

제4절 한국 중산층의 정책 선호

본 절에서는 전반적인 가치 지향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중산층의 정책 선호를 살펴본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능력주의 및 특권 중산층 담론에서 제시하는 이들의 특성, 또는 앞으로 바뀌어야 하는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능력주의 담론은 중산층이 분화

되면서 소수의 특권 중산층이 기술 변화로부터 경제적 기회를 얻었고, 기술 진보에 따라 노동 수요가 소수의 고급인재로 집중되는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고 직장에서의 성공에 과도하게 몰입한다고 묘사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상층에 가까운 사회경제적 지위를 달성했으나, 여전히 자산 축적을 통한 상층 진입을 희망하는 심리적 비상층의 가치관은 개인주의 및 능력주의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업적 성취에 매몰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사회적 이동성의 연결고리인 교육에 있어서도 입시제도 단순화와 통일된 기준 등 현재의 구조가 바뀌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대로 취약 중산층의 경우 사회의 불평등이 구조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을 더 선호한다.

이제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중산층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자. 다수의 기존 문헌의 전개구조를 따라 논의를 진행한다. 즉, 기술과 무역에 의해 노동 수요가 변화하고, 이것이 소득과 자산 축적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안에 대한 태도와 정책 선호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1. 기술 및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과 정책 선호

현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공지능의 경제 전반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응답자들에게 인공지능(AI)과 로봇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다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질문했다. <표 5-14>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종속변수는 0~10점 사이의 리커트 척도 형태이다. 먼저 AI와 로봇의 발전이 “나의 일자리”와 “경제 전반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했는데, 심리적 비상층은 개인적으로도, 사회 전반적으로도 AI의 영향력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이 관찰된다. 반면, 하층의 경우 AI와 로봇의 도입이 경제에는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

<표 5-14> AI와 로봇에 대한 태도: 순서형 로짓 결과

	AI, 로봇에 내 일자리는 안전	AI, 로봇은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정부는 기본소득보다 일자리 창출에 집중
	(1)	(2)	(3)
하층	-0.444** (0.184)	0.180 (0.183)	-0.161 (0.183)
취약 중산층	-0.001 (0.109)	0.168 (0.109)	-0.089 (0.110)
심리적 비상층	0.241** (0.111)	0.262** (0.110)	0.315*** (0.111)
상층	0.096 (0.241)	0.319 (0.235)	0.313 (0.225)
관측치	2000	2000	658

주: *은 10%, **은 5%, ***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인구변수 통제됨.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표 5-4>에서 드러나듯 하층의 60%가량은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이들이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 AI와 로봇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학 연구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중간 숙련 및 중간 이상의 숙련을 요구하는 직무와 직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며, 오히려 저임금 서비스직은 대체되기 어렵다고 본다(Autor and Dorn 2013)는 점에서 AI에 대한 인식과 과학적 예상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반의 일자리가 감소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응이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하는 것에 가까운지, 기술도입에 대응 또는 적응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전반적으로 후자의 응답이 좀 더 많긴 했으나, 심리적 비상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서 더 시장친화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에 대한 경험 및 노출을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도구를 어느 빈도로 활용하는지를 물었다. <표 5-15>에는 ‘필요할 때’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을 표시했다. 이 표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연령대가 낮

<표 5-15> 생성형 AI 적극적 사용자의 비율(필요할 때 + 일상적으로)

(단위: %)

연령대	하층	취약 중산층	핵심 중산층	심리적 비상층	상층
20대	33.3	36.2	39.2	33.3	68.8
30대	5.6	18.5	21.7	28.6	66.7
40대	4.5	28.1	27.3	31.3	50.0
50대	27.8	19.5	21.2	28.7	33.3
60대	3.6	17.9	25.2	17.4	20.0
전체	13.5	23.2	26.3	27.7	44.8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아질수록 계층 간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하며, 20~30대의 경우 상층과 나머지 간의 격차가 30%p에 달한다는 점이다.

최근 생성형 AI는 초기의 유행을 지나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생성형 AI를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젊은 층 사이에서 신기술에 대한 노출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역량에 있어서는 전체의 3% 남짓한 상층과 나머지의 격차가 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크고, AI 활용 역량의 격차가 노동시장의 성과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AI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은 곧 중산층을 지지하는 정책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은, <표 5-12>에서 교육 투자의 격차가 상층과 나머지 중산층 사이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AI 활용 역량에 있어서도 상층과 나머지 사이의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능력주의 담론이 말하는 구조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능력주의 담론에 따르면, 소수의 상층뿐 아니라 심리적 비상층까지 포괄하는 상위 10%가량이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중산층에게 그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을 주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노동 및 고용 관련 정책 선호

AI를 비롯한 기술 진보와 함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는 우리나라의 기업 및 산업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기술 및 경제 구조가 변화하는 시기에는 보다 유연한 노동 관리를 통해 기업들의 비용을 완화하는 한편 경제 전반의 자원 효율성 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가 함께 실행되어 기업 내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5-16>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고용보장의 강화와 정년 연장을 찬성하면서도 직무성과급제, 근로시간 유연화에도 찬성하는 견해가 관찰되는 가운데, 계층 간의 차이도 드러난다. 고용보장에 대한 지지는 취약 중산층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정년 연장에 대한 지지는 심리적 비상층에서 강한데, 이는 자산 축적에 대한 필요와 그 이면에 있는 노후 대비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반대가 하층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생산직이나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표 5-16> 노동 개혁 사안에 대한 견해: 순서형 로짓

	고용보장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반대	직무성과급 찬성	정년 연장
	(1)	(2)	(3)	(4)
하층	-0.156 (0.183)	0.395** (0.189)	0.180 (0.183)	0.203 (0.184)
취약 중산층	0.559*** (0.110)	0.166 (0.109)	0.168 (0.109)	0.201* (0.110)
심리적 비상층	0.068 (0.111)	-0.145 (0.110)	0.262** (0.110)	0.313*** (0.109)
상층	-0.149 (0.239)	-0.126 (0.231)	0.319 (0.235)	-0.006 (0.244)
관측치	2000	2000	2000	2000

주: *은 10%, **은 5%, ***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인구변수 통제됨.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동화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주요 정책 대응 중 하나로 꼽히는 이민 확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해, 다소간의 뉘앙스 차이를 두어 질문했다. 구체적으로, “인구절벽에 대처하기 위한 이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확대해야 하는지”, “맛벌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표 5-17>에 결과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민이나 고용에 대해서는 계층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인력의 도입이나 이민 확대에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다만, 가사도우미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핵심 중산층 이상과 그 하위그룹 간의 견해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취약 중산층과 하층에 속한 응답자들은 가사도우미 확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더욱 강했다. 이는 이들이 외국인 인력과 경쟁관계에 놓여서일 수도 있어서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취약 중산층 이하의 여성들

<표 5-17> 이민 관련 사안에 대한 견해: 순서형 로짓

	이민 확대	고용 확대	가사도우미 확대
	(1)	(2)	(3)
하층	-0.293 (0.199)	-0.191 (0.201)	-0.567*** (0.198)
취약 중산층	-0.140 (0.115)	-0.071 (0.118)	-0.429*** (0.114)
심리적 비상층	-0.149 (0.116)	-0.006 (0.119)	0.122 (0.116)
상층	0.332 (0.263)	0.433 (0.276)	0.565** (0.252)
관측치	2000	2000	2000

주: *은 10%, **은 5%, ***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인구변수 통제됨.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가적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직종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지면관계상 결과는 별도로 신지 않는다). 이는 가사도우미라는 한정된 범위에서도 외국인 인력의 도입은 객관적인 경제적 영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를 받아들이는 인식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3. 교육과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견해

마지막으로 교육과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교육 기능의 제고는 중산층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자들은 교육의 양과 접근성 강화를 모두 지지하지만, 대학 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는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질적 향상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재원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공적 투자가 크게 늘기 어려운 현실에서 등록금의 인상 없이는 교육의 질 제고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상의 제약에 초점을 맞추어, 두 가지의 선택지만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을 구성했다. 예컨대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과 등록금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등록금 유지를 선택할 것이다”와 같은 식으로 정책의 제약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도록 했다. 사회적 이동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택정책 중 전세제도, 전반적인 경제기조에서 안정과 성장 사이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도 확인하였다. 이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앞서와 동일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한 <표 5-18>은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의 독특한 면을 잘 보여준다. 심리적 비상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등록금 억제를 위해 교육의 질을 희생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더 약하다. 이는 교육을 통한 역량을 축적하고 좋은 일자리를 획득한 경험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견 모순되어 보일 수 있으나 다원화된 입시제도보다는 단순하고 일원화된 제도를 선호하는 것은 교육-노동을 통한 사회 이동성 제고 메

<표 5-18> 교육 및 사회적 이동성 관련 사안에 대한 견해: 선형확률모형

	대학교육 질의 향상보다 등록금 억제	대학 자율성보다 수능 일원화	매매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전세대출 유지	물가상승이 경기침체보다 더 나쁨
	(1)	(2)	(3)	(4)
하층	-0.013 (0.053)	0.061 (0.051)	-0.011 (0.048)	0.004 (0.052)
취약 중산층	-0.031 (0.031)	0.017 (0.030)	-0.082*** (0.028)	0.007 (0.030)
심리적 비상층	-0.052* (0.031)	0.121*** (0.030)	-0.000 (0.028)	-0.053* (0.030)
상층	0.034 (0.067)	0.127* (0.065)	-0.037 (0.061)	0.023 (0.066)
관측치	2000	2000	2000	2000

주: *은 10%, **은 5%, ***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인구변수 통제됨.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커니즘에서 입시제도의 다양화로 인하여 교육부문에 진입장벽이 세워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정책 전반의 기조에 대한 생각에서도 중산층 내부의 견해 차이가 관찰된다. 심리적 비상층은 경제성장에 대한 선호가 다른 계층에 비해 다소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국면에서 이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상기하자. 이들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새로운 산업의 성장, 일자리 창출 등 계층 상승에 필요한 기본 조건이 만들어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14>에서 기술 변화에 대해 이들이 다른 계층보다 뚜렷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상통한다.

주거와 관련해서도 중산층 내부의 차이가 관찰된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안락한 생활을 위한 기본 조건이자 자산 축적의 핵심 도구다. 이 과정에서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는 주거 측면에서 상향이동을 위한 사다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본질적으로 사금융적 성격을 갖는 전세에 대해 2010년대 초반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까지 이루어지면서 단기적인 주거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레버리지 증가를 통해 매매가격의 상승에

기여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정책적 요구가 강해졌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많은 논쟁이 발생했다. 소위 갭투자가 매매가격 상승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여겨지고, 전세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세제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산층에게 있어 주거안정과 주거 여건 상승이라는 두 가지 목표 중 어느 하나가 덜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표 5-18>의 3열은 취약 중산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전세대출로 인한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설문 기준으로 이 계층의 자가 주택 보유 비율이 51%에 불과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과 심리적 비상층의 자가 비율은 각각 70.8%, 79.6%였다. 현실의 전세 보증금 부담도 중요하지만, 주택 구매를 통해 중산층에 진입해야 하는 필요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결과는 문항에 “매매가격이 상승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두 가지가 상충관계에 있음을 응답자에게 각인시킨 결과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매매와 전세 각각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면, 모두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단순 가치 지향을 넘어 상충되는 정책목표 또는 자원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하에서 각 계층이 어떠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5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최근 사회학계를 중심으로 제시된 특권 중산층 및 능력주의 담론에 대한 검증은 시도했다. 이들은 사회적 불평등의 본질이 “1 대 99” 담론과 같은 극소수의 특권층 대 나머지가 아니며, 따라서 극소수의 부를 다수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으로는 불평등 문제의 해소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보기에 문제는 상위 10% 안팎의 신흥 상류층이다. 이

들이 부당한 정치사회적 권력을 활용하여 현재의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니다. 다만, 경제성장, 기술 및 무역의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집단일 뿐이다. 특권 중산층 담론이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노력도 있지만 시대적, 환경의 수혜를 입었음에도 모든 것이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가치관을 신봉함에 따라 결과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교육-취업-자산 축적의 구조에 있어 대부분의 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그리고 배타적 사회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특권 중산층 또는 능력주의 담론의 가설이 인식조사에서 확인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했다. 특히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집단들 중 심리적 비상층의 특징 — 객관적으로는 상층에 해당하나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 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특권 중산층과 가장 유사하다고 보았다. 분석의 초점은 이들이 실제로 다른 계층, 특히 핵심 중산층에 비해 능력주의 및 사회이동성과 정책사안에 대해 얼마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취약 중산층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 또한 주요 목표였다. 성, 연령이나 학력 등 인구적인 특성을 통제한 후 계층적 인식이 미치는 효과에 집중했다.

다양한 분석은 복합적인 그림을 보여준다. 심리적 비상층은 능력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중산층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물가안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기술 변화나 고령화와 같은 큰 변화에 대한 대응, 예컨대 보상체계의 변화나 이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산층 전반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논의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심리적 비상층이 “특권 중산층”이라고 불릴 만한 요소를 생각만큼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입시제도의 단순화를 지지하며, 사회적 측면에서 균형을 제고하는 정책에, 그리고 사회적 합의 추구하고 다원화된 정책에도 다른 집단보다 긍정적이다. 물론 태도와 행동이 서로 다를 수는 있으나, 이들은 경제 역동성 제고와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그간 제시되어 온 정책적 목표와도 가장 가까운 선호를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가치 및 정책 지향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틀과 소통 전략일 것이다.

그러나 본 장이 특권 중산층과 능력주의 담론의 핵심 가설들을 모두 검토한 것은 아니다. 특히 기존 담론이 제시해 온 “성공한 50~60대의 지위 공고화 노력이 자녀 세대의 10~20대 시절 교육, 그리고 20~30대에는 노동시장 진입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사회적 분열의 시작점이다”라는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거나 다루지는 못했다. 최근의 문헌들은 정치와 정책에서 중점 집단으로 강조해 온 “청년”들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처한 상황과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쉽게도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보자면, 상층 또는 심리적 비상층 가정의 자녀들과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의 자녀 세대들이 어떤 가치관과 정책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황 수 경 (한국개발연구원)

이 창 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1. 중산층의 다양한 개념

중산층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파악할지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경제학 전통의 연구자들은 주로 측정 가능한 소득이나 소비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OECD(2019)처럼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75~200%인 가구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 밖에 소득 혹은 소비 분포상 중간계층(60%)을 중산층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중산층으로 간주할 수 있는 소득(혹은 소비지출)의 절대 수준을 특정해 정의하기도 한다.

반면, 경제학 이외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소득·자산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 이외에 직업이나 교육수준이 보여주는 사회적 지위, 의식이나 생활양식의 배타적 특성, 삶의 기회나 생활 여건 만족도 등이 반영된 계층의식의 관점에서 중산층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산층의 정치적·사회적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중산층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물질적인 자산에서부터 계층 정체성으로 표현되는 의식적 측면까지의 넓은 스펙트럼에서 각기 다

른 기준 혹은 여러 기준을 결합해 중산층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3 참조).

다양한 중산층 개념 가운데 어느 개념이 적절한지는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는 단지 학제 간의 문제는 아니며 분석 주제와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다양한 개념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 중산층에 대한 상충된 인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2. 소득 상위층의 상당수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한다

객관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중산층이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중산층 위기’ 담론은 우리 사회에서 그토록 강건하게 지속되는 것일까?

중산층 위기 담론과 관련한 하나의 단서는 주관적 계층의식의 전체 분포에서 발견할 수 있다. 통상의 방식대로 우리 사회의 상위층을 약 20% 정도로 가정할 때, 그중 단 3%만이 자신을 상위층으로 인식하고 대부분은 자신을 중층, 즉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들 오분류된 집단이 유일하게 경제적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계층별로 최근 10여 년간의 소득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 상위 10% 이상 그룹에서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소득점유율이 하락하였고, 그 밖의 그룹에서는 소득점유율이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소득 상위층,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 상위 10% 이상 계층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위치 지으면서 객관적으로 경제적 지위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 오분류 집단은 우리 사회에서 단지 주관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측면에서도 상실감이나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계층이다. 동시에 이들은 강력한 사회적 발언권이나 문화 권력을 지닌 그룹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을 정책대상으로서의 ‘중산층’으로 보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만약 중산층 정책에 관한 논의가 이들에 의해 주도된다면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추가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며, 본 보고서의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3. 중산층 위기는 취약한 중산층의 문제로 이해해야

후자는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득 및 자산에서 ‘계층 양극화’ 증거가 일부 존재하지만, 양극화 지표(P90/P10)를 중위값(P50) 기준으로 상층 및 하층 간의 격차로 분해해 보면, 그 대부분은 상층-중층 간에서가 아니라 중층-하층 간 격차 확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표 1-4 참조).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은 객관적으로 중간소득자이지만 스스로 하층으로 인식하는 그룹에 더 적합한 논거일 수 있다.

중산층의 위기를 소득 및 계층 이동성의 맥락에서 이해하기도 한다. 이때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되는데, 첫 번째 쟁점은 하층 혹은 취약한 중산층이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계층적 기대감이고, 두 번째 쟁점은 중산층이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층적 기대감과 관련된다. 만약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중층-하층 간 격차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면 전자에 더 방점이 찍혀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후자의 문제는 중산층 위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중산층 문제는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매우 다른 문제의식들이 결합하여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산층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 간 불일치로 인해 중산층 담론에서 다양한 경제적 지위를 가진 그룹들의 상이한 불만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

해서는 ‘주관적 중산층’의 다층성, 그리고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 간 불일치가 나타나는 원인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4.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와 주관적 중산층

대부분의 국가에서 객관적 조건에 의한 계층 구분과 자신이 평가하는 주관적 계층 인식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또한 사람들은 소득으로 살펴본 계층 지위를 물었을 때와 일반적인 사회계층을 물었을 때 매우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 기준의 계층 인식보다는 일반적 의미의 사회계층 인식에서 불일치 정도가 크게 나타나, 사회계층을 판단할 때 소득 이외의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 불일치의 정도와 방향은 국가마다, 시기마다,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소득계층 인식에서 중앙 편향이 매우 두드러진 국가 중 하나로 파악되며, 반면에 주관적 사회계층 분포에서는 대부분(74.5%)이 자신을 중하위층에 귀속시키고 있어 중앙 편향과 하향 편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KDI 계층인식조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주관적 계층구조를 재구성해 보면 상상 0.7%, 상하 2.3%, 중상 20.8%, 중하 49.6%, 하상 17.3%, 하하 9.3%로 나타나, 상층은 매우 적고 중간층이 많지만 아래쪽으로 치우친 전형적인 호리병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객관적 상층의 일부는 주관적 중산층으로, 객관적 중산층 일부는 주관적 하층으로 편입된 구조인 셈이다. 결국 주관적 중산층은 객관적 상층과 중산층 상층부를 포함하게 되어 대표성에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인들의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는 준거집단 효과에 의한 중앙 편향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 정보 부족, 미디어의 영향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불일치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하층-중층-상층의 3단계 계층에서 개인이 중층을 기준으로 하층 혹은 상층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판별하는 다항로지트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의 소득/자산은 물론 개인의 소득/자산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여성과 청년층은 계층 인식에서 다소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다.

셋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하층이나 상층보다 중층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다.

넷째, 자가 보유 여부는 중층-하층 간에는 유의미한 변별 기준이지만 중층-상층 간에는 그렇지 않다.

다섯째, 진보적 정치 성향은 자신의 계층 지위를 체계적으로 낮게 보게 한다.

여섯째, 장래 전망은 중산층과 하층을 나누는 경계에서만 주효하게 작동한다.

5. 중산층의 다층화: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의 존재

한국에서 중산층의 다층성을 감안하여 ‘사회경제 계층’이라는 다섯 개의 계층—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그리고 하층—으로 재구성하여 계층별 불평등 인식,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 태도에서의 특징들을 비교하였다. 이 중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이 중산층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이 된다.

고소득층이면서 스스로는 상층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심리적 비상층은 고학력자 및 고소득자 비중이 상층보다도 높고, 관리직/전문직 비중과 자가 보유 비율도 가장 높으며,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자산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핵심 중산층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주관적 중산층의 상위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은 말 그대로 ‘엘리트’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취약 중산층은 교육수준, 직업군, 개인 소득 및 자산 등에서 핵심 중산층과 하층의 중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의해 언제든지 하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는 경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 비상층은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핵심 중산층보다는 상층에 가깝거나 심지어 상층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취약 중산층은 중산층보다는 하층과 더 유사한 특성을 보여준다.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은 불평등 인식 및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 사회경제적 인식 및 정책에 대한 견해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 수준에 대해 핵심 중산층에서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에서는 줄여도 된다는 의견이 높다. 반면, 심리적 비상층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어느 그룹을 중산층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층성을 감안할 때 주관적 중산층의 상층부,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엘리트 중산층의 견해가 중산층의 사회적 니즈로 과대포장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집중하고 있는 취약 중산층의 위험요인(주거 불안, 고용 불안 등)을 경감시키는 데 중산층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주관적 소득 지위 인식과 편향의 특성

실험적으로 설계된 KDI 계층인식조사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 계층 정보를 통해 인식 편향이 수정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적으로 검토하였다.

소득 인식 편향(10분위로 측정된 주관적 지위와 객관적 지위 간 차이)은 객관적 소득분위와 강한 부(-)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양의 편향, 높을수록 음의 편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여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 중앙 쓸림 현상을 설명한다.

중앙 편향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아르헨티나를 대상으로 한 기존 설명을 뒤집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Cruces *et al.*(2013)은 개인이 계층 지위를 인식할 때 자신의 주변 이웃들을 중심으로 모집단을 예상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부자의 구성을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하여 하향 편향이 발생하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구성을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하여 상향 편향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대로라면 특정 소득계층의 사람들과 주로 친분이 있을 때 모집단에 대한 추론에서 해당 집단의 분포를 과대평가하여 편향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에서는 주로 하향 편향을 가진 사람들에서 준거집단 효과가 나타나는데, 상층과 주로 교류하는 사람일수록 편향의 크기(절댓값)가 줄어들고 하층과 주로 교류하는 사람들은 편향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소득 상위층에서 상층과 주로 교류하는 사람이면 자신을 상층에 가깝게, 하층과 주로 교류하는 사람이면 자신을 하층에 가깝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친구나 지인으로 대표되는 준거집단은 모집단을 추론하는 표본(sample)으로 고려된다기보다는 자신이 동일시하고자 하는 내집단(in-group)으로 간주되고 그 집단 구성원들과 비슷하게 자신을 위치 지으려는 경향을 가진다는 설명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중심 편향(center bias) 혹은 극단 회피(extremeness aversion) 성향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 소득 지위의 오인식과 중산층 판단 / 재분배 선호

중산층 인식과 관련해 흥미로운 관찰은 소득 상위 20% 이내 혹은 자산 상위 20% 이내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처치 그룹에 한정해 보면, 자신이 명백히 소득 상위 10% 혹은 자산 상위 10%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도 각각 71.1%, 78.4%가 자신을 여전히 중산층으로 판단하였다.

중산층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 소득수준을 정확히 아는 것과는 크게 상관 없이, 상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자산 정보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을 하는데, 이러한 조정은 대부분 중산층 인식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산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소득 및 자산 지위에 대한 정보 제공은 오히려 중산층 판단기준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중산층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득 및 자산 지위의 제공항을 고려했으나, 모두 유의성이 없어 중산층 판단은 소득과 자산에 대해 단조 증가에 가깝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중산층’ 개념은 중간적 생활수준을 누리는 계층이 아니라 극소수의 상층부를 제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삶을 영유하는 상위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 지위에 따라 단조 증가하는 중산층 판단과는 달리, 재분배 선호 에서는 경제적 지위와 재분배 선호 간에 U자형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낮은 분위에서는 주관적 소득 및 자산분위가 증가할수록 재분배 선호가 감소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재분배 선호가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 실험 결과, 소득 인식 편향의 수정은 재분배 선호에 미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지만 자산 인식 편향의 수정은 재분배 선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인식 편향이 줄면 상향 편향이 있는 하위계층에서는 재분배 선호가 더 증가하고 하향 편향이 있는 상위계층에서는 재분배 선호가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상향 편향을 가진 사람보다 하향 편향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으므로, 경제적 지위에 관한 오인식은 우리 사회 전반의 재분배 선호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만약 객관적 정보를 통해 개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관한 인식 편향이 줄어들었다면 평균적 의미에서 재분배 선호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8. 특권 중산층·능력주의 담론에 대한 실증적 검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최근 사회학계를 중심으로 제시된 특권 중산층 및 능력주의 담론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 이들은 사회적 불평등의 본질이 “1 대 99” 담론과 같은 극소수의 특권층 대 나머지가 아니며, 따라서 극소수의 부를 다수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으로는 불평등 문제의 해소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상위 10% 안팎의 신흥 상류층이 문제의 근원이다.

소득 및 주관적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심리적 비상층이 특권 중산층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들이 다른 계층, 특히 핵심 중산층에 비해 얼마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분석을 집중하였다. 또한 특권 중산층의 모토로 여겨지는 ‘능력주의’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취약 중산층이 보여주는 견해의 특징과 차이 역시 확인하였다.

다양한 분석은 복합적인 그림을 보여준다. 심리적 비상층은 능력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중산층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성장이 불가안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기술 변화나 고령화와 같은 큰 변화에 대한 대응, 예컨대 보상체계의 변화나 이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산층 전반에 비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심리적 비상층이 ‘특권 중산층’이라고 불릴 만한 요소를 기존 논의들에서 주장하는 만큼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입시제도의 단순화를 지지하며, 사회적 측면에서 균형을 제고하는 정책에, 그리고 사회적 합의 추구하고 다원화된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물론 원론적인 견해와 구체적인 정책 태도나 행동이 불일치할 수는 있겠으나, 이들은 여전히 경제 역동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그간 제시되어 온 정책적 목표와 가장 가까운 집단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제2절 정책 시사점

이제 본 보고서의 발견들이 주는 정책 시사점을 정리해 보자. 중산층 정책의 대상 설정, 중산층 정책에서의 고려 사항, 향후 연구 제언이라는 세 측면에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중산층 정책의 올바른 대상 설정

우리나라의 정책에 있어 중산층 확대는 모든 역대 정부가 추구한 핵심 정책기조였다. 중산층이 된다는 것이 개개인에게는 더 나은 생활수준을 영위함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두터운 중산층이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는 암묵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중산층의 범위가 조세 및 복지 정책의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중산층 내부에서 상당한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기존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밝혀낸 것은 주관적 계층 인식과 객관적 기준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간극으로 인해 범중산층 내부에 매우 이질적인 여러 계층이 혼합되어 각기 다른, 때로는 상충적인 정책 수요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실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많은 정책이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중산층을 규정하고 성과를 예측하지만, 정작 정책에 대한 선호와 요구는 주관적 계층 인식을 반영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의 괴리는, 정책이 과도하게 전자에 의존할 때 정책에 대한 불만을, 후자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는 정책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적인 예가 이미 상층에 진입했지만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비상층의 존재다. 이들은 교육-직업-자산 축적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통해 이미 계층 상승을 이루었지만 추가적인 상승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정책당국자의 관점에서 이들은 상층에 해당하여 정부의 지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집단이다. 하지만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강력한 사회적 발언권이나 문화 권력을 통해 중산층 정책의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객관적으로는 중산층에 해당하지만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는 취약 중산층의 존재도 정책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여 통상적인 중산층 대상 정책보다 더 강한 지원을 원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즉, 공통의 정체성과 정책 수요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의 거대한 중산층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산층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산층을 명백히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많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중산층 이상 계층은 여러 정책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포괄적인 정책기조의 효과를 평가할 때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 점을 보면 여전히 중산층이라는 존재는 정책의 설계, 집행 및 평가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중산층의 분화와 다층적 구조를 고려하여 좀 더 세분화된 대상 설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중산층 정책의 범위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현재 중산층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중산층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 또는 ‘중산층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층과 취약 중산층이 중산층에 진입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산층 정책 본연의 당위적 과제라는 점 외에도, 객관적으로 소득과 자산 측면의 양극화가 상단보다는 하단에서 일어나고 있고, 취약 중산층의 경우 지위 하락으로 인한 주관적 인식의 악화를 함께 경험하고, 그 불안과 박탈감이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비상층 역시 객관적인 지위와 주관적인 계층 인식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또 다른 집단이다. 하지만 이들의 불안감은 상층에 아직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에 기인하며, 따라서 이들의 욕구는 계층 상승 기회의 공정성과 더불어 자산 축적과 노후 대비 등 자신의 지위 안정화에 있다. 심리적 비상층의 정책 수요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보다는 일반적인 기회의 공정성 정책, 주택시장정책, 노인정책 등으로 다룰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산층을 두텁게 한다는 기초를 이어 나간다면 구체적인 중산층 정책의 우선순위를 취약 중산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 중산층 정책의 고려 사항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객관적 계층 지위와 주관적 계층 지위 간의 불일치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 비상층의 목소리가 중산층 정책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다대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층과 심리적 비상층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등 정치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경로를 가지고 있어 자신들의 의제를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정책 우선의 차이는 여러 국가에서 확인되고 있다(Traber *et al.* 2021).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였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중산층 내에서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데, 취약 중산층은 내집 마련을 위해 매매가격 안정이 특히 중요한 반면, 자가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심리적 비상층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들에게는 주택가격 상승을 통한 자산 축적 증가가 매우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주택 보유 장려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중 어디에 힘을 싣느냐는 계층 간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도 있겠으나, 시장

의 상황적 요인 역시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취약 중산층과 심리적 비상층 간에 존재하는 비대칭적 정치적 영향력은 분명 사회적 논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산층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원인을 식별하여 정책 대응의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과 국제경제의 변화에 힘입어 엘리트 중산층이 새롭게 부상한 만큼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계층은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은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과소대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과 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훈련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심리적 비상층이 능력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단순화된 입시제도를 선호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술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훈련을 학령기의 전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되, 입시 요소화되어 계층 간 교육 투자의 차이가 성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과제인 역동성 제고와 구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심리적 비상층이 가장 강력한 지지 계층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신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지하고, AI와 로봇의 긍정적 효과를 더 강조하며, 직무급제를 더 선호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선호한다. 이들의 선호는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의 방향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과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다른 계층과 뚜렷이 대비된다. 따라서 성장을 위한 변화를 선호하는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을 설계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데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기술과 산업의 변화로부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다.

한편, 심리적 비상층이 자산 축적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이것이 주로

부동산시장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의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대추구 사회로 인식하고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에 대한 생산적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나 자산에 직접적,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중산층의 지속적 확대를 달성하기 어렵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단기적 개입의 반복은 시장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고른 자산 축적의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계층, 특히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계적으로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사용하지만, 정책에 대한 태도는 이들의 주관적 계층 인식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즘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사례에서처럼 상대적 박탈감이 무역과 이민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믿는’ 등 특정 이슈와 연결될 경우, 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 동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적 태도 그 자체가 정책의 대상이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무엇에 기인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대안을 내놓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하겠다.

3.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

본 보고서는 KDI 계층인식조사를 위주로 중산층의 다층성과 그 정책적 함의를 다루었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자산으로만은 파악되지 않는 심리적 비상층과 취약 중산층 사이의 격차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 사회학계에서는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다르고 문화적 거리가 존재하는지를 보인 바 있다 (Kozlowski, Taddy, and Evans 2019). 우리나라 문헌에서도 상층 및 엘리트 중산층은 다른 계층과 비교할 때 문화자본과 비인지적 역량에서 차이

가 더욱 크게 나타남을 보인 바 있다(조귀동 2020; 구해근, 2022). 이는 지리적 분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부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이 구분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준거집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구성이 다르고, 이들로부터 학습되는 비인지적 역량과 획득하는 정보들이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기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이것이 중산층의 분화와 이질성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특히 정책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는 것은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본문에서는 간략히 다루었으나, AI를 비롯한 새로운 파괴적 기술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각 계층의 대응 능력이 얼마나 다른지, 고령화 및 기후위기와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 분담에 관해 계층 간의 다른 생각을 확인하는 것도 추후 더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계층의 다원화 및 주관적 계층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엄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원택 · 이재열 · 최인철 · 안상훈 · 김병연,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 서울대 교수 5인의 계층 갈등 대해부』, 21세기북스, 2014.
- 구해근, 『특권 중산층 한국 중간계층의 분열과 불안』, 창비, 2022.
- 김병조,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제34권 제2호, 2000, pp.241~268.
- 김정호,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경제학연구』, 제67권 제4호, 2019, pp.97~137.
- 김태완 · 이주미 · 김기태 · 임완섭 · 송치호 · 김명중 · 김영미,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보건사회연구원, 2022.
- 박돈규, 「‘중산층’이 사라진다. 30년 전 국민 75% “난 중산층” … 올해엔 48%로 딱」, 『조선일보』, 2020. 7. 18.
- 박철웅, 「2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절반 “난 하층” … 사라지는 중산층」, 『주간한국』, 2023. 10. 20.
- 송한나 · 이명진 · 최섯별, 「한국 사회의 객관적 계급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간 격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36권 제3호, 2013, pp.97~119.
- 안아림 · 마강래, 「지역의 소득수준이 계층 인식 불일치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 준거집단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제35권 제2호, 2019, pp.19~31.
- 이상렬, 「한국 중산층,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2023. 5. 22.
- 이영욱, 「중산층 추이와 정책과제」, KDI FOCUS 제119호, 2023.
- 이원재, 「‘경제적 보통 사람’ 그 많던 중산층은 어디로 갔을까?」, 『한겨레』, 2022. 6. 4.
- 이재열,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중산층이 사라진 서민사회의 등장」, 민주정책연구원, 『제2차 민주정책포럼 자료집』, 2014.
- 이종희, 「한국 중산층의 계층귀속의식」, 『소비문화연구』, 제20권 제2호, 2017, pp.1~22.
- 이준협,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 중산층의 55%는 저소득층이라 생각」, 현대경제연구원 이슈리포트 13-41, 2013, pp.1~12.

- 임원혁 · 이창근 · 최동욱 · 정세은,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9-03, 한국개발연구원, 2019.
- 조권중 · 최지원, 『중산층 — 흔들리는 신화』, 서울연구원, 2016.
- 조귀동, 『세습 중산층 사회: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생각의힘, 2020.
- 조동기,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3호, 2006, pp.89~109.
- 최효미, 「중산층의 사회계층 소속감에 대한 분석: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사례」, 『노동리뷰』, 통권 제46호, 2008. 10, pp.73~84.
- 통계청, 「2023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 11. 8.
- 황수경, 『한국의 공정성 규범에 대한 실증분석과 소득재분배 정책에의 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15-05, 한국개발연구원, 2015.
- 황수경,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와 정책 결정』,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국개발연구원, 2019.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2022 중산층 보고서』, NH투자증권, 2022. 9.
- Atkinson, A. B. and A. Brandolini,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Middle Class,” in J. Gornick and M. Jäntti (eds.), *Income Inequality: Economic Disparities and the Middle Class in Affluent Countries*, 2013, pp.77~100.
- Atkinson, A. B., L. Rainwater, and T. M. Smeeding,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OECD, 1995.
- Autor, David, “Skills, Education, and the Rise of Earnings Inequality Among the ‘Other 99 Percent’,” *Science*, 344(6186), 2014, pp.843~851.
- Autor, David and David Dorn, “The Growth of Low-Skill Service Jobs and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103(5), 2013, pp.1553~1597.
- Autor, David, David Dorn, and Gordon Hanson, “The China Shock: Learning from Labor Market Adjustment to Large Changes in Trade,” *Annual Review of Economics*, 8, 2016, pp.205~240.
- Autor, David, David Dorn, Gordon Hanson, and Kaveh Majlesi, “Importing Political Polarization?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Rising Trade Exposure,” *American Economic Review*, 110(10), 2020, pp.3139~3183.
- Banerjee, A. V. and E. Duflo, “What Is Middle Class about the Middle Classes around the Worl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2008, pp.3~28.

- Brueckner, Markus, Era Dabla-Norris, Mark Gradstein, and Daniel Lederman, "The Rise of the Middle Class and Economic Growth in ASEAN," *Journal of Asian Economics*, 56, 2018, pp.48~58.
- Card, David and John E. DiNardo, "Skill-Based Technological Change And Rising Wage Inequality: Some Problems And Puzzl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20(4), 2002, pp.733~783.
- Chambers, John R., Lawton K. Swan, and Martin Heesacker, "Better Off Than We Know: Distorted Perceptions of Incomes and Income Inequality in America," *Psychological Science*, 25, 2014, pp.613~618.
- Cruces, G., R. Perez-Truglia, and M. Tetaz, "Biased Perceptions of Income Distribution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8, 2013, pp.100~112.
- Diermeier M., H. Goecke, J. Niehues, and T. Thomas, "Impact of Inequality-Related Media Coverage on the Concerns of the Citizens," DICE Discussion Paper, No. 258, 2017, pp.1~38.
- Easterly, W., "The Middle Class Consensus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6(4), 2001, pp.317~335.
- Engelhardt, C. and A. Wagener, "Biased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Hannover Economic Papers No. 526. University of Hannover, 2014.
- Engelhardt, C. and A. Wagener, "What Do Germans Think and Know About Income Inequality? A Survey Experiment," *Socio-Economic Review*, 16(4), 2018, pp.743~767.
- Evans, G. and J. Mellon, "Social Class: Identity, Awareness and Political Attitudes: Why Are We Still Working Class?" *British Social Attitudes*, 33, 2016.
- Evans, M. and J. Kelley, "Subjective Social Location: Data From 21 N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6(1), 2004, pp.3~38.
- Fehr, D., J. Mollerstrom, and R. Perez-Truglia, "Your Place in the World: Relative Income and Global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4(4), 2022, pp.232~268.
- Fernandez-Albertos, J. and A. Kuo, "Income Perception, Information, and Progressive Taxa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6(S1), 2018, pp.83~110.
- Freeman, Richard, Eunice Han, David Madland, and Brendan V. Duke, "How Does

- Declining Unionism Affect the American Middle Class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NBER Working Paper 21638, 2015.
- Giridharadas, Anand, *Winners Take All: The Elite Charade of Changing the World*, Knopf, 2018. (국역본: 아난드 기리다라다스, 『엘리트 독식사회: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들의 열망과 위선』, 정인경 역, 생각의힘, 2019).
- Goldthorpe, J., "Social class mobility in modern Britain: changing structure, constant process," *Journal of the British Academy*, 4, 2016, pp.89~111.
- Goldthorpe, J. and A. McKnight, "The Economic Basis of Social Class," in Stephen L. Morgan, David B. Grusky, and Gary S. Fields (eds.), *Mobility and Inequality: Frontiers of Research from Sociology and Economics*,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pp.109~136.
- Hauser, O. P. and M. I. Norton, "(Mis) Perceptions of Inequality,"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8, 2017, pp.21~25.
- Holzer, Harry J., "The Robots Are Coming. Let's Help the Middle Class Get Ready," Brookings Institution, 2018.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robots-are-coming-lets-help-the-middle-class-get-ready/>)
- Hvidberg, K. B., C. Kreiner, and S. Stantcheva, "Social Position and Fairness Views on Inequality," *Review of Economic Studies*, 90(6), 2023, pp.3083~3118.
- Karadja, M., J. Mollerstrom, and D. Seim, "Richer (and Holier) Than Thou? The Effect of Relative Income Improvements on Demand for Redistribu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9(2), 2017, pp.201~212.
- Koo, Kyong Hyun and Unjung Whang, "The Rise of China and the Rebound in Korea's Manufacturing Employment," KIEP Working Paper 18-07, 2018.
- Kozlowski, A. C., M. Taddy, and J. A. Evans, "The Geometry of Culture: Analyzing the Meanings of Class through Word Embedding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4(5), 2019, pp.905~949.
- Lindemann, Kristina, "The Impact of Objective Characteristics on Subjective Social Position," *Trames*, 11(1), 2007, pp.54~68.
- Loayza, N., J. Rigolini, and G. Llorente, "Do Middle Classes Bring Institutional Reforms?" *Economic Letters*, 116, 2012, pp.440~444.
- Lora, E. and J. Fajardo, "Latin American Middle Classes: The Distance between Perception and Reality," *Economia*, 14(1), 2013, pp.33~60.
- Markovits, Daniel, *The Meritocracy Trap: How America's Foundational Myth Feeds*

- Inequality, Dismantles the Middle Class, and Devours the Elite*, Penguin Books, 2020. (국역본: 대니얼 마코비츠 『엘리트 세습: 중산층 해체와 엘리트 파멸을 가속하는 능력 위주 사회의 함정』, 서경아 역, 세종, 2020).
- Niehues J., “Subjective Perceptions of Inequality and Redistributive Preferenc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Working Paper, 2014.
- Norton, M. I. and D. Ariely, “Building a Better America — One Wealth Quintile at a Tim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6(1), 2011, pp.9~12.
- OECD,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OECD Publishing, Paris, 2019.
- Powdthavee, N., “Feeling Richer or Poorer than Others: A Cross-section and Panel Analysis of Subjective Economic Status in Indonesia,” *Asian Economic Journal*, 21(2), 2007, pp.169~194.
- Ravallion, Martin, “The Developing World’s Bulging (but vulnerable) Middle Class,” *World Development*, 38(4), 2010, pp.445~454.
- Ravallion, M. and M. Lokshin, “Self-rated Economic Welfare in Russia,” *European Economic Review*, 46(8), 2002, pp.1453~1473.
- Reeves, Richard V. and Katherine Guyot, “A Policy Wish List for the Middle Class,” Brookings Institution, 2018.
(<https://www.brookings.edu/articles/a-policy-wish-list-for-the-middle-class/>)
- Savage, M., N. Cunningham, F. Devine, S. Friedman, D. Laurison, L. Mckenzie, A. Miles, H. Snee, and P. Wakeling, *Social Class in the 21st Century*, London: Pelican Books, 2015.
- Shell, Ellen Ruppel, *The Job: Work and Its Future in a Time of Radical Change*, Currency, 2018. (국역본: 엘렌 러펠 셸, 『일자리의 미래: 왜 중산층의 직업이 사라지는가』, 김후 역, 예문아카이브, 2019).
- Stewart, Matthew, *The 9.9 Percent is the New American Aristocracy*, Simon & Schuster, 2018. (국역본: 매튜 스투어트, 『부당 세습 — 불평등에 공모한 나라를 고발한다』, 이승연 역, 이음, 2019).
- Traber, Denis Miriam Hänni, Nathalie Giger, and Christian Breunig, “Social Status, Political Priorities and Unequal Represent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61(2), 2021, pp.351~373.
- Zilinsky, Jan, “Learning about Income Inequality: What Is the Impact of Information on Perceptions of Fairness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Peter G.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imeograph, 2014.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문화체육관광부, 「2022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보고서」, 2022. 12.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21. 5.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년도 원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KLIPS)」, 24차 원자료.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2023.06.16.
자료다운).

World Values Survey, WVS TimeSeries 1981~2022(버전 4.0).

부 록

<부표 3-1> 인적 특성별 사회경제 계층의 분포

(단위: %)

구 분		(%)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계
전체		(100.0)	3.0	17.8	54.5	19.9	4.9	100
성별	남성	(50.8)	3.1	17.7	55.7	18.6	4.9	100
	여성	(49.2)	2.8	17.9	53.3	21.2	4.8	100
연령	20대	(17.1)	4.2	14.8	59.4	16.5	5.1	100
	30대	(17.8)	1.6	18.9	50.8	24.7	4.1	100
	40대	(21.6)	1.9	16.0	56.1	21.2	4.8	100
	50대	(23.2)	2.8	22.0	51.4	20.1	3.7	100
	60대	(20.3)	4.4	16.6	55.4	16.7	6.8	100
취업 여부	취업	(71.4)	2.5	21.4	54.4	19.0	2.7	100
	미취업	(28.6)	4.1	8.8	54.7	22.0	10.3	100
학력	중졸 이하	(0.9)	3.6	3.6	39.8	12.9	40.1	100
	고졸	(19.5)	3.2	9.7	47.1	30.0	10.0	100
	전문대졸	(16.5)	2.0	15.1	51.2	26.9	4.9	100
	대졸	(53.5)	2.7	19.0	59.1	16.2	3.0	100
	대학원졸	(9.6)	5.2	34.1	50.8	8.1	1.8	100
세대주 특성	남성	(75.1)	2.8	20.0	55.2	18.1	3.8	100
	여성	(24.9)	3.3	11.4	52.3	25.1	7.9	100
	20대	(5.3)	4.2	7.9	65.2	15.8	6.9	100
	30대	(13.5)	1.4	18.6	52.8	24.1	3.1	100
	40대	(20.0)	2.0	16.4	57.1	19.7	4.8	100
	50대	(32.1)	3.2	21.2	52.6	19.5	3.4	100
	60대 이상	(29.2)	3.9	16.5	53.6	19.0	7.0	100
	취업	(82.6)	2.9	20.3	54.7	19.5	2.5	100
	미취업	(17.4)	3.3	6.0	53.3	21.5	15.9	100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대비 특성 항목의 구성비, 그 외는 특성 항목별 계층 구성비임.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부표 3-2> 개인의 경제 특성별 사회경제 계층의 분포

(단위: %)

구 분		전체	상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학력	중졸 이하	0.9	1.1	0.2	0.6	0.6	7.2
	고졸	19.5	21.4	10.6	16.8	29.4	40.1
	전문대졸	16.5	11.1	13.9	15.5	22.3	16.6
	대졸	53.5	49.6	56.9	58.1	43.8	32.5
	대학원졸	9.6	16.8	18.4	8.9	3.9	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업	농림어업	0.6	2.9	0.0	0.7	0.3	2.4
	자영업	7.0	6.9	5.9	7.3	7.5	4.9
	판매/서비스직	6.7	5.9	5.0	5.6	10.7	9.1
	생산/노무직	10.7	8.7	6.6	10.5	14.6	13.1
	일반사무직	36.2	24.9	44.8	38.8	29.1	10.6
	관리직/전문직	11.0	15.2	22.5	9.4	6.8	2.5
	주부	12.3	18.4	7.2	12.5	15.3	11.9
	학생	4.5	8.5	2.5	5.3	2.8	6.8
	기타	11.1	8.6	5.5	9.9	12.9	3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개인 소득	100만원 미만	20.6	20.3	9.4	19.4	24.2	59.9
	100~300만원	37.1	35.6	24.5	36.9	48.9	38.9
	300~500만원	27.7	13.0	28.4	32.3	23.3	0.6
	500~700만원	9.8	15.1	18.6	9.7	3.4	0.6
	700만원 이상	4.9	16.0	19.0	1.8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거 형태	자가	67.1	66.8	79.3	70.6	51.6	46.1
	전세	15.7	18.2	11.7	15.3	21.1	12.1
	반월세	14.8	11.1	8.1	12.1	23.8	34.7
	월세	1.0	3.2	0.2	0.6	1.6	5.8
	기타	1.4	0.8	0.7	1.5	1.9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KDI,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023.

<부표 4-1> 시장소득 기준 계층별, 가구원 수별 소득, 소비, 자산 수준

(단위: 만원)

		월소득			월 소비	순자산
		평균	최저	최고	평균	평균
하층	1인 가구	72	0	200	93	13,509
	2인 가구	132	0	283	146	34,140
	3인 가구	212	0	347	211	32,704
	4인 가구	274	0	400	263	28,315
	5인 이상 가구	306	0	515	277	25,954
중산층	1인 가구	319	201	534	160	21,181
	2인 가구	460	284	755	217	51,214
	3인 가구	585	347	925	285	50,179
	4인 가구	676	401	1,068	357	54,006
	5인 이상 가구	749	451	1,309	411	50,801
상류층	1인 가구	781	535	3,694	215	47,359
	2인 가구	1,190	757	9,051	306	117,318
	3인 가구	1,406	927	12,601	407	112,275
	4인 가구	1,574	1,070	9,596	506	135,493
	5인 이상 가구	1,821	1,200	7,649	582	133,729

주: 소득, 소비는 2021년 연간 기준이며, 자산은 2022년 3월 말 기준.

계층별 인구 구성비는 상류층 14.4%, 중산층 50.6%, 하층 35.0%임.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4-2> 처분가능소득 기준 계층별, 가구원 수별 소득, 소비, 자산 수준

(단위: 만원)

		월소득			월 소비	순자산
		평균	최저	최고	평균	평균
하층	1인 가구	105	0	198	92	12,178
	2인 가구	177	0	280	139	31,913
	3인 가구	241	0	344	213	30,104
	4인 가구	293	0	396	271	32,606
	5인 이상 가구	328	0	485	273	26,624
중산층	1인 가구	303	199	528	158	23,451
	2인 가구	445	281	748	212	49,530
	3인 가구	569	344	917	288	52,896
	4인 가구	663	397	1,057	368	60,114
	5인 이상 가구	729	444	1,273	412	52,668
상류층	1인 가구	718	530	3,002	220	52,685
	2인 가구	1,089	749	5,923	309	130,978
	3인 가구	1,279	918	10,139	408	117,694
	4인 가구	1,473	1,059	5,506	524	143,774
	5인 이상 가구	1,677	1,185	5,070	611	144,776

주: 소득, 소비는 2021년 연간 기준이며, 자산은 2022년 3월 말 기준.

계층별 인구 구성비는 상류층 10.4%, 중산층 57.8%, 하층 31.8%임.

자료: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부표 4-3> 소득 지위 판단에서의 편향 - 독일 사례

객관적 소득분위	인식된 평균 소득분위	평균 편향	양의 편향		음의 편향		편향 없음 비중
			비중	평균	비중	평균	
1분위	3.106	2.106	0.695	3.031	0.000	0.000	0.305
2분위	3.330	1.330	0.582	2.547	0.154	-1.000	0.264
3분위	3.725	0.725	0.418	2.684	0.319	-1.241	0.263
4분위	4.055	0.055	0.397	1.828	0.438	-1.531	0.165
5분위	4.174	-0.826	0.174	1.600	0.640	-1.727	0.186
6분위	4.369	-1.631	0.131	1.455	0.810	-2.250	0.059
7분위	4.695	-2.305	0.061	1.200	0.805	-2.955	0.134
8분위	4.930	-3.070	0.012	1.000	0.965	-3.193	0.023
9분위	4.947	-4.053	0.000	0.000	1.000	-4.053	0.000
10분위	6.240	-3.760	0.000	0.000	1.000	-3.760	0.000

주: 편향 = 객관적 소득분위 - 인식된 소득분위.

자료: Engelhardt and Wagener(2018)로부터 재구성.

<부표 4-4> 소득 지위 판단에서의 편향 - 아르헨티나 사례

구분	객관적 소득분위	인식된 평균 소득분위	평균 편향	양의 편향		음의 편향		편향 없음 비중
				비중	평균	비중	평균	
Lowest	1.62	4.60	2.98	0.85	3.02	0.04	-0.04	0.11
Second	3.47	4.96	1.49	0.71	1.71	0.16	-0.21	0.13
Third	5.53	5.38	-0.14	0.30	0.60	0.40	-0.74	0.30
Fourth	7.54	5.89	-1.64	0.07	0.09	0.81	-1.73	0.12
Highest	9.35	6.48	-2.88	0.00	0.00	0.97	-2.88	0.03
전체	6.12	5.60	-0.53	0.30	0.75	0.55	-1.28	0.15

주: 편향 = 객관적 소득분위 - 인식된 소득분위.

자료: Cruces *et al.*(2013)로부터 재구성.

부록 A: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 개요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는 한국인의 사회계층 및 중산층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의 올바른 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웹서베이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KDI 여론분석팀의 책임하에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실시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1차 조사는 2023년 5월 15~29일에 3,434명, 2차 조사는 2023년 9월 8~18일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본 설계는, 1차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을 개인으로 설정하여 지역별 인구 비중을 표집 기준으로 삼아 3,000명으로 설정된 표본 크기를 2023년 5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근거로 행정자치구별 인구수에 맞춰 1단계 층화를 한 후 다시 성별 및 연령대별 비중에 맞춰 2단계 조사응답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응답자 중 2차 조사 대상을 표본으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2차 조사의 표본 탈락의 우려로 예정 표본인 3,000명보다 많은 총 3,434명이 최종적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성별, 연령별 할당은 당초 표본 설계에 맞게 유지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응답자를 대상으로 랜덤하게 추출한 처치 그룹과 기준 그룹(비처치 그룹) 각각 1,000명씩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차 조사도 1차 조사와 동일하게 지역, 성별, 연령별 할당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고, 추가적으로 1차 조사된 소득 정보를 통해 구성된 소득 10분위 집단별로도 표본이 누락되는 집단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실제 조사된 표본 수는 <부표 A1>, <부표 A2>와 같다.

1차 조사 내용은 소득 및 자산, 주관적 계층의식 및 생활수준, 정보매체 활용, 지인 네트워크, 개인 및 가구의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정보, 소득 분포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 자녀 교육, 기술 발전, 조세 개편,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견해 등으로 구성하였다.

<부표 A1> 1차 조사 표본

지역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서울	608	54	62	60	66	61	66	62	67	53	57
부산	219	16	20	17	19	22	24	25	26	23	27
대구	160	13	12	13	15	18	16	17	25	15	16
인천	205	17	16	19	18	21	19	24	23	24	24
광주	109	8	8	12	7	10	18	12	11	13	10
대전	97	11	9	9	7	10	13	10	10	10	8
울산	88	7	11	6	5	11	13	8	12	7	8
세종	44	3	3	3	3	11	11	2	3	3	2
경기	855	74	70	79	77	104	96	100	99	76	80
강원	102	8	7	8	6	9	11	17	10	13	13
충북	113	8	9	11	9	11	12	17	15	10	11
충남	150	14	10	21	10	18	13	16	17	17	14
전북	124	10	8	7	10	18	10	20	14	14	13
전남	129	9	9	9	10	14	11	20	17	15	15
경북	165	14	9	12	10	20	18	21	19	23	19
경남	215	16	14	15	16	25	22	27	30	25	25
제주	51	4	4	5	4	7	5	5	8	4	5
계	3,434	286	281	306	292	390	378	403	406	345	347

자료: KDI 여론분석팀 제공 자료.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의 본인의 취업 상태 및 가구주 정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조사대상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처치 그룹에 대해서만 1차 조사에서 응답한 소득과 자산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본인에게 제공하는 실험적 조사를 가미하였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처치 그룹과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비처치 그룹 모두에 대해 주관적 소득 지위, 계층의식 및 삶에 대한 태도, 재분배 정책에 대한 견해, 최저임금 수준 및 결정 방식, 국민연금, 저출산 및 이민, 인공지능,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다음에 수록된 설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표 A2> 2차 조사 표본

지역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처치 그룹											
서울	184	18	14	18	17	20	20	21	20	17	19
부산	65	4	4	6	5	7	8	8	8	7	8
대구	47	5	4	2	5	5	5	5	5	5	6
인천	56	4	3	6	5	7	5	7	7	6	6
광주	33	2	3	5	2	3	4	5	3	3	3
대전	28	4	1	2	2	4	3	3	3	3	3
울산	24	1	4	2	1	3	4	2	3	2	2
세종	8	0	1	1	0	2	2	1	1	0	0
경기	252	19	18	22	20	32	29	32	31	25	24
강원	29	2	3	3	2	3	1	5	3	3	4
충북	33	2	4	3	1	4	3	5	5	3	3
충남	41	4	3	5	2	5	5	5	4	4	4
전북	36	3	3	2	3	4	3	5	5	4	4
전남	42	3	4	3	4	4	4	6	5	5	4
경북	46	4	1	4	3	6	3	7	6	6	6
경남	61	4	2	5	4	8	9	8	7	7	7
제주	15	1	2	1	1	3	1	1	3	1	1
계	1,000	80	74	90	77	120	109	126	119	101	104
기준 그룹											
서울	187	15	19	17	19	19	20	20	21	17	20
부산	67	4	4	6	6	8	8	7	8	8	8
대구	46	4	3	3	5	5	5	5	6	5	5
인천	56	4	3	3	6	7	5	6	9	6	7
광주	29	1	3	5	1	3	4	3	4	2	3
대전	25	3	1	2	1	3	4	3	2	4	2
울산	25	1	2	2	2	3	3	3	4	3	2
세종	10	0	1	2	0	3	2	1	1	0	0
경기	251	15	16	23	20	34	31	31	31	25	25
강원	34	3	3	3	2	4	2	4	4	4	5
충북	31	2	3	1	3	4	4	4	4	3	3
충남	39	4	3	5	2	4	4	5	4	4	4
전북	34	2	3	2	3	4	3	4	5	4	4
전남	41	3	3	2	5	4	4	6	5	4	5
경북	48	4	1	6	4	5	4	6	6	6	6
경남	61	3	2	5	5	8	6	9	8	7	8
제주	16	1	1	2	1	3	1	2	2	2	1
계	1,000	69	71	89	85	121	110	119	124	104	108

자료: KDI 여론분석팀 제공 자료.

부록 B: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 설문지

ID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1차)

안녕하십니까?

최근 글로벌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아기된 사회·경제적 변화로 사회 양극화 및 중산층 축소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금수저, 흙수저 등 사회계층 이동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졌습니다. 한 사회에서 중산층은 건전한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기동으로 그 역할이 지대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기준이나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인의 사회계층 및 중산층 인식을 살펴보고 정책의 올바른 대상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적 계층 인식, 생활 수준, 가치관 등에 대한 우리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소 생각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본 연구 및 향후 정책 설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처리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연구책임: 황수경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조사책임: KDI 경제정보센터 여론분석팀
전 화: 044-550-4657, 4465
팩 스: 044-550-4941

▶ 응답시 유의하실 사항입니다 ◀

- 질문지는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해 주십시오.
- 질문지에 응답하실 때에는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보기 중 하나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을 그대로 설문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SQ2.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년도 → **2004년 이전 출생지만 조사를 진행하십시오.**

SQ3. 귀하는 현재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소득 및 자산

본 연구는 '중산층'에 대한 객관적 및 주관적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는 연구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응답자 여러분의 소득 및 자산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여쭙는 점을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1. 귀하의 가구 구성원은 총 몇 명입니까? () 명

* 가구란 함께 살며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만 직장,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가족은 포함)

문1-1. 귀하의 가구 구성원의 출생연도, 세대주 여부 및 취업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가구원	본인과의 관계 (관계 코드*)	성별	출생연도	세대주 여부	취업 여부
본인				① 세대주 ② 세대원	① 취업 ② 미취업
1		① 남 ② 여	년	① 세대주 ② 세대원	① 취업 ② 미취업
2		① 남 ② 여	년	① 세대주 ② 세대원	① 취업 ② 미취업
3		① 남 ② 여	년	① 세대주 ② 세대원	① 취업 ② 미취업
4		① 남 ② 여	년	① 세대주 ② 세대원	① 취업 ② 미취업
5		① 남 ② 여	년	① 세대주 ② 세대원	① 취업 ② 미취업
6		① 남 ② 여	년	① 세대주 ② 세대원	① 취업 ② 미취업

*관계 코드: ① 조부모 ① 부모 ② 배우자 ③ 형제-자매 ④ 자녀 ⑤ 손자녀 ⑥ 그외 동거인
(기존 자녀/손자녀의 배우자는 각각 ④자녀와 ⑤손자녀로 표시해 주십시오.)

문2.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세전)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적어주세요.

* 가구 소득은 모든 가구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가구원 수별로 다른 보기 제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5인 이상 가구
①	100만 원 미만	130만 원 미만	160만 원 미만	19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②	100~140만 원 미만	130~200만 원 미만	160~240만 원 미만	190~280만 원 미만	200~320만 원 미만
③	140~180만 원 미만	200~260만 원 미만	240~320만 원 미만	280~370만 원 미만	320~460만 원 미만
④	180~230만 원 미만	260~320만 원 미만	320~400만 원 미만	370~450만 원 미만	490~600만 원 미만
⑤	230~270만 원 미만	320~380만 원 미만	400~470만 원 미만	450~540만 원 미만	600~760만 원 미만
⑥	270~320만 원 미만	380~450만 원 미만	470~550만 원 미만	540~640만 원 미만	760~850만 원 미만
⑦	320~380만 원 미만	450~540만 원 미만	550~660만 원 미만	640~760만 원 미만	850~1000만 원 미만
⑧	380~420만 원 미만	540~600만 원 미만	660~720만 원 미만	760~840만 원 미만	-
⑨	420~460만 원 미만	600~660만 원 미만	720~800만 원 미만	840~930만 원 미만	1000~1200만 원 미만
⑩	460~520만 원 미만	660~740만 원 미만	800~900만 원 미만	930~1000만 원 미만	-
⑪	520~600만 원 미만	740~870만 원 미만	900~1000만 원 미만	1000~1200만 원 미만	1200~1500만 원 미만
⑫	600~800만 원 미만	870~1000만 원 미만	1000~1300만 원 미만	1200~1500만 원 미만	1500~1800만 원 미만
⑬	8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13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	1800만 원 이상

문3.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무상임차(관사, 사택 등) ⑥ 기타()

*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직장교육 등의 이유로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자가로 표시해 주십시오.

문4. 귀하의 가구에서 **부동산**(주택, 토지)을 보유 중이라면, 자산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 부동산 전세 보증금도 자산가치에 포함.

- ① 5천만 원 미만
- ② 5천만~1억 원 미만
- ③ 1억~1억 5천만 원 미만
- ④ 1억 5천만~2억 원 미만
- ⑤ 2억~3억 원 미만
- ⑥ 3억~4억 원 미만
- ⑦ 4억~5억 원 미만
- ⑧ 5억~7억 원 미만
- ⑨ 7억~10억 원 미만
- ⑩ 10억~15억 원 미만
- ⑪ 15억~20억 원 미만
- ⑫ 20억 원 이상
- ⑬ 보유하고 있지 않다

문5. 귀하의 가구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채권, 펀드, 주식, 채권 등)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5천만 원 미만
- ② 5천만~1억 원 미만
- ③ 1억~1억 5천만 원 미만
- ④ 1억 5천만~2억 원 미만
- ⑤ 2억~3억 원 미만
- ⑥ 3억~4억 원 미만
- ⑦ 4억~5억 원 미만
- ⑧ 5억~7억 원 미만
- ⑨ 7억~10억 원 미만
- ⑩ 10억 원 이상
- ⑪ 보유하고 있지 않다

문6. 귀하 가구 전체의 모든 종류를 합친 **부채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대출금 및 지급 의무가 있는 임차보증금 등 포함

- ① 5천만 원 미만
- ② 5천만~1억 원 미만
- ③ 1억~1억 5천만 원 미만
- ④ 1억 5천만~2억 원 미만
- ⑤ 2억~3억 원 미만
- ⑥ 3억~4억 원 미만
- ⑦ 4억~5억 원 미만
- ⑧ 5억~7억 원 미만
- ⑨ 7억~10억 원 미만
- ⑩ 10억 원 이상
- ⑪ 부채 없음

문7. 귀하의 가구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순)자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 순자산은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부동산 + 금융자산 - 부채).

(가구원 수별로 다른 보기 제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①	900만 원 미만	1300만 원 미만	1600만 원 미만	1800만 원 미만	2천만 원 미만
②	900~3500만 원 미만	1300~5000만 원 미만	1600~6000만 원 미만	1800~7000만 원 미만	2천~8천만 원 미만
③	3500~7000만 원 미만	5천~1억 원 미만	6천~1억 2천만 원 미만	7천~1억 5천만 원 미만	8천~2억 원 미만
④	7천~1억 원 미만	1억~1억 5천만 원 미만	1억 2천~2억 원 미만	1억 5천~2억 원 미만	2억~3억 원 미만
⑤	1억~1억 5천만 원 미만	1억 5천~2억 원 미만	2억~3억 원 미만	2억~3억 원 미만	3억~4억 원 미만
⑥	1억 5천~2억 원 미만	2억~3억 원 미만	3억~4억 원 미만	3억~5억 원 미만	4억~6억 원 미만
⑦	2억~3억 원 미만	3억~4억 원 미만	4억~5억 원 미만	5억~6억 원 미만	6억~8억 원 미만
⑧	3억~4억 원 미만	4억~6억 원 미만	5억~7억 원 미만	6억~9억 원 미만	8억~10억 원 미만
⑨	4억~5억 원 미만	6억~7억 원 미만	7억~9억 원 미만	9억~10억 원 미만	10억~12억 원 미만
⑩	5억~7억 원 미만	7억~9억 원 미만	9억~11억 원 미만	10억~13억 원 미만	12억~15억 원 미만
⑪	7억~10억 원 미만	9억~13억 원 미만	11억~16억 원 미만	13억~20억 원 미만	15억~25억 원 미만
⑫	10억 원 이상	13억 원 이상	16억 원 이상	20억 원 이상	25억 원 이상

주관적 계층의식 및 생활수준

문8. 귀하 본인의 학력, 직업, 소득 및 자산에 관해 묻습니다. 응답은 아래 보기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세전)	자산(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재학포함) ④ 대졸(재학포함) ⑤ 대학원졸(재학포함)	* 직업 ①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 ② 자영업(소규모 청사, 개인박시문천사 등) ③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및 외판원 등) ④ 생산/기술직/단순노무직(기계조립 종사자, 토목 관련 현장업, 경비, 배달/운반 등) ⑤ 일반사무직(일반회사공공기관 등의 사무직, 교사 등) ⑥ 관리직/전문직(6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무장 이상의 지위, 교장, 연구직, 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등) ⑦ 주부(가사에만 종사하는 결혼한 사람) ⑧ 학생(전문대생 및 대학생생 포함) ⑨ 무직 ⑩ 기타 ()	* 월평균 소득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200만 원 미만 ③ 200~300만 원 미만 ④ 300~400만 원 미만 ⑤ 400~500만 원 미만 ⑥ 500~600만 원 미만 ⑦ 600~700만 원 미만 ⑧ 700~800만 원 미만 ⑨ 800만 원 이상 ⑩ 없음	* 자산 ① 5천만 원 미만 ② 5천만~1억 원 미만 ③ 1억~1억 5천만 원 미만 ④ 1억 5천만~2억 원 미만 ⑤ 2억~3억 원 미만 ⑥ 3억~4억 원 미만 ⑦ 4억~5억 원 미만 ⑧ 5억~7억 원 미만 ⑨ 7억~10억 원 미만 ⑩ 10억 원 이상 ⑪ 없음

문9. 소득, 직업, 학력, 재산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	① 상	중	③ 상	하	⑤ 상
	② 하		④ 하		⑥ 하

문10. 귀하 부모님의 학력, 직업, 소득 및 자산에 관해 묻습니다. 정확한 수준을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근사치를 반드시 표시해 주십시오. 응답은 앞(문9)의 보기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 부모님은 반드시 같이 살지 않아도 무방하며, 돌아가신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자산 항목은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사시는 경우 합산하여 한 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부 모	생년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세전)	자산(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문11. 소득, 직업, 학력, 재산 등을 고려할 때, 귀하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	① 상	중	③ 상	하	⑤ 상
	② 하		④ 하		⑥ 하

문12. 귀하와 귀하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 ② 순자산(부채 포함 자산) ③ 학력 ④ 직업 ⑤ 기타()

문13. 귀하는 현 생활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약간 불만족한다 ③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④ 약간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문14. 귀하의 현 생활 수준은 부모님께서 귀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훨씬 나빠졌다 ② 약간 나빠졌다 ③ 차이가 거의 없다 ④ 약간 좋아졌다 ⑤ 훨씬 좋아졌다

문15. 귀하는 주위 지역주민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 귀하의 생활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대적으로 낮다 ② 대체로 비슷하다 ③ 상대적으로 높다

문16. 10년 뒤, 귀하의 생활 수준이 현재와 비교해서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나빠질 것이다 ② 비슷할 것이다 ③ 좋아질 것이다

정보매체 활용

문17. 귀하는 국내의 뉴스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음의 정보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구분	1. 몇 개월 간격	2. 매월	3. 매주	4. 매일	5. 전혀 이용 안함
(1) 신문(중앙신문)-잡지-도서	①	②	③	④	⑤
(2) TV, 라디오(방송) 뉴스	①	②	③	④	⑤
(3)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뉴스	①	②	③	④	⑤
(4) 커뮤니티-카페 등 온라인 게시판	①	②	③	④	⑤
(5)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	①	②	③	④	⑤
(6) 유튜브	①	②	③	④	⑤

문17-1. ((5) SNS에서 ① ~ ④를 선택한 경우) 자주 활용하는 SNS 앱을 적어주세요.

()

문17-2. ((6) 유튜브에서 ① ~ ④를 선택한 경우) 자주 보거나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2개만 적어주세요.

()

지인 네트워크

문18. 귀하가 주로 만나는 지인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취했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교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토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	응답
(1) 서울의 강남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2) 무주택자로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3) 최근 3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4)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받은 사람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5)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의 투자로 돈을 크게 번 사람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6)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의 투자로 돈을 크게 잃은 사람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7) 부동산 투자로 돈을 크게 번 사람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8) 부동산 투자로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9) 지인 중 사회지도층(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법조계, 언론인, 대학교수 등)에 속하는 사람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19. 귀하가 만나는 지인들과 비교하여 귀하의 생활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대적으로 낮다 ② 대체로 비슷하다 ③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 분포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

문20. 한국 사회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한다면, 전체 인구에서 상위계층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문21. 한국 사회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한다면, 전체 인구에서 하위계층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문22. 다음은 한 사회의 소득에 따른 계층별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다양한 모형도입니다. 귀하는 현재의 한국 사회가 어떤 유형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고소득						
저소득						
설명	성층은 소수의 엘리트, 중층은 크수, 하층이 대다수인 형태	성층은 소수, 그보다 많은 사람들은 중층, 대다수가 하층인 피라미드 형태	가장 낮은 층에 적은 사람들이 있는 걸 제외한 피라미드 형태	대부분의 사람이 중간층에 있는 형태	가장 높은 층에 적은 사람들이 있는 걸 제외한 역피라미드 형태	모든 층에 균일하게 사람들이 존재하는 형태

문23. 그렇다면, 귀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한국 사회는 위의 보기 중 어떤 유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24. 최근 많은 뉴스에서 우리나라 중산층이 축소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아래 보도내용 참조).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약간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

*아래는 최근 중산층 추이에 관한 보도 내용의 일부입니다.



문25. 귀하가 생각할 때, 중산층의 조건으로 가장 고려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순위 응답)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① 소득 수준 | ② 총 자산(부동산 포함) | ③ 거주지역 및 거주 형태 |
| ④ 직업 | ⑤ 교육 수준 | ⑥ 주변 사람이나 인맥 |
| ⑦ 도덕이나 사회규범 의식 | ⑧ 정치 및 사회적 의식 | ⑨ 문화적 취향 |

문26. 귀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비되는 두 견해 중 왼쪽 의견에 더 동의하면 "0"쪽, 오른쪽 의견에 더 동의하면 "10"쪽으로 귀하의 동의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면 결국엔 성공할 수 있다			중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돈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소득은 더 공평해야 한다			중간				노력하는 만큼 차이가 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지어야 한다			중간				당시자가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개인의 교육이나 취업 기회 는 부모 혹은 지인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매우 높다			중간				개인의 교육이나 취업 기회 는 부모 혹은 지인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매우 균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개인의 자산 형성 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매우 높다			중간				개인의 자산 형성 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매우 균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자녀 교육에 대한 견해

문27. 다음 중 귀하께서 자녀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세 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① 메절 ② 독립심 ③ 근면 ④ 책임감 ⑤ 창의력 ⑥ 관용 및 타인존중
 ⑦ 절약 및 자축 ⑧ 결단력과 인내심 ⑨ 신앙심 ⑩ 박애정신 ⑪ 순종

* 자녀가 없더라도 귀하의 견해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28. 자녀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능력 개발과 좋은 직업을 얻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③ 약간 도움이 된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 자녀가 없더라도 귀하의 견해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29. 10년 뒤, 귀하의 자녀(혹은 자녀 세대)의 생활수준이 귀하(혹은 귀하 세대)와 비교해서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나빠질 것이다 ② 비슷할 것이다 ③ 좋아질 것이다

* 자녀가 없는 경우 귀하 세대와 자녀 세대를 비교해 귀하의 견해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30. 귀하는 취학연령대의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예 문30-1로 ② 아니오 문31으로

문30-1. 귀하의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되십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3시간 미만 ③ 3~5시간 미만 ④ 5~8시간 미만 ⑤ 8시간 이상

문30-2. 자녀의 교육비는 전체 월평균 소비 중 약 몇 %를 차지합니까?

- ① 10% 미만 ② 10~20% ③ 21~30% ④ 31~40% ⑤ 41~50% ⑥ 51% 이상

기술발전에 대한 견해

문31. 귀하는 '로봇과 AI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 인류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라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약간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

문32. 귀하는 '로봇과 AI 기술의 발전이 중산층 일자리를 위협해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약간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

문33. 다음은 로봇과 AI 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쟁점들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양쪽의 두 견해 중 왼쪽 의견에 더 동의하면 "0"쪽, 오른쪽 의견에 더 동의하면 "10"쪽으로 귀하의 동의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로봇과 AI 기술이 더 발전하면 내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 중간 →	로봇과 AI 기술이 더 발전해도 내 일자리는 안전할 것이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⑩
경제 전체로 보면, 로봇과 AI 기술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 중간 →	경제 전체로 보면, 로봇과 AI 기술이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것이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⑩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일하지 않아도 생활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기본소득제를 지지한다.	← 중간 →	기본소득제보다는 정부가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⑩

조세 개편에 대한 견해

문34. 귀하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보았을 때 현재의 세금부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득/자산 대비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
 ② 소득/자산 대비 세금이 많은 편이다
 ③ 적절한 편이다
 ④ 소득/자산 대비 세금이 적은 편이다
 ⑤ 소득/자산 대비 세금이 지나치게 적다

문35. 현재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복지지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③ 적절하다 ④ 다소 많은 편이다 ⑤ 매우 많다

문36. 중산층을 위한 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줄여도 된다 ② 현재 수준이 대체로 적절하다 ③ 늘려야 한다

문37. 정부의 복지지출을 늘린다면 주로 어느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소득층 ② 저소득층과 중산층 ③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

문38. 향후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면 세금을 추가로 낼 용의가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38-1등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38-1등
- ③ 보통이다 39 등
- ④ 약간 그렇다 39 등
- ⑤ 매우 그렇다 39 등

문38-1. 세금을 추가로 낼 용의가 없다고(①과 ② 응답)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세금을 정부가 제대로 사용할지 의문이라서
- ② 나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이미 충분히 내고 있어서
- ③ 다른 사람들이 소득과 재산에 비해 충분히 내지 않아서
- ④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⑤ 기타()

문39. 정부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 다음의 대안 중 귀하의 의견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현재 세대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중간				미래에 걸어야 하는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문40.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있어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올려야 하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	-----	-----	-----

- ① 소득세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 부과)
- ② 법인세 (기업의 이익에 대해 세금 부과)
- ③ 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비수준에 대한 세금 부과)
- ④ 재산세 (주택, 토지 등 재산수준에 따른 세금 부과)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견해

문41. 우리 사회의 개혁 이슈와 관련한 쟁점들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양쪽의 두 견해 중 왼쪽 의견에 더 동의하면 "0"쪽, 오른쪽 의견에 더 동의하면 "10"쪽으로 귀하의 동의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원활한 일자리 흐름을 위해 고용과 해고 요건 완화			중간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위해 고용보장 강화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원활한 업무 수행과 긴 휴가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친선			중간				장시간 근무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반대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므로 정년 연장을 반대			중간				고령화 대처를 위해 정년 연장 친선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평가의 어려움과 조직문화를 고려, 직무-성과급제 반대			중간				업무성과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직무-성과급제 친선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기본권리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에 더 투자					←	중간	→	산업변화 대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교육에 더 투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입시제도는 다원화를 지향해 다양한 기준 적용					←	중간	→	입시제도는 형평성을 위해 단순명료한 기준 적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입시제도에서 대학의 자율적 판단 확대					←	중간	→	입시제도에서 정부의 통일된 기준을 우선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42.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금이 2041년에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5차 재정추계).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쪽의 두 견해 중 왼쪽 의견에 더 동의하면 "0"쪽, 오른쪽 의견에 더 동의하면 "10"쪽으로 귀하의 동의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현세대가 더 내거나 덜 받는 등의 연금 개혁					←	중간	→	현재 제도를 유지하고 부족분은 미래세대의 조세로 부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연금 납입액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	중간	→	연금 납입액을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연금 수급액을 조금 줄여도 괜찮은 것이다					←	중간	→	연금 수급액을 더 늘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43. 다음은 사회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쟁점들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양쪽의 두 견해 중 왼쪽 의견에 더 동의하면 "0"쪽, 오른쪽 의견에 더 동의하면 "10"쪽으로 귀하의 동의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타다, 에어비앤비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없애야					←	중간	→	안전성과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정이 먼저 해결되어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산업육성과 정책개선을 위해 데이터 규제 완화					←	중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규제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수요가 있는 서울에 인프라 집중					←	중간	→	지역균형을 위해 지방에 투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주택을 주거수단을 넘어 자산으로 보는 정책 필요					←	중간	→	주거의 안정성 및 분배를 우선시하는 정책 필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환경 및 온난화 해결을 위해 에너지 가격 인상					←	중간	→	삶의 수준 보장을 위해 에너지 가격 억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저출산 해결을 위해 기존 유자녀 가정 혜택 강화					←	중간	→	형평성 및 다양성을 위해 기존 유자녀 가정에 혜택 반대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성별, 지역별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할당제 필요					←	중간	→	기회는 충분히 공평하므로 인위적 할당제 불필요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					←	중간	→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이민 규제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안보-경제 간, 미국-중국 간 균형 외교 필요					←	중간	→	안보를 우선시하여 미국 중심의 질서에 편입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국내 문제를 해결이 우선, 해외 원조 최소화					←	중간	→	국가 위상 및 국제적 이익을 위해 해외 원조 규모 확대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44. 다음은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정치 시스템과 관련한 쟁점들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대비되는 두 견해 중 왼쪽 의견에 더 동의하면 "0"쪽, 오른쪽 의견에 더 동의하면 "10"쪽으로 귀하의 동의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 확대					←	중간	→	행정 효율성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 축소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승지독식 및 사표 방지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	중간	→	책임성이 더 강한 소선거구제 유지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례대표제 확대					←	중간	→	명확한 대표성을 갖는 지역 선거구제 선호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정부의 신속하고 강한 정책 추진력					←	중간	→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추구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정책 결정 과정에 주권자인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를 더 확대					←	중간	→	대의제 원칙에 기반한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있는 결정과 책무성 강화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통계적 분류를 위한 질문

SQ3-1. 귀하는 앞에서 (SQ3 응답) 지역에 거주하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위 지역의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십니까? _____ (*시군구 코드 제시)

SQ4. 귀하가 청소년기(13-17세)에 주로 거주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해외

SQ4-1. 거주했던 지역의 시군구는 어디입니까? _____ (*시군구 코드 제시)

SQ5.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SQ6. 귀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보수적				중도		매우 진보적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SQ7.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없다 ② 개신교 ③ 불교 ④ 천주교 ⑤ 기타()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 (2차)

안녕하십니까?

최근 글로벌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아기된 사회·경제적 변화로 사회 양극화 및 중산층 축소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금수저, 흙수저 등 사회계층 이동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졌습니다. 한 사회에서 중산층은 건전한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기동으로 그 역할이 지대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기준이나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인의 사회계층 및 중산층 인식을 살펴보고 정책의 올바른 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진행된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에 이어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적 계층 인식, 생활 수준, 가치관 등에 대한 우리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소 생각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본 연구 및 향후 정책 설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처리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연구책임: 황수경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조사책임: KDI 경제정보센터 여론분석팀

전 화: 044-550-4183, 4465

▶ 응답시 유의하실 사항입니다 ◀

- 질문지에 응답하실 때에는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보기 중 하나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을 그대로 설문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래의 6Q 문항은 1차 조사에서의 응답을 가져와 보여줍니다.

sq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2. 출생연도	_____년 → 2004년 이전 출생자만 조사를 진행하십시오
sq3.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본인의 취업 상태 및 가구주 정보 확인

※ 지난 1차 조사(5월 ○일) 당시 귀하의 취업 상태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귀하는 지난 1차 조사에서 **(문1-1 본인 취업여부)** 상태이고 직업은 **(문8-2)** 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통상 ‘취업’이란 수입을 목적으로 혹은 가족 사업의 일환으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가.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나.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경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예컨대 주부나 학생이라도, 혹은 집에서 일하더라도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다면 ‘취업’, 그렇지 않으면 ‘미취업’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조사일 전 1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1. 위와 같은 기준에서 볼 때 귀하의 지난 1차 조사(5월 ○일) 당시 취업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취업 **문1-1문**

② 미취업 **문1-2문**

문1-1. 귀하의 지난 1차 조사(5월 ○일) 당시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만약 주부, 학생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곳 또는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일한 가족 사업체의 직종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 ①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
- ② 자영업(소규모 장사, 개인택시 운전자 등)
- ③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및 외판원 등)
- ④ 생산/기술직/단순노무직(기계조립 종사자, 토목 관련 현장점, 경비, 배달/운반 등)
- ⑤ 일반사무직(일반회사공공기관 등의 사무직, 교사 등)
- ⑥ 관리직/전문직(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지위, 교장, 연구직, 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등)
- ⑦ 기타 ()

문2문

문1-2. 귀하는 지난 1차 조사일(5월 ○일) 이전 한달 동안 직장(일)을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이번에는 현 시점의 귀하의 취업 상태에 대해 여쭙습니다.

문2. 앞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볼 때 현시점에서 귀하의 취업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취업 **문2-1문**

② 미취업 **문2-3문**

문2-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만약 주부, 학생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곳 또는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일한 가족 사업체의 직종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 ①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
- ② 자영업(소규모 장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
- ③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및 외판원 등)
- ④ 생산/기술직/단순노무직(기계조립 종사자, 토목 관련 현장일, 경비, 배달/운반 등)
- ⑤ 일반사무직(일반회사공공기관 등의 사무직, 교사 등)
- ⑥ 관리직/전문직(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지위, 교장, 연구직, 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등)
- ⑦ 기타 ()

문2-2. 귀하가 종사하는 산업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주십시오.

제조업	① 컴퓨터, 전자기기	② 전기기기	③ 자동차	④ 석유화학	⑤ 기계금속	⑥ 섬유, 의복 제조	⑦ 기타 제조업
서비스업	⑧ 도소매	⑨ 숙박, 음식	⑩ 금융	⑪ 문화콘텐츠	⑫ IT 서비스	⑬ 교육	⑭ 기타 서비스
기타	⑮ 공공부문	⑯ 자영업	⑰ 기타				

☞ **문장으로**

문2-3. 귀하는 현재 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육아/가사
- ② 학교 및 학원 통학
- ③ 취업 준비
- ④ 쉬었음
- ⑤ 기타()

문2-4. 귀하는 지난 한 달 이내에 직장(일)을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지난 1차 조사를 바탕으로 귀하 가구의 가구주에 대해 여쭙습니다.

문3. 귀하는 지난 1차 조사에서 가구 구성원이 아래와 같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귀하 가구의 구성원 중 **가구주**, 즉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구주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 본인과 관계(코드), 성별, 출생연도 데이터는 1차 조사의 응답을 가져와 보여줍니다.

가구원	본인과의 관계 (관계 코드)	성별	출생연도	가구주 선택
1	본인	남/여	년	<input type="checkbox"/>
2		남/여	년	<input type="checkbox"/>
3		남/여	년	<input type="checkbox"/>
4		남/여	년	<input type="checkbox"/>
5		남/여	년	<input type="checkbox"/>
6		남/여	년	<input type="checkbox"/>
7		남/여	년	<input type="checkbox"/>

* 관계 코드: ① 조부모 ① 부모 ② 배우자 ③ 형제-자매 ④ 자녀 ⑤ 손자녀 ⑥ 그외 동거인

문4. 귀하의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문5. 귀하의 가구 구성원 중 외국인(결혼 이민자 혹은 귀화자)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주관적 소득 수준과 계층의식

문6.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 기준으로 10개 집단으로 구분한다면, 귀하의 가구는 어디쯤 위치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그룹	←————— 중간 —————→								소득 수준이 높은 그룹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7.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자산 수준 기준으로 10개 집단으로 구분한다면, 귀하의 가구는 어디쯤 위치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그룹	←————— 중간 —————→								소득 수준이 높은 그룹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이 박스 내용은 처치그룹만 보여줄 것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을 낮은 수준(0%)에서 높은 수준(100%)으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지난 조사에서의 귀하의 응답에 따르면, 귀하 가구의 소득 수준은 전체에서 _____ % 구간, 자산 수준은 전체에서 _____ % 구간에 해당합니다.
 * 소득 수준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2021년 월평균 소득, 자산 수준은 동 조사의 2022년 순자산을 토대로 산출한 것입니다.

<정보제공 참고 사항>

▶ (1차 조사 문2 응답)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세전) <2021년 가금복 월평균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모든 가구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수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① 0-10	① 100만 원 미만	① 130만 원 미만	① 160만 원 미만	① 190만 원 미만	① 200만 원 미만
② 10-20	② 100~140만 원 미만	② 130~200만 원 미만	② 160~240만 원 미만	② 190~280만 원 미만	② 200~320만 원 미만
③ 20-30	③ 140~180만 원 미만	③ 200~260만 원 미만	③ 240~320만 원 미만	③ 280~370만 원 미만	③ 320~480만 원 미만
④ 30-40	④ 180~230만 원 미만	④ 260~320만 원 미만	④ 320~400만 원 미만	④ 370~450만 원 미만	④ 480~600만 원 미만
⑤ 40-50	⑤ 230~270만 원 미만	⑤ 320~380만 원 미만	⑤ 400~470만 원 미만	⑤ 450~540만 원 미만	⑤ 600~760만 원 미만
⑥ 50-60	⑥ 270~320만 원 미만	⑥ 380~450만 원 미만	⑥ 470~550만 원 미만	⑥ 540~640만 원 미만	⑥ 760~850만 원 미만
⑦ 60-70	⑦ 320~380만 원 미만	⑦ 450~540만 원 미만	⑦ 550~660만 원 미만	⑦ 640~760만 원 미만	⑦ 850~1000만 원 미만
⑧ 70-80	⑧ 380~420만 원 미만	⑧ 540~600만 원 미만	⑧ 660~720만 원 미만	⑧ 760~840만 원 미만	⑧ -
⑨ 70-80	⑨ 420~460만 원 미만	⑨ 600~660만 원 미만	⑨ 720~800만 원 미만	⑨ 840~930만 원 미만	⑨ 1000~1200만 원 미만
⑩ 80-90	⑩ 460~520만 원 미만	⑩ 660~740만 원 미만	⑩ 800~900만 원 미만	⑩ 930~1000만 원 미만	⑩ -
⑪ 80-90	⑪ 520~600만 원 미만	⑪ 740~870만 원 미만	⑪ 900~1000만 원 미만	⑪ 1000~1200만 원 미만	⑪ 1200~1500만 원 미만
⑫ 90-100	⑫ 600~800만 원 미만	⑫ 870~1000만 원 미만	⑫ 1000~1300만 원 미만	⑫ 1200~1500만 원 미만	⑫ 1500~1800만 원 미만
⑬ 90-100	⑬ 800만 원 이상	⑬ 1000만 원 이상	⑬ 1300만 원 이상	⑬ 1500만 원 이상	⑬ 1800만 원 이상

재분배 정책에 대한 견해

문12. 귀하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3. 귀하는 정부가 실직 상태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4. 귀하는 정부가 저소득 계층을 위해 **의료 및 주택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5. 귀하는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복지지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다소 부족하다 ③ 적절하다 ④ 다소 많다 ⑤ 매우 많다

문16. 귀하는 현재 **중산층**을 위한 정부의 복지지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다소 부족하다 ③ 적절하다 ④ 다소 많다 ⑤ 매우 많다

문17. 귀하는 정부의 복지지출을 늘린다면 주로 어느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소득층 ② 저소득층과 중산층 ③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

문18. 귀하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득여건 개선(세금 감면 등) ② 고용안정 지원 ③ 집값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
④ 자녀 교육비 지원 ⑤ 보편적 복지* 확대 ⑥ 기타()

* 소득·자산 등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가 고루 적용되는 것

문19. 정부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고려한다면,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① 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 지원 ② 고용안정 및 실업 대책 ③ 내 집 마련 지원
④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⑤ 건강 및 의료 지원 ⑥ 문화 활동 지원
⑦ 노후생활 지원 ⑧ 장애인 지원 ⑨ 기타()

최저임금 수준 및 결정 방식

문20.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 월액 206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다소 낮다 ③ 적절하다 ④ 다소 높다 ⑤ 매우 높다

문21. 귀하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견해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약간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

문22.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어 노사갈등을 더 악화시킨다는 견해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약간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

문23. 현재 최저임금 결정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중 귀하의 의견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왼쪽 의견(A)에 더 동의하면 "0" 쪽으로, 오른쪽 의견(B)에 더 동의하면 "10" 쪽으로 귀하의 동의 정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A. 현재와 같이 노·사·공의 의견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	중간	→	B.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A.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 협상을 중시해야 한다	←	중간	→	B. 이해당사자간 협상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중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A. 노사 제시안의 격차가 큰 것은 당연하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	중간	→	B. 노사 제시안의 격차가 크지 않도록 일정 범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A.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을 1년 단위로 결정한다	←	중간	→	B. 최저임금을 2년 단위로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A.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업종이나 사업체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간	→	B. 업종이나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A. 물가나 생활수준이 다른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간	→	B. 지역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A.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준액을 일정 수준 강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간	→	B. 고령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A. 외국인에 대해서는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	중간	→	B.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A.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	중간	→	B. 장애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저출산 및 이민에 대한 견해

문27.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대 아래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악화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함.

1순위 2순위

- ①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②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③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④ 노후준비 등 미래에 대한 우려와 불안 ⑤ 기타 ()

문28.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교육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 ② 어린이집 등 양육 인프라 확충
 ③ 근로문화 개선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 ④ 법률혼 이외의 동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⑤ 외국인의 이주 및 이민 지원 ⑥ 기타 ()

문29. 귀하는 저출산 및 이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견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외국인 이민을 장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30.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민관리청(이민정책 총괄 조직) 설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약간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견해

문31. 인공지능(AD)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감정은 어떠합니까?

매우 부정적 (거부감, 두려움 등)이다		보통						매우 긍정적(새로운 가능성, 신선성 증가 등)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32. 귀하는 일상에서 다음의 기술적 도구들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구분	전혀 사용해 보지 않았다	한두 번 사용해 보았다	필요할 때 가끔 사용한다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1) ChatGPT 등 생성형 AI* 도구 *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을 만들 수 있는 AI	①	②	③	④
(2) Slack, Notion 등 협업 도구	①	②	③	④
(3) 클라우드 서비스	①	②	③	④
(4) Zoom 등 원격회의 도구	①	②	③	④
(5) STATA, SAS 등 데이터분석 툴	①	②	③	④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견해

문37. 다음 견해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예/아니오 중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예	아니오
(1) 연공제(근무연한에 따라 임금과 직급 상승) 중심의 보상체계보다 직무·성과·능력 중심의 보상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①	②
(2) 근로시간 관리는 주 단위 보다 월 또는 분기 단위로 하는 것이 낫다	①	②
(3)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과 등록금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등록금 유지를 선택할 것이다	①	②
(4) 대학별로 일시기준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것보다 수능성적으로 입학하는 것이 낫다	①	②
(5) 매매가격을 장기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면도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①	②
(6)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중 더 나쁜 것은 물가상승이다	①	②
(7) 연구개발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조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규정을 세분화하고 중벌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8) 수술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줄여야 한다	①	②
(9) 진료시간 증가 등 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수가* 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의료수가 억제를 선택할 것이다 * 의사 등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금액	①	②
(10)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반대 정당과 입장을 같이한다면 신뢰가 떨어진다	①	②
(11)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정치인의 정책적 입장에 동의한 적이 있다	①	②
(12) 나는 대다수의 의견이나 견해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삶에 대한 태도

문38. 귀하는 다음 선택지 중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 ① 현금 10만원 ② 복권: 당첨확률 50%로 당첨 시 15만원, 미당첨 시 5만원 ③ 별 차이 없음

문39. 귀하는 다음 선택지 중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 ① 현금 10만원 ② 복권: 당첨확률 10%로 당첨 시 100만원, 미당첨 시 0원 ③ 별 차이 없음

문40. 귀하께서 오늘 만약 예기치 않게 '오늘의 행운인'에 당첨되어 1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주최자가 좋은 일에 쓰이도록 기부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다면, 귀하는 이 중 얼마를 기부하시겠습니까?
(기부 의사가 없으면 0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원

문41. 미래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기꺼이 포기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42. 삶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행복하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43. 다음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아니다 —————→										매우 동의한다
(1) 전반적으로 나는 인생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대부분의 경우 나는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어쨌게 하고 있는가에 항상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44. 다음의 가치관에 대하여 귀하의 삶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① 직업적 성취 ②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는 것 ③ 가족의 행복
 ④ 교우 및 사회적 관계 ⑤ 공동체와 국가

문4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자선단체나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현금, 현물 등 다양한 형태로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문4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 활동을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1) 영화 관람 * 극장에서 직접 관람한 것만 해당	_____ 회
(2) 전시회 및 공연 관람(음악, 연극, 무용, 박물관, 미술관 등) * 전시회장이나 공연장에서 직접 관람한 것만 해당	_____ 회

문47. 귀하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ho is the Middle Class in Korea?

Soo Kyeong Hwang and Changkuen Lee

This study delves into significant discrepancies between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middle classes in Korea, potentially prompting a diverse range of grievances from different economic groups in middle-class discourse.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xamining the multi-layered nature of the so-called "subjective middle class" and its impact on the discourse, together with the causes of such discrepancies and the various challenges that may arise.

The study employs an independent survey to gauge Koreans' class perceptions through two web-based panel surveys. The first survey, conducted in May 2023, queries participants on their objective income and asset levels, subjective class affiliation, satisfaction with living standards and prospects for upward mobility, perceptions of income distribution and inequality, and views on socioeconomic policies. It aims to analyze whether a systematic downward bias exists in self-assessment of one's position in income distribution, patterns of bias and their causes, and potential distortions such bias can cause in policy attitudes.

The subsequent survey, conducted in September 2023, incorporates an experimental component to observe the effects of information on social perception and policy attitudes. It identifies participants' objective class positions using data from the first survey and then shares this information with them. By randomly assigning participants to two groups and providing exact class standings on income distribution to only one group, this study enables an empirical analysis of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various social policies, including middle-class awareness and support for redistribution policies, between the feedback-receiving group (treatment group) and the group without feedback

(non-treatment group).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research draws from these surveys, with Chapters 2 and 3 based on the first survey (N=3,434) and Chapters 4 and 5 on the second (N=2,000). This report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1 presents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middle-class research, focusing on the concept of the middle class and discussions surrounding the middle-class crisis. Chapter 2 reviews previous studies on objective-subjective class inconsistency, conducts international comparisons using available data, and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among Koreans. Chapter 3 compares perceptions of class inequality and policy attitudes on various issues by reclassifying the category of the "socio-economic class" in consideration of the multi-layered nature of the middle class in Korea. Chapter 4 examines the changes after correcting perception biases through objective class information based on the experimentally designed results of the second survey. Chapter 5 assesses the varied cognitive structures and policy preferences within the multi-layered structure of the Korean middle class and examines whether this may lead to policy distortion in the context of discussions on the privileged middle class or elite hereditary succession. Finally, Chapter 6 summarizes the findings and discusses their implications.

KDI 신간안내

RECENT KDI PUBLICATION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이강구

정책연구시리즈 | 103쪽 | 정가 2,000원

본고는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성장효과를 산출하여 다른 기준보다 효율성을 강조하여 재원배분을 하려고 할 때 재정승수가 높은 지출성격들로 구성된 분야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투입의 분야별 우선순위나 재정사업의 구조조정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지침 등의 설정 시 합리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외 충격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 지정학적 위험과 미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김준형

정책연구시리즈 | 68쪽 | 정가 2,000원

본고는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험과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는 투자와 산업생산 등 국내 주요 거시변수들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의 혁신과 개혁 방안

강동수 외

연구보고서 | 417쪽 | 정가 9,500원

디지털 금융혁신의 출발점은 금융서비스에 광범위한 데이터가 활용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위주의 규제가 적극적인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크게 강화되었다. 그러나 금융혁신에 따른 새로운 업무나 유사한 비규제 업무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및 적용은 금융당국 입장에서 도전적인 과제이다. 이에 본고는 금융혁신이 초래한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한 금융정책의 재설계를 시도하고 있다.



저탄소경제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

양용현 편

연구보고서 | 510쪽 | 정가 13,000원

본 보고서는 저탄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설계하며, 기후변화와 저탄소경제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계획, 저탄소 전기화 전략, 배출권거래제, 탄소차액계약제 그리고 디지털기술의 활용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취업자의 건강, 지역, 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그린·에너지 인플레이션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을 분석한다.



개인사업자 대상 경영교육·컨설팅 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시사점

오윤해

정책연구시리즈 | 53쪽 | 정가 2,000원

본 연구는 국내에서 경영교육과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은 개인사업자가 1년 후 비수해업체에 비해 고용인원, 매출이 더 증가하는지의 여부와 90일 이상의 연체 발생 확률이 더 낮은지의 여부를 이중차분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지원 정책의 수혜업체에서 고용인원이 유의하게 증가하거나 연체 발생 확률이 낮아지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도소매업에서는 수혜업체의 매출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정보 제공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김민정

정책연구시리즈 | 47쪽 | 정가 2,000원

순차공개 가격 책정은 소비자의 행동 편향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최선의 선택을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다크패턴 행위로 소비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숙박공유 플랫폼인 Airbnb에서 의무적 추가요금인 청소비가 거래 과정에서 뒤늦게 공개되던 것에 주목해서, 새로운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급자들의 가격 책정 전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했다.



부동산 자산시장 균형 조건과 기대인플레이션 결정요인 분석

조덕상

정책연구시리즈 | 63쪽 | 정가 2,000원

본 연구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 동학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부동산 자산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시장에서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 부동산 자산시장에서 추출한 기대인플레이션 지표가 기존의 기대인플레이션 지표와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리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전파 경로로서 부동산 자산시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실증분석과 이론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연구보고서 2024-01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인 책 2024년 1월 19일

발 행 2024년 1월 22일

저 자 황수경 · 이창근

발행인 조동철

발행처 한국개발연구원

등 록 1975년 5월 23일 제6-0004호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전 화 (044) 550-4114

팩 스 (044) 550-4310

© 한국개발연구원 2024

ISBN 979-11-5932-848-0

값 7,000원

*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